

2009

문화정책논총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제 22 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09

문화정책논총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제 22 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차 례

● 기획 논문: 문화분야 자격제도와 전문인력 양성 - 자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자격이 문화 인력의 임금과 노동이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김준영	9
Ⅰ. 연구 배경과 목적	9
Ⅱ. 문화산업 노동 시장의 특성과 자격 제도	12
Ⅲ. 자료와 기초 통계	14
Ⅳ. 실증 분석	20
Ⅴ. 요약 및 결론	29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인증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박영정	33
Ⅰ. 서 론	34
Ⅱ.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역사	35
Ⅲ. 제도 운영 현황 및 성과	41
Ⅳ.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0
Ⅴ. 결론 및 전망	54

학예사 자격 제도의 성과와 한계

: 실무 경력 기준을 중심으로 / 양현미	59
Ⅰ. 서론	59
Ⅱ. 학예사 자격 제도에서 실무 경력 기준의 도입과 변천 과정	61
Ⅲ. 학예사 자격 제도 실무 경력 기준과 인증 시스템 현황	65

IV. 학예사 자격 제도 실무 경력 기준의 적정성 검토	72
V. 결론 : 학예사 자격 제도의 실무 경력 기준 개선을 위한 제언	78

영화산업 경력 인증 체계와 자격제도

: 영사 관련 직무를 중심으로 / 김미현	83
I. 서론	83
II. 한국 영화산업과 노동 시장의 특성	85
III. 경력 인증 시스템과 자격 제도	88
IV. 영화산업과 자격 제도 : 영사 관련 직군의 사례	91
V. 결론	97

● 일반 논문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임상수	105
I. 서론	105
II.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	107
III. 한국 영화 관람객 수 추정 및 구조 변화 검토	113
IV. 시사점 및 개선 과제	121

한국 미디어 산업의 분석

: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 임응순·정군오	125
I. 서론	125
II. 선행 연구	126
III. 연구 방법론	128
IV. 실증 분석 결과	134
V. 분석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44

한국의 박물관 건립 현황 분석에 따른

박물관 건립 계획(Museum Planning)의 필요성 / 박신의	151
Ⅰ. 서론	151
Ⅱ. 한국 박물관의 건립 현황과 제도적 쟁점	153
Ⅲ. 박물관 건립 계획의 필요성과 제도적 방안	162
Ⅳ. 결론	168

지역사회 박물관 활성화 방안 연구

: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사례 / 이주연·서희석·류지원	173
Ⅰ. 글을 시작하며	173
Ⅱ. 선행 연구 및 박물관 성공 사례 검토	175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178
Ⅳ. 연구 결과	180
Ⅴ. 전시관 활성화 방안	199
Ⅵ. 글을 마치며	201

계층적 분석처리(AHP)를 이용한 출판 수출 지원 기능에 대한

만족도 평가 / 서보밀·오준석·김소영	207
Ⅰ. 서론	207
Ⅱ. 기존 문헌 조사	210
Ⅲ. 만족도 평가 모형	215
Ⅳ. 출판 수출 지원에 대한 만족도 평가	221
Ⅴ. 결론	224

文化政策論叢

문화정책논총

기획 논문: 문화분야 자격제도와 전문인력 양성
- 자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자격이 문화 인력의 임금과 노동이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김준영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인증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박영정

학예사 자격 제도의 성과와 한계: 실무 경력 기준을 중심으로 / 양현미

영화산업 경력 인증 체계와 자격제도: 영사 관련 직무를 중심으로
/ 김미현

자격이 문화 인력의 임금과 노동 이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자격이 문화 인력의 임금과 노동 이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실증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 구조 조사(OES)의 2차년도부터 6차년도 조사를 결합한 자료이다. 자격 보유의 잠재적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격증의 직업별 취득 비율을 도구 변수(IV)로 사용하는 도구 변수법과 OLS를 함께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 인력과는 달리 문화 인력의 경우 자격 보유의 임금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자격 보유가 노동 이동에 미치는 효과는 문화 인력과 금융 인력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문화 산업의 경우 같은 직업에서의 경력년수가 임금과 노동 이동에 비교적 크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문화 산업에서는 자격보다 직업 경력이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나타내는 신호 기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문화 산업, 자격 제도, 자격의 임금 효과, 노동 이동]

I. 연구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자격이 문화 인력의 노동 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문화 산업에서 자격의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문화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자격에 대한 정의는 연구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는 자격 기본법의 자격 정의에 따라서 자격증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나타내는 직업 자격 증서’로 정의한다.¹⁾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 시장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여 내부 노동 시장이

축소되고 외부 노동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노동의 유연화가 진전되고 있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직업 능력을 습득하는 것은 개인의 고용 안정, 기업의 생산성,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 배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사회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신호 기제(signalling device)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서는 학력이 주요한 신호 기제로 활용되어 왔으나 급속한 고학력화와 경직된 교육 제도로 인해 학력의 신호 기능은 많이 약화되었다.²⁾ 더욱이 노동 시장이 점점 유연해지고 기업 채용이 경력직 위주로 변화하면서 인적 자원에 대한 신호 기제로서 자격의 중요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 자격은 개인이 보유한 직무 능력에 대한 신호를 노동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구직 기간을 줄이고 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임금과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기업 차원에서 자격은 채용 시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훈련 비용을 절감하여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활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격의 노동 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기존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현행 자격 제도는 현장 적합성이 낮아서 자격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 자격은 현장 활용도가 낮고, 자격 보유자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기업의 평가가 낮으며,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직업 능력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 능력 간의 차이가 크다(강순희 외, 2002). 개인 차원에서 보면 자격의 취득은 근로자의 취업에는 도움을 주지만 취업 후 임금 상승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우영, 2001; 김안국·강순희, 2004; 박성재, 2004; 이병희, 2004; 최영섭, 2007).³⁾ 그러나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노동 시장 전체(이동임·김덕기, 2001; 이병희, 2004; 김안국·강순희, 2004)를 대상으로 하거나 청년층 노동 시장(김우영, 2002; 김안국, 2003; 박성재, 2004)만을 다루고 있으며, 산업별로 자격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나타내는 신호 기제로서 자격의 역할은 노동 시장 구조, 생산물의 특성, 노동 과정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자격의 효과가 전 산업에 걸쳐서 동질적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자격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제조업 및 제조업 내 일부 업종을 분석한 이동

1) 사전적으로 자격(certification)이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으로 정의된다(국립국어원 홈페이지 : www.korean.go.kr). 이는 광의의 자격 정의에 해당한다.

2) 내부 노동 시장에서 기능 인력은 주로 채용 후의 내부 훈련 시스템과 현장 훈련(on-the-job-training : OJT)에 의해 양성되므로 근로자의 채용 시 기업은 근로자의 현재 역량이 아니라 잠재 역량(potential capacity)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선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학력이 근로자의 잠재 역량을 나타내는 신호 기제로서 중시되어 왔다.

3) 예외적으로 이동임·김덕기(2001)는 「한국노동패널」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서 자격이 취업과 임금 모두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면허성 국가 자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격의 임금 효과가 다소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김상호(2005)와 이상준(2006)이 있고, 비교적 민간 자격이 잘 발달되어 있는 금융업을 분석한 김주섭·박성재(2004) 정도가 있다. 노동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달리 이들 연구에서는 자격의 보유가 임금에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그러나 제조업과 금융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 자격의 임금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노동 조건 및 고용 상황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서비스업 노동 시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서비스 산업 중에서 특히 문화 산업은 최근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 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좋은 연구 대상이다. 그것은 문화 산업 노동 시장이 전통적인 내부 노동 시장과는 상이한 프로젝트형 노동 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정이환, 2005 : 90-93). 문화 산업 중 영화, 연극, 음악, 애니메이션 등 고도의 창의적 능력이 필요한 업종의 종사자들은 고용주와 장기간 고용계약을 맺는 경우가 드물며 대부분 한 작품이 제작될 때까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한다. 프로젝트형 노동 시장은 근무 기간이 짧고 노동력의 유동성이 매우 높으며 기능 인력이 기업 내 교육 훈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업 외부에서 조달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시장 원리가 강하게 관철되는 외부 노동 시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 산업에서는 고도의 숙련이 요구되는 전문직 인력으로 프로젝트형으로 고용된다는 점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 시장과 같은 전통적 저숙련 외부 노동 시장과도 구분된다. 이 같은 문화 산업 노동 시장의 특성은 개인의 직무 능력을 나타내는 신호 기제로서 자격의 역할과 활용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해서 본 연구는 문화 산업에서 자격이 임금 및 노동이동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한다. 분석을 위하여 문화 산업과 비교적 자격 제도가 잘 발전되어 있는 금융산업 간의 자격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타 산업과 대비되는 문화 산업에서의 자격 효과의 특징을 파악할 것이다. 실증 분석의 결과 문화 산업에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자격의 활용도가 낮고 자격이 임금과 노동 이동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노동 시장이 비교적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산업에서 자격의 활용이 낮은 것은 문화 산업의 작업 과정은 작업자의 창의력과 실기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직무를 매뉴얼화하기 어려워 직무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표준화하기 어렵고, 직무의 보편성이 낮아서 체계적인 직업 훈련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5장으로 구성된다.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소개한 제1장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문화 산업 노동 시장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장은 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기초 통계를 설명하고,

4) 이상준(2006)은 국가기술 자격증 중 기능사 2급 자격 등급의 보유가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을 약 5.5~9.9% 정도 높이며, 김주섭·박성재(2004)의 연구에 따르면 금융 관련 자격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약 20%가량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은 자격의 임금 및 노동 이동 효과를 실증 분석한다. 마지막 제5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문화산업 노동 시장의 특성과 자격 제도

자격 제도는 다양한 노동 시장 제도에 의해 그 모습과 활용도가 결정되므로 각 나라마다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나(이동임·김덕기, 2001, 35-39), 한 국가 내에서도 산업별로 다양한 형태로 발달할 수 있다. 자격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⁵⁾ 여기서는 문화 산업의 생산물 시장의 특성, 인적 자원 관리 관행, 직업 훈련 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⁶⁾

문화 산업의 노동 시장은 매우 이질적인 하위 산업의 노동 시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문화 산업 노동 시장의 특징을 단일하게 정의하는 것은 과다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문화 산업 인력은 문화 인력, 문화 서비스 인력, 문화 지원 인력 및 비문화 인력으로 구성되며(황준옥 외, 2004 : 37-38), 각 인력 유형은 인적 자본의 성격, 채용 관행 및 보수 결정 등에서 상이한 특성을 보이므로 문화 인력의 특성을 단일하게 정의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다른 산업과 구분되는 문화 산업 노동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화 산업의 고유한 노동 시장 특성을 어느 정도 일반화하여 도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기존 연구에 근거해서 문화 산업을 구성하는 하위 산업 노동 시장의 공통적인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황준옥 외, 2004 : 112-124; 최영섭 외, 2008 : 33-41).

첫째, 생산물 시장의 특성을 보면 문화 상품은 속성상 사전에 시장 성공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험재(experience good)적 성격이 강하며, 상품의 시장 성공이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나 기계·설비와 같은 객관적 요소보다 창작자의 창의력과 실기 능력과 같이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문예적 재능”⁷⁾에

5) 이동임·김덕기(2001)는 자격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동 시장의 유형, 인적 자원 관리 유형, 노사 관계 유형, 직업 훈련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6) 이 외에 노사 관계 유형도 자격 제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노동조합이 산업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독일의 경우 산별 노조는 사용자 단체와 단체 교섭을 통해서 자격 검정의 내용 기준을 결정하거나 직업 훈련 개선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여 자격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반면 노조가 주로 개별 기업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노조는 산업 차원의 자격 제도에 대한 관심이 적고 자격 제도의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권도 없다. 이처럼 노사 관계도 자격 제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화 산업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다른 산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노조의 영향력도 낮기 때문에(황준옥 외, 2004 : 119-120) 노사 관계가 자격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7) 문예적 재능은 특수한 숙련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으나 훈련을 통해서 양성되기 어려운 천부적 재능이라는 성격을 띠는 점에서 특수적 숙련과 구분된다.

의존하는 바가 크다. 특히 영화, 음악 등과 같이 고위험/고수익 문화 상품 생산 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문화 상품의 시장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작자로 하여금 고정 비용을 최소화하게 하는 유인을 낳으며, 절대 필요 인력을 제외하고는 외부 노동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하는 유인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문화 산업의 특성으로 작업 및 고용의 이동성과 계절적 변동성이 높고 경력 개발이 불연속적이며, 단기 고용 계약 및 다중 취업이 많다는 것이 지적된다 (EU, 2001).

둘째, 고용 형태를 보면 문화 산업에서는 상시적으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고용과 경력이 불연속적인 프리랜서나 계약직 위주의 고용 관계가 일반화되어 있다. 핵심 공정이 아닌 업무 수행에 하청이나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은 문화 산업 이외의 산업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문화 산업은 핵심 공정까지 외부 하청이나 프리랜스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과 차이가 있다(황준욱 외, 2004 : 113).

셋째, 인력 채용에 있어서 문화 산업에서는 학력보다 해당 분야의 경력이 더 중요하며 대규모 공개 채용보다는 내부 종사자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소규모 수시 채용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는 문화 산업에서는 경력과 개인 네트워크에서 파악된 개인의 특성이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나타내는 주요한 신호 기제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문화 산업은 상품의 시장 성과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과 계약직 중심의 고용 관행으로 인해 성과급과 직무급이 혼합된 임금 형태를 가진다. 임금 책정 시 주요한 기준으로 제조업에서는 학력과 근속을 중시하는 반면 문화 산업에서는 해당 직업에서의 경력이 중요시된다. 이는 개인의 창의력과 실무 능력이 문화 상품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화 산업의 특성상 고용주는 한 직업에서의 경력이 개인의 능력을 비교적 잘 나타내는 지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황준욱 외, 2004 : 115).

다섯째, 문화 산업에서 직업 교육·훈련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다. 이것은 문화 산업은 도제 제도라는 독특한 소규모 인력 양성 체계를 통해서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황준욱 외, 2004 : 118)과, 문화 상품의 성공을 좌우하는 ‘문예적 재능’은 개인의 타고난 자질에 가까운 것으로 공식적인 교육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양성되기 어렵다는 것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최영섭 외, 2008 : 36-37).

마지막으로 자력의 활용도를 보면 문화 산업에서 개인의 직무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력이 덜 발달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황준욱 외, 2004 : 118). 문화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 자격증은 2002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임 그래픽 전문가, 게임 기획 전문가 등을 비롯한 14개에 불과하며 민간 자격도 컴퓨터 그래픽 운용기능사, 영화 산업기사 등을 포함한 13개로 많지 않다.⁸⁾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문화 산업의 경우 작업 공정을 기술적으로 표준화하기 어렵고 직무의 보편성이 낮으며, 문화 상품의 시장 성공을 좌우하는 창의력과 실무 능력은 객관적으로 증명되

기 어렵다는 것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화 분야의 민간 자격 제도를 운영할 만한 공신력 있는 민간 교육 훈련 기관이 부족한 것과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기업 내부 자격이 발달하기 어렵다는 것도 자격 제도 미발달의 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시된 문화 산업에서 자격의 낮은 효과는 가설적 추측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며 본격적인 실증 연구가 이루어진 바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산업에서 자격이 임금과 노동 이동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여 동 산업에서 자격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Ⅲ. 자료와 기초 통계

1. 자료

본 연구에서 이용되는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 구조 조사」(이하 OES)이다. OES는 2001년부터 대략 전국 50,000가구를 대상(2006년 이후 75,000가구로 확대)으로 15세 이상 취업자의 인적·직장 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동 자료는 매년 조사가 실시되나 조사 대상 가구는 매년 변경된다. 분석을 위해서는 자격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OES의 2차년도(2002년)부터 6차년도(2006년)까지 5년간의 조사를 결합(pooling)한 자료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OES를 사용하는 이유는 국내의 활용 가능한 다른 자료에 비해 OES는 자격의 보유 여부뿐만 아니라 자격 종류를 개방형 코드로 제공하고 있어, 자격의 임금 및 노동이동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OES는 표본 수가 6차년도 조사의 경우 약 10만 개에 이르는 대규모 표본 조사로, 분석 대상을 문화 인력으로 한정하더라도 비교적 많은 수의 표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OES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OES는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자격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분석은 불가능하며, 자격 취득 당시의 상태에 관한 정보가 없어서 자격 취득의 결정 요인에 관한 분석 역시 불가능하다. 둘째, OES에는 자격명만이 기입되어 있을 뿐 자격의 운영 주체나 자격의 등급 등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자격 등급 간 혹은 민간 자격과 국가 자격 간 효과 비교 등과 같은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없다. 셋째, 보유 자격이 직장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도 조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유 자격이 실제 직무에서 활용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8)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9) 내부 자료

이 같은 자료의 한계로 불구하고 OES는 기존의 이용 가능한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자격의 임금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취업자의 직업을 직업 세분류(직업 4자리 분류) 수준으로 제공하는 사실상 유일한 자료이기도 하다. 분석 과정에서 직업 자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운전면허, 워드, 운동 관련 자격 등을 제외하였고, 기술의 발달로 실무 현장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주산 등의 자격도 제외하였다. 4.1절의 자격의 임금 효과 분석은 임금 근로자와 자영자의 임금(소득) 결정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 15-64세 임금 근로자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OES의 6차년도 조사에는 노동 이동 여부를 묻는 문항이 제외되었으므로 4.2절의 자격이 노동 이동에 미치는 효과는 2차년도부터 5차년도 조사를 결합한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임금은 2005년 기준의 실질 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2. 분석 대상

자격의 임금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분석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문화 산업에는 문화 인력뿐만 아니라 비문화 인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문화 산업에도 문화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 인력이 있다. 문화 산업 내에 동일한 직업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직무 내용이 상이한 문화 인력과 비문화 인력 간에는 그 자격에 대한 보상이 다를 것이다. 또한 산업 간 보상 체계의 차이로 인해 문화 산업과 비문화 산업에 종사하는 문화 인력 간에도 자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인력을 ‘문화 산업에서 일하면서 문화 관련 직업을 가진 근로자’로 정의하고 자격의 임금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OES를 이용하여 문화 산업과 문화 관련 직업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문화 관련 직업부터 정의해 보자. OES에서 제공되는 직업 정보는 한국 고용 직업 분류(KECO)에 근거하여 직업 4자리 단위(세분류)로 분류되어 있다.⁹⁾ 한국 고용 직업 분류는 직업을 24개의 중분류 직업(직업 2자리 단위)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중분류 번호 08)이다.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은 8개의 소분류 직업¹⁰⁾(직업 3자리 단위)으로 나누어지며, 그것은 다시 30개의 세분류 직업(직업 4자리 단위)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이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에 포함된 30개 세분류 직업을 문화 관련 직업으로 정의한다.¹¹⁾

9) 한국 고용 직업 분류(KECO)의 분류 체계와 각 직업의 내용에 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2008)을 참고할 것.

10) 구체적으로 작가 및 출판 전문가(081),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082), 기자(083),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084), 디자이너(085),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087),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089)이다. 여기서 ()는 한국 고용 직업 분류의 직업 소분류 번호이다.

한편 문화 산업에 대한 정의는 통계청과 문화관광부의 문화 산업 분류를 따른다. 통계청과 문화관광부는 문화 산업을 산업의 기능을 기준으로 문화 생산 제조업, 문화 생산 서비스업, 문화 유통업 및 임대업, 문화 제공업으로 분류하고 있다.¹²⁾ 그런데 통계청과 문화관광부가 분류한 문화 산업은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세세분류(산업 5자리 분류)를 기준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OES의 산업 정보에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소분류(산업 3자리 분류)만이 제공되므로 통계청과 문화관광부의 분류 기준과 완전히 동일하게 문화 산업을 정의할 수 없다. 이런 사정으로 본 연구는 통계청과 문화관광부가 문화 산업으로 분류한 세세분류 산업들이 포함된 소분류 산업들을 문화 산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¹³⁾

이상의 문화 관련 직업과 문화 산업 정의를 결합하여 문화 인력을 “산업소 분류 차원에서 정의된 문화 산업에서 일하는 30개 문화 관련 세분류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였다.¹⁴⁾

그리고 비교 집단인 금융 인력도 유사한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한국 고용 직업 분류의 중분류 직업 중 금융·보험 관련직(03)의 하위 3개 소분류 직업에 포함된 11개 세분류 직업을 금융 관련 직업으로 정의한 후, 제8차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대분류 ‘K.금융 및 보험업’에 포함된 5개 소분류 산업을 금융업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금융 인력은 “금융 관련 직업과 금융업에 모두에 속해 있는 인력”으로 정의한다.

3. 기초 통계

〈표 1〉은 앞 절에서 정의한 문화 인력, 금융 인력, 문화·금융 외 인력의 자격 취득률을 비롯한 인적·직장 특성이 나타나 있다.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 보유 유무별 월평균 소득을 보면 금융 인력과 문화·금융 외 인력의 경우 자격증 보유자가 자격증 미보유자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은 반면에, 문화 인력의 경우는 오히려 자격 미보유자의 소득이 약간 높다. 그러나 자격 취득자 비중을 보면 문화 인력은 12.2%로 금융 인력의 20.0%, 문화·금융 외 인력의 18.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는 문화 인력의 경우 자격의 활용이 크게 낮은 뿐만 아니라 자격 보유에 대한 경제적 보

11) 이것은 한국 고용 직업 분류의 직업 분류 번호 811에서 889 사이에 속하는 직업에 해당한다.

12) 문화 산업 분류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황준욱 외(2004 : 28-32)를 참고.

13) 이 경우 비문화 산업 일부가 문화 산업에 포함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문화 인력을 문화 산업 종사자가 아닌 “문화 산업 인력 중 문화 관련 직업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비문화 인력의 특성을 가진 근로자가 분석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다.

14) 문화 인력을 이렇게 정의할 경우, 문화 산업 내부의 비문화 인력의 대부분이 제외될 것이므로 문화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만을 대상으로 자격의 노동 시장 성과를 분석할 수 있다. 참고로 문화 산업의 인력은 1) 문화(창작) 인력, 2) 문화 콘텐츠 인력, 3) 문화 서비스 인력, 4) 문화 지원 인력, 5) 비문화 인력으로 구분되며(황준욱 외, 2004 : 38), 이 중 1)-4)의 문화 관련 인력과 5) 비문화 인력은 노동 이동 형태, 숙련의 성격, 직업 훈련과 자격의 노동 시장 성과 등에서 상이한 특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상도 거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문화 인력은 금융 인력에 비해 주당 근로 시간은 길고, 근속년수와 경력년수는 짧고, 평균 연령이 낮다. 이는 문화 산업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 조건이 문화 인력의 이·전직과 유출로 이어져서 문화 인력의 근속년수와 경력년수를 낮추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문화 인력은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와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기업 규모별로는 9인 미만 소기업 종사자의 비중이 51%에 이를 정도로 높다. 이처럼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 비중이 높은 것은 문화 인력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프리랜서가 고용 형태로는 자영업자로, 기업 규모로는 9인 미만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 표본 특성

(단위 : 만원, 년, 세, 시간, %)

		문화 인력	금융 인력	문화·금융 외 인력
월 평균 소득	전체	211.8 (141.2)	266.1 (171.3)	194.2 (146.6)
	자격 보유자	204.5 (143.9)	291.9 (163.6)	232.3 (142.3)
	자격 미보유자	212.8 (120.4)	259.7 (197.5)	184.9 (157.4)
자격 취득 비중		12.20	20.00	18.76
남자 비중		64.07	55.61	67.79
평균 경력년수		8.3 (6.9)	9.4 (6.9)	10.2 (8.5)
평균 근속년수		6.6 (6.9)	7.2 (6.4)	7.7 (7.9)
평균 연령		35.5 (8.3)	38.7 (8.1)	41.1 (9.4)
주당 근로 시간		51.4 (17.9)	46.3 (11.5)	54.5 (17.4)
학력	초졸 이하	9.72	21.03	30.60
	중졸	11.43	7.92	11.25
	고졸	23.11	25.81	29.30
	전문대졸	27.08	21.94	12.95
	대졸 이상	28.24	22.78	15.35
고용 형태	정규직	56.82 [78.6]	66.07 [78.7]	48.52 [68.2]
	비정규직	15.50 [21.4]	17.94 [21.3]	17.93 [31.8]
	고용주	6.63	1.58	7.47
	자영업자	19.50	14.34	20.79
	무급가족종사자	1.55	0.07	5.29
기업 규모	5인 미만	37.68	13.28	43.05
	5-9인	13.08	8.01	11.24
	10-29인	16.89	30.79	13.08
	30-99인	14.37	26.92	13.59
	100-299인	7.35	8.11	7.40
	300인 이상	9.41	11.69	10.76

		문화 인력	금융 인력	문화·금융 외 인력
조 사 년도	2002년	19.76	17.90	18.80
	2003년	16.23	20.10	17.60
	2004년	18.91	19.60	20.10
	2005년	17.70	16.80	19.10
	2006년	27.40	25.60	24.40
표본 수		3,877	6,979	306,849

주 : 1) ()은 표본편차임.

2) []는 임금 근로자 중에서의 비중임.

넷째, 고용 형태¹⁵⁾별로 보면 알려진 것과는 달리 문화 산업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은 높지 않다. 임금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비율은 문화 산업의 경우 약 21.4%인데, 이는 금융 인력과 비슷하고 문화·금융 외 인력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문화 인력을 ‘문화 산업에서 일하는 문화 관련 직업 보유자’로 정의하여,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화 산업의 비문화 인력이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 인적 특성별 자격 보유 현황

(단위 : %, 명)

		문화 인력		금융 인력		문화·금융 외 인력	
		자격 보유율	표본 수	자격 보유율	표본 수	자격 보유율	표본 수
성	남자	11.63	2,484	17.60	3,881	18.71	207,023
	여자	13.21	1,393	23.01	3,098	18.86	99,826
학력	초졸 이하	11.14	377	27.93	1,468	10.68	90,564
	중졸	18.28	443	20.07	553	16.95	33,290
	고졸	9.82	896	16.49	1,801	15.29	86,717
	전문대졸	13.24	1,050	19.73	1,531	31.10	38,336
	대졸 이상	11.14	1,095	17.11	1,590	32.56	45,442
고용 형태	정규직	14.62	2,203	15.66	4,611	25.40	143,613
	비정규직	10.65	601	20.77	1,252	9.04	53,080
	고용주	10.51	257	24.55	110	18.99	22,097
	자영업자	7.54	756	38.56	1,001	15.75	61,545

15) OES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조사 대상자의 응답에 따라 구분하는 ‘자기 선언적(self-declared)’ 방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OES의 비정규직의 규모는 경제 활동 인구 조사 부가 조사 등 다른 조사를 바탕으로 추정된 비정규직 규모와 차이가 있다.

		문화 인력		금융 인력		문화·금융 외 인력	
		자격 보유율	표본 수	자격 보유율	표본 수	자격 보유율	표본 수
경력 년수	2년 미만	13.35	547	16.79	822	11.73	42,913
	2-4년	14.47	636	19.63	912	15.52	39,793
	4-6년	12.18	550	18.17	787	18.15	32,611
	5-10년	12.85	615	21.09	1,138	22.15	36,709
	10년 이상	10.82	1,063	21.30	2,568	22.08	109,774
연령	30세 미만	15.46	1,054	10.18	933	23.89	36,647
	30대	12.80	1,711	19.53	2,954	22.88	94,521
	40대	8.04	846	23.08	2,370	16.63	103,863
	50대	9.68	217	23.50	600	12.72	52,801
기업 규모	5인 미만	8.69	1,461	32.69	927	13.82	127,415
	5_9	16.57	507	12.88	559	18.31	33,263
	10_29	15.88	655	16.47	2,149	20.33	38,714
	30_99	14.36	557	20.22	1,879	29.66	40,215
	100_299	12.63	285	17.49	566	20.53	21,892
	300인 이상	10.14	365	21.45	816	22.39	31,842

주 : 분류 불능 제외.

〈표 2〉는 문화 인력의 인적 특성별 자격 보유율이 나타나 있다. 문화 인력의 자격 보유율을 성별로 보면 여자가 13.2%로 남자의 11.6%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성별 특성은 금융 인력과는 같고 문화·금융 외 인력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문화 인력의 자격 보유율은 남녀 모두에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학력별로 보면 문화·금융 외 인력의 경우 대체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격 보유율도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문화 인력의 경우 자격 보유율은 중졸이 가장 높고 고졸이 가장 낮으며, 초졸 이하와 대졸 이상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즉 문화 산업에서는 자격 보유와 학력 간에 체계적인 관련이 없다.

고용 형태별 자격 보유 현황에서 특징적인 것은 문화 인력의 경우 비정규직의 자격 보유율이 고용주나 자영업자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자격 보유가 비정규직보다 높은 문화·금융 외 인력 및 금융 인력과 대조적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핵심 인력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문화 산업의 고용 관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흥미로운 것은 연령별 자격 보유율 현황이다. 비교 대상인 금융 인력의 경우 대체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자격 보유율이 높아지는 반면, 문화 인력의 경우 자격 보유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낮아진다. 이 같은 차이는 자격 제도의 발전과 활용 수준에 있어서 문화 산업과 금융 산업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금융 인력의 경우 자격이 청년층의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승진 또는 현 직무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되고 있는 반면(김주섭·박성재, 2008 : 150), 문화 인력의 경우 자격은 주로 청년층이 취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며 재직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용은 낮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IV. 실증 분석

1. 자격의 임금 효과

본 절에서는 자격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자격의 임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임금함수를 추정해야 한다.

$$\ln Y_i = \alpha + \beta X_i + \gamma C_i + \mu_i \quad (1)$$

여기서 Y 는 월평균 시간당 임금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며, X_i 는 개인의 인적·사업체 특성 벡터(성, 연령, 학력, 근속년수, 결혼 여부, 고용 형태, 기업 규모 등)이며, C_i 는 자격증의 보유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보유=1)이다.

자격의 임금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관심 변수인 C_i 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변수가 아니라 개인의 의사 결정에 따라 선택되는 내생 변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C_i 의 추정계수 γ 의 해석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개인의 '적극성'과 '성취동기'와 같이 관측되지 않은 개인의 특성이 자격의 취득과 임금에 동시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면, C_i 와 μ_i 가 양의 상관을 갖게 되므로 자격의 임금 효과는 과대 추정된다.

임금과 자격 취득이 어떤 관측되지 않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 동시에 결정되는 경우 임금 방정식과 자격 취득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선택 모형(selection model)을 설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 변수법(instrumental variable : IV)을 이용하여 자격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도구 변수 추정법은 다음의 2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먼저 일 단계 추정에서는 아래의 식 (2)같이 잠재적 내생 변수인 자격 보유 변수(C_i)를 도구 변수와 특성벡터(X_i)로 회귀하여 자격 취득 변수의 예측값(\hat{C}_i)을 구한다.

$$C_i = \alpha + \beta X_i + \delta R_i + \epsilon_i \quad (2)$$

그리고 이 단계 추정에서는 식 (1)에 C_i 대신에 일 단계 추정에서 얻은 \hat{C}_i 를 독립 변수에 포함한 후 OLS를 실시하여 \hat{C}_i 의 추정계수를 구한다.

여기서 문제는 적합한 도구 변수 R_i 를 찾아내는 것이다. 도구 변수는 1) 자격 보유 여부와 상관되어 있어야 하지만($Cov(C_i, R_i) \neq 0$) 2) 관측되지 않은 개인의 속성과는 무관해야 한다($Cov(\mu_i, R_i) = 0$)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OES의 조사년도별 ‘각 자격종의 직업별(직업 4자리분류) 취득자 비율’을 도구 변수로 사용한다.¹⁶⁾ 특정 자격종의 직업별 취득자 비율은 그 자격이 해당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정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R 은 $0 \leq R \leq 1$ 의 값을 갖는데, 만일 어떤 자격의 직업별 취득자 비율이 1에 가까우면, 그 자격은 해당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면허에 해당하는 자격이라 할 수 있다. 반면 R 이 0에 가까우면 그 자격종은 해당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취득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로 근로자에게 받아들여진다. 이 ‘자격의 직업별 취득자 비율’은 자격 취득(C_i)과 상관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도구 변수의 첫 번째 조건($Cov(C_i, R_i) \neq 0$)을 만족하며, 개인의 특성과는 관계없는 직업별 취득자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두 번째 조건($Cov(\mu_i, R_i) = 0$)도 만족하므로 도구 변수로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도구 변수 추정의 일 단계 추정에서는 엄밀하게 자격 취득 당시 시점의 직업별 자격종 취득자 비율을 도구 변수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OES에는 자격 취득 시점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자격 취득 당시의 특성 변수도 구분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시점에서의 ‘자격의 직업별 취득자 비율’을 도구 변수로 사용한다. 따라서 자격의 직업별 취득자 비율이 조사 시점과 자격 취득 시점 간에 차이가 없어야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 변수가 유효성을 가질 것이다. 지면 관계로 인해 문화 인력과 금융 인력의 자격 보유 현황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2002-2006년 기간 동안 두 집단이 보유한 자격들의 직업별 취득자 비율에는 어느 정도 변동이 있다. 그러나 자격의 직업별 취득자 비율의 연도별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변동의 대부분은 취득자 비율 5% 미만에서 발생하며, 두 집단이 취득하고 있는 자격의 거의 대부분은 해당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필수적인 면허형 자격이 아니라 해당 직업으로의 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능력 인정형 자격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¹⁷⁾ 따라서 자격의 직업별 취득자 비율의 연도별 변동이 근로자의 자격 취득 선택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16) 도구 변수 선정에는 이상준(2006)의 아이디어를 참고했다.

17) OES에서 2002-2006년 기간 문화 인력과 금융 인력이 보유한 자격의 약 91%와 65%는 직업별 취득자 비중이 평균 5% 미만이었다. 참고로 업무 독점(면허)형 성격의 자격은 금융 인력의 경우 손해 사정인 직업에서의 손해 사정인 자격(취득률 평균 65%), 문화 인력의 경우 사서 및 기록물 관리자 직업에서의 사서 자격(취득률 평균 39%) 등 두 개에 불과했다.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 선택된 도구 변수의 유효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에는 자격의 잠재적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은 OLS모형의 임금함수 추정 결과가 나타나 있다. 자영자와 임금 근로자 간에 소득 결정 원리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임금 근로자에 한정해서 분석했다. 추정 결과는 대체로 예상과 일치한다. 문화 인력과 금융 인력 모두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결혼 유배우자는 미혼과 결혼 무배우자보다, 고학력자는 저학력자보다, 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과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문화 인력과 금융 인력 간에는 상당한 차이도 존재한다. 우선 문화 인력은 금융 인력에 비해서 남자와 결혼 유배우의 임금 프리미엄이 작고, 연령에 따른 임금 증가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특성이 동일할 경우 문화 인력은 비교적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작고 임금의 연공급적 성격이 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금융 인력에서는 경력보다 연령의 임금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문화 인력에서는 경력의 임금 효과가 연령의 임금 효과를 압도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문화 산업에서는 경력이 개인의 직무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상대적으로 중시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관심인 자격의 임금 효과를 나타내는 자격 보유 더미의 추정 결과를 보면 금융 인력의 경우 자격이 임금에 11.2%가량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문화 인력의 경우 자격 보유의 임금 효과가 0.3%에 불과했으며 유의하지도 않다. 즉 금융 인력이 자격을 보유하면 약 2.5년의 경력에 해당하는 임금 프리미엄을 획득하고 있으나, 문화 인력은 자격 보유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격의 임금 효과 추정 결과 (OLS)

	문화 인력			금융 인력		
	계수값	표준오차	유의도	계수값	표준오차	유의도
상수항	3,647	0.200	***	3,114	0.138	***
성별더미(남성=1)	0.138	0.020	***	0.195	0.014	***
결혼더미(결혼유배우자=1)	0.046	0.023	**	0.082	0.017	***
주당 근로 시간	0.003	0.001	***	0.003	0.001	***
학력(고졸=1)						
초졸 이하	-0.219	0.039	***	-0.240	0.022	***
중졸	-0.083	0.036	**	-0.153	0.025	***
전문대졸	0.038	0.030		0.039	0.020	*

	문화 인력			금융 인력		
	계수값	표준오차	유의도	계수값	표준오차	유의도
대졸 이상	0.240	0.029	***	0.207	0.018	***
경력년수	0.045	0.005	***	0.045	0.003	***
경력년수 제곱	-0.001	0.000	***	-0.001	0.000	***
연령	0.027	0.012	**	0.063	0.007	***
연령 제곱	0.000	0.000	*	-0.001	0.000	***
정규직 더미(정규직=1)	0.271	0.023	***	0.229	0.016	***
기업 규모(9인 미만=1)						
10_29인	0.062	0.024	**	0.105	0.019	***
30_99인	0.141	0.025	***	0.121	0.020	***
100-299인	0.212	0.032	***	0.144	0.025	***
300인 이상	0.363	0.030	***	0.271	0.023	***
자격 보유 더미(보유=1)	0.003	0.026		0.112	0.015	***
Adj R2	0.3964			0.4652		
F	83.73			230.450		
표본 수	2,646			5,541		

주 :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

2) 분석에는 조사 연도 더미(2002년=1)가 설명변수에 포함되어 있음(결과 생략).

한편, 문화 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자격의 임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화 인력의 일부 집단에서는 자격의 임금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하여 앞의 추정 모형에 자격 변수 대신 성, 연령, 직업 등의 특성 변수와 자격의 상호 교호항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상호 교호항이 가지는 임금 효과를 통해서 문화 인력의 어떤 집단에서 자격의 임금 프리미엄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표 4>를 보면 50대 이상 연령층에 예외적으로 자격의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특성 집단에서 자격은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분류 직업별로는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 관리자(082)와 기자(083)에서 자격은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인적·직장 특성별 자격의 임금 효과 (문화 인력)

특성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특성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직업	081*자격	0.066	(0.129)	연령	30세미만*자격	0.007	(0.041)
	082*자격	-0.203	(0.113)*		30대*자격	-0.025	(0.036)
	083*자격	-0.225	(0.128)*		40대*자격	0.000	(0.075)
	084*자격	-0.101	(0.140)		50세이상*자격	0.268	(0.127)**
	085*자격	-0.083	(0.079)	성	남자*자격	0.006	(0.034)
	086*자격	0.035	(0.175)		여자*자격	-0.011	(0.040)
	087*자격	-0.001	(0.096)	학력	초졸 이하*자격	0.414	(0.460)
	088*자격	-0.125	(0.327)		중졸*자격	0.377	(0.456)
기업 규모	5인 미만*자격	-0.106	(0.211)		고졸*자격	0.419	(0.455)
	5-9인*자격	0.059	(0.209)		전문대졸*자격	0.373	(0.454)
	10-29인*자격	-0.035	(0.209)		전문대졸*자격	0.372	(0.454)
	30-99인*자격	0.023	(0.210)	경력 년수	2년미만*자격	-0.036	(0.050)
	100-299인*자격	0.065	(0.218)		2-4년*자격	0.090	(0.073)
	300인이상*자격	0.024	(0.218)		4-6년*자격	0.093	(0.078)
고용 형태	정규직*자격	-0.006	(0.029)		6-10년*자격	0.002	(0.072)
	비정규직*자격	0.021	(0.063)		10년이상*자격	0.016	(0.076)

주 : 1) 081=작가 및 출판 전문가, 082=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 관리자, 083=기자, 084=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085=디자이너, 086=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087=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088=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2) *, **은 각각 10%, 5% 수준에서 유의.

그러나 앞에서 설명했듯이 〈표 3〉과 〈표 4〉에서 제시되어 있는 자격의 임금 효과의 추정치는 관측되지 않는 개인의 속성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대 추정된 값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 변수의 잠재적 내생성을 고려하여 자격증의 직업별 취득 비율을 도구 변수로 사용하여 2단계 회귀식(2SLS)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2단계 추정 회귀의 결과 금융 인력의 경우 자격의 임금 효과가 5.5%($p=0.091$)로 OLS 추정 결과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감소하였으며 문화 인력의 경우는 자격의 임금 효과가 음(-)으로 바뀌었다. 이는 OLS 추정에서 자격의 임금 효과가 과대 추정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나 분석의 질적인 결론은 동일하다. 즉 자격 보유가 금융 인력에서는 유의한 임금 효과를 가지나 문화 인력에서는 자격의 임금 효과가 없다. 한편 자격 이외 설명 변수의 추정계수 값은 표 〈3〉의 OLS 추정 결과와 거의 동일하다.

〈표 5〉 도구 변수를 이용한 자격의 임금 효과 추정 결과 (2SLS)

	문화 분야		금융 분야	
	2단계 구조식	1단계식	2단계 구조식	1단계식
종속 변수	$\ln Y_i$	C_i	$\ln Y_i$	C_i
상수항	3.745 (0.210) ***	0.302 (0.151) **	3.098 (0.138) ***	-0.111 (0.106)
성별 더미(남성=1)	0.120 (0.021) ***	0.044 (0.015) ***	0.193 (0.015) ***	-0.045 (0.011) ***
결혼더미(결혼유배우=1)	0.046 (0.024) *	-0.018 (0.017)	0.084 (0.017) ***	**
주당 근로 시간	0.002 (0.001) ***	-0.001 (0.000)	0.003 (0.001) ***	-0.001 (0.000) *
학력(고졸=1)				
초졸 이하	-0.237 (0.041) ***	0.034 (0.030)	-0.241 (0.022) ***	-0.025 (0.017)
중졸	-0.093 (0.037) **	0.089 (0.027) ***	-0.154 (0.025) ***	-0.021 (0.019)
전문대졸	0.019 (0.031)	0.015 (0.022)	0.039 (0.020) *	-0.004 (0.015)
대졸 이상	0.216 (0.030) ***	0.002 (0.022)	0.210 (0.018) ***	0.051 (0.014) ***
경력년수	0.045 (0.005) ***	0.002 (0.004)	0.045 (0.003) ***	-0.002 (0.002)
경력년수 제곱	-0.001 (0.000) ***	0.000 (0.000)	-0.001 (0.000) ***	0.000 (0.000)
연령	0.024 (0.012) **	-0.008 (0.009)	0.065 (0.007) ***	0.013 (0.006) *
연령 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	0.000 (0.000) *
정규직 더미(정규직=1)	0.269 (0.024) ***	0.034 (0.017) *	0.227 (0.016) ***	-0.032 (0.012) ***
기업 규모(9인 미만)				
10_29인	0.066 (0.025) ***	0.012 (0.018)	0.105 (0.019) ***	0.009 (0.015)
30_99인	0.135 (0.026) ***	-0.013 (0.019)	0.122 (0.020) ***	0.016 (0.015)
100~299인	0.209 (0.033) ***	-0.017 (0.024)	0.145 (0.025) ***	0.002 (0.019)
300인 이상	0.364 (0.031) ***	-0.031 (0.022)	0.274 (0.023) ***	0.039 (0.018) *
자격보유더미 C_i (보유=1)	-0.064 (0.073)		0.055 (0.033) *	
도구 변수(R_i)		0.041 0.002 ***		0.032 (0.001) ***
Adj R2	0.3886		0.4639	
F	83.55***		227.54***	
하우스만 외생성 테스트	p=0.336		p=0.051	
표본 수	2,646		5,541	

주 :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

2) 분석에는 조사 연도 더미(2002년=1)가 설명 변수에 포함되어 있음(결과 생략).

3) $\ln Y_i$ 는 시간당 실질 임금, C_i 는 자격증 취득 더미(취득=1)임.

4) 도구 변수 R_i 는 각 자격증의 직업별 취득자 비율임.

도구 변수 추정에서 자격 보유 변수의 외생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하우스만 외생성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가 <표 5>의 하단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귀무가설은 임금 방정식(식 (1))의 잔차항 μ_i 과 자격 취득 방정식(식 (2))의 잔차항 ε_i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자격이 외생 변수라는 가정이 기각되므로 OLS 추정보다 도구 변수를 이용한 2단계 추정이 더 적합한 추정 방법이 된다. 하우스만 테스트의 결과, 자격 변수가 외생 변수라는 가설은 문화 인력에서는 기각되지 않으나 금융 인력에서는 기각된다($p=0.051$). 즉 금융 인력에서 자격 보유의 임금 효과에 대한 OLS 추정은 내생성 편의로 인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 경우 도구 변수를 이용한 2단계 추정이 더 적합한 방법이 된다. 반면 문화 인력의 경우 자격의 외생성 가정이 기각되지 않으므로 OLS를 이용해서 신뢰할 수 있는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격 변수의 외생성 테스트에 이어서 도구 변수의 적합성에 대해서 검증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 도구 변수로 사용된 ‘각 자격종의 직업별 취득자 비율(R_i)’이 자격의 유효한 도구 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1) 자격 보유 변수(C_i)가 R_i 와 상관되어 있어야 하며 (2) R_i 가 개인의 관측되지 않은 속성과는 독립이어야 한다. <표 5>의 1단계식 추정 결과, R_i 는 C_i 와 유의 수준 1%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은 문제는 R_i 가 관측되지 않은 개인 특성과 독립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증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임금 방정식에 C_i 대신 R_i 를 설명 변수로 포함시켜 추정한 후 R_i 의 추정계수 값의 유의성을 보는 것이다(Evans & Schwab, 1995 : 965-967). 추정 결과를 보면 문화 인력과 금융 인력 모두에서 R_i 의 추정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¹⁸⁾ 이는 R_i 가 개인의 관측되지 않은 속성과 유의하게 상관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 변수의 선택이 적절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2. 자격이 노동 이동에 미치는 효과

노동 이동과 관련해서 자격은 개인이 직무 능력을 나타내는 신호 기제(signalling device)로서의 역할을 한다. 노동 이동 시에 자격이 근로자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 수단으로 충분하게 기능한다면 기업은 채용에 있어서 근로자의 능력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줄일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입장에서 구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자격은 노동 시장에서 노동 이동을 촉진하여 전체적으로 일자리 일치(job match)를 높일 수 있어 새로운 산업이나 직종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공급을 촉진하는 역할

18) 추정 결과 R_i 의 추정계수의 p값은 문화 인력의 경우 0.394, 금융 인력의 경우는 0.112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필자에게 요청 시 제공될 것이다.

을 한다. 여기서는 OES 자료를 사용하여 문화 인력과 금융 인력에서 자격 보유가 노동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OES 자료에는 ‘지난 1년 동안 직장을 이동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가 있다. 그러나 OES 자료는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취업에서 실업 혹은 비경활로 이동한 경우는 파악할 수 없으며, 지역 이동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 고용 직업 분류의 세분류 직업(직업 4자리 분류)을 기준으로 임금 근로자의 직업 내 이동과 직업 간 이동에 관한 부분만을 다루고자 한다. OES자료의 6차 조사(2006년)에는 지난 1년 동안 직장 이동 경험을 묻는 항목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OES 자료의 2-5차 조사를 결합한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지난 1년간의 직업 간 이동 및 직업 내 이동의 실태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문화 인력의 임금 근로자 중에서 지난 1년간 노동 이동을 경험한 근로자는 문화 인력 전체 표본의 7.1%에 해당하는 130명이다. <표 6>에서 두드러진 발견은 문화 인력에서 직업 내 이동 비율은 다른 부문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직업 내 이동 비율은 문화 인력의 경우 3.7%로, 금융 인력의 2.3%, 문화·금융 외 인력의 2.6%에 비해 1%p 이상 높다. 이처럼 문화 인력의 높은 직업 내 이동 비율은 문화 인력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비문화 직업에서 발생한 이직자가 문화 직업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 인력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직업 내 이동 비율이 높고 직업 간 이동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의 노동 이동이 예외적으로 낮으며, 학력별로는 중졸과 고졸 학력에서는 직업 간 이동 비율이 직업 내 이동 비율 보다 높으나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반대로 직업 내 이동 비율이 직업 간 이동 비율보다 더 높아지는 것도 특징적이다. 자격 유무별로 보면 자격 보유자의 직업 내 이동 비율이 직업 간 이동 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것도 다른 분야 인력의 직업 이동 패턴과 구분되는 문화 인력의 특징이다.

<표 6> 지난 1년간 직업 내 이동 및 직업 간 이동 현황

(단위 : %)

		문화 인력		금융 인력		문화·금융 외 인력	
		직업내이동	직업간이동	직업내이동	직업간이동	직업내이동	직업간이동
전체		3.7(68)	3.4(62)	2.3(90)	3.7(145)	2.6(5,171)	10.8(21,476)
성	남자	3.4	3.6	2.8	4.0	2.6	11.1
	여자	4.0	3.1	1.7	3.2	2.7	10.0
연령	30세미만	4.0	4.1	1.8	4.8	2.9	10.2
	30대	4.2	3.3	2.7	4.2	2.9	11.2
	40대	1.4	2.3	2.5	3.1	2.4	10.6
	50대	3.5	1.7	0.7	1.3	2.1	10.9

		문화 인력		금융 인력		문화·금융 외 인력	
		직업내이동	직업간이동	직업내이동	직업간이동	직업내이동	직업간이동
학력	초졸 이하	0.9	0.5	0.8	0.7	1.7	3.8
	중졸	1.2	2.3	1.8	3.2	2.5	9.7
	고졸	5.3	5.7	3.2	4.8	3.5	17.4
	전문대	2.7	2.2	0.9	2.0	1.7	7.8
	대졸	5.3	4.3	3.7	6.3	3.6	14.4
자격 유무	있음	4.8	2.7	1.3	5.3	3.8	9.2
	없음	3.5	3.5	2.5	3.4	2.3	11.2

주 : ()는 지난 1년 이내에 노동 이동을 한 표본의 수임.

〈표 6〉의 결과는 임금 근로자의 개별 특성과 노동 이동과의 단순한 관계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격의 노동 이동 효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자격이 노동 이동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분석에서 종속 변수는 노동 이동 더미(이동=1)이다.

〈표 7〉 자격이 노동 이동에 미치는 영향 : 프로빗 모형

	문화 인력			금융 인력			문화·금융 외 인력		
	계수값	dF/dx	표준오차	계수값	dF/dx	표준오차	계수값	dF/dx	표준오차
상수항	-0.695		(0.857)	-3.948		(0.785)***	-1.905		(0.300)***
성별 더미(남성=1)	0.004	0.016	(0.093)	0.225	0.009	(0.077)***	0.307	0.001	(0.036)***
결혼 더미 (결혼유배우자=1)	0.033	0.019	(0.108)	0.154	0.010	(0.093)*	0.060	0.008	(0.047)
학력 더미(고졸=1)			(0.857)						
초졸 이하	-0.223	-0.033	(0.255)	-0.073	-0.017	(0.148)	-0.350	-0.450	(0.052)***
중졸	0.127	0.037	(0.187)	0.342	0.026	(0.140)**	-0.185	-0.023	(0.055)***
전문대졸	0.078	0.024	(0.127)	0.014	0.014	(0.115)	-0.214	-0.027	(0.056)***
대졸 이상	-0.162	-0.019	(0.112)	0.063	0.011	(0.085)	-0.072	-0.010	(0.048)
경력년수	-0.054	-0.004	(0.023)**	-0.149	-0.002	(0.015)***	-0.040	-0.006	(0.004)***
경력년수 제곱	0.001	0.000	(0.001)**	0.005	0.000	(0.001)***	0.035	0.005	(0.059)**
연령	-0.024	-0.009	(0.050)	0.171	0.005	(0.043)***	-0.010	0.001	(0.015)
연령 제곱	0.000	0.000	(0.001)	-0.002	-0.000	(0.001)***	0.000	0.000	(0.000)
정규직 더미 (정규직=1)	0.085	0.017	(0.107)	-0.138	-0.011	(0.081)*	0.044	0.006	(0.040)

	문화 인력			금융 인력			문화·금융 외 인력		
	계수값	dF/dx	표준오차	계수값	dF/dx	표준오차	계수값	dF/dx	표준오차
기업 규모(9인 미만)									
10_29인	0.101	0.020	(0.108)	-0.084	-0.011	(0.095)	-0.016	-0.002	(0.051)
30_99인	0.192	0.023	(0.115)	-0.203	-0.011	(0.099)**	-0.033	-0.005	(0.051)
100~299인	0.012	0.028	(0.159)	-0.112	-0.014	(0.127)	-0.216	-0.026	(0.068)***
300인 이상	-0.404	-0.019	(0.172)	-0.303	-0.011	(0.126)**	-0.494	-0.052	(0.066)***
자격 보유 터미(보유=1)	0.077	0.023	(0.122)	0.087	0.011	(0.085)	0.119	0.018	(0.043)***
Log likelihood	-579.49***			-977.45***			-3942.15***		
LR Chi2	258.53			367.75			3504.03		
표본 수	1,827			3,926			198,853		

주 :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

2) dF/dx 는 다른 변수가 표본의 평균값에 고정되어 있을 경우 각 변수의 한계 변화가 노동 이동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냄.

출처 : OES의 2차에서 5차 조사를 결합하여 사용하였음.

추정 결과는 <표 7>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초점인 자격 터미의 추정계수 값을 보면 자격은 문화 인력의 노동 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 인력이 보유한 자격은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 이동과 관련해서도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자격의 임금 효과가 비교적 뚜렷했던 금융 인력의 경우에도 자격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다른 대부분의 설명 변수도 문화 인력의 노동 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외적으로 근속년수만은 노동 이동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문화 인력을 대상으로 자격의 노동 시장 성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여기서 문화 인력을 ‘문화 산업에 종사하면서 문화 관련 직업을 가진 근로자’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 인력은 다른 분야 인력에 비해 자격 보유율이 상당히 낮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격 보유율이 낮아지는 등 자격의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격은 문화 인력의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OLS뿐만 아니라 자격의 잠재적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도구 변수를 사용한 추정에서도 자격의 임금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자격이 문화 인력의 직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신호 기제로서 기능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자격은 문화 인력의 노동 이동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격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능력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줄여주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구직 기간을 단축하여 전체적으로 일자리 일치(job match)를 높이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외부 노동 시장의 성격이 강한 문화 산업에서 이처럼 자격이 발달하지 못한 것은 작업자의 창의력과 실기 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직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도 않고, 개인의 표준적인 직무 능력보다 문예적 재능이라고 하는 객관화하기 어려운 개인의 역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문화 산업의 작업 공정상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추측된다. 여기에 덧붙여 문화 산업의 경우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여 사내 자격 제도가 발달하기 어렵고, 민간 자격 제도를 운영할 만한 공신력 있는 민간 교육 훈련 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도 자격 제도 미발달의 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실증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발견은 직업 경력년수가 문화 인력의 노동 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비교적 크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경력년수가 높아질수록 임금은 증가하고 노동 이동도 감소하는 것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문화 산업에서 자격을 대신해서 경력년수가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고용 안정성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문화 인력에 대한 경력 인증 지원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하여 경력이 개인이 능력을 나타내는 신호 기제로서 보다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 실증 분석을 위해 사용된 OES 자료는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횡단면 조사이므로 자격의 취업 효과를 분석할 수 없었고, 자격 취득 시점의 노동 시장 지위와 개인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자격 취득의 결정 요인에 관한 분석도 할 수 없었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은 문화 인력이 보유한 자격의 질적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묶어서 임금 및 노동 이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해석에 한계가 많다. 즉 자격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그렇지 못한 자격, 혹은 취득 자격의 분야와 종류, 등급으로 분류한 후, 분류된 자격들이 임금 및 노동 이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야 자격이 효과를 올바르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자료의 한계로 자격의 질적 특성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 셋째, 문화 산업은 노동 시장과 작업 공정의 특성이 상이한 여러 가지 하위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하위 산업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고 후속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의 구축이 요구된다.

참고 문헌

- 강순희·김안국·박성재·김주섭·김승택·김덕호·정주연·박충렬(2002), 「자격 제도의 비전과 발전 방안」,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 김안국(2003), 청년층 미취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6권 1호, 26-52.
- 김안국·강순희(2004), 자격 취득의 결정 요인 및 취업·임금 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7권 1호, 1-25.
- 김우영(2002), 학력, 훈련, 아르바이트, 자격증의 경제적 효과, 「제1회 산업·직업별 고용 구조 조사 및 청년 패널 심포지엄 발표 논문집」, 중앙고용정보원, 98-122.
- 김주섭·박성재(2004), 금융산업의 자격 관리·운영 실태와 시사점, 「자격과 노동 시장 연구」(126-163),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 박성재(2004), 청년층 노동 시장 이행에서 직업 훈련과 자격의 효과, 「자격과 노동 시장 연구」(47-76),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 이동임·김덕기(2001), 「노동 시장에서 자격의 활용도 제고 방안」,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동임·김상호(2005), 자격 보유자의 실태와 자격의 취업 및 임금 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5권 3호, 131-149.
- 이상준(2006), 자격증이 임금, 노동 이동에 미치는 효과 : 기능사 2급 자격증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29권 2호, 145-169.
- 이병희(2004), 자격의 취득·보유·활용 실태와 노동 시장 성과, 「자격과 노동 시장 연구」(6-45),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 정이환(2005), 한국 영화 산업 노동 시장의 구조적 특징, 「산업노동연구」, 제11권 제2호, 89-118.
- 최영섭(2007), 청년 패널 조사 결과를 이용한 자격 및 훈련의 노동 시장 효과 분석, 「제6회 산업·직업별 고용 구조 조사 및 청년 패널 심포지엄 논문집」, 한국고용정보원, 583-613.
- 최영섭 외 (2008),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 중장기 종합 정책 방안 수립,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한국고용정보원(2008), 「2007 한국 고용 직업 분류」, 서울 : 한국고용정보원.
- 황준옥 외 14인 (2004), 문화콘텐츠 산업 인력 구조 및 직무 분석,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Marsden, D.(1999), *A Theory of Employment Systems*, Oxford university Press.
- Evans, W.N. and R.M. Schwab(1995), Finishing High School and Sarting College : D Catholic make a difference? *Quarterly Jorunal of Economics*, 110(4), 941-974.
- EU(2001), *Job Creation Potential of Cultural Sector*, European Commission.

Abstract

Examining the Certification Effects on Wage and Job Mobility in the Cultural Sector in Korea

Kim, Joon-Young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Using data from the second to the sixth surveys of the Korea OES (Occupational Employment Survey),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s of vocational certification on wage and job mobility of workers in the cultural sector in Korea. For comparison purposes, this paper also analyzes the impact of the acquisition of certific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that is known as vocational certification is relatively well developed. This study uses the portion of certification by occupation as Instrumental Variable (IV) to take into account the potential endogeneity of the acquisition of certification. The empirical results do not indicate any evidence that the acquisition of certification has significant impacts on wage and job mobility in the cultural sector. However, this paper shows that in the financial sector, the certification effect on wage has about 11.2% in OLS and 5.5% in IV estimation, although the job mobility effect of certification is not significant in the same sector. An interesting finding is that the length of career in a certain occupation has significant effects on wage as well as the job stability of workers in the cultural sector.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suggest that vocational certification does not function as a signal system, but that length of career may play a role in signaling the capacity of a worker in the cultural sector.

[Key Words : cultural industry, vocational certification, effect of certification on wage, labor mobility]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인증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인증 제도는 공연예술에 참여하는 다양한 직군 가운데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을 담당하는 기술 스태프를 대상으로 소정의 검정 절차를 거쳐 국가에서 자격증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무대기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연예술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의 속에 1999년 공연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이 제도 시행 10년을 맞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제도 정착 및 변천 과정을 정리해 보고,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한 후 몇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1999년 2월 8일자 전문 개정 법률인 ‘공연법’ 제4장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개념·종목·등급, 교육 및 검정 기관,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인증 제도가 공식화되었다. 이후 검정 기관의 주관 하에 검정 시험이 실시되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 총 1,764건의 자격증 교부 실적을 보였다. 등급별로는 1급 400건, 2급 589건, 3급 775건이며, 종목별로는 무대기계 561건, 무대조명 670건, 무대음향 533건으로 무대음향 분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500석 이상 공공 공연장의 의무 배치도 상당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연장의 경우에는 현재 근무 중인 자격자 수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자격자 수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제도 시행 10년 동안 가장 큰 변화는 지정 교육기관 제도와 실무 경력 인정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이제 검정 시험에 있어서는 모든 응시자가 이론 시험과 실기 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경과 조치에 의하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대기술 인력은 기존의 방식대로 실무 경력에 의한 합격 인정이 유지된다. 그렇지만 자격자의 배출 규모나 검정 시험 시스템 정비 등을 볼 때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인증 제도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배출된 자격자를 공연장에 배치하는 문제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연장에 무대예술 전문인의 수가 많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세 종목으로 되어 있는 자격 종목을 확대하여 새롭게 ‘무대장치’를 신설하여 무대장치,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의 네 종목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제어 : 무대예술 전문인, 공연예술,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장치, 자격 제도]

I. 서론

공연예술은 개인 창작으로 이루어지는 문학이나 미술과 달리 여러 분야의 전문 인력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예술이다. 작품을 써서 제공하는 극작가·작곡가·안무가를 비롯, 무대미술가·무대조명 디자이너·무대음향 디자이너·무대의상 디자이너·무대소품 디자이너 등 창작예술가와 무대 위에서 실연 및 연출을 담당하는 배우·연주가·무용수·성악가·연출가·지휘자 등 실연예술가, 공연의 기획 및 제작을 담당하는 프로듀서·공연기획자·마케터·홍보 담당자·광고 담당자 등의 공연기획 인력과 공연 진행 시 무대 뒤에서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는 기술감독·무대감독·무대장치 스태프·무대기계 스태프·무대조명 스태프·무대음향 스태프·무대의상 스태프·무대소품 스태프 등의 무대기술 인력, 그리고 그 외 공연장 안내원, 매표원, 시설관리자, 주차 관리자 등 여러 직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모여서 한 편의 공연을 만들어 낸다. 또한 공연이 끝난 후 공연에 대해 비평하거나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비평가 및 연구자, 그리고 공연예술 교육을 담당하는 공연예술 교육가 등도 공연예술을 떠받치고 있는 인력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창작 인력, 실연 인력, 공연기획 인력, 무대기술 인력, 행정관리 인력, 평론 및 교육 인력의 여섯 개 직업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의 인력군만 성장해서는 안 되면서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나라 공연예술계는 배우나 연주가, 무용수 등의 출연자와 연출가나 안무가, 지휘자 등의 감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저작권법」(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두 그룹이 모두 실연예술가로 분류되는 것처럼 무대 위에서 실연이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인력군만으로 무대가 만들어졌던 셈이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공연장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본격적인 공연 제작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공연 기획 인력이나 무대기술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대학에 연극영화 관련 학과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커리큘럼이나 교수진에서 그러한 스태프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준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공연의 제작 규모가 확대되면서 무대기술 분야에서 경험이 쌓인 현장 전문 인력이 상당수 늘어났지만 자신들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거나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연예술가를 주인공으로 하는 공연무대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되는 등 활동 여건이 미비하였다. 따라서 우수한 인력이 무대기술 분야에 진입하기도 어렵고, 또 이미 진입해 있는 경우라도 자기 발전의 기회가 갖지 못하여 도약기에 접어든 공연예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9년 「공연법」에 의해 무대기술 인력의 기술적 예술적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연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종사하는 인력들의 사회적 지위도 함께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이제 이 제도 도입이 만 10년이 되어 가는 시점이다. 그 10년

사이에 우리 공연예술 분야, 특히 무대기술 분야는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제작비 규모가 확대되면서 작품 내적인 성장은 정체되고 무대장치나 무대조명 등 외형적인 면만 화려해진 것이 아닌가 우려할 정도이다. 이 모든 것을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인증 제도 도입의 효과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공연장의 증가, 공연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의 증가, 그에 따른 단위 공연 제작 규모의 확대 등 공연 환경 변화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1990년대 말부터 급증하고 있던 무대 기술 전문 인력의 수요에 대해 이 제도가 일정하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거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이제 10년의 역사를 갖게 된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인증 제도’에 대해서 도입 과정과 운영 현황을 제도 및 정책 차원에서 꼼꼼히 정리해 보고, 그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 스케치하듯 그려 보고자 한다. 지나온 역사에 대한 점검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II.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역사

자격 제도는 특정한 분야의 직무나 직능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노동 시장에 대한 통제 기능도 갖는다. 또한 국가 자격 제도의 경우 자격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인증 제도가 도입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연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무대기술 인력을 공급하여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데 있었다. 그 전문성에는 공연장에 설치된 무대 기계나 조명 및 음향 기기를 안전하게 조작·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은 물론, 공연예술을 이해하고 무대에서의 예술의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적 전문성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 때문에 이 제도 도입 단계에서부터 자격 제도의 운영과 무대기술 전문 인력의 양성 문제를 하나의 구조를 안에서 설계하게 된다. 현직에 있는 경우이든 새롭게 진입하려 하는 경우이든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 인력을 공연예술 현장에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제도 도입 단계에서 무대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연구에 집중했던 것도 이러한 전문성 강화의 목적으로 제도가 설계되었음을 말해 준다.¹⁾

1) 이 제도 도입의 발판이 되었던 연구 보고서의 주제가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이었다는 것은 이 제도가 무대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계되었음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신일수·최영애·김성철·장혜숙·고희선(1997), 「무대기술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다음으로 이 제도의 도입은 무대기술 종사자들의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법에 의한 국가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지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기술’을 경시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풍조 속에서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게 국가 자격이라는 예우의 효과를 준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제도의 명칭을 ‘무대기술 전문인’이 아닌 ‘무대예술 전문인’으로 붙인 것도 그러한 맥락을 반영한 것이었다.²⁾ 사실 이 제도의 대상 집단은 분명히 ‘무대기술 전문인력’이다. 그럼에도 공연예술 전체를 지칭하는 ‘무대예술 전문인’이라 명명함에 따라 호칭에 따른 다소의 혼선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본다.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무대기술 전문인 자격 인증 제도’로 명칭을 바꾸어도 그 본질적 가치도 훼손되지 않고 제도의 성격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제도의 도입은 무대기술 분야 노동 시장에 대한 공적 개입을 통해 시장 원리에 의해서는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이 분야의 고용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의무배치’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그러한 맥락에서 설치되었다. 이 제도를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① 무대기술 전문 인력의 양성 → ② 점정에 의한 자격 인증 → ③ 자격자의 공연장 의무 배치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도 명칭은 자격 인증 제도이지만 양성에서 시작하여 배치로 완성되는 체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발생과 전개 과정을 돌이켜 보면 이 제도의 역사 또한 ‘양성’에서 ‘자격 인증’으로, 그리고 다시 ‘배치’로 이어지는 3단계의 단계적 발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인증 제도’는 1999년 「공연법」에 관련 조항이 들어가면서 공식화되었지만 그 첫 시작은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1992)의 「문화예술 전문기술인 자격 인증 제도 연구」에서 자격 제도가 제안되었지만 「공연법」에 처음 도입된 것은 자격이 아닌 전문 인력의 양성이었다.

第25條의5 (舞臺藝術의 振興)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舞臺藝術의 발전을 위하여 公演 프로그램 企劃·照明·音響·舞臺機械 등과 관련된 舞臺藝術專門人의 養成計劃(이하 “養成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소속된 舞臺藝術 公演場의 經營者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養成計劃에 따라 그 所屬 職員의 研修教育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기타 舞臺藝術 公演場의 經營者에 대하여는 이를 勸誘할 수 있다.

2) 장미진·박동우·장혜숙(2001).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인증 제도 운영 내실화 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舞臺藝術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公演者 또는 舞臺藝術 公演場의 經營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補助金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全文改正 1995·12·29]

「공연법」 제5조의5는 1975년 신설되었지만, 1995년 12월 29일자 개정 법률(제5453호)에 전문 개정이 되면서 제1항과 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연 프로그램 기획, 조명, 음향, 무대기계 등과 관련된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 범위에 무대기술 전문 인력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기획 전문 인력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명칭을 포괄적인 ‘무대예술 전문인’으로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2항에서 공공 공연장에 한해 소속 직원 ‘연수 교육’에 대해 강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어 1996년 6월에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080호) 제21조의 2에서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으로 구체화되고, 1996년 7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 규칙」(문화체육부령 제28호)의 제11조의2에서 무대예술 전문 분야 교육 대상을 공연프로그램 기획, 무대미술, 무대기계, 조명 및 음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의3에서는 연수 교육 과목에 대해, 그리고 제11조의4에서는 연수 교육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999년 자격 제도가 도입될 무렵에는 상명대학교 무대디자인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무대미술과, 용인대학교 연극학과 디자인 및 기술 전공 등 여러 대학에 전공학과가 운영되고, 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무대예술 아카데미를 통한 전문적인 교육 과정(이론 및 실기)이 운영되고 있었다.³⁾ 비록 초창기의 교육 과정을 보이고 있었지만 무대기술 전문 인력에 대한 양성이 제도화되고, 또 실제 교육 과정이 운영되는 것을 기반으로 자격 인증 제도도 비로소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이다.⁴⁾

자격 인증 제도의 성격으로 이 제도가 완비된 것은 1999년 2월 8일자 전문 개정 「공연법」(법률 제5924호)을 통해서이다. 이 법률은 공연자 등록에 관한 규정 등 일제 시대 이래의 규제적 요소를 일소하고 새로운 체계로 재구성되었다. 이 법에서는 ‘제4장 무대예술전문인의 양성’이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무대기술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자격 인증, 의무 배치 등 3단 구조의 법체계를 완성한다.

3) 당시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이던 무대기술 관련 교육 과정에서 대해서는 신일수·최영애·김성철·장혜숙·고희선(1997), 115-119 참조.

4) 한편 1987년과 1989년 예술의 전당 운영요원 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된 바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예술의 전당 공채 인력의 훈련을 위한 것이었지만, 간접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무대예술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의 시작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박민호(1993),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예술의 전당 운영요원 양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조.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제13조 (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무대예술 전문인) ① 문화관광부 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 전문인 교육기관에서 무대예술 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그 실무 경력이 무대예술 전문인 교육과정에 상당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무대예술 전문인 교육기관에서 무대예술 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무대예술 전문인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자격 검정 기타 자격증의 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무대예술 전문인 교육 및 검정기관) ① 문화관광부 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 교육기관 및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무대예술 전문인 교육 및 검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 또는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무대예술 전문인의 교육 과정, 교육기관, 및 검정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그 경영을 위탁한 공연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는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의 세 종목에 1급에서 3급까지 등급을 설정한 자격 인증 제도에 대해, 제15조에서는 자격 검정 기관 및 지정 교육 기관에 대해, 그리고 제16조에서는 자격자의 공연장 배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에서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에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2조 제2항에서 제16조 제1항의 의무배치 규정을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까지 마련해 두었다. 이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 방안은 1999년 5월 10일자 전문 개정 「공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302호)과 2000년 3월 10일자 개정 「공연법 시행 규칙」(문화관광부령 제37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법제 정비가 이루어지자 2000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검정시험이 실시되었고, 드디어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자가 배출되었다. 그 사이 검정기관이 국립중앙극장으로 이관되어 운영 중이며, 2008년 말까지 1,700여 건의 자격증 교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후 가장 변화가 큰 법 개정 사항은 「공연법」 제15조 관련 교육기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9월 27일자 개정 법률 제7991호에서 삭제된 부분이다. 원래 이 조항은 교육기관과 검정기관을 함께 규정하고 있었는데, 교육기관 관련 부분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던 교육기관 지정 제도를 전면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안이 시행령에 반영된 것은 2006년 12월 29일자 개정 「공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798호)인데,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조항과 실무 경력 인증에 의한 무시험 합격에 관한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삭제되기 전의 조항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2조 (무대예술 전문인 교육 과정)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 전문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교육 과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교육기관은 당해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증을 교부하고, 수수료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전문 개정 2000·2·14] 제13조의2 (실무경력의 인정)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자나 실무 경력자가 전문인 자격 검정에 응시함에 있어서 검정기관에 의한 실무 경력의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제출 전에 별표 2의3의 실무 경력 인정 기준에 따라 미리 검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7.30.][본조신설 2000·2·14]

제13조의3 (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② 전문인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동일 자격 종류의 하위 등급의 검정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실기시험이 시행되는 하위등급의 검정(2년 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검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2·14]

제14조의2 (무대예술 전문인의 검정 합격 인정) ① 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 자격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4의 검정 합격 인정 기준에 따라 검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검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 합격 인정 시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4의 실무 경력 기준기간에서 1년을,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 경력 기준 기간에서 2년을,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 경력 기준기간에서 3년을 각각 감한다. [개정

2002.7.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검정 합격 인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2·14]

제17조 (무대예술 전문인 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재정적 능력
2. 교육 과정 편성 및 교수 요원 확보 상태
3. 강의·실습 시설 및 설비의 구비 상태

③ 문화관광부 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도 도입 초기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무대예술 아카데미, 계원조형예술대학 공간연출학과, 전남과학대학 모델이벤트과, 전남나주대학 방송연예제작과 등 4개의 지정 교육기관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에서 2005년까지 배출된 자격자 현황을 보면 4개의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응시자가 5년간 58명이었으며, 합격자는 그 중 23명에 불과하였다. 전체 자격증 교부 건수가 1,000여 건을 넘는 상황이었으므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0.23%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에 지정 교육기관 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어 법 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표 1〉 4개 지정 교육기관 출신자의 자격 응시 및 합격 현황

년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종 목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무대기계	1	1	2	2	0	0	1	0	3	0	7	3
무대조명	3	3	9	4	2	2	13	5	9	1	36	15
무대음향	2	2	2	2	0	0	7	1	4	0	15	5
계	6	6	13	8	2	2	21	6	16	1	58	23

이러한 결과는 지정 교육기관 제도가 이상론에 치우쳐 설계된 것임을 말해 준다. 이는 특정 교육기관의 문제만이 아니므로 단순히 지정 교육기관을 바꾼다고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또한 경력자가 어느 정도 소화되었고, 또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 인력으로서의 직능 강화가 요구된다고 보아 실무 경력 인정에 의한 자격 부여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자격 검정의 큰 방향은 교육기관 이수자든 실무 경력자든 검정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고 하겠다.

Ⅲ. 제도 운영 현황 및 성과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종목은 무대기계 전문인·무대조명 전문인·무대음향 전문인의 3종목이며 각각 1급·2급·3급의 등급이 있다. 검정에 관련된 제반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검정기관(현재는 국립중앙극장)과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검정 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도 도입 초기 중요한 기능이었던 무대기술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양성 기능은 이 제도에서 없어지고, 지금은 검정시험에 의한 자격 부여와 자격자의 공연장 의무 배치에 관한 기능이 이 제도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1. 무대예술 전문 인력 교육 현황

제도 초기에는 지정 교육기관 제도가 운영되다가 2006년 폐지되었는데, 2000년 12월 현재 4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되다가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한 채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 무대예술 전문인 교육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전문대 이상의 대학 또는 직업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었지만 750시간의 규정 시간을 구성하기가 어렵고, 지정에 따른 혜택이 거의 없어서 추가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무대예술 전문인 교육기관 지정 현황(2002.12. 현재)

지정일자	교육기관 개 설 자	교육기관명	교육 과정	연락처
1996.11.25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무대예술 아카데미	무대기계, 조명, 음향 분야	경기도 고양 소재
2000.6.10	학교법인 계원학원	계원조형 예술대학 (공간예술학과)	무대기계, 조명, 음향 분야	경기 의왕 소재
2000.10.17	학교법인 우암학원	전남과학대학 (모델이벤트학과)	무대조명, 음향 분야	전남 곡성 소재
2002.12.03	나주대학	나주대학 (방송연예제작과)	무대기계, 조명, 음향 분야	전남 나주 소재

출처 : 문화관광부(2003), 「공연예술 진흥 기본 계획 2003」, 72쪽.

이 제도 이전 단계부터 무대기술 전문인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되었던 문제이다. 따라서 무대예술 전문인 교육기관 지정 제도를 폐지했다고 하여 그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터이다. 교육기관에 지정되지 않았지만 무대기술 관련 학과나 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 용인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예술대학 등)가 상당수 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 예술 인력 개발원에서는 ‘아르코 공연예술 아카데미’라는 무대예술 전문인을 위한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단기 프로그램으로는 ‘무대예술 전문특화 교육’과 ‘아르코 찾아가는 교육’이 있으며, 장기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아르코 공연예술 아카데미’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 공연예술 아카데미는 2년 4학기 학제로 운영되며, 현장 경력 2년 이상이나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수학한 자로 입학 자격에 제한이 있다.⁵⁾ 아르코 예술 인력 개발원의 공연예술 아카데미로서 오랫동안의 노후를 축적하고 있다. 특히 실기 교육과 이론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또한 일반 대학에서도 전문적인 대학극장이 건립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론 교육과 실기 교육이 접맥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등 지정 교육기관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무대기술 교육의 여건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무대예술 전문인의 교육 및 훈련은 자격자의 수요에 따른 시장 기능에 의해 수급 조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업 종사자들이 직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관련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 자격자 배출 현황

1999년에 법이 개정되고 2000년부터 자격자가 배출되어 2008년까지 만 9년 동안 3종목에서 1,764건의 자격증 교부가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는 낮은 등급에서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는 자격자가 이중, 삼중으로 포함되어 있다. 동일한 사람이 2번 이상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 자격자가 1,764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사람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자는 1,764명보다는 적은 규모일 것이다.

지금까지 자격 취득 현황을 연도별, 종목별, 등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취득 종목별·등급별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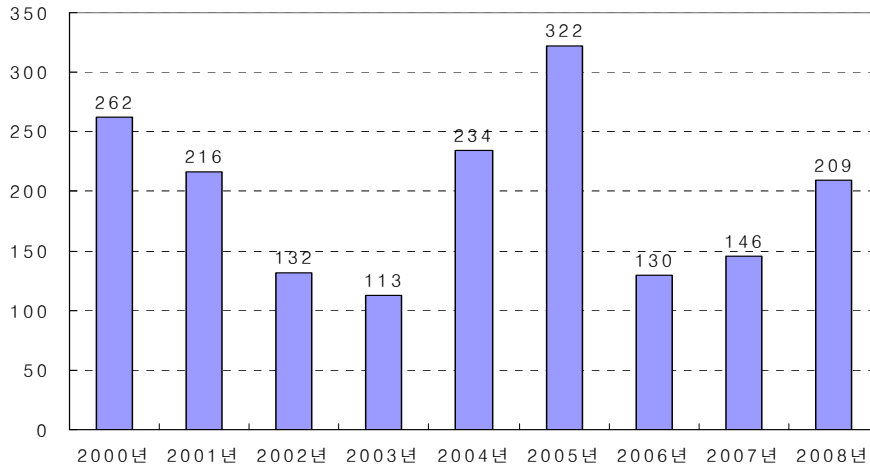
연도	합계	종목별 자격 취득 현황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소계	1급	2급	3급	소계	1급	2급	3급	소계	1급	2급	3급
2000년	262	86	26	20	40	92	18	27	47	84	21	24	39
2001년	216	77	19	21	37	78	14	32	32	61	10	20	31
2002년	132	34	10	8	16	61	17	25	19	37	10	18	9
2003년	113	37	9	15	13	47	6	23	18	29	2	14	13
2004년	234	56	8	20	28	101	32	31	38	77	21	28	28
2005년	322	116	19	48	49	116	33	44	39	90	18	26	46
2006년	130	41	11	21	9	48	8	22	18	41	14	12	15
2007년	146	48	10	19	19	54	10	9	35	44	8	13	23
2008년	209	66	19	16	31	73	18	15	40	70	9	18	43
총계	1,764	561	131	188	242	670	156	228	286	533	113	173	247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08.12.31) 내부 자료.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 동안 1,764건으로 연평균 196건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첫째 262건에서 시작하였으나 2003년까지 4년 연속 하락하여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13건을 기록하게 된다. 아마 초기에는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무대예술 전문인의 고용 시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추측된다. 이어 2004년과 2005년에 급상승하여 각각 234건과 322건을 기록하게 된다. 2005년 1월 1일자 의무 배치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무대기술 분야 신규 진입자들의 기대가 모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초기에는 두 자릿수에 머물던 시험 합격 건수가 2004년 126명, 2005년 245명 등 급증한 것으로 보아 시험 난이도 조정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6년도에 다시 130건으로 급락했다가 최근에 다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에는 209건을 보여 전체 평균에 가까운 값을 보였다. 지금까지 9년간은 W자 모형의 불안정한 배출 구조를 보였다. 2008년의 실적을 기반으로 향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안정세를 보일 것인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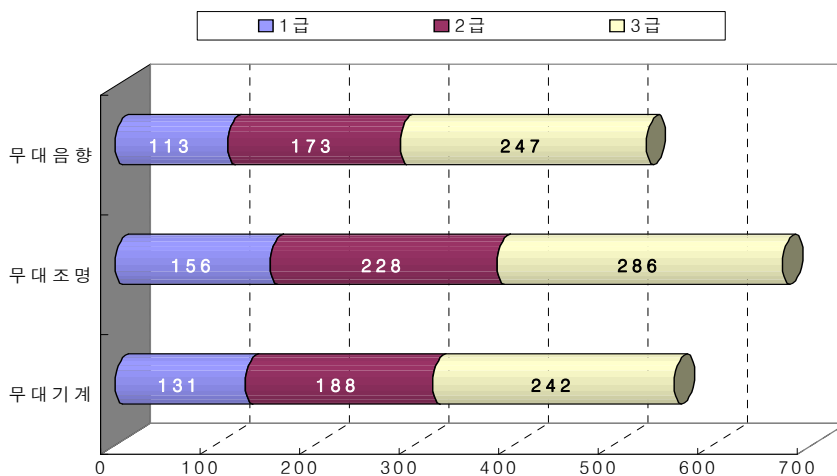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자격 취득 건수 추이



배출된 자격자를 종목별로 보면 무대조명이 다소 많은 670건을 보였을 뿐, 무대기계 561건, 무대음향 533건으로 대체로 균형 있는 배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등급별로 보면 1급 400건, 2급 589건, 3급 775건으로 하위 등급이 많고 상위 등급이 적은 완만한 피라미드 구조의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종목별 등급별 자격 취득 건수



다음으로 검정 방법을 기준으로 자격 취득 건수를 보면, 시험을 치르고 합격된 경우가 752건으로 전체의 42.6% 정도이고, 실무 경력을 인정받아 합격된 경우가 868건으로 전체의 57.4%에 이른다. 2006년 실무 경력 인정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아직까지는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대조명 3급과 무대음향 3급에서는 시험 합격의 비율이 각각 61.5%와 65.6%로 높게 나타나서 점차 시험 합격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검정 방법별 자격 취득 건수

(단위 : 건, %)

분야	등급	급수별 소계	시험 합격		합격 인정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무대기계	1급	131	49	37.4	82	62.6
	2급	188	70	37.2	118	62.8
	3급	242	107	44.2	135	55.8
무대조명	1급	156	78	50.0	78	50.0
	2급	228	111	48.7	117	51.3
	3급	286	176	61.5	110	38.5
무대음향	1급	113	55	48.7	58	51.3
	2급	173	88	50.9	85	49.1
	3급	247	162	65.6	85	44.4
합계		1,764	752	42.6	868	57.4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08.12.31) 내부 자료

검정 방법 자격 취득 건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시행 첫해인 2000년에는 실무 경력 인정에 의한 자격 취득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76.7%의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2007년과 2008년에는 시험 합격에 의한 자격 취득 건수가 각각 59.6%, 68.9%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점차 시험 합격자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건수가 많았던 2005년도의 경우 시험 합격자가 76.1%의 높은 비율을 보여 신규 진입자가 많이 몰렸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5〉 검정 방법별 자격 취득 건수 연도별 추이

(단위 : 건, %)

연도	시험 합격		합격 인정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0	61	23.3	201	76.7	262
2001	65	30.1	151	69.9	216
2002	73	55.3	59	44.7	132
2003	49	43.4	64	56.6	113
2004	126	53.4	108	46.6	234
2005	245	76.1	77	23.9	322
2006	46	35.4	84	64.6	130
2007	87	59.6	59	40.4	146
2008	144	68.9	65	31.1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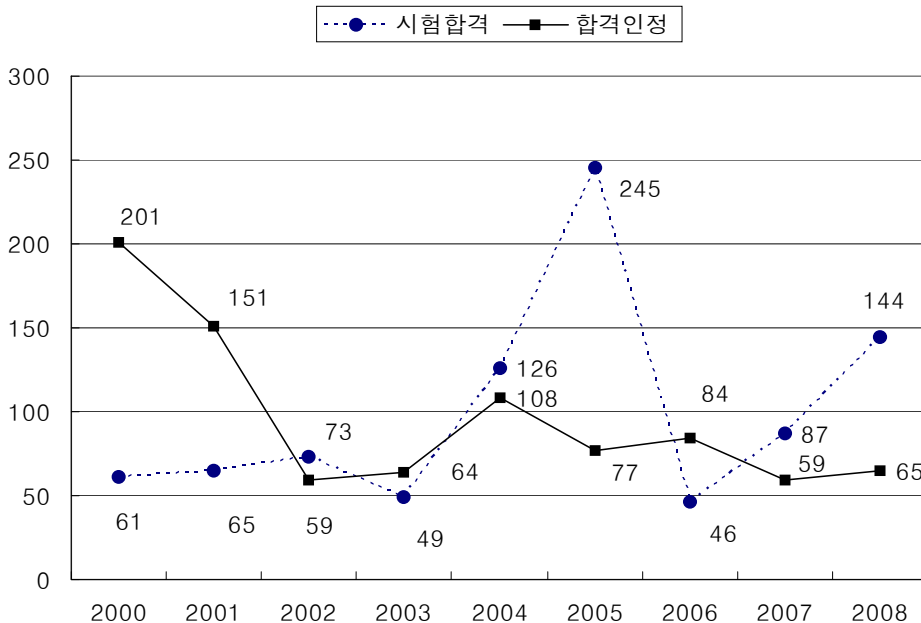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08.12.31) 내부 자료

연도별 추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합격 인정은 2002년 이후 낮은 기록을 지속하는 L자형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다만 2006년도의 합격 인정 제도 폐지는 일종의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즉, 2006년 12월 31일 현재 실무 경력이 있는 자가 개정 전 조항에 의거한 자격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현재에도 경력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2007년 1월 1일 이후 공연장이나 공연업에 신규로 진입한 무대기술 인력의 경우에만 실무 경력에 의한 합격 인정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2006년 12월 31일 현재 현업 종사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합격 인정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합격 인정에 의한 자격증 교부 건수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⁶⁾

한편 시험 합격은 2004년과 2005년에 과도하게 높은 배출 기록이 있었던 사례를 제외하면, 대체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4년과 2005년 시험 합격 건수는 2005년 이후 의무 배치에 대한 신규 진입자들의 관심과 검정 기관에서의 시험 난이도 조정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추정된다.

6) 2006년 12월 31일 현재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조건에서 공연장에 근무하고 있는 무대기술 인력은 296개 공연장에 623명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공연장, 그리고 공연장 이외 공연업 종사자가 더 있을 것이므로 최소한 600여 명이 실무경력에 의한 합격 인정 대상자가 될 것이며, 연간 50명 규모로 합격한다고 가정했을 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문화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2008), 「2007 공연예술 실태조사」, 141쪽).

〈그림 3〉검정 방법별 자격 취득 건수 연도별 추이



2006년 실무 경력 인정 방안을 폐지를 계기로 큰 방향에서는 점차 합격 인정 건수는 줄어들고 시험 합격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검정 제도가 시험 합격 위주로 정비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배출 규모의 안정성, 시험 합격을 중심으로 한 검정 방법의 전환 등은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인증 제도가 시행 10년 만에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 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3. 자격자 배치 현황

2005년 1월 1일부터 500석 이상의 공공 공연장(민간위탁 공공 공연장 포함)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현행 「공연법 시행령」에 의하면 기본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6〉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

배치 대상 공연장	무대예술 전문인 등급	자격 종류별 배치기준		
		무대기계 전문인	무대조명 전문인	무대음향 전문인
객석 1천 석 이상	1급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객석 800석 이상 1천 석 미만	2급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객석 500석 이상 800석 미만	3급 이상	1인	1인	1인
비고 1. 2개 이상의 공연장으로 구성된 복합 공연장의 경우에는 개별 공연장별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2. 상기 배치 대상 공연장의 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이 되는 바닥 연면적을 기준으로 1석을 1제곱미터로 보아 적용한다.				

출처 : 2002년 7월 30일 개정 「공연법 시행령」 별표3(제21조 제2항 관련).

2005년 이후 연간 계획인 ‘공연예술 진흥 기본 계획’에서는 매년 의무 배치 대상 공연장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도의 경우 500석 이상 공공 공연장은 166개소이며, 거기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무대예술 전문인은 모두 498명으로 제시되어 있다. 등급별로 보면 3급 258명, 2급 111명, 1급 129명이다.

〈표 7〉 의무 배치 대상 공연장 및 무대예술 전문인 규모(2008.12.31 현재)

배치 대상 공연장	공연장 수	의무 배치 대상 인원 규모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소계
500~800석 미만	86개소	3급 이상 86명	3급 이상 86명	3급 이상 86명	3급 이상 258명 이상
800~1,000석미만	37개소	2급 이상 37명이상	2급 이상 37명이상	2급 이상 37명이상	2급 이상 111명 이상
1,000석이상	43개소	1급 43명이상	1급 43명이상	1급 43명이상	1급 129명 이상
합계	166개소	166명 이상	166명 이상	166명 이상	498명 이상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09), 「공연예술 진흥 기본 계획 2009」, 92쪽에서 재구성.

그런데 자격증 교부 건수 가운데 승급 등으로 인한 허수가 발생하지 않는 1급 자격 건수를 보면 무대기계 131건, 무대조명 156건, 무대음향 113건 등 400건으로 의무 배치에 요구되는 129명의 3.1배에 이른다. 따라서 이러한 외형적 조건만 본다면 1급 자격자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자격자 부족으로 의무 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급이나 3급의 경우에는 각각 589건과

775건의 자격증 교부가 이루어졌지만, 그 가운데 1급이나 2급으로 승급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자격자를 기준으로 보면 의무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국의 공연장에 근무하는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자 현황을 보면 전국 296개 공연장에 1급 160명, 2급 290명, 3급 265명이며, 자격증 미취득자는 62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1,338명이 공연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자격증 취득자는 53.4%, 미취득자는 46.6%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가운데 의무 배치 대상이 되는 187개 공공 공연장의 무대예술 전문인은 1급 자격자 108명, 2급 자격자 240명, 3급 자격자 200명 등 548명으로 전체 종사자 981명의 55.9%로 나타났다.

〈표 8〉 전국 공연장 무대예술 전문인 현황

(2006.12.31. 기준)

구분	공연장 수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자				자격 미취득자	합계
		1급	2급	3급	소계		
전체	296개	160명	290명	265명	715명	623명	1,338명
공공 공연장	187개	108명	240명	200명	548명	433명	981명
민간 공연장	109개	52명	50명	65명	167명	190명	357명

출처 : 문화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2008), 「2007 공연예술 실태 조사」, 141쪽에서 재구성.

의무 배치 대상이 되는 187개 공공 공연장만을 대상으로 보면 이미 현직에 있는 무대예술 전문인이 548명으로 〈표8〉에 제시된 의무 배치 인원 규모 498명보다 50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공연장에는 자격 미취득자 433명이 종사하고 있으므로 외형적으로는 의무 배치 인원보다 2배 가까운 무대기술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제도의 운영 결과 ‘의무 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보다는 현직에 있는 무대기술 인력이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을 취득한 결과로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울 것이다.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433명의 미취득자가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자격 제도와 무관하게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역으로 자격자들의 공공 공연장 신규 진입의 문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자격 인증 제도의 운영, 의무 배치의 세 가지 기능으로 출발했던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인증 제도가 2007년부터는 자격 인증과 의무 배치의 두 기능을 축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실무 경력에 의한 합격 인정 제도가 폐지되면서 검정 시험을 통한 합격으로 검정 체계가 정비된 것도 제도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년 동안 1,764건의 자격증 교부 실적을 올리는 등 자격 인증 제도로써 최소한의 성과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IV.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 10년을 맞았지만 아직 안고 있는 문제는 적지 않다. 무대 기술 인력의 예술적 이해력과 기술적 전문성 향상에 이 제도가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서부터 의무 배치 제도의 실효성에 의한 문제 제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그 어느 경우도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할 정도로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이 제도의 규제 순응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때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자 4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 제도의 성과를 확인한 바 있다.⁷⁾

이 조사에서 자격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만족이라는 응답은 21.8%인 데 비해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그 2배 가까운 41.3%나 되었다. 제도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자 450명에 대한 설문에서 불만족의 비율이 40%를 넘게 나온 것은 아직까지 이 제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정착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 준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무대예술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88.2%의 응답자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응답은 11.8%에 지나지 않았다.⁸⁾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만족한 상황이 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의견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 의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격증 보유가 실무 능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과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정당한 대우나 혜택이 없다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자는 많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정작 공연 현장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찾기 힘들다든지, 반대로 전문성을 구비한 자격자임에도 마땅한 작업 현장을 만나지 못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의무 배치 기준 역시 해당 공연장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을 기준으로 설정했는데, 정작 공연장에서는 이를 적정 인원 규모로 인식하고서 오히려 의무 배치 인원만으로 운영을 하는 폐단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의무 배치 인원을 채우지 않고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런가 하면 무대기계 전문인의 경우 무대장치 디자인을 담당하는 사람과 장치 제작 및 세팅을 위한 기계 조작을 담당하는 인력이 섞여 있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대응을 못한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자격 종목으로 되어 있는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외에도 무대감독 등 실제 공연장

7) 이 조사는 2007년 11월 3종목의 3등급에서 고르게 할당하여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무대예술 전문인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조사이다(허은영(2007),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제도 규제 순응도 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8) 허은영(2007), 41-49쪽.

에서 꼭 필요함에도 자격 종목이 없는 인력은 오히려 고용에서 배제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⁹⁾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일일이 짚어 보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으므로 향후 이 제도의 발전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간단하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자격자 수급 구조의 개선

이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현안 중의 하나는 자격자의 현장 배치 문제이다. 공연장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의무 배치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이고,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자 입장에서는 고용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앞서 현황에서 살펴본 대로 자격자 배출 규모가 의무 배치 수요를 앞지르고 있어서 자격자의 공급 부족 문제는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는 오히려 자격자의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현재 공연장에 근무하고 있는 무대기술 인력 가운데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 미취득자가 상당수 종사하고 있다는 점은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공연장에서의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취득자를 현장에서 쫓아내고 자격자로 대체하는 정책을 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급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격 검정을 좀더 엄격히 하여 자격자의 공급 규모를 조절하거나 반대로 공연장 의무 배치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를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응시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또 앞서 자격증을 교부 받은 경우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공급 부문을 조절하기보다 수요 부문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 500석 이상의 공연장이라는 기준에서 그 객석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의무 배치 대상 공연장의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공연장당 의무 배치 인원 기준을 상향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연장 경영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인력 수요를 늘리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의무 배치’라는 강제적 방식으로는 필요한 인력 가운데 최소 규모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단순히 공급과 수요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현실적 방안을 제안해 본다면, 자격자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무 배치 기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기준을 초과하여 자격자를 채용하는 공연장에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9)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김희경(2008),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제도 현황 및 발전 방안」,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2-43쪽 참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 인센티브의 내용은 추가 고용이 이루어지는 자격자 인건비에 대한 직접 보조나 공연 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보조하는 방안, 또는 해당 공연장 무대기술 인력에 대한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무대예술 전문인 배치 현황을 좀더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극장,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의 우수한 대형 공연장에는 의무 배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수의 무대기술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 문예회관의 경우 공연장 수는 많은 데 비해 현재 근무 중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적 단위로 볼 때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지역에 따라서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표 9〉 설립 주체별 공공 공연장 무대예술 전문인 규모

설립 주체별 공연장	공연장수 (A)	현재 근무 중인 무대예술 전문인 (2006.12.31. 기준)				의무 배치 인원 (A×3)	비고
		1급	2급	3급	합계		
중앙정부	4	43	20	14	77	12	65
광역자치단체	32	47	43	35	125	96	29
기초자치단체	138	33	136	113	282	414	-132
공기업	13	23	11	12	46	39	7
합계	187	146	210	174	530	561	-31

출처 : 문화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2008), 「2007 공연예술 실태조사」, 141쪽에서 재구성.

전체 공공 공연장 187개의 의무 배치 규모를 등급이나 규모를 무시하고 1공연장당 3명으로 가정할 경우 현재 근무 중인 무대예술 전문인은 530명이고, 배치되어야 할 인원은 561명이므로 3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연장에서는 132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향후 무대예술 전문인 배치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연장을 주요한 타깃으로 설정하여 실질적인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연장의 경우 공연장 가동률도 낮고, 또 인력 사용 예산도 부족하며, 동시에 자격 있는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격 종목 간 등급 간 수급 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자격증 교부 현황과 함께 자격자 배출 현황, 그리고 공연장 및 공연업에 종사하는 자격자

고용 현황 등을 통계화하여 발표함으로써 수급 구조의 질적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자격 중 소지자는 종목별, 등급별, 지역별로 각각 몇 명씩인지, 그리고 공연장이나 공연업에 피고용자 지위로 근무하는 자격자의 현황, 의무 배치 공연장 목록 및 현재의 배치 인원 현황 등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의 작성과 발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무대예술 전문인 수급 구조의 질적 개선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 자격 종목의 세분화 및 확대

도입 초기부터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종목은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의 세 분야로 한정된 채 운영되어 왔다. 이 세 분야는 전기나 기계 등 공학적 기반이 필요한 기술적 영역이므로 우선적으로 자격 제도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무대기계 분야의 경우 자격 명칭은 ‘무대기계 전문인’으로 되어 있지만 합격자의 다수가 무대장치 전문가들로 되어 있는 데서 오는 편차가 문제가 되고 있다. 즉, 무대기계 전문인 가운데 실제로 기계 조작 및 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 기술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무대기계 전문인의 숫자가 적지 않음에도 실제 무대기계 전문가는 많지 않는 상황이 발행하는 것이다. 그 해결 방안으로는 현재의 ‘무대기계 전문인’ 종목에 무대장치 전문가를 배제하고 무대기계 관련 기술 인력만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무대장치 관련 전문 인력은 자격 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이미 무대장치로 자격을 얻은 ‘무대기계 전문인’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없다.

여기에서 적극 고려하게 되는 것이 현재의 “무대기계” 종목을 “무대기계”와 “무대장치”로 분리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¹⁰⁾ 그리하여 무대기계와 무대장치가 각각 고유한 영역을 확보(무대기계 전문인은 무대기계의 작동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무대장치 전문인은 무대미술 디자인 및 제작 등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을 취득한 자격자들의 경우 종목 세분화에 동의하는 의견이 전체의 63.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무대기계 전문인들의 72.1%가 종목 세분화에 대해 찬성하여 다른 종목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종목 세분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앞서 언급한 무대기계와 무

10)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박영정·이승엽·이태섭(2003), 「공연예술 전문 인력 양성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77-80쪽에서 자세하게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대장치의 분리 방안을 전체의 91.3%가 지지하였다.¹¹⁾ 만약 무대장치 전문인과 무대기계 전문인으로 자격 종목을 세분화한다면, 무대기계 전문인 자격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 드러날 것으로 추정된다. 무대기계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기술 습득의 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목 분리를 위해서는 무대기계 분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 아카데미 외에도 국립중앙극장이나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대형 공연장에서 현장교육 프로그램(OJT)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전망

우리의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제도는 낙후한 무대기술 분야를 발전시키고 무대기술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목적에 따라 도입되었다.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도입된 것에는 그 나름의 사회적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공연장 상주 무대기술 인력은 무대예술에 꼭 필요한 전문 인력이지만 교육 시장이나 노동 시장에 의한 수급 구조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 인력을 공급하고자 한다면 공적인 제도 틀 안에서 자격 제도의 운영을 통해 전문 인력의 수급 구조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서구의 경우 무대예술의 역사가 오래고, 특히 극장의 운영 시스템이 대관 중심이 아닌 자체 제작 중심이어서 극장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인력 양성과 배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으므로 별도의 자격 제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¹²⁾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공연장이 경제 성장과 함께 급속하게 공급되었고, 또 공연장 운영도 대관 중심으로 되어 왔으므로 정책을 통한 인위적인 방식의 무대기술 인력의 양성과 공연장예의 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수급 구조의 문제에서 살펴보았듯이 ‘의무 배치’는 우리나라 공연장의 특수 여건에서 요구되는 것일 뿐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무대기술 인력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적 조직(예를 들면 무대기술 인력의 협회나 조합)이 등장하여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인력 관리와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게 되면 공연장이나 공연업에 종사하는 무대기술 인력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무대기술 인력까지 포괄하여 수급과 권익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1) 허은영(2007), 52-54쪽.

12) 이에 대해서는 김수영(1999), 「무대기술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국내 무대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서구와 비교」, 중앙대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조.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공연 시장의 규모가 작고, 또 무대기술 전문 인력의 공급과 수요가 모두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국가 자격 제도 운영이 가장 현실적 모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제도의 틀 안에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에서 발전시켜 나간다면, 서구식 조합 제도와 다른 독창적인 무대기술 인력 수급 구조를 형성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수영(1999), 「무대기술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국내 무대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서구와 비교」, 중앙대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2008),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제도 현황 및 발전 방안」,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화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2008), 「2007 공연예술 실태 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09), 「공연예술 진흥 기본 계획 2009」.
- 박민호(1993),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예술의 전당 운영요원 양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정·이승엽·이태섭(2003), 「공연예술 전문 인력 양성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손인술(2003), 「국공립 공연장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연구」, 한남대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경(2008), 「공공 공연장의 무대기술 인력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부산시를 중심으로」, 경성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일수·최영애·김성철·장혜숙·고희선(1997), 「무대기술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장미진·박동우·장혜숙(2001),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인증 제도 운영 내실화 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조현철·강석후(1992), 「문화예술 전문기술인 자격 인증 제도 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 허은영(2007),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제도 규제 준수도 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Abstract

A Study on Qualification System of Theatrical Artists and Technicians

Park, Young-Jeong

Chief Researcher,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The Qualification System of Theatrical Artists and Technicians is a system under which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grants an official certificate to technical workers in charge of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stage machinery, stage lighting, and stage sound. This system was implemented to encourage performing arts technicians to improve their technical skills and have self-confidence as professional performing artis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settlement and change processes of this system, and to propose plans for improvement.

With the revisions to the Performing Arts Act of February 1999, the regulations relating to the types, grades, education, certification authority and compulsory disposition of theatrical artists and technicians were established, and the Qualification System of Theatrical Artists and Technicians was formulated. Over the nine years between 2000 and 2008, 1,764 certificates were issued. Since January 1, 2005, it has been compulsory for certificated technicians to be employed in public theaters with seats or more. With the exception of public theaters established by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theatrical artists and technicians have been disposed at an extent over and above the compulsory level.

In the ten years since this system was first enforced, the biggest changes were the abolition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 appointment system and the experience-based authorization system. In terms of producing qualified technicians or establishing the certification system, the Qualification System of Theatrical Artists and Technicians can be evaluated as having entered a stable stage. In conclusion, two tasks to improve the Qualification System of Theatrical Artists and Technicians are recommended. Firstly, the public theaters established by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require many more theatrical artists and technicians, so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on solving this problem. Second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w classifications for 'stage setting,' so that the existing three job types can be changed into four job types, namely : technicians of stage setting, stage machinery, stage lighting and stage sound.

[Key Words : theatrical artists and technicians, performing arts, stage machinery, stage lighting, stage sound, qualification system]

학예사 자격 제도의 성과와 한계

: 실무 경력 기준을 중심으로

양현미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학예사 자격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1999년으로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학예사는 연구, 수집, 보존, 전시, 교육 등 박물관 사업을 수행하는 박물관 전문 인력을 말한다. 학예사는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등급별 자격 기준은 학력과 실무 경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무 경력 기준은 준학예사는 학사학위 소지자 1년, 3급 정학예사는 석사학위 소지자 2년이다. 2급 정학예사는 3급 정학예사 취득 후 5년, 1급 정학예사는 2급 정학예사 취득 후 7년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학사의 경우 17년의 경력이 있어야 1급 정학예사가 될 수 있다.

학예사 자격 제도에서 실무 경력을 자격 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나 자격 제도가 실무 경력을 적정하게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학예사 자격 제도 규제 준응도 및 만족도 조사」(2007)를 살펴보고, 유사 분야 자격 제도와와의 비교를 통해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예사 자격 제도의 실무 경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 제도, 실무 경력, 적정성]

I. 서론

1990년 문화 행정을 전담하는 독립 부처로 문화부가 발족하면서 「문화 발전 10개년 계획」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서 문화부는 21세기가 되는 2000년에는 박물관·미술관 1,000관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발표하였다. 1993년에 박물관 101관, 미술관 17관으로 118관에 불과했던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야심찬 목표였다고 하겠다(e-나라지표).

학예사는 연구, 수집, 보존, 전시, 교육 등 박물관 사업을 수행하는 박물관 전문 인력을 말한다.¹⁾ 학예사 자격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1999년이므로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필자가 학예사 자격 제도와 인연을 맺게 된 햇수도 비슷한데 학예사 자격 제도의 시행령을 연구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 제도 연구」(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자격 제도의 모습이 갖추어지는 데 영향을 주었던 핵심 쟁점은 3급 정학예사의 자격 조건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것인가에 있었다. 문화부는 3급 정학예사를 석사학위가 있으면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에서는 석사학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제대로 된 박물관에서 일정 정도 실무 경력을 가져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무 경력을 자격 조건에 넣자는 입장에 찬성하는 쪽에는 박물관에 이미 재직하고 있는 학예사가 많았고, 실무 경력을 넣지 말자는 입장에 찬성하는 쪽은 국내에서는 외국처럼 박물관에 인턴 제도가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다. 결론은 학예사가 일정한 학력과 실무 경력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내려졌다.

실무 경력 기준은 준학예사는 학사학위 소지자 1년, 3급 정학예사는 석사학위 소지자 2년, 2급 정학예사는 3급 정학예사 취득 후 5년, 1급 정학예사는 2급 정학예사 취득 후 7년으로 설정되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학사의 경우 17년의 경력이 있어야 1급 정학예사가 될 수 있다.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입장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때로는 어느 쪽에도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학예사 자격 제도에서 실무 경력을 자격 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나 자격 제도가 실무 경력을 적절하게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학예사 자격 제도 규제 순응도 및 만족도 조사」(2007)를 살펴보고, 유사 분야 자격 제도와 비교를 통해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예사 자격 제도의 실무 경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1) 학예사라는 용어는 학예사 자격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그리 친숙한 용어가 아니었다. 학예사보다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이었다.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예연구관과 학예연구사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학예사가 더 일반적인 용어로 자리 잡고 있다.

Ⅱ. 학예사 자격 제도에서 실무 경력 기준의 도입과 변천 과정

학예사 자격 제도에 관한 근거 조항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마련된 것은 1999년이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박물관이 총 248관²⁾이 있었으며, 425명³⁾의 전문직이 종사하고 있었다. 학예사 자격 제도 도입을 포함한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와 단체, 정부 부처와 국립박물관 등이 2년여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 마련한 것이었다.⁴⁾ 이경재, 정동채 의원은 1998년 12월 3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동 법안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9년 1월 5일 국회 본 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어, 1999년 2월 8일 공포되었다. 이경재, 정동채 의원이 발의한 의안 원문⁵⁾과 비교할 때 수정 가결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원안은 박물관·미술관에 학예사를 둔다고 되어 있으나, 수정안은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에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박물관·미술관에 학예사를 ‘둘 수 있다’로 수정되었다. 다음으로 원안은 학예사의 구분, 자격 제도의 시행 방법, 절차, 시기, 자격 요건과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정안은 학예사를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자격 제도의 시행 방법, 절차, 시기, 자격 요건과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안은 박물관·미술관의 관장을 학예사로 임명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수정안은 관장이 전문 분야 능력 외에 경영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천호선, 1998).

- 2) 「전국문화공간현황」(문화관광부, 1997)에 따르면 박물관은 총 248관으로, 박물관 214관, 미술관 34관이었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
- 3) 박물관 전문 직원은 총 425명으로,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146명,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97명,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182명이었다(천호선, 1998).
- 4) 문화관광부 등 관계 기관과 국립박물관·미술관, 박물관협회 등과 협의를 거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사)한국박물관협회와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제출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98.11.13)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 5) 의안 원문(의안 번호 151546, 1998.12.3)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직으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 구분, 자격 제도의 시행 방법, 절차, 시기, 자격 요건과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연구에서의 실무 경력 기준

1999년 2월 8일 학예사 자격 제도에 대한 근거법령이 공포된 후, 문화관광부는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 학예사 자격 제도와 관련한 시행령 연구를 의뢰하였다. 연구 결과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 제도 연구」(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⁶⁾로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학예사를 박물관 전문직으로 규정하면서 4개의 직종으로 구분하였다. 준학예사와 3급 정학예사는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박물관 전문직(museum professional)이라고 통칭하였으나 2급 정학예사와 1급 정학예사는 연구원(curator), 교육원(educator), 보존 전문가(conservator), 자료 관리원(collection manager)⁷⁾으로 구분하였다.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전공은 제한하지 않았으나, 준학예사와 3급 정학예사는 대학에서 이수해야 할 학점을 정하였는데 박물관학과 전공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2년제 대학은 12학점, 4년제 대학은 24학점). 자격 인정 방법은 시험 인정과 무시험 인정으로 구분하였으며 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실습(인턴)으로 구성하였다. 필기시험은 박물관학과 전공 과목을 보도록 하였다.⁸⁾ 무시험 인정은 박물관 재직자와 해외 자격증 소지자로만 제한하였으며 자격 심사 후 재교육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⁹⁾(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

이 안에서 학예사 자격 제도는 학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실무 경력은 학력으로 환산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은 실무 경력이 없어도 1급 정학예사가 될 수 있었다. 준학예사와 3급 정학예사는 일정 학점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실습을 하도록 하였다. 이때 실습 기간은 6개월 정도였다. 현행 학예사 자격 제도와 비교하면 실무 경력에 관한 기준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령 연구에서 실무 경력 기준을 낮게 잡은 것은 당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인턴 프로그램을 거의 운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6) 연구진은 다음과 같았다. 연구 책임자 김병모(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공동 연구자 양현미(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원), 이보아(경희대 박물관 경영 및 학예사 연구 과정 교수), 최종호(한국민속촌박물관 관장). 연구 기간은 1999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이루어졌다.

7) 자료관리원(collection manager)은 소장품 등록 업무와 박물관 자료를 관리하는 사서를 합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

8) 이 안의 특징은 학예사의 자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 막 알려지기 시작한 박물관학(museology)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재직하고 있던 학예연구원의 전공은 대부분 고고학과 미술사학이었고 박물관학은 매우 생소한 학문 분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학이 대학 및 대학원의 이수과목이나 필기시험 과목에 비중 있게 포함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발과 논란은 불가피하였다.

9) 이와 함께 학예사 자격 제도 관련 후속 조치로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 의무화, 관장의 학예직 채용 의무화 등을 제안하였으며, 중장기적인 학예사 양성 방안으로 박물관학 표준 교과 과정 개발과 박물관 전문 인력 훈련 기관 설립을 제안하였다.

〈표 1〉 시행령 연구에서 제시한 학예사 자격증의 구분과 자격 기준

자격증 구분		자격
1급 정학예사	연구원 chief curator 교육원 chief educator 보존전문가 chief conservator 자료관리원 chief collection manager	박사학위 취득자 2급으로 5년간 박물관 재직
2급 정학예사	연구원 curator 교육원 educator 보존전문가 conservator 자료관리원 collection manager	석사학위 취득자 3급으로 3년간 박물관 재직
3급 정학예사	박물관전문사 museum professional	4년제 대학졸업자 준학예사로 2년간 박물관 재직
준학예사	준박물관전문사 assistant museum professional	2년제 대학 졸업자로 4년간 박물관 인턴직원으로 재직 고교 졸업후 6년간 박물관 인턴직원으로 재직

출처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

2. 공청회 안에서의 실무 경력 기준

문화관광부는 학예사 자격 제도의 자격 요건과 시행 방안에 대한 박물관·미술관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다. 문화정책국장 주재로 고고학 및 미술사학계 학자,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원, 박물관학자, 시행령 연구진 등이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다. 당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학예사의 자격 요건이 박물관·미술관에서 학예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전문성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박물관·미술관 학예사는 학력만 아니라 실무 경력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1999년 12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관에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 제도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학예사 자격 제도 연구에 공동 연구자로 참여했던 최중호 당시 한국민속촌 박물관장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공청회 안은 시행령 연구에서의 안에 비해 실무 경력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 안에 따르면, 학예사는 직종 구분 없이 법에 규정한 대로 1급, 2급, 3급 정학예사와 준학예사로 구분하고, 3급에서 출발하는 정학예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박물관·미술관에서 일정 기간 재직 경력을 쌓은 후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3급에서 2급은 7년, 2급에서 1급은 10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준학예사는 학사학위 소지자가 국가가 인정한 곳에서 2년(전문학사는 4년)의 경력을 쌓은 후 필기시험(박물관 관련 필수 3과목과 선택 1과목, 외국어 1과목)을 통과하면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였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졌다. 첫째, 아직 박물관·미술관이 248관에 불과하여 학예사에 대한 수요가 매우 적은 현실에서 자격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둘째, 학예사의 개념에 대한 것으로, 학예사를 박물관 전문직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연구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자격 기준에 대한 것으로, 박물관학에 편중되어 있으며 실무 경력 요구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었다. 넷째, 박물관 재직자의 경력을 무시한 채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학예사의 자격 요건에서 실무 경력이 대폭 강화된 것은 박물관·미술관에 재직하고 있는 학예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러한 실무 경력 기준은 이미 박물관·미술관에 재직하고 있는 학예사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나 아직 박물관·미술관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일종의 진입 장벽이 될 소지가 있었다.

3. 2000년 제정된 시행령에서의 실무 경력 기준

2000년 3월 4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학예사 자격 제도가 시행되었다. 학예사의 등급별 자격 요건은 시행령 연구에서의 안보다는 대폭 강화되었으나 공청회 안보다는 약간 완화된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자격 요건은 기본적으로 학력과 실무 경력 모두를 요구하였다.

학예사의 등급별 자격 요건의 큰 골격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당시 등급별 자격 요건에서 학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 분야’로 전공이 제한되어 있었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 분야는 “고고학·미술사학·예술학·민속학·인류학·서지학·자연사·과학사·박물관학·역사학 및 보존과학과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관련 분야를 말하였다.

실무 경력은 경력 인정 대상 기관에서의 재직 경력·실습 경력 및 실무 연수 과정 이수 경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실무 경력은 1급 정학예사가 2급 자격 취득 후 7년, 2급 정학예사가 3급 자격 취득 후 5년의 재직 경력을 요구하였다. 3급 정학예사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 준학예사는 7년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였다. 준학예사는 학사학위 취득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1년의 실무 경력을 가질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

〈표 2〉 학예사 등급별 자격 요건(시행 2000.3.4)

등급	자격 요건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 인정 대상 기관에서의 재직 경력 7년 이상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재직 경력 5년 이상
3급 정학예사	1.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실무 경력 1년 이상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실무 경력 2년 이상 3.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재직 경력 7년 이상
준학예사	1. 학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실무 경력 1년 이상 2.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실무 경력 3년 이상 3.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실무 경력 5년 이상

※ 비고

1.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 분야”라 함은 고고학·미술학사·예술학·민속학·인류학·서지학·자연사·과학사·박물관학·역사학 및 보존과학과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관련 분야를 말한다.
2. 실무 경력은 재직 경력·실습 경력 및 실무 연수 과정 이수 경력 등을 포함한다.
3. 등록 박물관·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을 경력 인정 대상 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2009년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실무 경력 기준의 완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학예사의 등급별 자격 요건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09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격 요건이 일부 완화되었다. 2009년 1월 14일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예사의 전공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 분야로 제한하였던 규정을 삭제하였다. 박물관·미술관의 전문화와 다양화 경향을 감안하여 학예사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2005년부터 전공 분야의 구분 없이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3급 정학예사 자격 요건 중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재직 경력 7년 이상을 요구하였던 것에서 재직 경력 4년 이상으로 실무 경력 기준이 3년 줄어들었다.

Ⅲ. 학예사 자격 제도 실무 경력 기준과 인증 시스템 현황

1. 학예사 자격 제도 실무 경력 기준 현황

박물관·미술관 학예사는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사업이란 박물관·미술관진흥법 제4조¹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수집, 등록, 보존, 연구, 전시, 교육, 문화행사, 출판, 국제

교류 등 제반 사업 전체를 포괄한다. 이에 따르면 학예사 개념은 서구에서 흔히 통용되는 큐레이터(curator)보다 넓은 의미의 박물관·미술관 전문 인력(museum professional)을 통칭한다.

학예사 자격 제도의 도입 목적은 박물관·미술관이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다.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 제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99. 2. 9 공포) 제6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2000. 3. 4 공포) 제3~5조, 그리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규칙(2000. 5. 2 공포) 제2~4조에 근거하고 있다.

〈표 3〉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 제도의 법적 근거

第6條(博物館·美術館 學藝士) ①博物館 및 美術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博物館·美術館 사업을 담당하는 博物館·美術館 學藝士(이하 “學藝士”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學藝士는 1級正學藝士, 2級正學藝士, 3級正學藝士 및 準學藝士로 구분하고 그 資格制度의 施行方法·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學藝士는 國際博物館協會의 倫理綱領과 國際協約을 遵守하여야 한다.

학예사 자격 제도는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로 구분된다. 등급별 자격 요건은 크게 학력과 실무 경력으로 구성되어 있다.¹¹⁾ 전공은 제한이 없다. 실무 경력 기준은 등급에 따라 다르며 경력 인정 대상 기관에서 쌓은 실무 경력만 인정된다. 정학예사의 경우 박물관·미술

10) 第4條(사업) ①博物館은 다음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

1. 博物館資料의 蒐集·관리·보존·展示
2. 博物館資料에 관한 專門的·學術的인 調査·研究
3. 博物館資料의 보존·展示 등에 관한 技術的인 調査·研究
4. 博物館資料에 관한 講演會·講習會·映寫會·研究會·展覽會·展示會·發表會·鑑賞會·探查會·踏査 등 각종 행사의 開催
5. 博物館資料에 관한 複製와 각종 刊行物의 製作 및 配布
6. 國內外 다른 博物館 및 美術館과의 博物館資料·美術館資料·刊行物·프로그램 및 情報의 交換, 博物館·美術館 學藝士 交流 등의 有機的인 協力
7. 기타 博物館의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美術館의 사업에 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第1號 내지 第5號 중 “博物館資料”는 이를 “美術館資料”로 보며, 第7號 및 第8號 중 “博物館”은 이를 “美術館”으로 본다.

11) 3급 정학예사의 자격을 심사하는 요건에 있어서 경력의 시기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의 실무 경력’으로 한정하여 학예사 자격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초래했으나, 이러한 문제는 수정되어 현재는 경력의 시기를 학위 취득 전후와 상관없이 인정하고 있다. 2003년 하반기부터 3급 정학예사의 자격 요건에 석사학위 논문 이외에 연구 논문(발굴 보고서 제외)을 학회지, 신문 등에 발표한 실적이 없는 자는 자격증 교부 대상에서 조건부 승인 혹은 제외하는 심의 기준을 두었는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결국 이와 같은 기준 조건이 폐지되었다.

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서류 심사를 통해, 준학예사는 필기시험¹²⁾과 실무 경력 확인을 통해 자격증이 주어진다.

2009년 6월 4일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와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실무 경력 기준에 따르면, 19세에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사람이 준학예사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1급 정학예사 자격증을 따려면, 대학 4년 + 1년 + 4년 + 5년 + 7년을 해야 하므로 40세가 되어야 한다.

〈표 4〉 학예사 등급별 자격 요건(시행 2009.6.6)

등급	자격 요건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경력 인정 대상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재직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1. 국립중앙박물관 2. 국·공립박물관 3. 국립현대미술관 4. 공립미술관 5.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등록된 대학 박물관·대학 미술관 및 외국 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 실태 및 업무 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기관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 인정 대상 기관에서의 재직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급 정학예사	1.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 인정 대상 기관에서의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 인정 대상 기관에서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 인정 대상 기관에서의 재직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준학예사	1.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 인정 대상 기관에서의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 인정 대상 기관에서의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 인정 대상 기관에서의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비고

1. 삭제(2009.1.14)
2. 실무 경력은 재직 경력, 실습 경력 및 실무 연수 과정 이수 경력 등을 포함한다.
3.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은 경력 인정 대상 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2) 준학예사 자격시험은 2008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을 관장하고 있으며 Q-net을 통해 시험 정보 제공에서 확인서 발급까지 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curator>) 준학예사 자격시험은 연중 한 차례 실시하며 12월 첫째 주 일요일로 정해져 있다. 준학예사 시험은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통으로 치러야 하는 2과목은 박물관학과 외국어¹⁾로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있다. 수험자들은 선택과목 12과목¹⁾ 중에서 주관식 서술형 2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4과목에 응시하여 각각의 과목이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게 된다. 준학예사 자격증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실무 경력을 충족시킬 경우 발급된다.

2. 학예사 자격 제도 실무 경력 인증 시스템 현황

학예사 자격 제도는 시행 이후 자격 기준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다. 그러나 자격 기준 중에서 실무 경력과 관련해서는 계속 문의와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시스템의 보완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 학예사 자격 제도에서 실무 경력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경력 인정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박물관에서 인턴 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에서 경력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실무 경력 요건, 시기, 기간 산정

실무 경력은 재직 경력과 인턴 경력을 모두 포괄한다. 우선 재직 경력은 국립박물관과 등록박물관 -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대학 박물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을 말한다. 인턴 경력은 경력 인정 대상 기관에서 비정규직, 일용직, 조교, 인턴십, 학예 분야 자원봉사 및 실무 연수 과정 등의 경력을 포괄한다.

실무 경력 시기는 최초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학위 취득 시기나 준학예사 자격시험 합격 시기와 선후 관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이전에 한 인턴 경력도 실무 경력으로 인정된다.

실무 경력은 박물관에 재직하지 않는 한 계속 근무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실무 경력 시수 산정 기준이 별도로 제시되고 있다. 우선 3급 정학예사는 실무 경력 기간은 전일제 근무(1주일 5일 이상, 오전9시~오후6시)를 기본으로 한다.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 기간 2년과 4,000시간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준학예사의 실무 경력 기간은 전일제 근무(1주일 5일 이상, 오전9시~오후6시)를 기본으로 한다.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 기간 1년과 1,000시간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2) 경력 인정 기관 선정

실무 경력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학예운영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에서 한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을 경력 인정 대상 기관이라고 하며 '등록된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 실태 및 업무 실적이 향후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 연수에 적합하다고 학예사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력 인정 기관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법적 경력 인정 대상 기관이다.
- 등록 사립·대학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신청 기관에 한하여 심의하여 실무 경력을 인정한다.
- 사립일 경우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으로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 실태 및 업무 실적이 향후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 연수에 적합하다고 학예사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이다.
- 인력은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직원(관장 포함)이 2인 이상 있어야 한다.
- 3급 정학예사 1명당 실습 및 실무연수 각 2명, 준학예사는 1명당 실습 및 실무 연수 각 1명씩을 인정한다.
- 소장품 도록 또는 특별 전시 도록, 연구 보고서 발간 여부 및 상설 전시 여부를 확인한다.

2009년 현재 경력 인정 대상 기관은 총 366개 관이다. 박물관이 2008년 말 기준으로 670개이므로 54.6%의 박물관만이 경력 인정 대상 기관이다. 경력 인정 기관이 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학예사 수에 따라 인턴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된다.

〈표 5〉 경력 인정 대상 기관(2009년 7월 현재)

국립	공립	사립	대학	계
31	133	134	68	366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3) 박물관에서의 인턴 과정 운영

경력 인정 대상 기관이 된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턴 시간의 총량은 각 기관이 보유한 학예사의 수에 따라 제한되어 있다. 3급 정학예사 1명당 실습 및 실무 연수 각 2명, 준학예사는 1명당 실습 및 실무 연수 각 1명씩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을 감안할 때 국·공립박물관은 예비 인력에 대한 인턴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지가 큰 반면, 사립박물관은 그렇지 못한 편이다.

학예사 자격 제도에 실무 경력이 자격 요건으로 들어간 2000년에 사실 국내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인턴 제도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었다. 지금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턴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늘어났고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들도 늘어남에 따라 현재는 이전보다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실무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는 인턴 프로그램은 여전히 귀한 것이 현실이다.

내실 있는 인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노후가 필요하다. 국립중앙박물관

관 기획 총괄과는 경력 인정 대상 기관에 따라 인턴 프로그램의 수준이나 운영 관리 방식에 편차가 큰 문제를 개선하고자 2009년 「박물관·미술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십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경력 인정 대상 기관에 배포하였다.

3. 학예사 자격증 교부 현황

학예사 자격 제도가 실시된 이후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총 1,888명이다. 2007년 12월 기준으로 2급 정학예사 109명, 3급 정학예사 1,564명, 준학예사 215명이다. 신청자 대비 87%가 자격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준학예사의 경우, 시험 응시자가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 경력을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비율은 27%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최환·박은순, 2008).

〈표 6〉 학예사 자격증 교부 현황(2007.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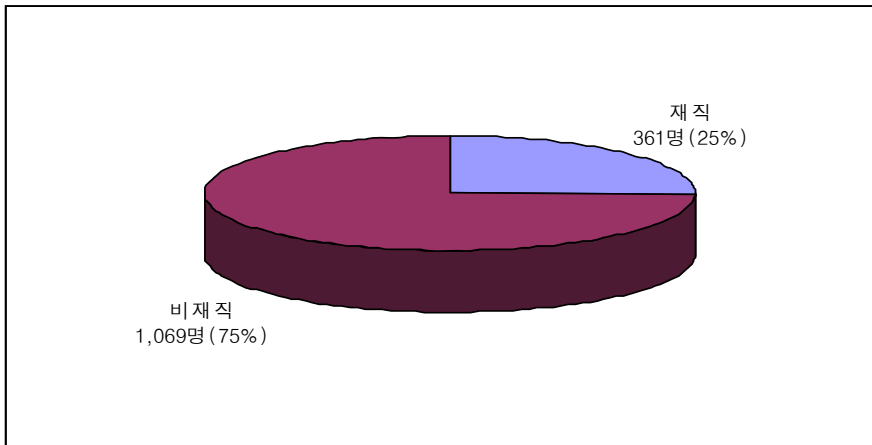
구분	합계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	
	신청	발급	신청	발급	신청	발급	신청	발급
합계	2,165	1,888	115	109	1,795	1,564	255	215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최환·박은순(2008)에서 재인용.

2급 정학예사는 3급 정학예사 자격증 취득자가 경력 인정 대상 기관에서의 재직 경력 5년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3급 정학예사 자격증 취득자가 그 조건을 충족한 2006년 하반기에 처음 배출되었다. 1급 정학예사는 아직 배출되지 않았다. 1급 정학예사는 2급 정학예사가 배출된 2006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재직 경력 7년이 충족되는 2013년이 되어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학예사 자격 제도는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요건을 정한 시행령 제10조와 별표2에서 학예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함으로써 2004년부터 학예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에 따르면, 2006년 12월 기준으로 총 1,430명의 학예사 자격증 취득자가 배출되었으나 이들 중 등록 박물관·미술관에 취업한 사람은 361명으로 4분의 1에 불과하다. 의무화한 제도 덕분에 일부 신규 채용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연간 신규 조성되는 박물관·미술관 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자격 제도가 채용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대적으로 채용 규모가 큰 국·공립박물관은 학예사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련 없이 자체 시험을 통해 학예사를 선발하는 경우가 많아 학예사 자격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림 1〉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중 등록 박물관 재직자(2006.12.31 기준)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에서 재인용.

최환·박은순(2008)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등록 박물관에 재직하고 있는 종사자 수는 총 2,237명이며, 이중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는 363명으로 약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박물관의 학예사 자격증 보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29.6%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사립박물관, 국립박물관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등록 박물관 재직자의 학예사 자격증 보유율

구분	학예사 자격증 보유	전문직	기타 직원	계	학예사 자격증 보유 비율
국립	118	103	668	889	13.2%
사립	138	243	606	987	14.0%
대학	107	140	114	361	29.6%
계	363	486	1,388	2,237	16.2%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최환·박은순(2008)에서 재인용.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에서 학예사 자격증 보유율은 공식적인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국립박물관과 비슷하게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국·공립박물관은 박물관과 미술관 중에서 운영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예사를 채용할 경우 경쟁률이 높고 이를 시험을 통해 가려내고 있다. 아직까지 학예사 자격증 보유를 응시 자격 조건으로 삼고 있는 국·공립박물관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학예사 자격증을 굳이 취득하지 않더라도 취업이 가능하고 재직 중에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혜택이 없기 때문에 보유율이 낮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박물관 재직자의 학예사 자격증 보유율이 낮은 것은 자격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에서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자격 요건에서 1급과 2급 정학예사는 3급 정학예사를 받은 이후부터 경력을 산정하기 때문에 박물관·미술관 재직자의 경우 3급 정학예사 신청을 늦게 하면 그만큼 1급 정학예사가 되는 기간이 길어지도록 자격 요건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 제도가 박물관·미술관에 재직하고 있는 기존 학예사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학예사 자격 제도 도입에서부터 현재까지 박물관·미술관 재직 학예사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V. 학예사 자격 제도 실무 경력 기준의 적정성 검토

1. 선행 연구에 나타난 실무 경력에 대한 불만 요인

1) 부실한 인턴 프로그램

실무 경력에 대한 요구는 박물관에 재직하고 있는 학예사에게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박물관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예비 인력의 경우에는 인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실제로 인턴 기회를 갖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실무 경력이 비현실적이고 재직자에게 유리한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우선, 학예사 자격 제도가 실무 및 재직 경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보니, 실무 경력을 쌓으려는 사람들보다 박물관·미술관에서 제공하는 인턴이나 자원봉사 자리가 적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인턴이나 자원봉사 기회를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둘째, 필요한 시간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일 년에서 이 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무보수나 낮은 보수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인턴이나 자원봉사자에게 맡겨지는 일이 학예사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업무가 아니라 단순 잡일인 경우도 많아서 실무 경력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무 경력을 제대로 쌓은 사람과 형식적으로 실무 경력 기간만 채운 사람을 변별해 내기가 쉽지 않아 학예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는 비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문화관광부, 2007).

2) 승급에 필요한 실무 경력 기간의 비현실성

현행 자격 제도에 따르면, 학부 졸업생이 1급 정학예사를 취득하려면 총 17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 박물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근무를 계속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승급이 된다. 하지만 박물관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승급에 필요한 실무 경력 기간이 비현실적이다.

학예사 자격 제도가 박물관 전문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높이려는 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박물관에 재직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이제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계속 근무를 하면 승급이 되는 것이라면 후자의 재직자에 대한 자기 계발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학예사 자격 제도가 박물관에서 일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한 문턱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면, 학예사와 준학예사 정도만을 두고 1급, 2급 정학예사는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3) 박물관 재직자에 대한 경과 규정 부재

현재의 학예사 자격 제도는 박물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경력에 따라 일괄 등급을 부여하는 재직 학예사에 대한 경과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최초 3급 정학예사를 받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유리하지만 1급, 2급 정학예사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각각 5년과 7년을 기다려야 한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학예사 자격 제도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경력을 시작한 학예직의 경우, 이러한 규정대로라면 경력이 많고 적응을 떠나 모두 같은 3급 정학예사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부당한 일이다.

2. 「학예사 자격 제도 규제 준응도 및 만족도 조사」에 나타난 실무 경력에 대한 의견

1) '규제 준응도 조사'에 나타난 실무 경력에 대한 의견

필자는 문화관광부의 의뢰로 2007년 학예사 자격 제도의 규제 준응도 제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규제 준응도 조사와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피규제 집단, 규제 집단, 제3차 집단으로 구분하고, 피규제 집단은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규제 집단은 학예사 자격 제도 주관 기관 공무원과 학예사 자격 제도 운영위원, 제3차 집단은 등록 박물관·미술관 인사담당자로 설정하였다. 조사 방법은 전화 조사 및 팩스, 이메일 조사를 병행하였다. 표본 추출은 자격증 소지자는 1급, 2급, 3급 정학예사와 준학예사 소지 자격증에 따라 비례 할당 추출하였으며, 공무원 및 인사담당자는 모집단이 크지 않아 전수 추출하였다. 유효 표본은 총 510명으로 피규제 집단 400명, 규제 집단 10명,

3차 집단 100명이었다. 조사는 (주)윌드리서치가 2007년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였다(문화관광부, 2007).

조사 항목은 규제 순응도 조사와 관련하여 규제 인식도, 규제 인정도, 규제 준수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이외에 요인 분석을 위해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하였다. 이중에서 실무 경력과 관련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학예사 자격 제도에 대한 규제 인식도는 규제 인지도, 규제 이해도, 규제 명확성으로 구분된다. 전반적으로 인지도, 이해도, 명확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규제 명확성에 대해 명확하거나 매우 명확하다고 판단한 응답자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 70.6로 나타났다. 반면 명확하지 않은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8.2%, ‘전혀 명확하지 않음’은 0.2%로 나타났다. 그런데 규제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응답한 114명의 불명확 사유를 보면 실무 경력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1.4%를 차지한다.

〈표 8〉 피규제 집단 특성별 규제 내용 불명확 사유

		사례 수	실무 경력에 관한 규정 불명확	학위에 관한 규정 불명확	준학예사 시험에 관한 규정 불명확	무응답
			%	%	%	%
전 체		114	61.4	28.9	8.8	0.9
성별	남자	58	63.8	27.6	8.6	0.0
	여자	56	58.9	30.4	8.9	1.8
연령별	20대	19	63.2	21.1	15.8	0.0
	30대	54	59.3	29.6	9.3	1.9
	40대	32	68.8	28.1	3.1	0.0
	50대	9	44.4	44.4	11.1	0.0
자격증 소지별	2급 학예사	6	50.0	50.0	0.0	0.0
	3급 학예사	88	60.2	30.7	8.0	1.1
	준학예사	20	70.0	15.0	15.0	0.0
실무 경력별	5년 미만	29	72.4	17.2	10.3	0.0
	5-10년 미만	47	51.1	34.0	12.8	2.1
	10년 이상	38	65.8	31.6	2.6	0.0

출처: 문화관광부, 2007.

학예사 자격 제도에 대한 규제 인정도는 규제의 필요성, 규제 내용 및 수준의 적절성, 규제의 목적 부합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학예사 자격 제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5.4%가 ‘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했고 ‘매우 필요함’도 41.0%로 전체의 86.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규제의 내용 및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조사를 하였는데, 1급 정학예사 자격 요건 수준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체의 70.4%, 2급 정학예사 73.4%, 3급 정학예사 71.2%, 준학예사 71.6%가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예사 자격 제도 규제 내용의 수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사유를 보면, 1급과 2급, 3급 학예사 자격 요건에서는 ‘재직 경력 기준의 부적절성’이, 준학예사 자격 요건에서는 ‘실무 경력 기준의 부적절성’이 가장 주된 사유로 언급되었다.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피규제 집단의 경우 집행 담당 집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9〉 학예사 자격 요건 부적절성 사유로 ‘재직 경력 기준 부적절’ 선택 비율(1급-3급 정학예사)

		사례 수	1급 정학예사	사례수	2급정학예사	사례수	3급정학예사
			%		%		%
전 체		119	78.2	105	81.9	117	82.9
구분	피규제 집단	116	78.4	103	82.5	115	83.5
	집행 담당 집단	3	66.7	2	50.0	2	50.0

출처, 문화관광부, 2007.

〈표 10〉 준학예사 자격 요건 부적절성 사유

		사례 수	실무 경력 기준의 부적절	준학예사 시험의 부적절	학력 기준의 부적절
			%	%	%
전 체		113	45.1	37.2	20.4
구분	피규제 집단	110	45.5	36.4	20.9
	집행 담당 집단	3	33.3	66.7	0.0

출처, 문화관광부, 2007.

학예사 자격 제도의 규제 준수도에 대해 규제 준수율과 규제 집행력에 대해 조사하였다. 규제 준수율을 살펴보면 지켜진다(‘지켜지는 편’+‘매우 잘 지켜짐’)는 응답이 83.1%, 지켜지지 않는다(‘별로 잘 지켜지지 않음’+‘매우 안 지켜짐’)는 응답은 13.8%, 무응답은 3.1%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지켜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규제 집행력에 대해 ‘적당한 편’이라는 응답 비율이 48.4%로 가장 많고 ‘현재 집행력으로 불가능’은 27.4%인 반면 ‘현재 집행력으로 가능’이란 응답은 17.4%로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2)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에 나타난 실무 경력에 대한 의견

필자는 규제 순응도 조사와 함께 학예사 자격 제도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를 하였다. 조사 설계의 기본 사항은 동일하며, 조사 항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학예사 자격 제도가 채용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였다. 둘째, 학예사 자격 제도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무 경력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실무 경력이 학예사로서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조사하였다. 셋째, 학예사 자격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지 조사하였다.

실무 경력에 관해서는 5가지 문항을 조사하였다. 피규제 집단의 실무 경력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실무 경력 기관, 실무 경력 방식, 실무 경력 기회 정도를 조사하였다. 피규제 집단이 실무 경력을 쌓은 박물관·미술관은 국립 40.4%, 대학 34.8%, 사립 26.3%, 공립 20.1%, 해외 1.0%로 나타났다. 국립박물관·미술관은 별도의 심사 없이 경력 인정 대상 기관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실무 경력 기관으로서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규제 집단이 실무 경력을 쌓는 방식은 직원으로 재직이 95.7%로 나타났으며 인턴 24.8%, 조교 3.0%, 자원봉사 2.8%, 비정규직 2.8%, 위촉연구원 0.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직원으로서 재직하면서 경력을 쌓은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력을 쌓기가 수월했다고 여겨진다.

피규제 집단은 실무 경력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쉬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쉬웠다 35.8%, 보통 44.2%, 어려웠다 17.5%로 나타났다. 어려웠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응답자의 약 30%정도만이 인턴이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 실무 경력을 쌓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피규제 집단의 실무 경력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55.0%, 보통 40.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은 2.5%에 불과했다. 업무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 결과 역시 실무 경력을 쌓는 방식이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쌓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무 경력이 학예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조사하였다. 조사는 피규제 집단과 제3차 집단에 대해 실시하였다. 우선 피규제 집단 전체 응답자의 94.0%가 학예사 자격 제도 규제가 학예사로서의 전문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어, 규제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제3차 집단의 92%는 학예사 자격 제도 규제가 학예사로서의 전문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어, 규제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예사 자격 제도에 대한 규제 순응도 조사 및 만족도 조사에서 실무 경력과 관련하여 조사된 바를 종합하면, 피규제 집단의 대다수가 실무 경력이 필요하고 학예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박물관 재직자로서 실무 경력을 쌓는 사람에 비해 인턴을 통해 실무 경력을 쌓는 사람의 경우 실무 경력 기회 확보와 업무 만족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학예사 자격 제도의 자격 요건에 대해 피규제 집단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일부 불만요인들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실무 경력 기준에 대한 불만으로, 실무 경력 인정 업무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고 실무 경력 수행 방식 규정과 실무 경력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사 자격 제도의 실무 경력 기준과 비교

1) 일본 박물관법 학예사 자격제도의 실무경력 기준

학예사 자격 제도는 해외에서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적은 편이다. 외국에서 학예사 자격제도라고 부를 만한 국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프랑스, 영국 정도이다. 일본의 자격 제도가 가장 유사하나 자격 기준이 높지 않으며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쉽게 딸 수 있는 편이다. 자격 기준이 낮은 대신 채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박물관·미술관에서 학예사 자격증 소지 여부를 채용 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자격 제도는 자격 제도라기보다는 국립박물관 학예사 채용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합격하면 국립박물관에 학예사로 배치되며 배치되기 전에 약 일 년 정도 연수를 받는다. 영국의 자격 제도는 재직자에 대한 연수 제도로서 인센티브 제도와 연동되어 있어서 성격이 다르다.

일본의 박물관법에서는 학예사를 학예원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학예원과 학예원보로 두개의 등급이 있다. 학예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째, 대학에서 필수학점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받는 것이다. 학예원보에서 학예원이 되려면 3년의 실무경력을 필요로 한다. 둘째,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학사학위가 있으나 필수학점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셋째, 시험을 보지 않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석사학위나 박사학위가 있으면 시험을 보지 않고 자격을 취득한다. 일본에서는 99%가 첫 번째 방식으로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이러한 학예사는 연간 약 10,000명 정도이다(일본 교육문화체육과학기술부, 2005).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자격 요건이 높지 않다. 등급은 학예원과 학예원보 두 개이며, 자격 요건이 학위를 기준으로 되어 있다. 학예원은 학사학위와 학점 이수만 하면 된다. 실무 경력은 학위가 없는 경우 요구된다. 학예원보에서 학예원이 되려면 3년의 경력이 있으면 된다.

2) 도서관법 사서의 실무 경력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실무 경력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려면 오히려 해외 사례보다는 국내 유사 자격

제도의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예사 자격 제도와 가장 유사한 자격 제도는 사서 자격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사서는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로 구분된다. 등급별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1급 정사서는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를 경력으로 환산하면 2급 정사서 자격 취득 후 9년의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 과정 이수가 필요하다. 2급 정사서는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학사학위나 석사학위를 받은 자이다. 이를 경력으로 환산하면 준사서 자격 취득 후 3년의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 과정 이수가 필요하다. 준사서는 전문학사학위를 받거나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부전공을 한 자이다. 실무 경력은 등록된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 외에도 열람실 면적이 11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자료가 1천 500권(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1천 500점) 이상인 경우 근무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서 자격 제도와 비교할 때, 학예사 자격 제도는 학력과 실무 경력 기준 모두 매우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서 자격 제도는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 기준으로 9년이면 1급 정사서가 될 수 있으나 학예사 자격 제도는 17년으로 약 두 배가 걸린다. 자격 요건이 높다면 그만큼 의무 채용 기준이 높거나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처럼 자격증이 없으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도 인턴 2년, 레지던트 3년으로 5년이면 박사학위와 함께 수련 과정을 마치게 된다. 그러나 학예사는 자격증이 없다고 진입을 못 하게 할 성질의 것은 아닌데다 오히려 사서 자격 제도가 갖고 있는 배치 기준보다 의무 채용 기준이 낮다. 실무 경력 기준의 적정성은 자격 제도로 인한 고용보장 정도와 비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학예사 자격 제도는 적정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학예사 자격 제도는 실무 경력만 있으면 상위 등급을 자동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서 자격 제도의 경우 문화부가 정한 연수 과정을 이수하거나 상위의 학위를 받을 경우 상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자격 제도를 통해 재교육을 촉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학예사 자격 제도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V. 결론 : 학예사 자격 제도의 실무 경력 기준 개선을 위한 제언

학예사의 자격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면서 학예사 자격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학예사가 박물관 전문 인력의 대명사로서 인지도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제도 규제 준수도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학예사 자격 제도의 실효성 - 박물관·미술관 채용 시 학예사 자격증의 영향 정도에 대해서는 57.3%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7.5%에 달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여겨

진다. 하나는 자격증 소지자에 비해 박물관이 적다 보니 자격증이 있어도 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국·공립박물관에서 학예사 자격 제도를 별로 활용하지 않는데 있다. 국·공립박물관에서 학예사 자격증 보유율은 대학이나 사립박물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박물관은 학예사를 채용할 때 학예사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공립박물관이 학예사 자격 제도의 변별성이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예사 자격 제도에서 실무 경력의 문제는 박물관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물관 재직자는 실무 경력을 쌓는 것은 쉬우나 경과 규정이 없어서 경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3급 정학예사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현재 1급 정학예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이미 현재 박물관에서 오래 근무하여 경력이 넘치는 학예사들이 경과 규정의 미비로 제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학예사 자격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문제이다. 대안은 학력과 재직 경력을 감안하여 학위를 받고 일정한 기간의 재직 경력을 가지면 3급부터가 아니라 바로 1급 정학예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승급에 필요한 경력 기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박물관에 들어가도 17년이 지나야 1급이 되는 것이 과연 자격 제도로 현실성이 있고 의미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급으로 승급하기 위해 5년,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해 7년을 정한 기준에 대해서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학예사 자격 제도는 신규 인력이 박물관에 들어갈 때 전문 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므로 아예 정학예사, 준학예사 두 개의 등급만 두고 1급과 2급 정학예사는 폐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만약 박물관 재직자가 재직 중에 지속적으로 자기 계발을 하도록 촉진하려면 오히려 자격 제도가 아니라 재직자에 대한 직무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국립미술관 관장으로 경영인이 임명되면서 1급 정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관장의 자격 조건으로 의무화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위 등급의 자격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학예사 자격 제도에서 실무 경력에 대해 매우 부담을 갖고 있는 박물관 비재직자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개개 박물관에 인턴 프로그램을 맡겨 놓고 있다. 그러나 실무 경력에 필요한 인턴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로 길기 때문에 한국박물관협회에서 학예 인력 지원 사업과 함께 인턴 인력 지원 사업을 권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인턴 채용 및 배치 정보가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실무 경력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2009), 「박물관·미술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십 운영 매뉴얼」.
- 김병모·양현미·이보아·최종호(1999),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 제도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양현미·이영범(2007),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 제도 규제 준응도 조사」. 문화관광부.
- 윤금진(2003), 「박물관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연구 : 학예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 윤태석(2006), Museum학예사 자격 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재고(再考), 「현대미술연구소논문집」 9집, 114-133.
- 윤태석(2007),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 제도 운영 현황을 통한 문제점 연구. 「조형교육」 30집, 211-240.
- 최환·박은순(2008),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 제도 연구,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Vol.29, 서양미술사학회, 223-253.
- 한국예술경영학회(2005), 「문화예술 인턴십 운영관리 매뉴얼」,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 Min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2005), Present Status of Museums in Japan, <http://www.mext.go.jp>.

Abstract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Museum Career Standard for the Curator Certificate

Yang, Hyun-Mee

Professor, Ph.D., Department of Culture & Arts Management, Sangmyung University

The legal basis for the curator certificate was established in 1999. A curator is a museum professional that is responsible for research, collecting, preservation, exhibitions, and education in the museum. In the curator certificate, grades of curators are divided into four levels assistant curator, third grade curator, second grade curator, and first grade curator. Standards for the certificate differ according to grades, but an academic degree and museum career are required.

In this thesis, the appropriateness of the museum career standard for the curator certificate is reviewed. In order to judge the appropriateness, I reviewed surveys on the compliance of the curator certificate regulation (2007), and compared it with other national certificates in the culture and arts area.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ator certificate, an alternative museum career standard is suggested.

[Key Words : museum, the curator certificate, appropriateness of museum career standard]

영화산업 경력 인증 체계와 자격 제도

: 영사 관련 직무를 중심으로

김미현 영화진흥위원회 연구위원

본고는 한국 영화산업 노동 시장의 특성과 실태를 살펴보고 프로젝트 조직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문 인력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경력 인증 체계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경력 인증 체계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근로 조건을 보완하기 위해 특정 직무와 직급의 직업적인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공급 인력의 수를 조절하고 교육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더불어 국가 기술 자격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영사직군의 실례를 통해 영화산업에서 자격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국가 기술 자격 제도는 가장 공식적인 자격 인증 형태로서 영화 분야에서 국가 검정 자격 종목은 영사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영사 관련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실시 기관은 종전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루어졌으나 2009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로 이관되어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본고는 한국 영화산업 노동 시장에서 경력 관리 체계의 의미를 짚어 봄과 아울러, 영사직군의 사례를 통해 자격 제도의 의미를 짚어 보고 동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영화 인력, 경력 인증, 영사 자격 제도]

I. 서론

한국 영화산업은 2000년 이후 주목할 만한 산업적, 문화적 성과를 이루어 왔다. 제작 편수가 2007년 124편으로 증가했고, 국민 1인당 극장 관람횟수가 2007년 3.3회로 늘어 프랑스나 일본과 비슷해졌다. 무엇보다 한국 영화 점유율이 2006년 63.8%까지 상승하는 등 한국 영화의 지위가 현저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투자수익률이 급락하고 2008년 전국 관객 수마저 전년 대비 5% 감소하면서 위기감이 확산되었다¹⁾(영화진흥위원회, 2009).

1) 영화산업 평균수익률은 2001년 41.5%에서 2007년 -37%로 추락하였으며 수익의 약 80%가 극장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 영화산업은 지난 10년간의 양적 성장에서 비롯된 다양한 문제에 부딪쳐 왔다. 이 중 인력 문제는 미숙련 신규 인력의 과잉 공급, 비합리적인 처우와 이로 인한 잦은 직업 이탈, 그리고 전문 인력의 질적 저하라는 악순환 구조로 요약할 수 있다. 창조 인력의 불안정성은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에 따라 한국 영화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한국 영화 인력 구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2001년 비둘기둥지라는 인터넷 모임에서 시작하여, 4부 조수 연합, 그리고 2005년 영화산업 노동조합의 출범으로 본 궤도에 올랐다.²⁾ 그러나 아직 처우 개선이 기대했던 만큼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침체기를 겪고 있는 산업 현실로 인해 일자리 감소와 실업률 증가라는 한계에도 직면해 있다.

이에 본고는 영화산업 인력 구조의 특성과 실태를 살펴보고 영화산업과 같은 프로젝트 조직 운용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력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경력 인증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영화 분야에서 자격 제도가 시행되는 유일한 분야인 영사 관련 직무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통해 경력 인증 방식 중 가장 공식적인 인증 형태인 자격 제도의 의미를 점검하고자 한다.

영화 제작 과정은 하나의 작품을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며 각각의 인력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창작성을 기반으로 협업을 통해 작업하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인력 고용에 있어서는 프리랜서 계약 방식이 가지는 양 측면인 전문성이라는 요소와 고용의 불안정이라는 요소가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직무별, 직급별 자격 조건을 규정하고, 인력 풀을 관리하며 숙련과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경력 관리 체계가 절실하다(황준욱, 2005). 그러나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인 교육센터 등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현장의 세분화된 요구를 만족할 만한 통합적인 경력 인증과 교육 훈련 시스템은 부재하다. 한편, 자격 제도는 신규 인력의 공급과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진입 장벽을 제도화하는 것은 다양한 인력의 자유로운 진입을 제한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창조산업인 영화인의 경력 관리는 자유로운 인력 풀의 교육 훈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영사 관련 직무는 관객에게 최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직무로서 표준적인 업무 수행이 요구된다. 따라서 창조산업에서 자격 제도가 유의미하다면, 그 직무의 특성은 무엇인지 고찰함으로써 이의 제한적 활용 사례를 짚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영화산업은 아날로그 필름에서 디지털로

산업의 위험도가 높다. 부가시장이 몰락함과 더불어 고제작비 영화의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영화진흥위원회, 2009).

- 2) 2006년 단체 협상이 시작되어 2007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제작가 협회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협상단의 첫 임금 및 단체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매년 영화산업 제작 합리화와 스태프 처우 개선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스태프의 직무별, 직급별 최저임금, 근로시간, 지급 방식 등을 비롯하여 고용보험 등의 4대 보험의 적용 가능성을 확장하기까지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의 매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어 이에 적절한 제도 개선 방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전반적인 영화산업의 특성과 경력 인증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영사 관련 자격 제도의 유의미성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영사 분야의 자격 제도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영사직군의 직무 분석을 비롯하여 기술 변화에 따른 검정 방법 및 수준을 세부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II. 한국 영화산업과 노동 시장의 특성

1. 영화산업의 특성과 프로젝트 조직

영화산업은 불확실성과 위험도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Caves(2000)는 창조산업에서 나타나는 수요의 불확실성(demand uncertainty)을 ‘아무것도 알 수 없다’(nobody knows anything)는 Goldmand의 표현을 빌려서 설명하고 있다.³⁾ 제작자와 창작자는 과거에 어떤 작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지식을 새로운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자신의 비전이 동등하게 타인에게도 효과적인지 계량화하기 곤란하다. 영화는 경험재(experience good)여서 소비하기 전에는 만족도를 알 수 없고, 창작자와 관객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al information)이 있을 뿐더러, 작품에 대한 평가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이다(Caves, 2000 : 2-3).

영화산업의 이러한 특장은 어떤 요인이 영화의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이끌기도 한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들이 영화산업의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화의 상업적 성공 요인을 다룬 연구들은 장르, 스타, 등급, 제작비 등을 영화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지만 각 시기와 나라마다 연구 결과의 차이가 크다. 순제작비, 스타, 장르보다 마케팅비나 개봉 스크린 수가 수입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합의가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다(Vany, 2004; Wyatt, 1994; Wasco, 2004). 큰 규모의 매몰비용(sunk cost)이 투자되지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영화산업의 속성은 투자자에게 종종 재난을 일으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산업은 다양한 조직적, 정책적 대응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며 지속되었다. 영화의 상업적 성공 여부는 궁극적으로 콘텐츠의 차별적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과 이

3) 골드만은 아무도 관객의 취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영화산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며, 확실히 성공할 아이디어는 없고, 절대 불변의 법칙도 없다고 언급하였다.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조직의 운영에 대한 관심이 이 과정의 일부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창조 산업의 전문 인력은 다른 분야와 달리 자신들이 관여한 창작물의 질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art for art's sake) 예술가 혹은 전문가들로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야의 인력이 혼성적인 팀(motley crew)을 구성하여 일시적으로 운영된다. 팀 작업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작업을 마쳐야 하는 적시성(time flies)이 매우 중요하다. 동일한 장르나 속편처럼 조그만 차이만 있어도 다른 작품으로 받아들여져 질에 관한 차이가 인정되는 분야이다. 즉 인력의 창조적 숙련도, 능력의 차이가 결과물에 반영되어 수요자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인력의 전문성이 성패의 핵심적인 결정 요인이다(Caves, 2000 : 4-8).

영화산업의 불확실성과 창조 인력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발달하여 온 것이 프로젝트 조직이다. 프로젝트 조직은 프로젝트별로 팀을 구성하고 제작이 완료되면 해산하는 임시적인 형태로서, 창의적이고 예술 중심적인 가치와 시장 통제 중심의 가치가 상호 충돌할 경우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생명으로 한다. 즉 자유로운 이합집산과 개별 계약 방식은 작품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과 자원 투입 효과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고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이다(안주엽 외, 2005 : 27-28). 그러나 공개 채용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와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개별 프로젝트의 일시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그 지속 기간이 짧다는 특성도 있다. 기획 개발 단계부터 후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2년 이내가 대부분이며 개별 인력의 계약 기간은 통상 1년을 넘지 않는다(김현호, 2006).

여기서 불가피한 결과로서 창조 인력의 직업적 불안정성 문제가 발생한다. 현대의 영화회사는 기획, 관리 및 마케팅 등의 경영 관련 직군을 제외한 창조성이 강한 직무에 정규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 왔다.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들은 연기를 비롯한 분야에 존재하지만, 영화 제작사에서 배우, 시나리오 작가, 특수효과 기술자, 기타 전문적인 지원 인력 등을 독점적으로 고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영화산업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창작적 역량, 기술적 역량, 사업적 역량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 차이는 보다 분명해진다. 사업적 역량이 주요한 투자, 제작, 기획 직무의 일부가 영화사에 소속되며 창작성과 기술성이 핵심인 연출, 촬영 등의 직무는 개인으로, 팀 단위로, 또는 별도 회사에서의 계약을 통해 결합한다. 대형 제작사를 중심으로 제작부 인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례는 전체 인원 대비 낮은 수준이다. 달리 해석하면, 창조성을 사업적 가치로 통제하지 않으면서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2. 한국 영화산업 노동 시장의 실태와 특성

한국 영화산업 노동 시장의 특징은 스태프의 낮은 처우와 전문성의 위기라는 두 측면으로 압축된다(이현승 외, 2002; 조성대 외, 2008; 배경민 외, 2008; 최형익 외, 2009). 한국 영화산업의 부정적

특징을 증폭하는 구조로 도제 시스템과 네트워크 채용이라는 경력 형성 과정이 지목되어 왔다.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영화산업 전문 인력 실태를 43개 직무에 455명을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했다.⁴⁾ 이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영화 인력의 평균 근로 기간은 연간 5.1개월이며 감독급을 제외한 퍼스트 이하 직급의 프로젝트별 평균 계약 금액은 797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서드 직급 이하의 보수는 평균 466만 원에 그치고 있는 데 반해, 근로 시간은 주당 60시간 가까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계약 기간인 5.1개월과 프로젝트별로 실제 일한 기간인 9.5개월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추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실업 급여를 포함한 4대 보험을 적용받는 비율이 약 15%에 불과하다(안주엽 외, 2005).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없는 연출과 촬영 분야만 보면 산재 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등의 가입률은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었다. 건강 보험의 가입률이 다소 높지만 이조차도 개인적으로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용 보험의 경우, 실업 급여는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수급 대상이 되지만 영화 스태프의 경우 제작 기간에만 참여하는 일도 잦아 작품 종료 시 실업 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목수정·홍원표, 2006).

현장 스태프의 실태는 낮은 보수, 장시간 근로, 계약 기간 이외의 초과 근로, 사회보장제도의 미적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스태프의 저소득은 영세한 제작사가 낮게 책정한 보수 수준이 근본적인 원인이며, 한편으로 팀 단위 계약이 이루어져 보수가 임의적으로 배분되거나 개별 계약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낮은 직급의 인력이 있기 때문이다.

팀 단위 네트워크 채용 방식은 전근대적인 도제 시스템과 함께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한국 영화산업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도제 시스템은 붕괴되었으나 팀 단위 작업은 여전히 중요한 경력 형성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개별 근로 계약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상당수는 감독 중심으로 느슨하게 형성된 팀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화 제작에 필요한 인력은 많은 경우 개인적 혹은 집단적 네트워크를 통해 구성된다. 계약 형태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54%가 서면 계약을, 30%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여 84%가 계약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계약 유형은 개별 계약이 54.3%, 팀별 계약은 31.6%이다(안주엽 외, 2005). 팀 단위 작업과 네트워크 채용의 특성은 인력의 진입 경로와 제작진의 구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화산업의 진입 경로 중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는 답은 53.3%, ‘구인광고’가 16.3%, ‘스스로 찾았다’는 25.6%로 나타난다

4) 영화산업의 직군은 제작 공정을 중심으로 크게 개발 및 전반 제작직군, 주요 제작직군, 후반 제작직군, 기타 직군으로 구별할 수 있다. 직급은 책임자급(감독급), 조정자급, 조수급으로 나누곤 한다. 본고에서는 영화 현장에서의 직급별 호칭을 고려하여, 직군의 책임자는 감독급, 조정자급인 조감독에 해당하는 직급을 퍼스트급, 조수급인 해당 직무 경력이 2-3년 수준의 부원을 세컨드급, 해당직무 경력이 1-2년 이하이거나 신규 진입한 부원은 서드 이하로 표기하였다.

(안주엽 외, 2005). 영화 제작사가 감독 및 주연 배우, 감독급을 선정할 때는 물론 조명이나 촬영감독 혹은 조감독들이 팀원을 구성할 때도 자신들의 인맥을 통하여 적당한 사람을 고르는 경우가 많다.⁵⁾

하지만 이러한 네트워크 채용 방식을 개인의 능력, 자세, 태도 등을 무시한 단순한 학연, 지연, 혈연의 전근대적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공동 작업의 중요성 때문에 영화산업에서 발달한 협업의 폭을 넓힌 특성이라 할 수 있다(황준욱 2005). 영국의 경우에는 도제 시스템을 창조산업의 고유한 특성으로 받아들이고 인력 육성 도구로 활용한다. 영국의 문화산업 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스킬셋(Skillset)의 지원 제도 중 창조산업 도제 프로그램(creative apprentice)이 있다. 이 제도는 16~20세 초반의 청소년이 문화예술업체에서 1~3년간 도제로 현장교육을 받은 후 2급 또는 3급의 자격증을 취득해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도제는 근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월급을 받는다(이혜경, 2009).

프로젝트 조직의 인력 시스템은 자유로운 입출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안정한 근로 조건을 야기하곤 한다. 따라서 영화산업 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훈련과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III. 경력 인증 시스템과 자격 제도

1. 해외 경력 관리 시스템의 유형

해외 영화산업의 경력 인증 체계는 대표적으로 할리우드의 시장 중심적 모델과 프랑스의 공적 시스템 중심의 구조를 대비할 수 있다.

할리우드는 인력 시스템은 수요 공급에 기초한 전문 시스템이 운영된다. 부가가치 창출 규모와 인력 수요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크기이고 전문화 수준이 높아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무엇보다 민간 중심의 시장이 형성 될 수 있는 것은 제작사와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분야별 직능조합이 있기 때문이다. 직능조합은 단체 회원의 이익을 대표하여 임금과 계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5)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총 319편의 영화(상업영화 기준) 중 2편 이상 제작한 49명 감독의 영화 총 118편을 대상으로 촬영, 편집, 조명, 음악, 음향, 미술 책임자의 일치 여부를 분석한 결과, 2편 이상의 영화를 제작한 49명 감독 중, 매 편마다 각 분야에 이전과 다른 팀장급 인원을 활용한 감독은 15명에 불과하며, 34명이 이전 작품에서 같이 활동한 팀장급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직무별로 보면 편집이 가장 심하고 미술 분야가 가장 덜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렇듯 영화 제작 현장에서는 이전에 활동한 경험이 새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인력 충원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황준욱, 2005).

단체 협약을 맺으며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회원들의 입회 자격 부여, 인턴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디렉토리 운영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할리우드의 각종 직능 조합은 공공 부문의 역할까지 일부 담당하고 있어서 단순한 시장 모델만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합의가 있다(이현승 외, 2002 : 160-230).

한편, 공공 주도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진 것은 프랑스의 문화예술 인력 정책이다. 경력 인증 시스템은 직업 카드 제도, 연수생 제도, 기술 자격 제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력 정책의 기초가 되는 것은 직업 카드 제도이다. 영화산업 종사자는 프랑스 국립영화진흥원(CNC)에서 발급하는 직업 신분 증명서에 의해 직업의 자격을 보장받는다. 감독, 촬영감독 등 14개 분야 직종의 종사자에게 직업 카드를 발부하며, 각 제작사가 영화 제작 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종마다 직무 단계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대부분 일정 편수 이상의 작업 참여가 조건이다.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합당할 경우 자동적으로 카드가 부여되고 무기한 효력이 있다. 제작사는 CNC의 제작 승인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 직업 카드 소지자를 고용해야 한다. 이 직업 카드 제도는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하는 것이 불가능한 영화 인력에게 일정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유럽연합 출범 이후 인력 간의 교류를 제약하는 폐쇄성이 비판받고 있으며 텔레비전 인력과의 경계선이 약해지는 등 전반적인 효력이 쇠퇴하고 있는 추세이다(이현승 외, 2002 : 238-243). 연수생 제도는 신규 진입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훈련을 담보하는 일종의 인턴 제도이다. 프랑스에서 전문 스태프가 되기 위해서는 스타지아르(stagiaire)라 불리는 견습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수생 제도는 기존 도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으로서 신규 미숙련 인력의 공급을 자연스럽게 줄이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핵심이 있다. 직업 카드 제도와 연계되어 있어 영화 인력의 전문화와 공급 통제를 위한 강력한 제도로 작용한다.⁶⁾ 프랑스는 촬영 분야와 같은 기술 직종에 대해서는 기술 자격증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 자격증은 우리의 기술 자격증과 유사한 제도로 직무 수행 경력에 중요 요인이며 직업 카드 발급에 혜택이 주어진다.

6) 프랑스의 연수생 제도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영화사의 공고를 보거나 개별적으로 각 단위 책임자와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연수생을 거친 후 전문 인력이 되는지 여부도 개인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영화 지방생들은 이 과정을 거치지만 국립영화학교 등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경우는 연수생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연수생이 되는 경로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제작사에서 작품 제작 시 공고하거나 감독급 책임자와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일하기도 한다. 정해진 코스워크가 있는 것도 아니며 제작사가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도 없다. 근무 여부는 학력, 직업 경력, 단편 제작 경험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기간과 방식이 있을 수 있다(이현승 외, 2002 : 140-142).

2. 경력 인증 체계의 필요성과 방향

경력 인증체계는 특정 직무와 직급의 직업적인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직무 수행 능력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회사 단위의 조직에 항시적으로 속해 있지 않은 광범위한 직업군의 자질을 세분화하고 관리하여 직업 환경의 안정성과 질적 능력을 제고하는 교육 훈련 체계를 결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인력을 선발하는 기준은 학력과 자격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러나 창조산업에서는 학력이 거의 의미가 없고 자격 제도가 제한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실제 작업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 즉 개인의 직무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이 일해 본 제작 경험과 평가에 근거한 네트워크가 가장 효과적이다.

영화산업의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연출부, 제작부, 촬영부, 조명부 등의 직군에 속해 있는 프로젝트 인력의 경우 대표적으로 경력 인증과 정책지원이 필요한 직군이다. 예를 들어 장편영화 감독은 3편 이상의 영화에서 조감독을 수행한 자에 한하여 자격이 인증된다거나, 프로듀서는 4편 이상에서 제작실장을 맡은 자에 대하여 가능하다는 식의 경력 기준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특정 직무와 직군의 경력 수준에 대한 합의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전문 인력 운영에 있어 자체적인 네트워크이자 교육단위인 느슨한 팀 단위 인력 구조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도제 시스템 자체는 붕괴되었지만, 고용 시장은 여전히 감독 혹은 기사를 정점으로 형성된 인력 풀이 그룹별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른바 “통 계약”⁷⁾이란 형태를 유지해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내부 노동 시장의 특성은 제작사측에서는 채용 관리를 감독급에게 전담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구조는 기술 직군에서 발달하는 경향을 보이며 관습적인 경력 인정 질서로 작동하고 있다. 기술 직군에서 팀 단위 계약 비중이 높은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영화산업 인력의 계약 단위는 개별 계약이 73.7%, 팀별 계약이 16.7%를 차지하는데, 이중 미술 48.3%, 촬영 46.6%, 조명 72.7%, 녹음 75.0% 등의 기술 분야는 팀별 계약이 많다. 반면, 기술 직군에 비해 제작 16.7%, 연출 29.1% 등의 직군은 개별 계약의 비중이 높다(안주엽 외, 2005).

해외 사례와 한국 영화산업의 특징에 근거한 경력 관리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연수생 혹은 인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연수생 선발 과정을 통해 신규 인력의 과잉 공급을 통제하고 적절한 현장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적 기구에서 지원자를 선발하여 수요가 있는 제작사에 중계하고 급여를 보조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 이수 증명을 통한 경력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직군, 직급별로 세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이에 대한 증명

7) 영화 현장에서 팀 단위의 일괄 계약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을 받고, 이것이 채용의 기회로 확대되는 재생산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이현승·안지혜 외, 2007 : 134-145).

이 외에 경력 인증 체계의 구축을 위해 자격 제도를 포함한 공인 자격 제도의 확대 시행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인적 자원의 구체적인 직업 능력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자격 제도의 기능은 영화 분야에서 미미하게 작동하여 왔다. 자격 제도는 자질 능력이 인증되고 직업으로 이어질 때 그 효력이 발휘되지만 협업과 네트워크가 강조되고 공개 채용 비율이 매우 낮은 영화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리 적절한 경력 인증 방안이라 보기는 어렵다.⁸⁾ 또한 창조성과 협업성을 인력의 주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자격 제도의 확대는 부적절한 규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직군의 경우, 팀 단위 작업과 숙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표준적 인증 체계가 요구될 수 있다. 기술직군은 카메라, 조명 등의 장비를 다루어야 하며 끊임없이 새롭게 등장하는 시스템과 신 모델의 매뉴얼을 습득하여야 한다. 즉 연출, 제작 등의 분야보다 촬영, 조명 등의 기술 분야에서 표준화된 평가 인증 체계와 재교육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영화 분야에서 유일하게 자격 제도가 운영되는 극장 영사 분야의 사례를 통해 경력인증 체계로서 자격 제도의 의미와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V. 영화산업과 자격 제도 : 영사 관련 직군의 사례⁹⁾

1. 영사 관련 자격 제도 현황

국내에서 영사 관련 직종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사 관련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동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 기술 자격 분야로 존재하여 왔다. 영사산업기사와 영사기능사는 1984년 각각 영사기능사 1급과 2급으로 신설되었고 1999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영사기능사의 수행 직무는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필름 및 디지털 매체, 영사기, 녹음 재생 장비, 전기 전원 등을 점검하고 관련 장비를 조작하여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다. 산업기사는 여기에 더해 기기 보수와 극장 영사 시스

8) 국가 자격 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도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직무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 주요 이유는 교육 훈련 현장과 직업을 연결하는 기능이 부족하고(최영섭·정진화, 2003), 특정 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다량의 시스템과 현장성 부족을 들 수 있다(김덕기·김상진·이동임, 2006).

9) 이 장은 영화진흥위원회 기술운영팀 자격 검증 담당 박철선 과장과 영사예술인협회 장영욱 부회장의 자료 제공과 도움으로 구성되었다.

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영상기능사는 응시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영상 산업기사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동일 직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4년제 대학졸업자 등이 가능하여 광범위하게 열려 있다. 동 제도는 현재 연간 1회 검정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된다. 영상기능사의 실기시험은 영상기의 준비, 운영, 응급조치 등으로 구성되며, 산업기사는 상영관 설계 및 영상기 주요 부품 수리 테스트가 포함된다.¹⁰⁾

기존의 자격 제도는 정부와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현장 및 산업의 이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국가 기술 자격 시행을 민간 위탁하여 현장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이영현 외, 2002). 정부는 2004년 국가 기술 자격법을 전면 개정하여 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적 자원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왔다. 이후 국가 자격 검정의 민간 이행이 추진되어 영상 분야 검정 시행 주체도 영화진흥위원회로 이관되었다. 2009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는 영상인 단체인 영상예술인 협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검정시험과 종사자에 대한 직무 능력 향상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영화관 경영자가 영상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상 자격증 취득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가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때문에 영상 직종은 극장에서 무자격자로 경력을 쌓은 후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력 형성 경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장 교육 훈련이 직업으로 연결되도록 보장하고 있어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률이 매우 높다.

〈표 1〉 연도별 영상산업기사 응시·합격·취업 현황

연도	원서접수인원	최종응시인원	최종합격인원	합격률	취업자수	합격대비취업률
1985-2000	193	166	16	9.6%	16	100%
2001	48	34	4	11.8%	4	
2002	66	52	7	13.5%	7	
2003	102	77	4	5.2%	4	
2004	107	80	8	10.0%	8	
2005	120	85	7	8.2%	7	
2006	83	63	1	1.6%	1	
2007	64	48	3	6.3%	3	
2008	28	20	3	15.0%	3	
계	783	605	50	8.3%	50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10) <http://www.enap.or.kr/index.action>

〈표 2〉 연도별 영상기능사 응시·합격·취업 현황

연도	원서접수인원	최종응시인원	최종합격인원	합격률	취업자수 ¹⁾	합격대비취업률
1985-2000	6,963	6,190	548	8.9%	548	100%
2001	574	506	45	8.9%	45	
2002	721	625	106	17.0%	106	
2003	913	794	86	10.8%	86	
2004	1,560	1,340	158	11.8%	158	
2005	1,293	1,143	155	13.6%	155	
2006	1,117	1,003	189	18.8%	131	69.3%
2007	635	572	122	21.3%	107	87.7%
2008	290	253	71	28.0%	48	67.6%
계	13,776	12,173	1,406	13.9%	1,384	98.4%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산업적 전망을 고려할 때, 영상 자격증 소지자의 인력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응시 대비 합격률을 살펴보면, 〈표 1〉, 〈표 2〉에서처럼 평균 시험 합격률은 산업기사가 8.3%, 기능사가 13.9%이다. 현장 실무 경력이 없으면 실기시험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취업률은 높아서 2005년까지 영상기능사, 산업기사 모두 100% 취업되었으나 2006년부터 영상기능사 중 취업 대기자가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와 유사한 영상 분야의 자격 검정 시스템은 영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제도와와의 가장 큰 차이는 영국의 경우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직업 인증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영국 영화 사운드 텔레비전 위원회(British Kinematograph Sound and Television Society, 이하 BKSTS)와 영화상영관 협회(Cinema Exhibitors' Association, 이하 CEA)는 여러 과정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하고 상영관에서 받아들이는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BKSTS는 영화산업이 상영 표준과 인증된 평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유럽연합 출범 이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제가 영화관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둘째, 극장 영상기사의 미숙함은 필름에 손상을 입혀 산업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관객의 불만족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영상기사는 산업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객이 극장의 품질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음향기와 영화 상영에 대한 지식을 지녀야 하며 상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¹²⁾

11) 취업자 수는 메이저 영화관 스태프로 근무 중 자격시험을 합격 한 후 정직원 발령 대기자를 포함한 것이다.

BKSTS는 방송과 영화 스튜디오에 대한 국가 직업 검정(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개발에 중점을 둔 스킬셋의 표준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스킬셋의 장점은 교육 훈련 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으나 이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극장과의 업무 수행 평가가 합의되지 않아 독립영화관들은 이미 숙련된 영사실 직원이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훈련을 반대했고 개발된 프로그램은 폐기되었다. 이에 BKSTS는 CEA의 기금을 통해 프로그램을 발전시켰고 영사기 사용 매뉴얼이 되었다. 영사기사가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극장에서 BKSTS와 CEA가 발급하는 인증서를 인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이다.¹³⁾ BKSTS는 모든 영화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인증 체계를 갖추어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Cineworld, Odeon, Vue Cinemas 등의 멀티플렉스 체인과 독립영화관의 대표들로 구성된 하위 위원회에서 영사기사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협의한다. 즉 민간위원회와 극장협회가 중심이 되어 자체적인 표준개발-인증-교육 훈련-작업 검정 시스템을 발전시킨 것이다.

국내의 영사 분야가 국가 검정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영국은 민간협회의 자율적 인증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영화산업의 다른 직군과 달리 영사 분야에서 자격 검정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관객의 안전과 최종적인 상영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표준적인 직무 습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영사 관련 자격 제도의 개선 방향

현재 영사 관련 자격 제도는 디지털로의 기술 변화에 따라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 논란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해, 2007년 10월 전경련이 제출한 규제 개혁 대상에 영화관의 영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 의무 조항을 폐지할 것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있었다.¹⁴⁾ 주요 내용은 영화관이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고용과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자율 경영을 하도록 국가 개입을 배제하여야 하며, 디지털 시네마 등 관련 환경 변화로 인하여 이 조항이 사문화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전경

12) <https://nt12.orbital.net/bksts/about.asp>

13) 이 인증 체계는 초기에는 숙련도에 따라 Booth Attendants(영사실 관계자), 영사기사(Technicians), 영사 보조(Operator)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에는 영사기사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인 요구 조건은 첫째 건강과 안전, 둘째 필름과 영화 상영의 기술적 능력을 비롯한 영사 관련 운영 능력, 셋째 영사와 음향 정비 등의 유지 보수 조직 능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며 영사 담당자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2007년 전경련은 한국경제연구원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금융·창업 등 38개 1,664개의 규제 개혁 과제를 제출하였는데, 기업 환경 개선,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시급한 현안 과제 184건, 불량 과제 103건 중 영사 관련 자격증 취득자 고용 의무 개선이 포함되면서 영사기사 제도의 적절성을 문제 제기하였다.

련·한국경제연구원, 제2권, 2007 : 340).

이러한 관점은 필름을 물질적 기반으로 시행한 영사기능사와 영사산업기사 제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영사 자격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극장 경영자는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이외의 재교육에 관심이 없어 기술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 인정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2007년 이후 자격증 소지자의 시장 수요보다 공급 인원이 많아 종사자의 권익에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영사기 조작이 과거에 비해 쉬워져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의 지속 사유는 존재한다.

첫째, 영사 분야가 국가 자격 검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품질 관리의 최종 단계로서 공급자의 시연 요구와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표준적인 기술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상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의 대처와 필름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여전히 그 필요성이 있다. 영사 분야의 직무는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이 투자된 영화의 마지막 고리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에 충분하다. 영화의 창작자뿐만 아니라 투자자, 제작자 모두 최종 결과물이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관객에서 상영되기를 기대한다. 만약 스크린에 상영되는 이미지가 흠집이 나고 얼룩지거나 불안정하다면, 혹은 사운드가 시끄럽거나 안 들린다면 관객의 만족도는 매우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영사기능사 및 산업기사는 적절하게 필름을 공급받고 작동할 수 있는 숙련도를 지녀야 하고 극장의 시스템과 다양한 장비를 유지 보수해야 하며 극장의 청결과 관객의 안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디지털과 멀티플렉스 환경으로의 변화는 동 제도의 폐지 사유가 아니라 효율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 디지털 작업에서는 아날로그 필름과 달리, 화면 밝기, 색감 등 화면의 모든 부분에 색 데이터 값을 지정한다. 그런데 극장 환경이나 시설이 각기 달라 이 데이터 값을 스크린마다 일일이 지정하지 않으면 관객들은 창작자의 의도와 다른 화면을 보게 된다.¹⁵⁾ 단관 극장과 달리 멀티플렉스 극장의 경우엔 이 표준적 상영 시스템이 더욱 요구된다. 멀티플렉스는 한정된 공간 안에 최대 수의 스크린을 배치하기 때문에 상영관마다 크기, 좌석 수는 물론이고 영사기와 스피커의 종류, 극장 운영 방식 등이 달라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화면에 초점이 맞지 않거나 선명도가 떨어지고 변색이 나타난다. 영사 시의 환경 차이로 의도와 다른 비전을 상영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적인 직무 교육과 공인 자격 검정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의 규정이 폐지될 경우 영화관의 편법 운영이 초래될 수 있어 고용 안정에 역효과를 일으

15) 김성훈(2009. 7. 14).

킬 수 있다. 현재는 영사예술인협회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사 분야 자격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자격 제도가 폐지된다면 개별 업체의 경쟁 체계로 전환될 것이 예상된다. 이 결과 영사 관련 직종이 인건비를 줄이려는 적절치 못한 인력 운용으로 관객 후생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 영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처 능력 및 기기의 전문적 관리, 극장 상영 시스템 관리 등의 미흡은 결국 극장의 이미지에 추락으로 이어져 전체 한국 영화 관객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경력 관리 체계 중 일부로서 동 제도의 의미를 인정한다면, 변화한 기술 및 산업 환경에 따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할 지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등급 체계가 현장의 직무 수준과 비교하여 적절하지, 검정 과목은 이 직무 수준에 부합하는지, 현장 기술 능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검정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현행 영사기능사와 영사산업기사 두 직무가 영사기 조작과 이의 유지 보수 및 관리 감독으로 각각 구별되는 점을 고려할 때 두 단계의 자격증은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동일 직급 영사산업기사와 영사기능사의 실질적인 직무, 임금, 기술 수준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환기할 때, 자격증의 세분화보다 실질적인 실무 경험이 직무 내용을 결정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검정 방법에 있어 디지털 기기의 조작과 특성을 이해하는 디지털 영사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과목으로의 재편은 필수적이다. 필름을 영사할 때는 필름을 조작하는 업무의 숙련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디지털 영사는 기기 조작의 측면에서는 필름보다 쉽지만 장비생산 업체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높고 기술 변화가 빠르다. 필름 영사와 조작에 중점을 두는 검정 내용과 검정 방법은 필름과 디지털의 혼용 시기에 적절하게 디지털 관련 기술 습득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제도 개선 측면에서 불분명한 극장의 고용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규정은 고용 인원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동 제도가 제정되었던 1984년은 단일상영관 시기여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었으나 멀티플렉스가 보편화되면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멀티플렉스의 증가로 전국 스크린 수는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각각 1,648개, 1,880개, 1,975개, 2,081개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극장 수는 301개, 321개, 314개, 322개로 정체 및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영화진흥위원회, 2009). 그런데 현재 일부 영화관에서 영사 자격증 소지자 고용기준을 스크린당 1명으로 해석하여 고용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상영관당 1명으로 이해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 의무를 정하고 있는 제도와 실태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 국내 5대 멀티플렉스 체인(CGV, 롯데시네마, 프리미어스, 메가박스, 씨너스)의 무자격자 근무 비율은 약 40%로 조사되었다. 일정 기간 무자격 상태에서 근무하여 실기를 익힌 후 정규 직원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1985년 이후 자격증을 취득한 영사산업기사 50명과 영사기능사 1,406명 중 퇴직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영사기능사와 산업기

사의 수는 640명이며, 이외에 약 256명이 무자격자로 추정된다.¹⁶⁾ 무자격자 비율과 멀티플렉스 환경에서 영사 직무의 노동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스크린 수 10개관 이상의 멀티플렉스는 영사 산업기사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스크린당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비율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영사기사 자격 제도와 관련하여 현안으로 부각되는 것은 디지털 영사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새로운 직업 능력을 재교육하는가이다. 가장 핵심적인 지점은 필름과 디지털이 모두 사용되는 상영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디지털 영사가 설치된 스크린은 2004년 4개(총 스크린 수 대비 0.3%), 2005년 46개(2.8%), 2006년 95개(5.1%), 2007년 161개(8.2%)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개봉영화 112편 중 34편이 디지털로 촬영되거나 배포, 혹은 상영되어 디지털 적용률이 30.4%에 이른다(영화진흥위원회, 2008).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는 기술 관련 직무의 재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전반적인 영화 인력 경력 인증 체계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며, 영화진흥위원회의 디지털 시네마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존 인력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극장에서 실제로 영사기를 조작하는 무자격 영사는 일종의 연수생 개념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연수생들은 인턴 제도와 연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사예술인협회, 그리고 극장연합회 공동으로 진입 인력의 기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 무자격자도 극장에서 영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극장의 상영 품질 개선과 관객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사예술인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을 극장의 무자격자에게까지 확대하고, 기존의 인력은 디지털과 관련한 교육내용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논문은 영화산업의 불확실성과 여기서 비롯한 프로젝트 조직의 특성이 어떻게 노동 시장을 일시적인 계약과 인력 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는지 고찰하였다. 전문 인력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경력 인증 시스템은 미숙련 신규 인력의 진입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인턴 제도의 도입과 교육 훈련의 강화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가장 공식적인 형식의 경력 관리 제도인 자격 제도는 창조성과 협업을 중시하는 네트워크 조직의 특성상 광범위한 도입에 무리가 있다. 그러나 표준 시스템을

16) 무자격자 수는 5대 멀티플렉스 체인에서 자격증 없이 근무하는 영사 관련 종사자의 평균비율 40%를 전체 영화관에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적용하는 기술 직군에서는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용할 수 있다.

현재 영화 분야에서 유일한 국가 검정 분야인 영사 직군은 필름 및 디지털 영사에 따라 영화 상영의 기술적 대처 능력과 극장에서 관객이 영화의 품질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표준화 된 시스템 습득 능력이 중요한 직무이다. 영사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 고용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자격 제도의 효용성을 도모하고 교육 훈련과 직업을 연결하기 위한 입법 장치이다. 이에 멀티플렉스 환경과 디지털로의 기술적 변화에 따라 이에 맞는 제도 개선과 교육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전경련의 영사기사 자격증 소지자 의무 고용 조항 폐지 건의는 영사기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영사기사 검정 업무가 영화진흥위원회로 이관된 것을 계기로 영화관의 품질과 관객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표준 인증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영화진흥위원회와 극장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극장 전반에 걸친 기술 시스템의 표준화와 인증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세부적인 직무 분석과 검정 시스템의 마련이 이와 관련해 요청된다.

참고 문헌

- 김덕기·김상진·이동임(2006), 국가 기술자격 검정의 위탁 확대를 위한 민간 기관의 자격 검정 능력 실태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9권 10호, 26-47.
- 김성훈(2009. 7. 14), 상영 표준화도 팝콘만큼 신경 쓰자, 『씨네 21』, http://www.cine21.com/Article/article_view.php?mm=001002003&article_id=57028.
- 김현호(2006), 영화산업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방안, 『영화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5-52), 천영세의원실.
- 목수정·홍원표(2006), 영화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혁-프랑스 공연예술비정규직(Intermittents du Spectacle) 사례를 중심으로, 『영화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53-68), 천영세의원실.
- 배경민·안영진·김현정·조외숙(2008), 「노사협약 이후 영화 제작현장 변화 및 개선 방향 연구」, 서울 : 영화진흥위원회.
- 안주엽·황준욱·김미현·이상민 외(2005), 「영화산업 전문 인력 구조 분석과 정책 지원 방향」, 서울 :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진흥위원회(2008), 「2008년도 판 한국영화연감」, 서울 :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진흥위원회(2009), 「2008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http://kofic.or.kr/>
- 이영현 외(2002),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자격 제도의 방향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현승 외(2002), 「한국영화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서울 : 영화인회의.
- 이현승·안지혜 외(2007), 「영화 현장 인력수급 및 경력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서울 : 영화진흥위원회.
- 이혜경(2009), 창조 산업과 고용 : 영국 문화 정책의 시각, 『한국문화경제학회 2009 춘계학술대회 자료집』(27-35), 문화경제학회.
- 전경련·한국경제연구원(2007), 「규제 개혁 종합 연구-시장 경제 창달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로드맵」 제2권 (340), 서울 : 전경련.
- 조성대(2008), 「단체 협약 적용 이후 현장 실태 조사와 단협 개선 방안 연구」, 서울 : 전국 영화산업노동조합·한국영화제작가협회.
- 최영섭·정진화(2003), 「기업 주도의 산업별 인적 자원 개발 기구 설립 방안 연구」, 서울 : 산업연구원.
- 최형익 외(2009), 「영화산업 노동자의 생계 안정 및 실업 급여 지급 방안 -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 영화진흥위원회.

- 황준욱(2005), 영화 제작 인력의 작업 및 고용 특징, 「한국 영화 동향과 전망」, 2005년 12월호, 서울 : 영화진흥위원회.
- Caves, Richard E.(2000), *Creative Industries: Contracts between Art and Commerce*,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Prindle, David F.(1993), *Risky Business : The Political Economy of Hollywood*, Boulder, Colo. : Westview Press.
- Vany, Arther de(2004), *Hollywood Economics : How Extreme Uncertainty Shapes the Film Industry*, Routledge.
- Wasko, Janet(2004), *How Hollywood Works*, 박조원·정현일 역(2007), 「할리우드 영화산업론」.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Wyatt, Justin(1994), *High Concept : Movies and Marketing in Hollywood*, 조윤장·홍경우 역(2004), 「하이 컨셉트 : 할리우드의 영화 마케팅」. 도서출판 아침이슬.
- 국가 영사 기사 기능사 자격 검정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2009. 6. 10)
<http://www.enap.or.kr/index.action>
- 영국 영화 사운드 텔레비전 위원회 홈페이지(British Kinematograph Sound and Television Society)(2009. 5. 20) <https://nt12.orbital.net/bksts>

Abstract

The Career Qualification System and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in the Korean Film Industry, Focusing on the Projectionist Job

Kim, Me-Hyun

Senior Researcher, Korean Film Council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market in order to consider the need for the career qualification system in the Korean film industry. It could be a way to improve the instability of the job market in project-based organizations. To supplement the unstable labor flow in project-based organizations, the career qualification system could be used, not only in managing the flow of human resources, but also in improving professionalism through educational training.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by studying the case of the projectionist job as the only acting field of the system in the Korean film industry. As for the projectionist career, the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test was previously operated by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and has been operated by the Korean Film Council since 2009.

This paper attempts to prove the significance of the career management system of the labor market in the Korean film industry, and to survey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projectionist job as a case of the career qualification system. Finally, the paper seeks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system in the Korean film industry.

[Key Words : Korean film industry labor market, career qualification system, projectionist job]

文化政策論叢

문화정책논총

일반 논문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임상수

한국 미디어 산업의 분석 : 산업 연관 분석을 중심으로 / 임응순·정군오

한국의 박물관 건립 현황 분석에 따른
박물관 건립계획(Museum Planning)의 필요성 / 박신의

지역사회 박물관 활성화 방안 연구
: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사례 / 이주연·서희석·류지원

계층적 분석처리(AHP)를 이용한 출판 수출 지원 기능에 대한
만족도 평가 / 서보밀·오준석·김소영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임상수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

최근 들어 한국 영화산업은 투자 수익률 하락, 제작 비용 및 제작 편수 감소, 배급 및 상영 부문의 독과점 심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영화 시장의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함께 한국 영화에 대한 수요 감소라는 수요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한국 영화 수요의 감소는 구조적 문제로 향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 크다. 왜냐하면 스크린쿼터 축소가 있었던 2006년 7월부터 한국 영화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를 검정하기 위해, 한국 영화 관람객 수를 추정한 후 Chow test를 활용했다. 검정 결과,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국 영화 관람객 수의 축소를 야기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6년 7월을 기점으로 이동통신사의 극장 할인이 중단되었는데, 이로 인해 국내 영화 관람객 수는 감소했으며 외국 영화보다 한국 영화에 보다 큰 악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 구조변화 검정, 스크린쿼터, 시장 집중도, 허핀달-허쉬만 지수]

I. 서론

그동안 한국의 영화산업은 스크린쿼터제 도입에 따른 국산 영화 보호 정책과 함께 크게 발전해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의 영화산업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1999년 영화 ‘쉬리’의 관람객 수는 620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후 ‘공동경비구역’이 580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2003년 ‘실미도’는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관람객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한 1,108만 명을

기록했다. 이후 2005년 ‘왕의 남자’는 1,230만 명 그리고 2006년 ‘괴물’은 1,302만 명을 기록하여 한국 영화 사상 흥행 1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 영화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2006년 7월 스크린쿼터의 의무 상영 일수가 연간 146일 이상에서 73일 이상으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한국 영화산업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2007년 이후 한국 영화의 입장객 수는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관람객 수가 1,000만 명 이상인 흥행작이 하나도 없다는 점은 이를 잘 말해준다. 최근 들어 영화 ‘괴수 스캔들’이 전국 관객 700만 명을 돌파하여 침체된 한국 영화산업에 활력소가 되고 있으나, 한국 영화산업은 여전히 침체기에 있다.

영화산업은 종합 산업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영화산업의 발전은 출판, Hardware, Software, 음악, 관광 등 관련 산업 역시 동반 성장시킬 가능성이 크다. 영화산업은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취업 유발 등과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영화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산업적 측면 외에 영화는 한 나라의 문화와 예술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영화 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영화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발전과 함께 문화 및 예술을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하겠다. 한국 영화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영화산업이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영화의 관람객 수를 추정해야 한다.

영화 수요함수를 추정한 국내 선행 연구로는 김휴중(2002), 김미현 외(2004), 김상호(2007) 등이 있으며, 해외 선행 연구로는 Blanco·Pino(1997), Hand(2002), Dewenter·Westermann(2005) 등이 있다.

김휴중(2002)은 연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득, 영화 관람료, 총 스크린 수, TV 및 VCR 보급률, 직배 여부 등을 독립 변수로 하여 영화 수요함수를 추정했으며, 추정 결과 영화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사치재임을 밝혔다. 김미현 외(2004)는 국내 영화 수요함수를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로 구분하여 추정했으며, 추정 모형으로 ARI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를 사용했다. 김상호(2007)는 국내 영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는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연립방정식 모형을 활용했으며, 영화 수요함수의 설명 변수로 영화 제작 편수, 외화 수입 편수, 수출입 단가, 관람료, TV 보급 대수를 사용하였다.

Blanco·Pino(1997)는 연간 스페인 영화 관객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오차수정 모형(ECM : Error Correction Model)을 사용했으며, 영화는 사치재임을 밝혔다. Hand(2002)는 1936년부터 1999년까지 영화 관람객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적 분포를 검토하고 이에 ARIMA 모형을 적용하여 영화 관람객 수를 예측하였다. Dewenter·Westermann(2005)는 독일 영화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김상호(2007)가 추정한 모형과 마찬가지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연립방정식 형태를 선정한 후 이를

추정했으며, 수요함수의 설명 변수로 전기의 실질 관람료, 소득, 전기의 스크린 수, TV와 VCR 보급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영화 관람객 수는 실질 관람료와 소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 영화산업의 문제점을 투자, 제작, 배급, 상영으로 이어지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스크린쿼터가 축소된 2006년 7월 이후 한국 영화에 대한 관람객 수가 감소했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 영화 수요함수를 추정하며, 이 때문에 데이터는 월별 한국 영화 관람객 수를 사용한다. 또한 한국 영화에 대한 대체재 변수로 외국 영화의 관람객 수를 설명 변수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II.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

공급 측면에서의 영화산업은 일반적으로 투자, 제작, 배급, 상영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한국 영화산업의 문제점은 이들 4개 부문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1. 투자 현황

한국 영화산업의 투자 주체에는 자기 자본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 공적 투자자 등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자기 자본 투자자는 주로 영화 제작사가 해당되며, 전략적 투자자는 상영권 소유 대기업, 부가관련 시장 유통 사업자(TV, 홈비디오, 통신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 창업투자회사, 금융기관, 개인 투자자 등이 해당되며, 공적 투자자의 경우 문화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해당된다.¹⁾

또한 1996년 이후 금융 자본이 영화산업으로 진출하면서 영상 전문 투자조합이 결성되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영화 관련 펀드들이 탄생했고, 특히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투자조합에 출자함으로써 한국 영화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출자하여 결성된 영상 전문 투자조합은 2000년 이후 2006년까지 28개이며, 조합 결성액은 3,175억 원에 달한다. 또한 이들 영상 투자 조합에 의한 투자 편수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251편에 달하며 출자 금액은 525억 원을 기록했다.

1) 최영준·최수영 외(2008), 「한국 영화산업 투자 환경 및 자본 조달 구조」, 영화진흥위원회.

〈표 1〉 한국 영화 투자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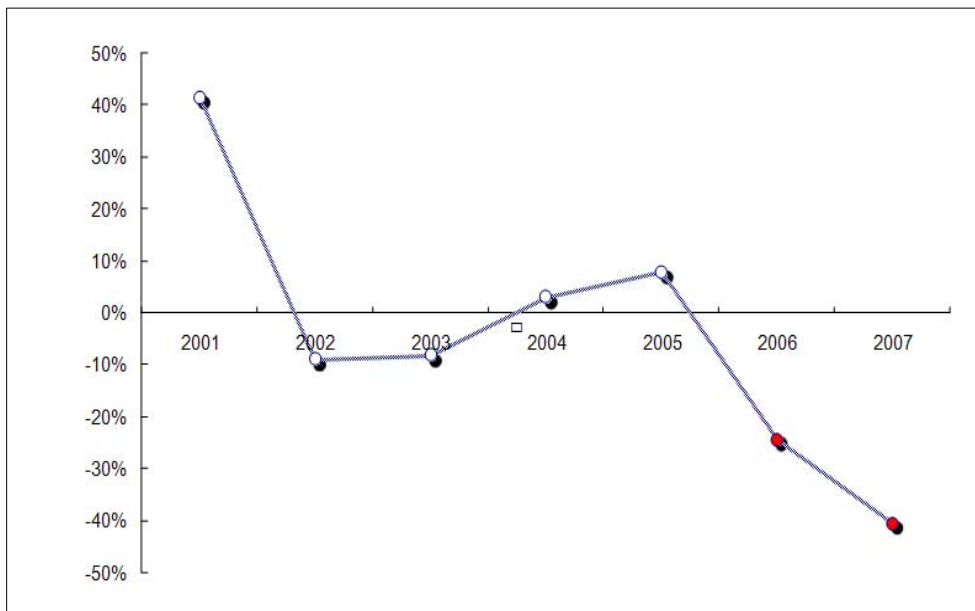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출자조합수	7개	2개	2개	4개	5개	4개	4개	28개
조합결성액	685억원	200억원	190억원	390억원	620억원	623억원	467억원	3,175억원
투자편수	10편	23편	30편	35편	61편	52편	40편	251편
출자금액	100억원	40억원	35억원	70억원	100억원	80억원	100억원	525억원

출처 : 최영준, 최수영 외(2008), 「한국 영화산업 투자 환경 및 자본조달 구조」, 영화진흥위원회.

이처럼 한국 영화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의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한국 영화의 투자 환경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상이익 대비 비용으로 나타나는 한국 영화의 투자 수익률은 2001년 41.5%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2002년과 2003년 각각 -8.9%와 -8.1%로 급락했다. 2004년 이후 2005년까지 3.1%와 7.9%로 양의 부호로 전환된 한국 영화의 투자 수익률은 2006년 이후 음의 부호로 전환되어 2006년에는 -24.5% 그리고 2007년에는 -40.5%의 사상 최저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림 1〉 한국 영화 투자 수익률

(단위 : %)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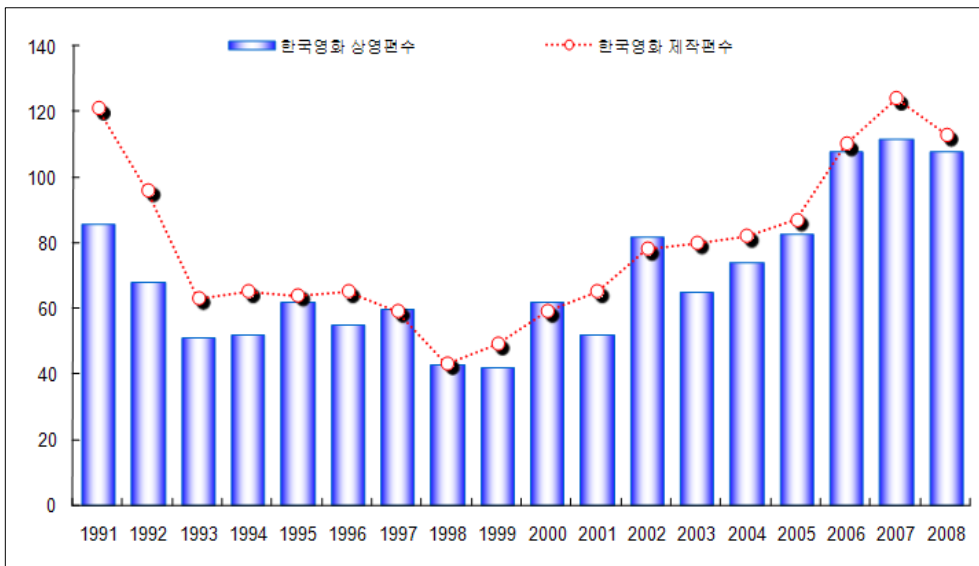
2. 제작 현황

한국 영화는 1991년 121편이 제작된 이후 감소하여 1998년에는 사상 최저치인 43편을 기록했으나, 1999년 이후 급증하여 2007년에는 124편을 기록했다. 이처럼 국내 영화의 제작 편수가 늘어남에 따라 개봉 편수 역시 증가하여, 1999년 43편에 불과하던 국내 시장에서의 한국 영화 개봉 편수는 2007년 112편으로 무려 2.7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2008년 한국 영화의 제작 편수는 113편으로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개봉 편수 역시 108편으로 감소했다. 총 개봉 편수에서 한국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7.4%에 불과했으나 2006년 31.9%로 상승한 이후 2007년 31.6% 그리고 2008년에는 29.8%로 급락했다.

이러한 한국 영화의 제작 편수와 함께 평균 제작비 역시 감소하고 있다. 한국 영화 편당 평균 순제작비의 경우, 1997년 11억 원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28.4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25.5억 원 그리고 2008년에는 20.7억 원으로 감소했다. 마케팅비 역시 1997년 2억 원에 불과했으나 2006년 14.4억 원으로 급증했다가 2007년과 2008년 각각 11.7억 원과 9.4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총 제작비 역시 2007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30.1억 원을 기록했다.

〈그림 2〉 한국 영화 제작 편수 및 개봉 편수

(단위: 편)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표 2〉 연도별 한국 영화 편당 평균 제작비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순제작비	마케팅비	총제작비	구분	순제작비	마케팅비	총제작비
1997	11.0	2.0	13.0	2003	28.4	13.2	41.6
1998	12.0	3.0	15.0	2004	28.0	13.6	41.6
1999	14.0	5.0	19.0	2005	27.3	12.6	39.9
2000	15.0	6.5	21.5	2006	25.8	14.4	40.2
2001	16.2	9.3	25.5	2007	25.5	11.7	37.2
2002	24.5	12.7	37.2	2008	20.7	9.4	30.1

출처 : 영상산업정책연구소 조사연구팀, 「2008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3. 배급 현황

한국의 영화 시장은 배급 및 상영 부문에서 독과점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들 독과점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편당 투자 수익률 하락과 한국 영화의 다양성 및 창조성 부족 문제를 야기했다.

한국 영화산업은 배급업 및 상영업을 중심으로 독과점을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의 편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CR(Concentration Ratio)²⁾을 사용하며, CR이 상위 몇 개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편중도의 차이가 크게 달라진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허핀달 지수(HHI : Herfindahl-Hirschman Index)³⁾를 함께 활용하고 있다.

배급업 부문의 CR10과 HHI를 산출한 결과, 한국 영화산업의 배급업 부문은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국내 영화 배급사는 2005년 61개에서 6개 줄어든 55개를 기록했다. 관람객 수 기준 3위 업체의 점유율로 표시되는 CR3는 2005년 55.9%에서 2007년 53.5%로 하락하였으나, 상위 10위 업체의 점유율로 표시되는 CR10은 2005년 90.9%에서 2007년도 93.2%로 오히려 상승했다. 또한 HHI로 살펴본 결과, 2005년 HHI는 0.13이었으나 2007년 0.15로 상승했으며 이는 한국 영화산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편중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CRN = 관람객 기준 상위 N개의 회사들의 관람객 합계를 전체 관람객 합계로 나눈 비중을 의미한다.

3) HHI는 각 회사의 점유율을 제곱한 후 이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

〈표 3〉 배급사 관객 순위

(단위: 명)

순위	2007			2005		
	배급사 이름	관객수	점유율	배급사 이름	관객수	점유율
1	CJ엔터테인먼트	47,056,162	31.05%	쇼박스(주)	33,006,979	21.10%
2	쇼박스(주) ⁴⁾	18,677,778	12.33%	CJ엔터테인먼트(주)	31,094,337	19.88%
3	한국소니픽처스 ⁵⁾	15,258,240	10.07%	시네마서비스	23,384,732	14.95%
4	워너브러더스코리아	14,448,615	9.53%	워너브러더스코리아	12,452,800	7.96%
5	롯데엔터테인먼트	14,196,576	9.37%	이십세기폭스코리아	9,975,006	6.38%
6	시네마서비스	10,659,452	7.03%	UIP코리아	9,327,080	5.96%
7	이십세기폭스코리아	7,701,612	5.08%	쇼이스트(주)	8,403,092	5.37%
8	프라임엔터테인먼트	4,807,129	3.17%	롯데엔터테인먼트	6,124,713	3.92%
9	UIP코리아	4,442,506	2.93%	브에나비스타 ⁶⁾	4,604,734	2.94%
10	스튜디오2.0	3,944,408	2.60%	소니픽처스	3,821,219	2.44%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4. 상영 현황

상영업 역시 CJ그룹과 롯데그룹에 의한 편중이 심화되었다. 극장 및 스크린 수 기준으로 상위 2개 업체는 CJ그룹과 롯데그룹으로 모두 대기업의 자회사이며, 특히 두 그룹에 의한 극장 및 스크린 수의 점유율은 60%를 넘었다. 상영업의 Big4 업체에는 CJ그룹, 롯데그룹, 동양그룹의 대기업과 씨너스의 중소기업이 포함되며, 이들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CJ그룹과 롯데그룹의 Big2의 점유율은 상승하고 있으며, 이들의 2004년도 극장수의 점유율은 46%에서 2007년 64.8%로 상승했고 스크린 수의 점유율 역시 2004년도 44.4%에서 2007년도에는 62.7%로 상승했다.

이처럼 배급 및 상영 부문의 독과점 구조와 함께 CJ그룹, 동양그룹, 롯데그룹을 중심으로 투자, 제작, 배급, 상영의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현행 국내 영화산업의 수직 계열화는 1920~1940년대의 미국 영화산업과 유사하며, 미국의 경우 1948년 반트러스트법을 제정하여 영화 제작 및 배급사를 소유하면서 동시에 극장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4)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를 지칭한다.

5) 한국소니픽처스 릴리징 브에나비스타를 지칭한다.

6) 브에나비스타 인터내셔널 코리아를 지칭한다.

〈표 4〉 상영업 Big4의 극장 및 스크린 수 현황

		2004		2005		2006		2007	
		극장수	스크린수	극장수	스크린수	극장수	스크린수	극장수	스크린수
CJ	CGV	27	215	33	258	43	343	46	369
	Primus	18	132	28	207	33	228	36	261
	계	45	347	61	465	76	571	82	630
롯데시네마		12	98	25	195	36	273	36	290
Megabox		13	105	16	129	10	92	9	84
씨너스		5	37	9	69	14	103	13	98
소계		75	587	111	858	136	1039	140	1102
총계		124	1002	158	1269	198	1562	210	1680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CJ그룹의 경우, 영화산업의 투자 및 제작, 배급을 위해 CJ엔터테인먼트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상영 부문을 위해 CJ CGV 및 프리머시네마, 그리고 케이블 방송 채널인 CJ 미디어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그룹 역시 투자 및 제작, 배급을 담당하는 롯데엔터테인먼트, 상영을 담당하는 롯데시네마를 통한 수직 계열화를 추진했다. 동양그룹은 투자, 제작, 배급을 담당하는 쇼박스, 상영을 담당하는 메가박스 시네플렉스, 그리고 케이블 방송 채널인 미디어플렉스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추진했다.

독과점 구조 및 수직 계열화는 초대권 남발, 소수 흥행 위주 작품에 대한 투자 집중 및 조기 종영, 차별적인 부울 조정 등의 불공정 행위를 가능케 했으며, 이는 편당 제작 비용 및 투자 수익률 감소와 한국 영화의 다양성 및 창의성 부족을 야기했다.

초대권 남발에 따른 제작사 수익 축소는 한국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 경색으로 이어져 편당 제작비용이 감소했다. 2005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극장 Big 3인 CJ, 롯데그룹, 동양그룹의 무료 초대권 발행 매수는 무려 약 478만 매에 달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월 이들 멀티플렉스 극장들에게 시정 조치를 내렸다. 무료 초대권은 극장 및 영화에 대한 마케팅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티켓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제작사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폐해가 발생했다.

〈표 5〉 무료 초대권 발매 내역(2005.01~2007.07)

(단위 : 매, 백만 원)

업 체 명	발행매수	발행금액
CJ CGV (주)	3,006,123	17,700
롯데쇼핑 (주)	764,800	4,152
(주) 메가박스	602,577	3,259
(주) 프리머시네마	402,079	2,112
계	4,775,579	27,223

출처 : 국회의원 이경재 보도자료(2008.10.17).

또한 소수 흥행 위주 작품에 대한 투자 집중 및 흥행에서 실패한 작품의 조기 종영은 한국 영화의 창의성 및 다양성 부족을 야기했다. 영화 상영 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관행은 평균 2주이나 흥행 위주의 작품 상영을 위해 또는 멀티플렉스 극장 계열사가 제작 또는 배급한 영화의 상영을 위해 흥행하지 못한 영화를 조기 종영하는 사례가 있다. 2005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멀티플렉스 극장의 조기 종영 편수는 211편을 기록했으며, 평균 상영 기간은 5.3일에 불과했다.

〈표 6〉 조기 종영 편수 및 평균 상영 기간(2005.01~2007.07)

(단위: 편, 일)

업 체 명	조기 종영 편수	평균 상영 기간
CJ CGV (주)	29	5,0
롯데쇼핑 (주)	26	5,4
(주) 메가박스	16	5,6
(주) 프리머스시네마	140	5,2
계	211	5,3

출처: 국회의원 이경재 보도자료(2008.10.17).

상영업의 독점적 지위는 차별적 부율 조정을 가능케 했으며, 이는 한국 영화 제작사의 수익성을 악화시켰고 편당 제작 비용을 감소시켰다. 한국 영화 제작사와 극장의 티켓 수입 배분 비율인 부율은 50:50으로 외국영화의 60:40에 비해 낮았으며, 또한 부율이 극장에게 유리하게 조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Ⅲ. 한국 영화 관람객 수 추정 및 구조 변화 검토

1. 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 영화 점유율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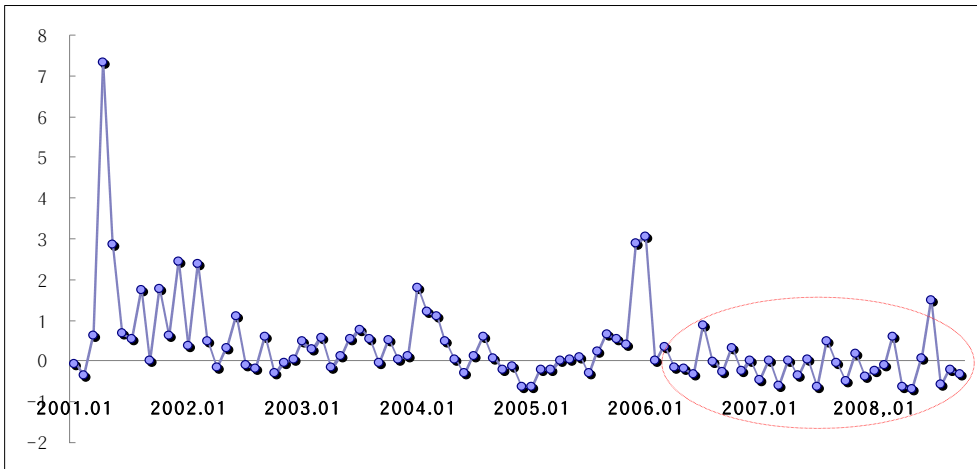
분석을 위한 한국 영화 관람객 수와 외국 영화 관람객 수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한 2001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월별 데이터이다. 스크린쿼터 축소⁷⁾로 한국 영화의 평균 상영 일수는 축소 이전 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영화진흥위원회의 분석⁸⁾에 따르면 스크린쿼터 축소로 한국 영화 의무 상영

7) 스크린쿼터(Screen Quota)는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의 극장 상영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국내 영화관에서 국산 영화를 1년의 2/5인 146일 상영해야 했으나, 스크린쿼터의 축소로 146일에서 73일로 의무상영 일수가 감소했다.

일수가 73일 감소하면 한국 영화 상영 일수는 24.5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 영화 상영 일수는 2006년 191일에서 2007년 153일로 약 38일 감소했으며, 이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분석 결과보다 13.5일이나 큰 폭의 감소를 보인 것이다.

〈그림 3〉 한국 영화 관람객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단위 : %)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스크린쿼터의 축소와 함께 이동통신사의 극장 할인 제휴가 폐지⁸⁾된 2006년 7월부터 한국 영화 관람객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크게 하락했다. 이는 스크린쿼터 축소로 극장에서 한국 영화의 상영 기회가 줄었고, 한국 영화 관람객 수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극장 할인 제휴 폐지는 국내 영화 시장을 축소시켰으며, 스크린쿼터 축소 영향과 함께 외국 영화의 점유율 하락보다 한국 영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2006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28개월 동안 한국 영화 관람객 수의 전년 동월 대비 평균 증가율은 -8.6%를 기록했다. 반면 2006년 7월 이전 한국 영화 관람객 수의 전년 동월 대비 평균 증가율은 56%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한국 영화 관람객 수의 증가율 하락으로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 역시 급락하였다. 한국 영화에 대한 연간 관람객 수는 2006년 9,791만 명을 기록했으나, 2007년에는 7,683만 명으로 급감했다. 또한 한국 영화에 대한 월 평균 관람객 수 역시 2006년 816만 명에서 2007년 640만 명 그리고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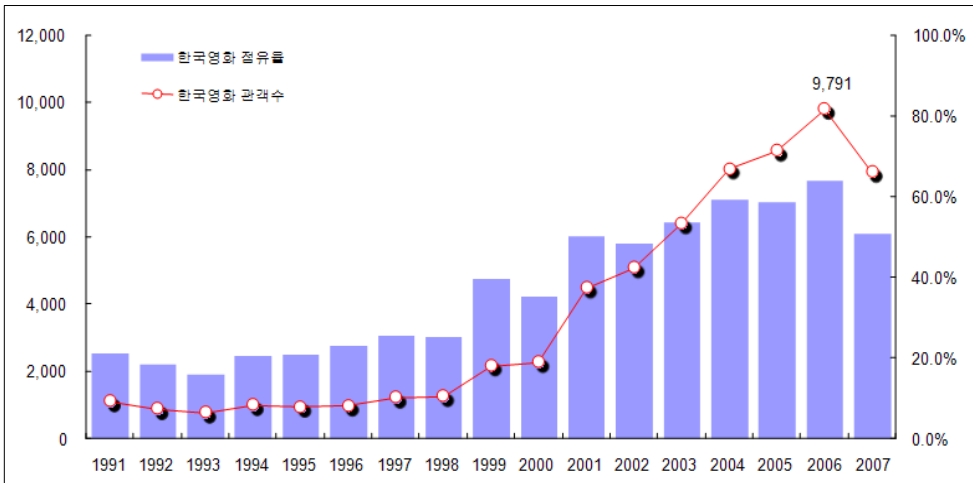
8) “2007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스크린쿼터가 1일 감소될 경우, 한국 영화의 상영 일수는 평균 0.336일 감소한다.

9) 2006년 7월 1일 이후 이동통신사와 극장과의 제휴 할인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년에는 510만 명으로 급감했다. 더욱이 2008년 5월에는 2000년 이후 월별 한국 영화의 관람객 점유율 중 최저치인 8%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한국 영화의 월 평균 시장 점유율은 2006년 7월 이전 51.5%인데 반해 2006년 7월 이후 50.8%로 급락했다.

〈그림 4〉 연도별 한국 영화 관람객 및 점유율 추이

(단위 : 만 명)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2. 한국 영화 관람객 수 추정

앞서 한국 영화산업은 2006년을 기점으로 쇠퇴하고 있음을 보였다. 특히 한국 영화에 대한 관람객 수 감소는 한국 영화산업 발전의 저해가 되는 요인 중 가장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영화에 대한 관람객 수 감소의 원인으로 2006년 7월 이후 스크린쿼터 축소 및 이동통신사의 제휴 중단을 들었다. 실제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 영화의 관람객 수는 감소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이 한국 영화 시장의 구조 변화를 야기했는지 계량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그동안의 가정을 입증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한국 영화산업에 대한 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 영화에 대한 월별 관람객 수를 추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 영화 관람객 수와 영화 흥행기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 가격 변수, 소득 변수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수요함수는 가격과 소득이 설명 변수로 사용되지만, 영화 관람료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며 또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월별 소득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리 변수로 광공업 생산지수를 사용한다.

$$K_t = \alpha_0 + \alpha_1 W_t + \alpha_2 Y_t + \sum_{i=1}^{11} \gamma_i D + \epsilon_t \quad (\text{수식 1})$$

$$W_t = \beta_0 + \beta_1 K_t + \beta_2 Y_t + \sum_{i=1}^{11} \delta_i D + v_t \quad (\text{수식 2})$$

K_t : t시점의 한국 영화 관람객 수, W_t : t시점의 외국 영화 관람객 수,

Y_t : t시점의 광공업 생산지수,

$$D = \begin{cases} 0 ; & t\text{시점이 } i\text{월이 아니면} \\ 1 ; & t\text{시점이 } i\text{월이면} \end{cases} : \text{월별 특성 더미}$$

추정 방법으로는 최소통상자승법(OLS : Ordinary Least Square)을 사용한다. 먼저 (수식 1)을 추정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7>의 (가)항이다. 1월, 2월 7월 더미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월, 2월, 7월 더미를 제거하고 추정한 것이 <표 7>의 (나)항이다. 다음으로 (수식 2)를 추정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8>이다. 외국 영화 관람객 수를 추정한 결과 1월과 8월 더미가 유의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월과 8월 더미 변수를 제거하고 추정한 결과가 <표 8>의 (나)항이다. 따라서 (수식 1)과 (수식 2)는 다음과 같은 (수식 3)과 (수식 4)로 나타낼 수 있다.

$$K_t = \alpha_0 + \alpha_1 W_t + \alpha_2 Y_t + \gamma_3 D_{3t} + \gamma_4 D_{4t} + \gamma_5 D_{5t} + \gamma_6 D_{6t} + \gamma_8 D_{8t} + \gamma_9 D_{9t} + \gamma_{10} D_{10t} + \gamma_{11} D_{11t} + \epsilon_t \quad (\text{수식 3})$$

$$W_t = \beta_0 + \beta_1 K_t + \beta_2 Y_t + \delta_2 D_{2t} + \delta_3 D_{3t} + \delta_4 D_{4t} + \delta_5 D_{5t} + \delta_6 D_{6t} + \delta_7 D_{7t} + \delta_9 D_{9t} + \delta_{10} D_{10t} + \delta_{11} D_{11t} + v_t \quad (\text{수식 4})$$

먼저 2006년 7월 이후 스크린쿼터 축소와 이동통신사와의 할인 제휴 중단이라는 사건이 한국 영화 관람객 수와 외국 영화 관람객 수에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했는지를 검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조 변화 검정을 위해 Chow test와 CUSUM test를 사용한다. CUSUM test는 구조 변화의 시점을 밝히기 위해 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진 구조 변화를 통해 그 당시 발생한 사건이 무엇인지 검증하는 방법이다. 반대로 Chow test는 발생한 사건과 시점을 알고 있을 때, 이로 인해 구조 변화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Chow test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7〉 한국 영화 관람객 수 추정

변수명	(가)		(나)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α_0	-13644.61	-0.01	210070.60	0.18
α_1	-0.93 [*]	-6.63	-0.84 [*]	-7.00
α_2	125408.50 [*]	8.37	120164.00 [*]	8.28
γ_1	507935.40	0.48		
γ_2	-421765.10	-0.37		
γ_3	-5234058.00 [*]	-4.56	-5296579.00 [*]	-6.04
γ_4	-4813210.00 [*]	-4.14	-4851761.00 [*]	-5.48
γ_5	-2530743.00 ^{**}	-2.40	-2811880.00 [*]	-3.49
γ_6	-2470481.00 ^{**}	-2.36	-2809909.00 [*]	-3.51
γ_7	1254259.00	1.18		
γ_8	1775415.00 ^{***}	1.69	1461906.00 ^{***}	1.83
γ_9	-2118149.00 ^{***}	-1.84	-2171516.00 ^{**}	-2.48
γ_{10}	-3895984.00 [*]	-3.23	-3871155.00 [*]	-4.17
γ_{11}	-4551432.00 [*]	-3.78	-4566855.00 [*]	-4.87

* : 99% 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이 유의함.

** : 95% 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이 유의함.

*** : 90% 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이 유의함.

〈표 8〉 외국 영화 관람객 수 추정

변수명	(가)		(나)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β_0	768931.80	0.89	732043.90	0.99
β_1	-0.35 [*]	-6.63	-0.34 [*]	-6.80
β_2	83844.39 [*]	10.02	83751.99 [*]	10.22
δ_1	-171101.10	-0.27		
δ_2	-2084432.00 [*]	-3.20	-2053178.00 [*]	-4.06
δ_3	-4108322.00 [*]	-6.39	-4069337.00 [*]	-7.72
δ_4	-4118010.00 [*]	-6.45	-4080132.00 [*]	-7.88
δ_5	-1655461.00 ^{**}	-2.59	-1617571.00 [*]	-3.12
δ_6	-1224185.00 ^{***}	-1.90	-1185263.00 ^{**}	-2.26
δ_7	1466947.00 ^{**}	2.31	1502544.00 [*]	2.98
δ_8	75984.16	0.12		
δ_9	-3080889.00 [*]	-4.83	-3047835.00 [*]	-6.10
δ_{10}	-4259751.00 [*]	-6.71	-4225018.00 [*]	-8.36
δ_{11}	-4203720.00 [*]	-6.42	-4166957.00 [*]	-7.79

* : 99% 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이 유의함.

** : 95% 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이 유의함.

*** : 90% 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이 유의함.

한국 영화 관람객 수 검정 결과 Chow value는 4.74이었으며, 외국 영화 관람객 수 검정 결과 Chow value는 4.54이었다 이는 신뢰수준 99%에서의 $F_{11,86}$ 값 2.46과 $F_{12,82}$ 값 2.41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인 '구조 변화가 없다'를 기각할 수 있다. 따라서 2006년 7월 이후 한국영화 관람객 수에 구조적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스크린쿼터 축소 및 이동통신사 제휴 카드 할인 중단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더미 변수가 각 함수에 추가되어야 한다.

$$K_t = \alpha_0 + \alpha_1 W_t + \alpha_2 Y_t + \alpha_3 S_t + \gamma_3 D_{3t} + \gamma_4 D_{4t} + \gamma_5 D_{5t} + \gamma_6 D_{6t} + \gamma_8 D_{8t} + \gamma_9 D_{9t} + \gamma_{10} D_{10t} + \gamma_{11} D_{11t} + \epsilon_t \quad (\text{수식 5})$$

$$W_t = \beta_0 + \beta_1 K_t + \beta_2 Y_t + \beta_3 S_t + \delta_2 D_{2t} + \delta_3 D_{3t} + \delta_4 D_{4t} + \delta_5 D_{5t} + \delta_6 D_{6t} + \delta_7 D_{7t} + \delta_9 D_{9t} + \delta_{10} D_{10t} + \delta_{11} D_{11t} + v_t \quad (\text{수식 6})$$

K_t : t시점의 한국 영화 관람객 수, W_t : t시점의 외국 영화 관람객 수,

Y_t : t시점의 광공업 생산지수,

$$D = \begin{cases} 0 ; & t\text{시점이 } i\text{월이 아니면} \\ 1 ; & t\text{시점이 } i\text{월이면} \end{cases} : \text{월별 특성 더미}$$

$$S_t = \begin{cases} 0 ; & 2000.01 \leq t \leq 2006.06 \\ 1 ; & 2006.07 \leq t \leq 2008.10 \end{cases} : \text{구조 변화 더미}$$

또한 외국 영화와 한국 영화 간에는 대체 관계가 성립하므로, 외국 영화 관람객 수는 내생 변수일 가능성이 크다. Hausman 검정을 통해 외국 영화 관람객 수의 내생 변수 여부를 검정한다. 이는 (수식 5)와 (수식 6)을 단일 방정식 형태로 추정할 경우 편의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Hausman 검정을 통해 외국 영화 관람객 수가 내생 변수로 판명될 경우, (수식 5)와 (수식 6)은 연립방정식 형태로 추정해야 하며, 추정 방법으로는 2단계 최소자승법을 사용해야 한다.

외국 영화 관람객 수의 내생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수식 5)를 (수식 6)에 대입하여 (수식 7)와 같은 유도형(Reduced form)으로 산출한다. 다음으로 (수식 8)과 같이 한국 영화 관람객 수와 외국 영화 관람객 수 간 회귀식을 설정한다. (수식 7)을 추정한 후 추정한 결과를 통해 산출한 잔차항을 (수식 8)에 독립 변수로 추가하여 (수식 9)와 같은 회귀식을 설정한다. 추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hat{v}_t 의 추정치인 η_2 의 유의성을 검정한다. 유의성 검정으로는 귀무가설을 $\eta_2 = 0$ 로 하는 t-검정을 수행한다. 귀무가설을 기각할 경우 외국 영화 관람객 수는 내생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검정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한국 영화 관람객 수와 외국 영화 관람객 수를 추정하기 위한 함수는 2단계 최소자승법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W_t = b_0 + b_2 Y_t + b_3 S_t + d_2 D_{2t} + d_3 D_{3t} + d_4 D_{4t} + d_5 D_{5t} + d_6 D_{6t} + d_7 D_{7t} + d_8 D_{8t} + d_9 D_{9t} + d_{10} D_{10t} + d_{11} D_{11t} + v_t \quad (\text{수식 7})$$

$$K_t = \eta_0 + \eta_1 W_t + \epsilon_t \quad (\text{수식 8})$$

$$K_t = \eta_0 + \eta_1 \widehat{W}_t + \eta_2 \widehat{v}_t + \epsilon_t \quad (\text{수식 9})$$

〈표 9〉 외국 영화 관람객 수의 내생성 검정

변수명	추정치	t-value
η_0 (상수항)	4034967*	5.98
$\eta_1 (W_t)$	0.282**	2.21
$\eta_2 (\widehat{v}_t)$	-0.949*	-5.47

* : 99% 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이 유의함.

** : 95% 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이 유의함.

내생성 검정 결과 $\eta_2 = 0$ 이라는 귀무가설을 신뢰수준 99%에서 기각할 수 있었으며, 이 때문에 외국 영화 관람객 수가 내생성이 강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영화 관람객 수의 추정함수는 (수식 8)과 같다.

$$K_t = \alpha_0 + \alpha_1 \widehat{W}_t + \alpha_2 Y_t + \alpha_3 S_t + \gamma_3 D_{3t} + \gamma_4 D_{4t} + \gamma_5 D_{5t} + \gamma_6 D_{6t} + \gamma_8 D_{8t} + \gamma_9 D_{9t} + \gamma_{10} D_{10t} + \gamma_{11} D_{11t} + \epsilon_t \quad (\text{수식 10})$$

K_t : t시점의 한국 영화 관람객 수, W_t : t시점의 외국 영화 관람객 수,

Y_t : t시점의 광공업 생산지수,

$D = \begin{cases} 0 ; & t\text{시점이 } i\text{월이 아니면} \\ 1 ; & t\text{시점이 } i\text{월이면} \end{cases} : \text{월별 특성 더미}$

$S_t = \begin{cases} 0 ; & 2000.01 \leq t \leq 2006.06 \\ 1 ; & 2006.07 \leq t \leq 2008.10 \end{cases} : \text{구조 변화 더미}$

(수식 10)과 (수식 7)을 바탕으로 한국 영화 관람객 수와 외국 영화 관람객 수를 추정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10>이다. 월별 한국 영화 관람객 수를 추정한 결과, 한국 영화 관람객 수는 2006년 7월 이후 구조 변화로 매월 2,399,911명 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 영화 관람객 수가 1명 증가하면 한국 영화 관람객수는 0.59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 간 대체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외국 영화를 선택한 1000명 중 594명은 한국 영화를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반면 외국 영화 관람객 수를 추정한 결과, 2006년 7월 이후 구조 변화로 매월 112,796명 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조 변화로 인한 영향이 외국 영화 관람객 수보다 한국 영화 관람객 수를 더 큰 폭으로 줄인 것은 스크린쿼터 축소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국 영화의 상영 일수를 줄이고 이로 인해 한국 영화 관람객 수를 줄인다. 이 때문에 외국 영화 관람객 수는 오히려 증가하지 감소하지는 않게 된다. 이 때문에 2006년 7월 이후 구조 변화 더미를 나타내는 α_3 의 절댓값 2,399,911이 β_3 의 절댓값보다 더 큰 것이다.

<표 10> 국내 영화 관람객 수 추정

한국 영화 관람객 수			외국 영화 관람객 수		
변수	추정치	t-value	변수	추정치	t-value
α_0	-3705896 ^{***}	-1.84	b_0	644045.9	0.47
α_1	-0.59355 ^{**}	-2.21			
α_2	153306.2 [*]	5.09	b_2	63508.7 [*]	4.15
α_3	-2399911 [*]	-2.64	b_3	-112796	-0.19
			d_2	-2571321 [*]	-3.87
γ_3	-4950429 [*]	-3.98	d_3	-3134981 [*]	-4.79
γ_4	-4329976 [*]	-3.40	d_4	-3357600 [*]	-5.15
γ_5	-2943999 [*]	-3.05	d_5	-887953	-1.36
γ_6	-3007003 [*]	-3.20	d_6	-276752	-0.42
			d_7	1813957 [*]	2.76
γ_8	1717601 ^{***}	1.82	d_8	-505674	-0.77
γ_9	-1391197	-1.12	d_9	-3188103 [*]	-4.87
γ_{10}	-3151346 ^{**}	-2.23	d_{10}	-4036499 [*]	-6.17
γ_{11}	-4099851 [*]	-3.00	d_{11}	-3625363 [*]	-5.32

* : 99% 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이 유의함.

** : 95% 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이 유의함.

*** : 90% 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이 유의함.

IV. 시사점 및 개선 과제

이처럼 한국 영화 시장은 공급과 수요 양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이것이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영화 산업은 투자, 제작, 배급, 상영의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투자 부문의 경우,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어 한국 영화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제작 부문의 경우, 순제작비, 마케팅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제작 편수 역시 감소하고 있다. 배급 및 상영 부문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 구조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차별적 부울 조정을 가능케 하여 한국 영화 제작사의 수익성을 악화시켰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 살펴볼 경우,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은 2006년 7월 이후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 점유율의 하락은 한국 영화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이는 다시 질 좋은 한국 영화 제작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으로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은 정체 내지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 영화에 대한 시장 점유율 하락은 구조적 변화에서 야기된 것으로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06년 7월 이후 이동통신사의 할인 제후가 중단됨에 따라 영화산업 전반에 걸친 수요가 감소했으며, 더욱이 한국 영화의 경우 스크린쿼터가 축소됨에 따라 한국 영화 관람객 수 감소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급 및 수요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한국 영화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 과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먼저 수요 측면의 경우, 한국 영화에 대한 법정 상영 일수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해야 하며 저작권 침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 영화에 대한 법적 상영 일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영관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을 강화하고, 위반 시 벌금 및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온라인 시장의 불법 다운로드 및 오프라인 시장의 불법 복사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은 한국 영화의 관람객 수를 증가시키며 또한 한국 영화의 투자 수익률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공급 측면의 경우, 영화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영화 가치 사슬에서 약자로 분류되는 업체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영화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화 제작비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투자 수익률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 투자조항 출자 금액을 증대하고 '우선 손실 충당률'¹⁰⁾을 확대함으로써 한국 영화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하며, 영화산업의 안정적인 제

10) 우선 손실 충당제는 손실 발생 시 영화진흥위원회의 투자금으로 우선 충당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작 기반 확충을 위해 완성 보증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영진위의 공정거래환경조성 특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조기 종영, 무료 초대권의 편법 발급, 배급사의 지방 상영관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영화 가치 사슬에서 약자로 분류되는 업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처럼 한국 영화 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영화산업 신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과 한국 영화 입장객 수를 계량적으로 추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참고 문헌

- 김미현·최영준·전범수(2004), 「한국 영화산업 규모 예측과 성장 요인 분석」,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보고, 2004-3.
- 김상호(2007), 한국 영화의 수요·공급 결정요인, 「경제학연구」, 제55집, 제2호 : 35-59.
- 김휴종(2002), 한국 영화산업의 구조 및 수요 변화에 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제5권 제1호 : 85-107.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산업정책연구소(2008), 「2007년 한국 영화 투자수익성 분석」.
- 영화진흥위원회 영상산업정책연구소(2008), 「한국 영화산업 위기 진단과 극복 방안」.
- 이경재(2008), 국회의원 보도자료 2008년 10월 17일자.
- Blanco·Pino(1997), Cinema Demand in Spain : A Cointegration Analysi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1, 57-75.
- Dewenter, R. Westermanny, M. (2005), Cinema demand in Germany,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9, 212-231.
- Ferández-Blanco, V., Ba os-Pino, J.(1997), Cinema Demand in Spain : A Cointegration Analysi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1(1), 57-75.
- Hand, C.(2002), The Distribution and Predictability of Cinema Admission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6, 53-64.

Abstract

Policy Directions to Improve the Film Industry in Korea

Lim, Sang-Soo

Senior Researcher, Korea Chamber of Commerce&Industry

Korean film industry has three problems such as the rate of investment decline, the number of manufacture decrease, monopolization of the distribution and screening.

These problems are related with supply side in Korean film market. The admissions for the Korean films are decreasing on the side of demand. Korean film industry is going downhill because of two composite reasons.

Especially we are interested in demand side because it is more serious in that the spectators for Korean movies may continue decreasing. The government cut the screen quota in July 2006 and then the Korean film admissions started to plunge. To make matters worse, the partnership that offered discounts on the movie with mobile telecom company terminated since that period. The demand for Korean movies was changed structurally by those two events. Actually the Chow test showed that there was the structural change in Korean film market since then.

[Key Words : Chow test, Concentration Ratio Index, Herfindahl-Hirshman Index, Screen quota]

한국 미디어 산업의 분석

: 산업 연관 분석을 중심으로

임응순 호서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정군오 호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교신저자

세계적으로 미디어 산업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미디어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미디어 산업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 연관 분석을 사용하여 미디어 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수요 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를 살펴보고, 공급 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공급 지장 효과, 그리고 레온티에프 가격 모형을 이용하여 물가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1995-2005년까지에 대한 비교 정태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 그리고 물가 파급 효과는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 : 미디어 산업, 수요 유도형 모형, 공급 유도형 모형, 레온티에프 가격 모형]

I. 서론

2000년부터 한국의 미디어 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 미디어 융합의 가속화, 다매체 다채널의 실현 등과 인터넷 신문, 인터넷 방송, 전자출판, 블로그(blog), DMB, IPTV, 와이브로(wibro) 등 새로운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주은수, 2009). 이러한 변화들로 인하여 미디어 산업 지형 자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디어 산업은 국내 문화산업 시장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다양한 형식과 장르의 콘텐츠 산업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7).

이러한 미디어 산업 중에서 통신 서비스, 디지털 방송 서비스 등은 첨단 기술이 이용되는 산업이며, 한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디지털 방송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디지털 지상파 TV, 위성방송 등이 종합 가정매체로 발전하여 TV를 이용한 전자상거래(T-commerce) 활성화를 주도하고, 대화형 원격 TV교육, TV게임 등이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될 것이다(유승훈 외, 2008). 또한 방송 서비스, 인터넷 등의 부가 통신 서비스에 수반되는 콘텐츠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 파급효과도 큰 미래의 주요 전략 산업 분야이다.

이렇듯 미디어 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미디어 산업에 대한 정의¹⁾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디어 산업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산업에 대하여 재정의한 후에 미디어 산업에 대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미디어 산업에 대한 실증 분석을 위하여 산업 연관 분석을 이용하여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산업 연관 분석이란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 간의 상호 연관 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 방법으로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한다(Ghosh, 1958). 따라서 산업 연관 분석은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 간의 연관 관계까지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 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리하다(강광하, 2000; Wu and Chen, 1990).

본 논문의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선행 연구와 미디어 산업의 산출액의 변화에 대한 비교 정태 분석을 실시할 것이며, 제Ⅲ절에서는 연구 방법론인 산업 연관 분석의 기본 구도를 설명한 후에 구체적인 모형들을 소개한다. 제Ⅳ절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자료를 설명할 것이며, 제Ⅴ절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 절은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한 후에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점 등을 제시할 것이다.

Ⅱ. 선행 연구

산업 연관 분석을 이용하여 산업을 분석한 연구들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그 모든 연구들 중에서 미디어 산업과 관련이 있는 연구들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1) 미디어 산업에 대한 정의는 통일되어 있지 않고 있다. 권호영 외(1997)의 연구에서 미디어 산업에 대한 정의가 있고, 또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8)에서 제시한 정의 등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문화산업 또는 문화콘텐츠 산업 등을 정의하면서 그 범주 안에 미디어 산업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 산업에 포함되는 산업들에 대한 각각의 산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세 번째는 미디어 산업에 대한 분석이다.

먼저 문화산업 또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범주 안에 미디어 산업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정교(2003)의 연구에서는 산업 연관 모형을 이용하여 문화산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분석 수단을 확대하여 주요 분석 수단에는 산업별 각종 유발계수 및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등의 다양한 분석 수단을 활용하였으며, 투자 분석 결과는 문화산업의 경우 특히 생산, 부가가치, 고용 및 간접세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변창욱·이상호(2007)의 연구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문화산업을 대상으로 산업 연관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분석 결과 문화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나 전후방 연관 효과 등은 여타 산업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우월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간 투입물이 낮은 문화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방법론 이외의 Ritz-Spaulding 생산유발계수에 의한 생산 유발 효과 계측 그리고 Jones 방식에 의한 전·후방 연관 효과의 계측 결과 문화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민용식·정근오·임응순(2009)의 연구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산업 분류를 시도한 후에 실측 분석을 실시하였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비교 정태 분석을 할 수 있었으며,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시장 규모를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미디어 산업에 포함되는 산업에 대한 분석으로서, 유승훈·임응순·구세주(2008)의 연구에서는 2003년도 산업 연관표에 근거한 투입 산출 분석을 이용하여 광고 산업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 공급 지장 효과, 물가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시 광고 산업을 외생화 시킴으로써 분석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유승훈·김효주(2008)의 연구에서는 문화오락 서비스 산업을 정의한 후에 문화오락 서비스 산업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방송 산업, 통신 서비스 산업, 일본 방송 산업 등에 대한 분석이 존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산업을 정의하고 분석한 것으로 권호영·조진영(1997)의 연구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디어 산업이 당면한 다양한 현실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이론적 접근 노력으로서 국내 미디어 산업 부문에 대한 총체적 산업 구조 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미디어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국내의 미디어 산업 부문의 객관적 계량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미디어 산업 구조의 특성과 변화 추이 그리고 그 시장경제적 영향력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향후

미디어 산업 부문의 정책적 함의들을 도출하였다. 미디어 산업에 대하여 1980년부터 1993년까지의 정상표를 바탕으로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 그리고 물가 파급 효과에 대하여 산업 연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미디어 산업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며, 기존 선행 연구들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첫째, 미디어 산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08년 12월에 발표한 2005년 산업 연관표에 수록된 접속불변 산업 연관표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가장 최근의 분석에 사용된 것은 2003년도 산업 연관표이며, 또한 단년도 분석만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표를 사용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5년 단위의 표를 사용함으로써 비교 정태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기존의 연구와 차별된다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 산업에 대한 재정의를 실시하고, 분석 방법 중에 자기 부분을 포함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분석의 왜곡을 제거하기 위하여 외생화 기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며, 분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은 공급 유도형 모형을 통한 공급 지장 효과까지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Ⅲ. 연구 방법론

1. 연구에 사용된 자료 및 분류

1) 미디어 분류

〈표 1〉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2008년 12월에 발표한 “한국 사회의 방송·통신 패러다임 변화 연구”에서 제시한 미디어에 대한 분류이다. 이 분류들은 미디어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크게 분류한 다음 다시 온라인을 디지털과 기존 미디어로 분류한 것이다. 이 중 디지털은 다시 인터넷과 모바일로, 기존 미디어는 TV, 라디오, 유선전화로 분류하였다. 오프라인에서는 신문 잡지와 실제 활동으로 분류를 하였다.

〈표 1〉 미디어 분류

미디어			설명
온라인 미디어	디지털미디어	인터넷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무선랜 등 고정형)
		모바일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와이프로 등 이동형), PMP 등 기타 이동기기
	기존 미디어	TV	지상파 TV, 케이블 TV, 위성 TV, DMB, IPTV
		라디오	라디오
		유선전화	유선전화
오프라인	신문 잡지		신문 잡지
	실제 활동		기타 실제 활동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8).

2) 연구에 사용된 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995년, 2000년 그리고 2005년도의 산업 연관표를 사용하였다. 1995년, 2000년 그리고 2005년의 자료는 산업 연관표 상의 접속불변 산업 연관표를 이용하였으며, 접속불변 산업 연관표는 시간에 따른 가격 변화 요인을 없애기 위해 경상가격으로 표시된 연도별 산업 연관표를 기준 연도(2000년)의 가격으로 전환하여 서로 연결시킨 산업 연관표이다. 그러므로 산업 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 분석을 할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산업의 변화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접속불변 산업 연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수 있겠다(정군오 외, 2008). 또한 산업 부문을 동일하게 재정리한 표이다.

한국은행에서는 5년 단위로 산업 연관표 실측표를 작성하여 발표하며, 중간에 한 번씩 부분적인 조사 결과에 근거한 연장표를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8년 12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최신의 산업 연관표인 2005년 산업 연관표를 이용하였다.

〈표 2〉 산업 연관표 상에서 재분류된 28부문

부문 코드	산업명	부문 코드	산업명	부문 코드	산업명
01	농림수산물	11	금속제품	21	운수 및 보관
02	광산물	12	일반 기계	22	금융 및 보험
03	음식료품	13	전기 및 전자기기	2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문 코드	산업명	부문 코드	산업명	부문 코드	산업명
04	섬유 및 가죽 제품	14	정밀기기	24	공공 행정 및 국방
05	목재 및 종이 제품	15	수송 장비	25	교육 및 보건
06	인쇄·출판 및 복제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26	사회 및 개인 서비스
07	석유 및 석탄 제품	17	전력가스 및 수도	27	기타 ²⁾
08	화학 제품	18	건설	28	미디어 산업
09	비금속 광물 제품	19	도소매		
10	제1차 금속	20	음식점 및 숙박		

본 연구에서는 산업 연관표의 대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산업을 재분류하였으며, 재분류에 사용된 산업 부분은 산업 연관표 상의 기본 부문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미디어는 정보, 오락 등을 전달하는 매체이며, 미디어 산업은 신문, 방송 등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매스미디어 산업을 지칭한다.³⁾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미디어 산업은 우편(299), 전기통신(300), 방송(301), 광고(315), 신문(334), 출판(335), 영화, 연극 및 기타 예술(338)로 정의한다.⁴⁾ 재분류 산업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2. 분석 모형

1) 수요 유도형 모형

산업 연관 분석을 이용하여 각종 경제적 파급 효과들을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수요 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를 구할 수 있다. 산업 연관 분석에서는 관심 대상 변수를 외생적으로 취급하여 그 변수가 내생적인 경제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이를 외생화 기법이라 한다. 이러한 외생화 기법을 이용하면, 총 수요가 아닌 특정 부문의 산출물이 미치는 영향과 그 산출물이 타 산업에 유발시키는 효과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곽승준 외, 2002). 이러한 외생화 기법에 대한 모형의 수식과 계산 과정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2) 영향력계수의 경우 기타 부문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는데, 기타 부문은 사무용품, 가계 외 소비지출(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광고홍보비, 기밀비, 회의비 등) 그리고 분류 불명(혈액, 인모, 정액 등)을 포함하는 산업이다.

3) 권기덕(2006)의 자료에 정의되어 있다.

4) 95-00-05년 접속불변표상의 기본 부문은 350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위 숫자는 그 산업 부분의 숫자이다.

〈표 3〉 수요 유도형 모형을 이용한 계산 과정

모 형		관 계 식
수요 유도형 모형(기본)		$X = (I - A)^{-1} Y$ (1)
1	생산 유발 효과	$\Delta X^e = (I - A^e)^{-1} (A_H^e \Delta X_H)$ (2)
2	부가가치 유발 효과	$\Delta W^e = \widehat{A^{v^e}} (I - A^e)^{-1} (A_H^e \Delta X_H)$ (3)
3	취업 유발 효과	$\Delta M^e = \widehat{m^e} (I - A^e)^{-1} (A_H^e \Delta X_H)$ (4)
변 수		ΔX^e : 분석대상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산출 증감량 $(I - A^e)^{-1}$: A에서 분석대상부문의 행과 열을 제외시키고 작성한 레온티에프 역행렬 A_H^e : 분석대상부문의 원소를 제외한 열벡터 ΔX_H : 분석대상부문의 산출액 변화분 $\widehat{A^{v^e}}$: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에서 분석대상부문의 행과 열을 제외한 행렬 $\widehat{m^e}$: 취업계수의 대각행렬에서 분석대상부문의 행과 열을 제외한 행렬

식(1)은 기본적인 수요 유도형 모형이며, 여기에 외생화 기법을 적용시킨 것이 식(2), (3), (4)이다. 식(2)는 생산 유발 효과를 구하는 식이며, 식(3)은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구하는 식이며, 식(4)는 취업 유발 효과를 구하는 식이다.⁵⁾

2) 공급 유도형 모형

수요 유도형 모형의 레온티에프 역행렬은 최종 수요 한 단위의 변화가 부문 간 총 산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것이다. 반면 공급 유도형 모형은 투입량의 변화에 따라 총 생산량이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공급 유도형 모형을 이용하면, 투입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총 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Wu and Chen, 1990; Hoover, 1975). 미디어 산업의 공급 지장이 각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파급 효과를 구할 수 있는데, 이를 공급 지장 효과라고 한다(Gosh, 1958; Giarratani, 1978; Howe and Smith, 1994). 공급 지장 효과 계산 과정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5) 본 내용에 관련된 수식은 산업 연관 분석(한국은행, 2007)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표 4〉 공급 유도형 모형을 이용한 계산 과정

모형	관계식
공급 유도형 모형(기본)	$X_i = \sum_{j=1}^n z_{ij} + W_j = \sum_{j=1}^n r_{ij} X_j + W_j \quad (5)$
공급 지장 효과	$\Delta X^e = R_H^e \Delta X_H (I - R^e)^{-1} \quad (6)$
변수	ΔX^e : 분석대상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생산량의 변화량 $(I - R)^{-1}$: 산출역행렬 $(I - R^e)^{-1}$: 분석대상부문을 외생화한 산출역행렬 R_H^e : 분석대상부문의 원소를 제외한 행벡터

식(5)는 공급 유도형 모형의 기본식이며, 여기에 외생화 기법을 적용시킨 후 행렬 형태로 만든 것이 식(6)이다. 식(6)을 통하여 미디어 산업의 공급 지장 효과를 구할 수 있다.

3) 레온티에프 가격 모형

산업 연관표를 열로 본 각 산업 부문의 구성은 각 산업 부문의 생산 활동에 대한 비용 구조를 나타내므로 이를 이용하면 가격 변화의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이를 레온티에프 가격 모형 또는 물가 파급 모형이라고 한다(한국은행, 2007; Miller and Blair, 1985). 물가 파급 효과 계산 과정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식(7)은 레온티에프 가격 모형의 기본식이며, 이 식에 외생화 기법을 적용하여 도출한 식이 식(8)이다. 이 식을 이용하여 물가 파급 효과를 구할 수 있다.

〈표 5〉 물가 파급 효과 계산 과정

모형	관계식
레온티에프 가격 모형(기본)	$P = (I - C)^{-1} \widehat{C}^v P^v \quad (7)$
물가 파급 효과	$\Delta \overline{P}_e = (I - A^e)^{-1} A_H^e \Delta \overline{P}_H \quad (8)$
변수	\widehat{C}^v : 금액단위 부가가치계수로 이루어진 부가가치 계수행렬의 대각행렬 P^v : 물량단위 부가가치에 대한 단위가격을 나타내는 행렬 $\Delta \overline{P}_e$: 분석대상부문을 제외한 가격변동율의 벡터 $\Delta \overline{P}_H$: 분석대상부문의 가격변동율 A_H^e : 분석대상부문의 원소를 제외한 벡터

4) 산업 간 연쇄 효과

각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은 최종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산업의 생산을 위한 중간재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산업 간에는 연관 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산업간 연관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가 산업 연쇄 효과이다(한국은행, 2007).

전방 연쇄 효과는 확산 감응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감응도계수라 불린다. 감응도계수(FL_i)는 전 부문의 최종 수요를 모두 한 단위씩 증가시키기 위해 i 번째 산업이 생산해야 할 단위의 전 산업 평균치에 대한 비율로 i 부문에 대해 식 (9)로 정의된다.

〈표 6〉 산업 연쇄 효과 계산 과정

모형	관계식
전방 연쇄 효과 (Forward linkage effect) 감응도 계수	$FL_i = \frac{\frac{1}{n} \sum_{j=1}^n a_{ij}}{\frac{1}{n^2} \sum_{i=1}^n \sum_{j=1}^n a_{ij}} = \frac{n \sum_{j=1}^n a_{ij}}{\sum_{i=1}^n \sum_{j=1}^n a_{ij}} \quad (9)$
후방 연쇄 효과 (backward linkage effect) 영향력 계수	$BL_j = \frac{\frac{1}{n} \sum_{i=1}^n a_{ij}}{\frac{1}{n^2} \sum_{i=1}^n \sum_{j=1}^n a_{ij}} = \frac{n \sum_{i=1}^n a_{ij}}{\sum_{i=1}^n \sum_{j=1}^n a_{ij}} \quad (10)$

후방 연쇄 효과는 확산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영향력계수라 불리며 전 산업 평균 생산 유발계수에 대한 산업별 생산유발계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영향력계수(BL_j)는 j 번째 산업에 대해 식 (10)으로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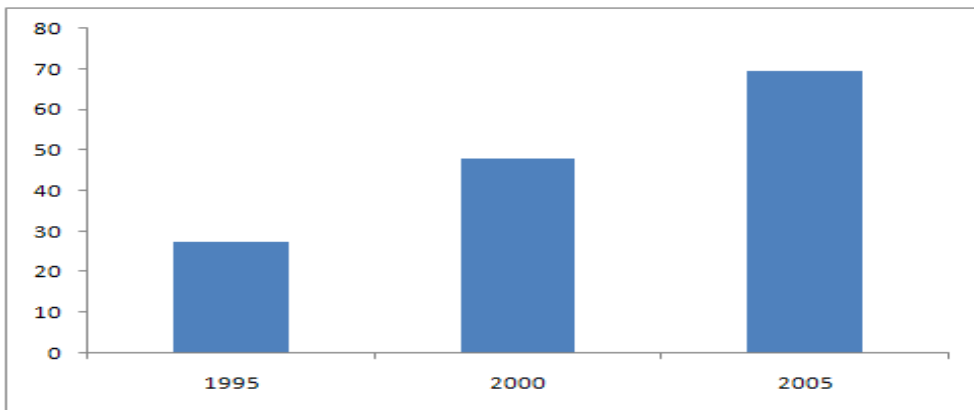
미디어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볼 때 감응도계수는 미디어 산업을 다른 산업의 원료로 파악하는 것이며 영향력계수는 미디어 산업을 최종재로 보고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미디어 산업 부문의 생산을 위한 원료로 파악하는 것이다.

IV. 실증 분석 결과

1. 미디어 산업의 비중

아래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미디어 산업의 총 산출액은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995년도에는 27조 4천억 원에서 2000년도에는 48조 1천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69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5년과 2005년 사이인 10년 동안 미디어 산업의 총 산출액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미디어 산업의 총 산출액(1995-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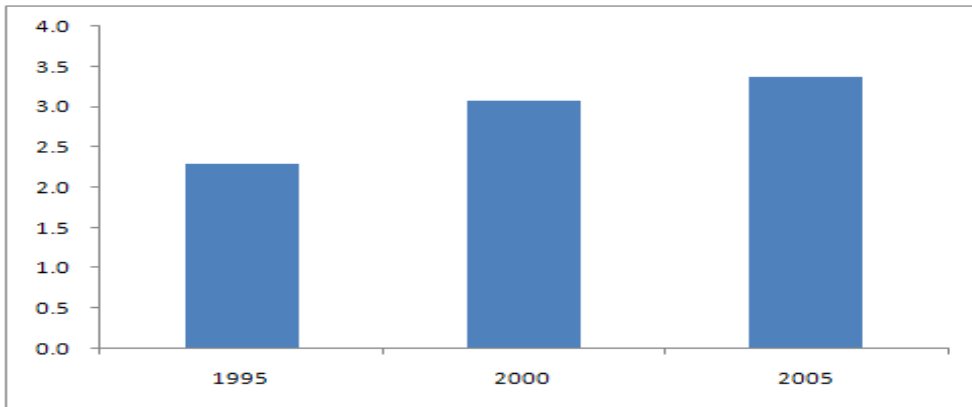


출처 : 한국은행, 「2005년도 산업 연관표」를 바탕으로 작성.

이렇듯 미디어 산업에 대한 비교 정태 분석 결과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2>에서는 전체 산업의 총 산출액에서 미디어 산업의 산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것이다. 1995년에는 총 산출액에서 2.30%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3.07%로 증가한 후 다시 2005년도에는 3.37%로 증가하였다. 이 역시 앞에서 이야기한 미디어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미디어 산업의 중요도가 높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미디어 산업의 산출액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1) 생산 유발 효과

미디어 산업에 대한 생산 유발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미디어 산업을 전체 산업에서 또 다른 하나의 산업으로 외생화하여 미디어 산업에 1원의 산출액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생산 유발 효과는 미디어 산업의 산출액 1원이 증가하였을 경우 타 산업에 유발하는 생산 유발액을 의미한다. 미디어 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는 1995년에 0.4842원이었으며, 2005년에는 0.4982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1원에 대한 것이므로 미디어 산업의 실제 산출액에 전체 생산 유발 효과를 구하면 상당히 큰 값이 될 것이다.

〈표 7〉 미디어 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

구 분		미디어 산업 산출액 1원이 타 산업에 유발하는 생산액					
		1995년		2000년		2005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1부문	농림수산물	0.0086	15	0.0044	16	0.0048	18
2부문	광산품	0.0008	26	0.0005	26	0.0005	27
3부문	음식료품	0.0174	11	0.0075	14	0.0086	13
4부문	섬유 및 가죽 제품	0.0034	21	0.0035	17	0.0039	20
5부문	목재 및 종이 제품	0.0862	1	0.0552	3	0.0331	4

구 분		미디어 산업 산출액 1원이 타 산업에 유발하는 생산액					
		1995년		2000년		2005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6부문	인쇄 및 복제	0.0262	7	0.0167	10	0.0208	10
7부문	석유 및 석탄 제품	0.0282	6	0.0209	7	0.0173	11
8부문	화학제품	0.0325	5	0.0255	6	0.0221	9
9부문	비금속광물 제품	0.0028	23	0.0022	24	0.0023	24
10부문	제1차 금속 제품	0.0079	16	0.0074	15	0.0069	15
11부문	금속 제품	0.0032	22	0.0033	18	0.0041	19
12부문	일반 기계	0.0039	19	0.0032	19	0.0035	22
13부문	전기 및 전자기기	0.0137	13	0.0206	8	0.0319	5
14부문	정밀기기	0.0014	25	0.0014	25	0.0018	25
15부문	수송 장비	0.0035	20	0.0028	21	0.0053	16
16부문	기타 제조업 제품	0.0062	17	0.0028	22	0.0035	23
17부문	전력, 가스 및 수도	0.0171	12	0.0162	11	0.0238	8
18부문	건설	0.0092	14	0.0084	13	0.0074	14
19부문	도소매	0.0189	9	0.0595	2	0.0567	2
20부문	음식점 및 숙박	0.0174	10	0.0169	9	0.0152	12
21부문	운수	0.0246	8	0.0159	12	0.0239	7
22부문	금융 및 보험	0.0341	4	0.0388	4	0.0356	3
23부문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0638	2	0.0991	1	0.1244	1
24부문	공공행정 및 국방	0.0000	27	0.0000	27	0.0005	26
25부문	교육 및 보건	0.0051	18	0.0032	20	0.0049	17
26부문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0020	24	0.0027	23	0.0037	21
27부문	기타	0.0462	3	0.0337	5	0.0317	6
합 계		0.4842		0.4724		0.4982	

생산 유발 효과에 대한 연도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995년에는 목재 및 종이 제품(5) 산업과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23) 산업에서 생산 유발을 크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00년도와 2005년도에는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23) 산업과 도소매(19) 산업에 생산 유발을 크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부가가치 유발 효과

〈표 8〉에서는 미디어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미디어 산업 부문의 산출액 1원이 증가하였을 경우, 타 산업에 유발시키는 부가가치 유발액을 의미한다. 미디어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액은 1995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5년에 0.2615원에서 2005년에는 0.2860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8〉 미디어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구 분		미디어 산업 산출액 1원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 효과					
		1995년		2000년		2005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1부문	농림수산물	0.0053	13	0.0028	16	0.0029	15
2부문	광산물	0.0005	26	0.0003	26	0.0003	27
3부문	음식료품	0.0075	10	0.0028	15	0.0034	14
4부문	섬유 및 가죽 제품	0.0015	20	0.0013	20	0.0018	20
5부문	목재 및 종이 제품	0.0472	1	0.0257	4	0.0154	7
6부문	인쇄 및 복제	0.0140	6	0.0080	11	0.0096	9
7부문	석유 및 석탄 제품	0.0267	3	0.0195	5	0.0158	6
8부문	화학제품	0.0131	7	0.0102	8	0.0095	10
9부문	비금속광물 제품	0.0010	24	0.0008	24	0.0010	24
10부문	제1차 금속 제품	0.0033	17	0.0030	14	0.0028	16
11부문	금속 제품	0.0013	21	0.0014	19	0.0015	21
12부문	일반 기계	0.0015	19	0.0010	22	0.0013	23
13부문	전기 및 전자기기	0.0041	16	0.0089	9	0.0175	4
14부문	정밀기기	0.0005	25	0.0005	25	0.0008	25
15부문	수송 장비	0.0013	22	0.0009	23	0.0018	19
16부문	기타 제조업 제품	0.0027	18	0.0012	21	0.0014	22
17부문	전력, 가스 및 수도	0.0086	9	0.0103	6	0.0169	5
18부문	건설	0.0052	14	0.0042	13	0.0036	12
19부문	도소매	0.0124	8	0.0407	2	0.0354	2
20부문	음식점 및 숙박	0.0065	11	0.0081	10	0.0068	11
21부문	운수	0.0148	5	0.0103	7	0.0151	8
22부문	금융 및 보험	0.0253	4	0.0282	3	0.0231	3
23부문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0458	2	0.0746	1	0.0900	1
24부문	공공행정 및 국방	0.0000	27	0.0000	27	0.0004	26
25부문	교육 및 보건	0.0041	15	0.0024	17	0.0035	13
26부문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0011	23	0.0015	18	0.0021	18
27부문	기타	0.0060	12	0.0045	12	0.0023	17
합 계		0.2615		0.2732		0.2860	

부가가치 유발 효과에 대한 연도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995년에는 목재 및 종이 제품(5) 산업과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23) 산업에서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00년도와 2005년도에는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23) 산업과 도소매(19) 산업에 생산 유발을 크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생산 유발 효과와 같은 결과인데 원래 부가가치가 생산 유발액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3) 취업 유발 효과

미디어 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취업 유발 효과란 미디어 산업에서 산출액 10억 원이 증가할 경우, 타 산업에 유발시키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표 9> 미디어 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

구 분		미디어 산업 산출액 10억 원에 따른 취업 유발 효과(명)					
		1995년		2000년		2005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1부문	농림수산물	0.5411	5	0.2334	6	0.2032	6
2부문	광산물	0.0075	25	0.0029	25	0.0025	26
3부문	음식료품	0.1083	12	0.0310	17	0.0335	16
4부문	섬유 및 가죽 제품	0.0670	15	0.0402	14	0.0337	15
5부문	목재 및 종이 제품	0.6465	3	0.3425	5	0.1718	8
6부문	인쇄 및 복제	0.3286	8	0.1781	8	0.1860	7
7부문	석유 및 석탄 제품	0.0110	24	0.0046	24	0.0031	25
8부문	화학제품	0.1906	9	0.0758	11	0.0599	13
9부문	비금속광물 제품	0.0258	20	0.0131	21	0.0100	22
10부문	제1차 금속 제품	0.0185	23	0.0091	23	0.0070	23
11부문	금속 제품	0.0316	19	0.0271	18	0.0271	18
12부문	일반 기계	0.0387	18	0.0227	19	0.0175	19
13부문	전기 및 전자기기	0.1746	10	0.1192	9	0.1035	9
14부문	정밀기기	0.0201	22	0.0134	20	0.0132	21
15부문	수송 장비	0.0240	21	0.0108	22	0.0150	20
16부문	기타 제조업 제품	0.1179	11	0.0354	16	0.0285	17
17부문	전력, 가스 및 수도	0.0559	17	0.0355	15	0.0353	14
18부문	건설	0.0852	14	0.0851	10	0.0772	11
19부문	도소매	0.7927	1	2.0961	1	1.4395	1
20부문	음식점 및 숙박	0.7020	2	0.4843	3	0.3740	3
21부문	운수	0.3658	7	0.2077	7	0.2899	4
22부문	금융 및 보험	0.5271	6	0.3776	4	0.2222	5
23부문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6007	4	0.6008	2	0.9357	2
24부문	공공행정 및 국방	0.0000	26	0.0000	26	0.0053	24
25부문	교육 및 보건	0.1065	13	0.0553	13	0.0791	10
26부문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0663	16	0.0654	12	0.0653	12
27부문	기타	0.0000		0.0000		0.0000	
합 계		5.6538		5.1669		4.4390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995년에는 10억 원당 5.7명, 2000년도에는 5.2명 그리고 2005년에는 4.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디어 산업 자체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아닐 뿐더러 경제 전반적으로 산업 구조가 지식집약적인 형태와 자본집약적인 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도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소매(19) 산업이 가장 높은 취업 유발을 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뒤로는 음식점 및 숙박(20) 그리고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23)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4) 공급 지장 효과

〈표 10〉에서는 미디어 산업에 대한 공급 지장 효과의 분석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표 10〉 미디어 산업의 공급 지장 효과

구 분		미디어 산업 산출액 1원에 대한 공급 지장 효과(원)					
		1995년		2000년		2005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1부문	농림수산물	0.0149	18	0.0102	18	0.0090	19
2부문	광산물	0.0015	27	0.0008	27	0.0006	27
3부문	음식료품	0.0534	6	0.0354	7	0.0285	10
4부문	섬유 및 가죽 제품	0.0361	9	0.0275	10	0.0149	17
5부문	목재 및 종이 제품	0.0100	22	0.0082	20	0.0059	21
6부문	인쇄 및 복제	0.0034	26	0.0031	26	0.0038	24
7부문	석유 및 석탄 제품	0.0069	23	0.0055	24	0.0037	25
8부문	화학제품	0.0746	2	0.0549	4	0.0393	5
9부문	비금속광물 제품	0.0131	19	0.0091	19	0.0068	20
10부문	제1차 금속 제품	0.0262	13	0.0174	17	0.0177	14
11부문	금속 제품	0.0127	20	0.0075	21	0.0098	18
12부문	일반 기계	0.0232	16	0.0180	16	0.0168	15
13부문	전기 및 전자기기	0.0644	3	0.0552	3	0.0541	4
14부문	정밀기기	0.0060	25	0.0043	25	0.0034	26
15부문	수송 장비	0.0436	8	0.0339	8	0.0288	9
16부문	기타 제조업 제품	0.0115	21	0.0071	22	0.0046	23
17부문	전력, 가스 및 수도	0.0061	24	0.0057	23	0.0052	22
18부문	건설	0.0640	4	0.0405	6	0.0364	6
19부문	도소매	0.1256	1	0.0962	1	0.1088	1

구 분		미디어 산업 산출액 1원에 대한 공급 지장 효과(원)					
		1995년		2000년		2005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20부문	음식점 및 숙박	0.0256	15	0.0196	15	0.0192	13
21부문	운수	0.0259	14	0.0207	13	0.0164	16
22부문	금융 및 보험	0.0610	5	0.0452	5	0.0570	3
23부문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0463	7	0.0567	2	0.0743	2
24부문	공공행정 및 국방	0.0272	12	0.0201	14	0.0214	12
25부문	교육 및 보건	0.0298	11	0.0263	11	0.0321	8
26부문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0227	17	0.0250	12	0.0243	11
27부문	기타	0.0307	10	0.0296	9	0.0362	7
합 계		0.8665		0.6836		0.6789	

공급 지장 효과란 미디어 산업에서 1원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995년에는 0.8665원에서 2000년도에 0.6836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05년에 0.6789원으로 소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공급 지장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도소매(19)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5) 물가 파급 효과

미디어 산업의 산출물의 가격의 변화(10%)에 의한 타 산업의 산출물의 가격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물가 파급 효과를 비교할 경우에는 외생화를 통해 구해진 물가 파급 효과에 대한 각 부문별의 값은 정확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즉, 가격 파급계수가 높아도,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작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가 파급 효과를 각 산업의 전체 산출액 비중으로 곱하여 가중 평균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는 이 값을 사용하였다.

〈표 11〉 미디어 산업의 물가 파급 효과

구 분		미디어 산업의 10%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파급 효과(%)					
		1995년		2000년		2005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1부문	농림수산물	0.1021	23	0.1153	23	0.1469	22
2부문	광산물	0.0914	25	0.1150	24	0.1195	24
3부문	음식료품	0.2393	10	0.2489	10	0.2754	6
4부문	섬유 및 가죽 제품	0.2522	9	0.2932	8	0.2499	8
5부문	목재 및 종이 제품	0.1567	17	0.2293	13	0.2110	12
6부문	인쇄 및 복제	0.2065	13	0.3170	6	0.3784	4
7부문	석유 및 석탄 제품	0.0294	27	0.0321	27	0.0337	27
8부문	화학 제품	0.2752	8	0.2423	11	0.1964	16
9부문	비금속광물 제품	0.1803	15	0.2388	12	0.2010	14
10부문	제1차 금속 제품	0.0983	24	0.0911	25	0.1051	25
11부문	금속 제품	0.1326	21	0.1309	22	0.1567	20
12부문	일반 기계	0.1778	16	0.1966	16	0.1687	18
13부문	전기 및 전자기기	0.4081	2	0.2746	9	0.1986	15
14부문	정밀기기	0.3506	3	0.3216	5	0.2087	13
15부문	수송 장비	0.2123	12	0.2011	14	0.1516	21
16부문	기타 제조업 제품	0.3317	4	0.3238	4	0.2341	10
17부문	전력, 가스 및 수도	0.0765	26	0.0801	26	0.0785	26
18부문	건설	0.1180	22	0.1577	20	0.1685	19
19부문	도소매	0.5454	1	0.5719	1	0.7138	1
20부문	음식점 및 숙박	0.2368	11	0.1975	15	0.2363	9
21부문	운수	0.1407	20	0.1620	19	0.1453	23
22부문	금융 및 보험	0.3183	6	0.3029	7	0.450899	3
23부문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1528	18	0.1788	18	0.262554	7
24부문	공공행정 및 국방	0.2009	14	0.1949	17	0.2162	11
25부문	교육 및 보건	0.1424	19	0.1553	21	0.1939	17
26부문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3097	7	0.3739	3	0.3729	5
27부문	기타	0.3314	5	0.4462	2	0.6172	2
가중평균값		2.0412		2.1679		2.3683	

미디어 산업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물가 파급 효과는 1995년도 2.0412%에서 2000년도에는 2.1679%로 증가하였으며, 다시 2005년도에 2.368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디어 산업의 산출물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산업 간 연쇄 효과

미디어 산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방 연쇄 효과와 후방 연쇄 효과를 계산하여 서로 수평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미디어 산업의 경제적 위치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

〈표 12〉 미디어 산업의 감응도 계수

구 분		감응도 계수 (전방연쇄효과)					
		1995년		2000년		2005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1부문	농림수산물	1.1301	9	1.0657	12	1.0285	15
2부문	광산물	0.6829	23	0.6504	23	0.6215	25
3부문	음식료품	1.3353	6	1.1012	9	1.1340	9
4부문	섬유 및 가죽 제품	0.7933	21	0.8480	19	0.8589	19
5부문	목재 및 종이 제품	1.2646	7	1.1811	7	1.0820	11
6부문	인쇄 및 복제	0.7034	22	0.6939	21	0.7141	21
7부문	석유 및 석탄 제품	1.6786	3	1.4687	4	1.3135	5
8부문	화학 제품	1.8752	2	2.0918	2	1.9700	2
9부문	비금속광물 제품	0.8600	17	0.8159	20	0.7733	20
10부문	제1차 금속 제품	2.1767	1	2.2433	1	2.0341	1
11부문	금속 제품	0.8360	19	0.9006	15	0.9762	17
12부문	일반 기계	0.8488	18	0.8753	16	0.9095	18
13부문	전기 및 전자기기	0.8953	15	1.0006	14	1.0404	13
14부문	정밀기기	0.5961	27	0.6222	24	0.6092	27
15부문	수송 장비	0.8613	16	0.8611	18	0.9815	16
16부문	기타 제조업 제품	0.6133	25	0.6064	27	0.6375	23
17부문	전력, 가스 및 수도	1.0698	11	1.0576	13	1.1157	10
18부문	건설	0.7955	20	0.6904	22	0.6362	24
19부문	도소매	1.0458	12	1.1908	6	1.3514	4
20부문	음식점 및 숙박	0.9704	13	1.0763	10	1.0395	14
21부문	운수	0.9604	14	0.8649	17	1.2021	7
22부문	금융 및 보험	1.4082	5	1.3360	5	1.2267	6
23부문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1.5710	4	1.7604	3	1.6944	3
24부문	공공행정 및 국방	0.5431	28	0.5387	28	0.5561	28
25부문	교육 및 보건	0.6762	24	0.6143	25	0.6396	22
26부문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5990	26	0.6069	26	0.6212	26
27부문	기타	1.1317	8	1.0729	11	1.0518	12
28부문	미디어	1.0781	10	1.1646	8	1.1811	8

경제 전체에서 수요의 증가가 발생한다면, 중간재로 사용되는 미디어 산업의 산출물의 공급도 증가하여야 한다. 이때, 중간재 산업으로서 미디어 산업이 받는 영향의 정도가 감응도계수이다. 일반적으로 한 산업의 제품이 각 산업 부문에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계수는 커진다(유승훈 외, 2008).

〈표 13〉 영향력계수

구 분		영향력계수 (후방 연쇄 효과)					
		1995년		2000년		2005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1부문	농림수산물	0.9227	20	0.9184	19	0.9374	19
2부문	광산물	0.8547	24	0.8347	21	0.9232	20
3부문	음식료품	1.0932	13	1.1395	10	1.1259	7
4부문	섬유 및 가죽 제품	1.1306	11	1.2394	4	1.1063	8
5부문	목재 및 종이 제품	0.9784	18	1.0791	14	1.0718	16
6부문	인쇄 및 복제	1.0072	15	1.0806	13	1.0956	11
7부문	석유 및 석탄 제품	0.5902	28	0.5968	28	0.6106	28
8부문	화학 제품	1.1478	10	1.1543	9	1.1051	9
9부문	비금속광물 제품	1.1729	7	1.1557	8	1.0812	14
10부문	제1차 금속 제품	1.1911	6	1.2164	5	1.2103	5
11부문	금속 제품	1.2043	5	1.1878	6	1.2639	3
12부문	일반 기계	1.2347	4	1.3139	3	1.2536	4
13부문	전기 및 전자기기	1.3147	2	1.1392	11	0.9900	18
14부문	정밀기기	1.1704	8	1.1832	7	1.0972	10
15부문	수송 장비	1.2716	3	1.3226	2	1.3197	2
16부문	기타 제조업 제품	1.1227	12	1.1366	12	1.1753	6
17부문	전력, 가스 및 수도	0.9566	19	0.8465	20	0.7818	27
18부문	건설	1.0053	17	1.0774	15	1.0829	13
19부문	도소매	0.8581	23	0.8261	23	0.8897	21
20부문	음식점 및 숙박	1.1677	9	1.0490	17	1.0867	12
21부문	운수	0.8616	22	0.8232	24	0.8466	23
22부문	금융 및 보험	0.7862	26	0.7834	26	0.8550	22
23부문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8200	25	0.7729	27	0.8067	26
24부문	공공행정 및 국방	0.9083	21	0.8268	22	0.8392	24
25부문	교육 및 보건	0.7316	27	0.7938	25	0.8366	25
26부문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0058	16	1.0001	18	1.0081	17
27부문	기타	1.4803	1	1.4436	1	1.5267	1
28부문	미디어	1.0116	14	1.0590	16	1.0730	15

후방 연쇄 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계수의 분석 결과는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영향력계수는 미디어 산업의 최종 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중간재로 사용되는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즉 미디어 산업의 산출물을 최종재로 보고 다른 산업의 산출물을 미디어 산업에서의 생산을 위한 원료로 파악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생산 과정에서 여러 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일수록 영향력계수는 커진다.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의 평균은 정확하게 1이 된다. 따라서 1보다 높으면 평균보다 높은 것이고, 1보다 낮으면 평균보다 낮은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 산업의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1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전후방 연쇄 효과의 크기에 따라 산업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후방 연쇄 효과가 모두 높은 산업은 중간 수요적 제조업형, 둘째, 전방 연쇄 효과가 높고 후방 연쇄 효과가 낮은 산업은 중간 수요적 원시 산업형, 셋째, 후방 연쇄 효과가 높고 전방 연쇄 효과가 낮은 산업은 최종 수요적 제조업형, 마지막으로 전후방 연쇄 효과가 모두 낮은 산업은 최종 수요적 원시 산업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국은행, 2007). 따라서 미디어 산업의 경우에는 전후방 연쇄 효과가 크므로 중간 수요적 제조업형이라 할 수 있다.

V. 분석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산업 연관 분석을 이용하여 미디어 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들을 분석하여 보았다. 단년도에 국한하지 않고 1995년, 2000년, 2005년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미디어 산업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산업 연관 분석에서 사용되는 수요 유도형 모형과 공급 유도형 모형, 그리고 레온티에프 가격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취업 유발, 공급 지장, 물가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미디어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 파급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분석의 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나타낸다.

첫째, 미디어 산업에 대한 국내 총 산출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에는 27조 4천억 원이었으며, 2000년에는 48조 1천억 원, 2005년에는 69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산업의 총 산출액에서 미디어 산업의 총 산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 보니 1995년에는 2.30%에서 2005년에는 3.37%로 증가하였다. 이는 미디어 산업이 국내 경제에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둘째, 수요 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인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의 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디어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산출물에 점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 유발 효과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에서도 보여 주듯이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미디어 산업은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취업 유발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 전반적으로 지식 집약적인 산업으로 변모를 해감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셋째, 공급 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공급 지장 효과를 살펴보면, 1995년 0.5665원, 2000년 0.6836원, 2005년 0.6789원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995~2005년까지 공급 지장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도소매(19) 산업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반대로 미디어 산업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도소매 산업에 가장 먼저 투자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급 지장 효과는 미디어 산업의 공급을 제한하여야 할 때, 용도별 우선 공급 순위 결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Yoo & Young, 1999).

넷째, 미디어 산업에 대한 레온티에프 가격 모형을 이용하여 구한 물가 파급 효과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미디어 산업의 산출물의 가격 변화가 경제 전체의 산출물의 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미디어 산업의 산출물이 경제 내에서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책적으로 미디어 산업의 산출물의 가격을 변화시키게 되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정책 결정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한다. 특히 미디어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방송, 통신 등은 공공 부문이므로 가격 변화가 일어나면 경제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미디어 산업에 대한 전후방 연쇄 효과를 분석해 보니, 전후방 연쇄 효과가 모두 평균보다 높은 값으로 나타남으로써 중간수요적 제조업형으로 분류되었다. 즉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가 높다는 것으로써 미디어 산업의 산출물이 중간재로 혹은 최종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후방 연쇄 효과는 한정된 자원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할 때에 어떤 산업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전후방 연쇄 효과의 크기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강광하, 2000).

본 연구는 정책적 시사점뿐만 아니라 연구적인 시사점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최신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최근의 산업 변화를 수용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급 유도형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결과들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디어 산업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 연관 분석론의 유연성, 유용성, 정확성은 향후 많은 연구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연구도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분석의 시기가 2009년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까지의 분석밖에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국내의 분석만을 실시함으로써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업데이트 기법을 이용하거나 다른 국가들과의 분석 결과에 대해 비교해 본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디어 산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에는 미디어 산업을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한다면 미디어 산업에 대한 세세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광하(2000), 「산업 연관 분석론」, 서울 : 연암사.
- 곽승준·유승훈·한상용(2002), 발전 부문별 국민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한국자원경제학회」, 제11권 4호, 581-608.
- 권기덕(2006), 「인터넷이 바꾸는 미디어산업」,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 권호영(2005), 「미디어 산업의 성장과 변화」, 서울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권호영·조진영(1997), 국내미디어산업의 산업연관분석, 1980~1993, 「한국언론학보」, 제42권 1호, 48-105.
- 문화관광부(2007), 「2006 문화미디어 산업 백서」.
- 민용식·정군오·임응순(2009), 문화콘텐츠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3호, 175-184.
- 서정교(2003), 문화산업 투자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경제학연구」, 제51권 1호, 61-87.
- 산업연구원(2007), 문화산업의 산업 연관 분석, 「월간산업경제」, 21-32.
- 유승훈·김효주(2008), 문화오락 서비스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문화정책논총」, 제 20집, 219-238.
- 유승훈·임응순·구세주(2008), 광고산업의 국민경제적 산업파급효과 분석, 「광고연구」, 봄호, 189-214.
- 유승훈·임응순·정군오(2008),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방송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9권 1호, 134-158.
- 주수현·유영명(2006), 전국 및 부산 문화산업의 파급 효과 비교 분석, 「관광·레저연구」, 제 18권 1호, 195-214.
- 주은수(2009), 「2009년 미디어 산업 전망과 대응 방안(글로벌 경제 불황 속의 미디어 산업과 관련하여)」, 서울 : 미디어경영연구소.
- 정군오·임응순(2008), 한국 철강 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한국산화기술학회」, 제9권 3호, 831-839.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8), 「한국 사회의 방송·통신 패러다임 변화 연구」.
- 한국은행(2008), 「2005년도 산업 연관표」.
- 한국은행(2007), 「산업 연관 분석 해설」.
- Ghosh, A.(1958), "Input-output approach to an allocative system", *Economica*, 25(1), 58-64.
- Giarratani, F.(1976), Application of an interindustry supply model to energy issu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8, 447-454.

- Hoover, E. M.(1975), *An Introduction to Regional Economics*, 2nd ed. Alfred A. Knopf, New York,
- Howe, C. W., & Smith, M. G.(1994), The value of water supply reliability in urban water systems,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26, 19–30.
- Miller, R. E. and Blair, P. D.(1985), *Input-output analysis : foundations and extensions*, Prentice-Hall, New Jersey.
- Miller, R. E. Polenske, K. R. and Rose, A. Z. (ed.)(1989), *Frontiers of Input-Output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Wu, R. H. and C. Y. Chen.(1990), “On the Application of Input-Output Analysis to Energy Issues,” *Energy Economics*, 12(1), 71–76.
- Yoo, S. H. and H. J., Yang(1999), “Using Input-Output Analysis to Analyze Water Resources Issues in Korea,” *Korea Observer*, 30(2), 345–369.

Abstract

The Role of the Korean Media Industry Analysis Using Inter-industry Analysis

Lim, Eung-Soon

Ph. D. Candidate. Department of Economics, Hoseo University

Jung, Kun-Oh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Hoseo University

The importance of the media industry has been growing around the world, and the structure of the media industry is changing. Korea is also recognizing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 industry and is implementing related policy. This study attempts to analyse the economic impacts of the media industry using inter-industry analysis. This study specifically analyzes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added inducing effect, and employ-inducing effect based on a demand-driven model. It also examines the future of the media industry based on analysis of supply shortage effect and sectoral price effect of the media industry by applying a supply-driven model and the Leontief price model. Moreover, comparative statistics analysis of 1995 to 2005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the changes overtime. This shows that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 industry is growing among all the industries.

[Key-words : Media Industry, Demand-driven model, Supply-driven model, Leontief price model]

한국의 박물관 건립 현황 분석에 따른 박물관 건립 계획(Museum Planning)의 필요성

박신의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조교수,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장

본 논문은 한국의 박물관 건립 과정에서 비롯하는 제반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뮤지엄 플래닝의 개념과 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실제로 한국의 박물관 정책에서 시설 확충은 매우 중요한 성과지표이다. 그러나 건립에 대한 계획 작업이 미흡함에 따라 대체로 건립 이후 운영 부실이 불가피하게 되고, 대국민 문화 향유에도 어려움을 가져온다. 비록 박물관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단순한 예산 편성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고, 자원 확보를 위한 ‘투·융자심의’ 과정도 박물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될 뿐이다. 건축과 전시디자인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자침이 이루어지기 힘들어 디자인에서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이에 따라 건립 단계에서부터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에서 기획과 행정 업무를 진행, 관리하는 뮤지엄 플래닝 개념과 그것의 활동 영역을 제시한다. 특히 박물관 건립의 전문 인력인 뮤지엄 플래너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결국 뮤지엄 플래닝은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목표만이 아니라, 한국 박물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주제어 : 박물관 건립 계획(뮤지엄 플래닝), 뮤지엄 플래너, 박물관 진흥]

I. 서론

박물관 시설 확충은 문화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된다. 박물관과 같은 문화 기반 시설은 기본적으로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기구로서, 그리고 국가의 문화 정체성과 자긍심의 상징으로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책적 관점에서 ‘국민에게 보다 친근한 문화 체험 및 평생 학습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¹⁾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에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에서 ‘2012년을 목표로 문화 강국 진입’을 선언하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국민 문화 향유율을 2012년까지 75%까지 높이는 동시에 도서관, 박물관 등 시설을 1,700개 정도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역에서도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이 민선자치 성과와 문화 발전의 기준을 거의 예외 없이 문화 시설의 증가와 확충으로 제시하고 있어, 문화 시설에 대한 접근은 정책 목표상 수치적 성과를 드러내 주는 핵심적인 사안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 기반 시설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는 생각만큼 단순한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시설 확충의 의미가 양적 증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차적인 시설 건립에 집중하지, 실제 운영에 대한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속수무책인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박물관 건립 이후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거의 예외 없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박물관 건립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이를테면 박물관 건물은 완공이 되었어도 소장품이 빈약하여 개관을 늦추거나, 운영 조직이 준비되지 못해 개관을 해도 운영에서의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이름은 박물관이지만 실제 내용은 테마파크의 형태를 갖고 있어 정체성과 미션에서의 혼란을 겪는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또한 처음부터 박물관 관장이나 학예사가 임명되어 건립 준비 단계부터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상황에서, 관장이나 학예사 등의 전문 인력들은 프로그램과 상관 없이 설계된 공간에 맞춰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거나, 나쁜 경우는 개관하고 나서 곧바로 설계 변경이나 리노베이션을 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많은 경우 박물관 건립은 시설 중심으로 인식되면서 하드웨어적 접근이 먼저 되고, 운영과 프로그램 구성이 건물 설계 후에 이루어지는 식의 ‘뒤집힌 순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건립 과정은 궁극적으로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근본 요인이 되고, 이는 다시 우리의 박물관 문화와 전문성에서 경쟁력을 낮추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물론 국공립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공적 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거치고는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박물관이라는 공간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한 전문성을 기획하는 절차가 병행되지 못하면서 프로세스 상의 체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이는 건립 계획(Museum Planning)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이와 관련한 대응책이 미비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한국에서의 박물관 건립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뮤지엄 플래너’(Museum Planner)의 역할과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미 서구에서는 8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고 실질적으

로 제도적으로 안정된 형태를 유지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립 계획에 대한 논의가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물론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분석이나 전시와 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 등이 없지 않았으나, 박물관 건립 초기 단계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실행 과정에까지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활동으로서의 건립 계획에 대한 연구는 본격화되지 못했다고 본다. 박물관 건립 계획은 건립 여부에 대한 타당성에서부터 건립 추진 단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래밍 단계, 건축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지침 마련 등의 실행 단계 등에 걸친 일종의 연구 작업이자 컨설팅 행위라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의 목표는 박물관 진흥과 활성화에 있다고 하겠다.

연구자는 2001년부터 지자체의 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운영 계획 등에 참여해 왔으며, 또 지자체의 재정 투·융자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얻게 된 경험을 토대로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물론 경험 자체보다는 경험으로 확인한 제도적 난관에 대한 절실함이 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서의 박물관 건립 과정의 합리적 프로세스를 정립하고자 하는 정책적 요구이기도 하며, 그런 점에서 이번 연구는 건립 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진전시켜 보도록 하겠다.

II. 한국 박물관의 건립 현황과 제도적 쟁점

한국에서 국공립 박물관 건립을 위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시설물 중심의 접근이며, 행정적 요구가 앞선 과정이라는 점에서 건립 계획의 총체적인 프로세스 속에서 이루어지기는 힘들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박물관이 건립되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행하는 행정적 과정 및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갖는 한계를 밝히고, 이에 따라 운영을 염두에 둔 건립 계획이 왜 필요한지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

1. 박물관 건립을 위한 단계와 쟁점

일반적으로 박물관을 포함한 국공립 문화 시설의 건립은 크게 네 단계로, 즉 기획 단계, 준비 단계, 건립 단계, 개관 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기획 단계는 건립의 여부를 확정하고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며, 준비 단계는 기획 단계의 결과물을 대상으로 재정 투·융자 심의를 거쳐 예산 지원을 확정하게 되는 과정이다. 건립 단계는 설계 공모 등의 입찰 과정을 통해 공사에 착수하게 되는 과정을 말하며, 개관 단계는 건물이 준공된 후 실제 박물관 운영을 위한 최종 실무 내용을 점검하고 개관에 이르는 과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단계는 문화 시설 건립에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공적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관리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박물관 건립의 행정 절차로서 주어진다. 이에 따라 단계별로 근거와 타당성을 점검하고, 이에 적절한 지침을 제시하면서 건립 과정을 따르게 된다. 물론 이러한 단계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즉 박물관 건립 예산의 규모나 건립 주체의 단위(중앙정부, 광역시, 시, 군 등)마다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단계별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반적인 과정이 과연 문화 시설이라는 특수성을 얼마나 반영하면서 관리되고 진행되는가에 있다. 전체적으로는 단계별 과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관리되는 것처럼 비치지만, 실제로는 문화 시설 건립에 따라 주어지는 특수성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가 쉽게 읽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 시설이 단순 건립의 목표가 아니라 추후 운영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타당성 조사는 것의 범위와 역할은 얼마만큼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는지, 그리고 단계별로 전문 인력의 참여와 컨설팅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되는지, 결국 전체 과정을 총괄할 전문 인력의 배치와 사업 주체 간의 조율은 가능한지 등의 사항들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단계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왜 박물관 건립 계획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유추해 보도록 하겠다.

〈표 1〉 박물관 건립 단계

기획 단계		박물관 건립 여부를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초기 계획을 수립
①건립 결정→②부지 확보→③공유 재산 관리 계획→④타당성 조사 〈건립 결정을 위한 자문기구(건립추진위원회 등) 설정 가능〉		
준비 단계		박물관 건립 담당자(행정직)가 박물관의 소요예산 및 건립 방향성을 확정하여 과업지시서 작성
⑤투·융자 심의→⑥국/도비 신청 및 결정→⑦과업지시서 작성		
건립 단계	공모단계	경쟁 입찰을 통한 설계사 선정 및 계약
	설계단계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진행 및 건축 심의와 감리 선정
	시공단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실내공사, 전기공사 진행
⑧설계공모 및 선정→⑨기본 및 실시설계→⑩시공 및 감리업체선정→⑪착공→⑫시공		
개관 단계	운영 분야	박물관 조직 구성 및 재정 계획 등 사업계획서 작성
	시설 분야	보수공사 및 시운전, 시설 및 관리운영계획서 작성
⑬준공→⑭시운전 / 운영 및 사업계획→⑮개관		

2. '타당성 조사'의 의미와 한계

박물관 건립을 확정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는 기획 단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박물관 건립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후, 이에 대한 기본 구상을 제시하고 건립의 필요성을 타진하며, 건립 부지와 규모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박물관 건립의 계기는 소장품의 보유에 의해 주어지는데, 이를 결정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나 정책 의지에 근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자체장들은 일종의 자문기구를 두어 건립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²⁾ 자문기구의 활동은 전문가의 의사가 일정하게 반영되는 등의 성과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의 위원회가 그러하듯 결정적인 의사 결정이나 정책적 변화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문기구가 건립 결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위원회가 한시적이고 의견 제시 수준에서 끝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의사 결정에 필요한 과정은 건립의 여건을 조사, 연구하는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라 할 수 있다. 공공 문화 시설 건립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건립 당위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실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 이전에 공공 문화 시설의 건립의 필요성과 위치 및 규모의 적절성, 경제성 분석과 재원 조달 능력, 사업 추진 방안, 건축 기본 계획, 향후 시설의 운영 계획 등 건립과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 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비효율적 투자나 불합리한 공공 투자를 억제하고 투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3항을 수정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기존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소요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신규 투·융자 사업에 국한하여 실시하던 타당성 조사 의무 규정을 건축비 50억 원 이상인 공공 청사나 시·군·구민회관 등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³⁾

타당성 조사가 문화 기반 시설에 적용될 경우, 기존의 일반 시설과는 달리 수익 창출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로 채산성을 조사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대체로 건립의 필요성 및 부지와 규모 결정에 집중하고 다른 영역에서의 조사 내용은 부차적인 것으로 용인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대체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 연구 주체가 박물관 관련 전문 기관이기보다는 일반적인 형태의 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행정 및 경영 관련

2) 일례로 부천시는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라는 자문기구를 운영한 바 있으며, 2009년 8월자로 명칭을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로 개칭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오동훈·이재순·정만모, 공공 문화 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방법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006 : 76-77.

기관이어서 더욱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다.⁴⁾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위한 틀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박물관이 갖는 재정 운영의 특수성을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쉽지 않으며 시설의 성격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추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구상을 내놓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제도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 목표하는 바가 일차적으로 박물관 건립 비용을 확정받기 위한 것이어서, 이에 적합한 내용으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박물관의 성격과 방향을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수익 창출 가능성을 갖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입이 부풀려지면서 타당성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타당성 조사는 박물관 운영에서 비현실적인 재정 자립도를 내세워 예산 통과를 위한 요식 행위처럼 작성되기도 한다. 더욱 고약한 일은, 그렇게 해서 건립을 위한 사업비 예산은 확보된다 하더라도, 운영에 대한 예산 대비를 불가능하게 만들게 됨에 따라 부실 운영의 소지를 처음부터 안고 가게 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⁵⁾ 또 자체적으로도 운영을 위한 연구 과제를 다시 수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따르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이며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대규모 박물관 사업의 경우 실시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이 제도는 현행 공공 건설 사업의 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도입된 것이다.⁶⁾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수행을 위해 일반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별히 문화·관광 부분 사업은 세부 지침에서 기타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화·관광 사업 부분은 기존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과는 달리 사업의 성격과 기능이 복잡·다양하다. 이에 따라 다른 부분의 사업에 비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그 특수성이 감안되어야 함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다.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의 분석틀 중 경제성 분석은 사업 규모 확정 및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됨으로 더욱 정교함을 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경제성 분석은 크게 수요, 편익, 비용 항목의 추정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세 항목이 사업 추진 및

4) 건립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시·도정개발연구원 등의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대학 부설연구원(소), 한국 자치경영평가원, 한국 산업관계 연구원 등 경영 관련 법인 형식의 연구 기관 등이다.

5) 일례로 「구로 디지털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연구 기관:도시경영연구원)를 보면, 조사 기관에서 제안한 공간 운영의 방향에 따라 경제성과 재원 조성 방안의 타당성을 제시한 바 있다. 디지털문화관의 운영 방향을 체험형 전시관과 교육 및 창작 공간으로 설정하였으나 그 자체로 수익성이 충족되어, 디지털문화관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런 결과는 실제로 건립을 위한 사업비에 대한 예산 추인을 목표로 제시된 것이라 하지만, 건립 이후 운영 예산에 대한 대비 부분에서는 무책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6) 현행 ‘국가 재정법’ 시행령 제13조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앞서 시행되는 개략적인 타당성 조사로서, 이 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의 경제성 분석, 투자 우선순위, 적정 투자 시기, 재원 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국고 지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분석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

이러한 정황은 이미 문화·관광 분야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실시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2001)나 ‘인천해양과학관 Oceanpia 건립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2004) 결과를 보면 두 개의 사업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아 실제로 실행되지 못한 경우이다. 두 사업 모두 박물관 건립 이후의 운영에 대한 상세한 항목 제시가 미흡하거나, 전시물의 재수집과 확충 등에 대한 고려가 누락된 것, 그리고 문화 시설에 적합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비용이 고려되지 못한 점 등이 낮은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⁸⁾ 이는 곧 초기 단계에서 운영 계획을 현실적으로 제시하여 편익과 비용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며, 또한 운영 계획의 초기 정립은 추후 사업 진행을 원활히 도와주고 경제적·정책적 효과를 좀 더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은 기본 계획 용역 단계에서 시설물에 대한 기본 계획과 동시에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 되기 때문에 제한된 기간 안에서의 진행은 결국 건물→기능→운영 계획이라는 역순의 업무 흐름을 초래하게 된다.⁹⁾

3.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와 박물관 심사 기준의 필요성

이처럼 기획 단계에서 타당성 조사가 나오게 되면, 이를 근거로 지자체는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게 되면서 준비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¹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 예정인 사업에 대해 사전에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한정된 투자 재원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투자 심사의 기준은 투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의 장기 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 지역 계획 및 지방 재정 계획과의 연계성, 소요 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 능력,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¹¹⁾ 물론 재원을 지자체 자체가 전액 부담하거나, 사업비가 작은 규모로서 행사성 사업

7) 손숙리·김주형·신성우·김재준, 문화·관광 부분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학술지 논문」, 2007.12 : 129.

8) 앞 글, p.134.

9) 앞 글, pp.136-137.

10) 제37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11)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2조 (투자심사기준), [시행 2009.2.9] [행정안전부령 제60호, 2009.2.9, 일부개정]

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시·군·구의 사업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신규 투자 사업의 경우는 시·도 의뢰 심사를 받게 되고,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의 경우는 중앙 의뢰 심사를 받게 된다.

이러한 심사 과정에서 박물관과 같은 문화 시설의 심사는 특별히 기존 일반 시설과 다른 예외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기반 시설과 같은 수준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한, 박물관의 운영 계획이나 예산 대비, 성격과 방향 등을 심사 기준으로 적극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 지원이 불안할 경우 ‘자체 예산 투입’을 생각해 보라거나, 예산이 확보될 경우는 ‘계획대로 추진’하라거나 하는 수준의 의견만이 주어질 뿐이다.¹²⁾ 실제로 많은 경우 지자체들이 문예회관이나 박물관 건립을 제안해 오는데, 대부분의 타당성 조사의 수준이 시설 건립에 대한 수요와 운영에서의 인력 배치를 최소화함으로써 운영 경비를 줄이고, 입장 수입을 올려 재정 자립도를 중장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실제 운영에 대한 투자는 최소화된 상태이니, 문예회관이나 박물관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 문화 발전에도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됨은 자명한 사실이 된다. 이는 결국 투·융자 심사의 원래 목적인 ‘투자 재원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 구축’을 이루지도 못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문화 시설에 대한 투·융자 사업 심사의 기준은 어떻게 달리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문화 시설에 대한 투·융자 개념에서 주요 기준으로 고려하는 재정·경제적 효율성을 문화 시설의 특수성과 가치지향적 활동을 중시하고,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면서 현실적인 운영 예산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운영 계획을 정확히 함으로써 전문 인력의 배치와 이에 합당한 프로그램 운영,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소장품 관리 및 정책을 비롯한 사업 예산에 대한 정확한 기입을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박물관으로서의 전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재정 자립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구도 속에서 설정하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기준이나 지표를 제시하도록 유도한다면 문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 타당성 조사와 투·융자 사업 심사 과정에 어떤 식으로 뮤지엄 플래닝 작업이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인 박물관 운영 계획이나 세부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타당성 조사의 방향은 건립의 필요성과 입지 분석, 박물관의 규모와 예산 규모를 비롯하여 활동 프로그램의 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충분하리라 본다. 그러나 이러한 큰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주체가 현재의 많은 경우처럼 일반적인 타당성 조사 기관에 의해서라면 가능하지 않음을 전제해야 한다. 게다가 투자 심사는

12) 연구자는 2007년부터 ‘경기도 투자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다음 회계 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 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¹³⁾고 되어있어, 사실 실시설계를 위한 지침이 이미 나와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실시설계를 위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큰 방향은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지금의 타당성 조사로는 별다른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준비 단계의 진행은 사실상 두 개의 축으로 주어져야 한다. 즉 ‘행정적 과정’과 ‘기획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행정적 과정은 지자체 공무원 가운데 건립 담당자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투·융자사업 심사와 예산 신청 및 결정 등의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며, 기획 과정에서는 박물관의 설립 목표와 특성, 전시 콘셉트 및 활동 프로그램 기본 구상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두 개의 과정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사실상 박물관 건립에는 최상의 여건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대체로 행정적 과정에 집중하고, 기획 과정에 참여할 박물관장이나 학예사를 건립 단계에서부터 선정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자문기구에 의존하는 수준이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서 행정적 과정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가 어렵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과업 지시서나 지침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결국 준비 단계에서 뮤지엄 플래닝 작업은 타당성 조사와 이에 따른 투·융자 사업 심사를 위해 필요한 시기만큼 큰 구도와 방향을 설정하되,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건립을 위한 ‘프로그래밍’(programming)¹⁴⁾ 작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타당성 조사는 투·융자 사업 심사를 위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심사에 통과되고 나서 다시 세부적인 프로그래밍 작업을 요구하는 역순이 늘 벌어지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타당성 조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큰 구도를 잡는 일에서 세부적인 프로그래밍 작업에 이르는 건립 계획의 일관된 흐름을 갖출 경우만이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박물관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타당성 조사를 거쳐 투자 심사를 받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일단 짓고 보자’ 식의 논리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셈이 된다.

4. 건립 단계에서의 공간 설계 및 전시 디자인의 문제

이처럼 투자 심사를 거치게 되면 실제로 박물관이 구축되는 건립 단계로 넘어간다. 이 단계는 건축 설계사와 전시전문회사가 투입되면서 실질적인 박물관 건축과 전시를 위한 ‘디자인’ 작업이 실행되는 과정으로, 다시 공모와 설계, 그리고 시공의 단계로 분류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축설계사와 전시전

13)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시행 2009.2.9][행정안전부령 제60호, 2009.2.9, 일부개정]

14) 프로그래밍은 박물관 실제 운영을 염두에 둔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를 말한다. 즉 전시 기획의 방향, 소장품 정책 및 정보화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조직 및 예산 운영 프로그램 등이 그 내용이 된다. 이에 따라 프로그래밍은 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체 계획(Planning)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문화사는 사업 기본 계획과 건축 계획, 전시 계획, 연출 계획 및 관리 운영 계획 등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박물관의 성격과 방향, 큰 구도에서의 공간 프로그램이 제시되는 등의 정확한 과업 지시서 내지 지침이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연구자가 공모 단계에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박물관의 고유 성격을 살린 과업 지시서나 지침에 따라 설계를 제출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며, 대체로 기술적인 차원에서 큰 방향만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기획과 준비 단계에서 박물관 프로그래밍 작업이 간과되는 현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결과적으로는 '적절한 프로그래밍을 통한 타당성 검증과 전시 방향 확립'이라는 중요한 기획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건립 단계'로 추진해 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즉, 타당성 조사와 방향성 연구 없이, 설령 타당성 조사를 했을지라도 실제로 프로그래밍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건립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알아온 정보로 입찰 공고만을 내 버려서, 정작 중요한 기획 단계가 건축업체와 전시업체에 떠맡겨져 버리는 기이한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짧은 현상공모 기간 내에 기획과 디자인을 모두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에 따른 시행착오는 불가피한 일이 되고 만다.

이는 수행 주체의 전문 능력의 문제도 있겠으나, 프로세스 상의 문제와 기본적인 선행연구의 부재가 더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곧 건축과 전시 업체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건축 분야는 전제 공간 설계에서 방향 설정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그리고 전시 분야는 소장품 관련한 전문 지식에 근거한 전시 기획의 방향과 전시 연출의 특화된 내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건축 분야에서 박물관 건립을 위한 프로그래밍 연구가 되기도 했다. 건축 설계의 입장에서도 박물관 건립을 위해 단계별로 협업 체제를 제기한 것인데, 즉 기획 단계에서 박물관 학자와 건축주와의 협업을, 건축가가 선정된 이후의 건축가, 박물관 학자, 건축주 간의 협업을, 그리고 건축 설계 단계에서의 최종 승인 과정을 건축주와 박물관학자와 함께 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¹⁵⁾ 특히 소장품에 대한 이해와 이를 위한 전시 계획과 공간 설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나아가 전시와 건축의 협업 관계에서 다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전시 전문회사들은 전시 기본 설계를 준비하면서 국내외 사례 조사는 물론 박물관의 성격과 기본 방향, 관리 운영 부분까지 함께 계획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건축과 협업을 해야 한다. 공개 입찰에서 발주 형태를 보면, 신축일 경우 건축업체와 전시업체의 컨소시엄 방식으로 제한 설계 경기를 하는 것이 보

15) 건축가 맨프레드 램브루크(Manfred Lehmbrock)가 제안한 박물관 건립 과정의 분류.

박석수·이우권, 박물관 설립기획을 위한 프로그래밍 체계 연구, 「한국박물관건축학회논문집」, 2002 : 70.

통이다. 대개 공고일로부터 30일에서 45일 내에 제출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전시와 건축을 함께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건축 공간에 대한 요구 사항은 전시 소장품과 전시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전시 콘셉트로부터 도출됨에도 불구하고 짧은 일정 때문에 박물관의 기획 방향이 전달되기 전에 건축 공간이 임의로 결정될 수밖에 없고, 이 후에 그 공간에 전시의 콘셉트나 방향을 끼워 맞춰 디자인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전시 전문가와 건축 전문가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박물관의 밑그림을 그리는 구도는 당연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서로 협업을 하는 시점과 과정에서 제도적인 개선 및 보완이 절실하다.¹⁶⁾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쟁점이 주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전시를 건축과 다른 독립된 영역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 전시 설계에서 ‘기획’ 분야가 인정되느냐의 문제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는 그만큼 박물관 전시가 얼마나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정받느냐에 따른 인식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박물관 발주와 입찰 방식에서 ‘전시’는 여전히 시설물 설치 분야로, 건축의 하도급 형태의 계약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시 전문회사는 기획, 설계, 시공을 모두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입찰 공고를 통해 박물관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설계와 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도에서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기획과 설계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가 없고, 이에 따라 회사의 수익을 공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시 산업을 건축의 일부로 해석하고 있어 건축 설계 대가인 공사비의 5%의 설계비 기준을 전시 사업에도 적용하여 불합리한 설계비를 책정하는 것이다. 전시 사업은 건축보다 사업비는 적으나 더 많은 기획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건축 설계 용역 대가 기준에서 말하는 효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¹⁷⁾

이러한 관행은 창의적인 기획 능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전시 분야의 발전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설계(건축 분야와는 달리 전시 분야에서는 전시 기획이 포함됨) 자체의 중요도가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점에서 전시 시설 건립 프로세스를 설계와 공사를 통한 시설 구축 차원으로만

16) 건축 설계와 전시 설계의 공모 방식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2002년 과천국립과학관의 설계 발주를 할 때, 기존의 선 건축 설계·후 전시 설계의 관행을 깨고, 전시 개념 설계 공고가 먼저 발표된 적이 있다. [전시 개념 설계] 방향 설정 및 공간 프로그램 구성→[건축 기본 설계] 전시 프로그램에 적합한 건축 공간 설계→[전시 기본 설계] 건축 당선안에 적합한 전시 공간 설계→[건축·전시 실시 설계]의 공모 단계를 걸쳐 설계를 진행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와 같은 발주 방식이 다른 전시 시설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17) 현재 우리나라 전시 산업에서 전시 설계비는 건축 설계 용역 대가 기준이나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을 유추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이렇게 산출된 전시 설계 대가는 창의성이나 예술성에 대한 대가는 차지하고라도 전시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을 받고, 해외 조사를 나가고,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필수적인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과 직접 설계 작업을 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을 보전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하다. (김태현, 전시 산업 발전법을 통해서 바라본 전시 산업의 현황과 과제, 「2008한국박물관대회집」, p186)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시 프로세스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그 전문성을 인정하여 전시 기획과 디자인을 하나의 창의적인 작업으로 인정해 주는 사회적 풍토 마련이 시급하다.¹⁸⁾

III. 박물관 건립 계획의 필요성과 제도적 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박물관 건립 현황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쟁점은 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으로 정리될 수 있을 텐데, 본 장에서는 뮤지엄 플래닝 작업의 개념과 활동 영역, 그리고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역할과 자격을 제시하되,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보도록 하겠다.

1. 박물관 건립 계획의 정의와 영역

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한 저서와 활동으로 유명한 게일 로드(Gail D. Lord)와 배리 로드(Batty Lord)가 그들의 저서 『The Manual of Museum Planning』에서 밝힌 뮤지엄 플래닝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뮤지엄 플래닝이란 박물관 그 자체의 기능들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박물관의 건립 혹은 리노베이션에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들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인간의 물질 문명의 보존과 해석을 용이하게 하는 연구(study)와 실행(practice)’¹⁹⁾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뮤지엄 플래닝의 목표는 ‘박물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고 강화’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관람객에게 심미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소장품의 보존과 해석이라는 박물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박물관의 공간 및 시설을 제공’²⁰⁾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뮤지엄 플래닝의 정의는 다소 추상적인 가치를 담고 있어 일의 성격이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 지향적 맥락을 갖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물관 건립에서 요구되는 제반 단계의 전문성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그 영역은 총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반 행정적 요건과 과정을 비롯하여 박물관학과 박물관 경영, 건축 및 전시 디자인 등의 영역을 모두 포괄

18)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박물관 건립 과정에서 전시 전문인의 역할을 연구한 바 있다.

박신의, 박물관·미술관 건립에서의 전시 전문인의 역할, 「문화 예술 경영, 이론과 실제」, 생각의 나무, 2000 : 30-45.

19) Gail Dexter Lord·Barry Lord, *The Manual of Museum Planning*, 2nd edition, AltaMira Press, 2001, p.2.

20) 앞 글

하기 때문이며, 또 이러한 제 분야의 인력들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일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뮤지엄 플래닝은 인력 계획 및 행정적 과정의 계획, 소장품을 비롯한 박물관 관련 계획, 건축 및 전시 관련 분야에 대한 계획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일 로드와 베리 로드가 제시하는 뮤지엄 플래닝의 단계는, 기초 계획(Preliminary planning)에서 시작하여 법인(기관) 계획(Corporate and institutional plan), 소장품 분석과 전략(Collection analysis and strategy) 단계, 시장성 분석과 전략(Market analysis and strategy) 단계, 공공 프로그램 계획(Public program plan) 단계를 거쳐 타당성 연구(Feasibility study)로 이어지는 과정을 제시한다.²¹⁾ 기초 계획 단계에서는 박물관의 건립 목표와 프로젝트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표로 진행되는데, 내용적으로는 기회 요인과 요구(needs)의 파악을 중심으로 전체 기획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기획자(museum planner)와 참여자들의 역할을 설정하고, 기획 단계에서 의사 결정의 핵심 요소를 규명함과 동시에 의사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연구 보고서를 진행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방법과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정책의 요구 사항을 정의하게 된다.

법인(기관) 계획(Corporate and institutional plan)에서는 개발을 위한 적절한 법인(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데, 이를 위해 박물관 재단 서류들을 재검토하면서 박물관의 미션과 역할, 목적, 조직도 등을 제안하며,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관계를 조정한다. 소장품 분석과 전략(Collection analysis and strategy) 단계에서는 소장품 증가를 대비한 공간과 시설 계획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 소장품 수집 분야 및 과정, 방법에 관한 정성 분석을 수행하고 소장품 수집의 기준을 검토하며, 전시/연구/보존의 구분으로 소장품을 분류하는 작업을 실행한다. 이에 따라 소장품을 위한 공간과 시설, 전문 인력 계획을 대비하면서 기능적으로는 소장품 확보 범위 비율을 산정함으로써 전시실과 수장고의 비율과 밀도를 계산한다.

시장성 분석과 전략(Market analysis and strategy) 단계에서는 현재 이용자와 잠재적 이용자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람객 조사를 위한 인구통계학적 행동 연구 자료 분석과 현재와 잠재적 시장 분석을 행하며,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고 서비스 비용 및 세입세출 계획을 주도한다. 공공 프로그램 계획(Public program plan) 단계에서는 박물관 공공 서비스를 위한 공간과 시설 계획을 목표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대중적 접근 방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며, 시장에 대한 박물관 포지셔닝과 함께 연구 정책과 계획의 초안 및 전시 정책과 계획의 초안, 그리고 박물관 활동 및 프로그램의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공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직원과 공간,

21) 앞 책, pp.14-15.

시설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타당성 연구(Feasibility study)는 앞서 수립된 여러 계획을 기반으로 개발 타당성을 요약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예 : 임대, 구입, 건설, 병용, 재 배치, 리노베이션, 입지 대안)이 연구되며, 선택된 대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함께 예산안(재정과 운영비) 수립과 자금 조달 계획 검토, 사업 추진 일정 계획이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타당성 연구는 구체적인 건립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제반 과정을 포괄하도록 되어 있어, 이후 박물관이 설계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침서와 프로그래밍 작업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와 다른 지점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타당성 연구의 결과는 이후 프로그래밍 및 사업 지침 수립(Programming and Briefing)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다시 기능 프로그램(Functional program)²²⁾ 기획과 기술 지침서(Technical specification)²³⁾ 작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건축 및 전시 디자인의 지침서가 제공되고 실시 설계와 시공에 대한 관리가 진행되며, 결국 박물관 개관을 위한 조직 이관을 실행하면서 전체 과정이 마무리를 보게 된다. 그리고 평가 작업이 행해질 수 있는데, 이는 추후 계획될 여타의 프로젝트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한다.

2. 뮤지엄 플래너(Museum Planner)의 역할과 자격

뮤지엄 플래닝 작업을 하는 것의 효용성이라면, 무엇보다도 박물관 건립 이후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데 있겠다. 하지만 건립을 위한 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데 더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우리나라의 박물관 건립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지만, 계획이 충실하지 않게 되면서 사업 지침서가 기능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며, 이로써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비용에서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행하는 전문가가 요구됨에 따라, 뮤지엄 플래닝은 전문화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뮤지엄 플래닝을 담당하는 뮤지엄 플래너(Museum Planner)라는 전문 인력의 문제가 나온다. 뮤지엄 플래너는 문제올로지적 관점에서 박물관 프로젝트(혹은 ‘캐피털 프로젝트’²⁴⁾)의 핵심

22) 공간의 기능과 요구사항, 접근성, 공간 구성(조닝), 부지 환경 분석과 요구 사항, 건물 설비 기준 등을 담아 내는 시설 기준 설계 지침서(written description)와 개발에 대한 단위 단가 기준과 기초 수행 계획 준비가 이에 해당한다. 앞 책, p.16.

23) 기능 프로그램에 부합되는 기술적인 요구 조건을 정의하는 것으로, 부지 조성과 건축 기초 및 구조, 박물관 공간 개요, 마감재료, 건물 설비, 도입 장비와 시설에 대한 기술 명세서의 작성이 행해지며, 동시에 기본 공사비 산출과 공사 공정 계획이 제시된다. 앞 글.

24) 일반적으로 박물관 건립이 많은 시간과 자본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서구에서는 박물관 건립 전 과정을 ‘캐피털 프로젝트

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박물관의 전문적인 리더십을 돕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뮤지엄 플래너는 일종의 박물관 건립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로서의 기능을 갖지만, 실제로 그의 능력은 소장품, 보존 과학, 공사 단계, 보안 사항 등에 걸쳐, 교육, 이벤트, 관람객 서비스, 재정 경영까지 박물관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박물관 건립 계획에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뮤지엄 플래너는 박물관 운영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박물관 건립의 타당성을 제안하며 박물관 프로그래밍 연구 보고서를 개발하는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뮤지엄 플래너는 박물관 건축 주체와 박물관 내부 인력, 건축가, 추진단 등의 여타의 플래닝 작업에 참여하는 인력과 협의하며 의사 결정을 조절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따라서 소요 예산과 사업 일정상의 문제에 대해 각 이해 관계자들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특화된 뮤지엄 플래너가 필요한지에 대한 네 가지 이유를 보도록 하겠다. 먼저 대부분 박물관 전문 인력들은, 캐피탈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한정되어 있어 디자인과 건설 과정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박물관에 대한 건축적 실행 과정 자체가 기존 건설 유형(building type)과 다른 부분을 포함하는데, 건설 유형과 친숙한 것 대부분의 것들은 종종 기능적, 박물관학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전체적인 캐피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만일 박물관내에서 플래닝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면 박물관 직원으로는 모든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네 번째는 무제율로지와 건설 프로세스를 모두 이해하는 뮤지엄 플래너는 그러한 전문성으로 인해 박물관 직원과 발주처, 그리고 건축가 사이의 합의점을 종합적인 플래닝 프로세스 내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²⁵⁾

뮤지엄 플래너가 일종의 독립된 직업 개념으로 인식되는 수준을 보면, 비교적 국가의 문화 발전 정도와 박물관 전문직에 대한 인식 수준과 비례하여 주어진다. 현재 서유럽에서는 박물관 건립이 대형화되고, 급증하는 가운데 뮤지엄 플래너를 고용하는 일이 눈에 띄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la programmation”이라는 과정을 통해 건축가의 참여에 앞서 공공기관과 공공 자금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에 대해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²⁶⁾ 프랑스는蓬피두센터에 프로그래밍 방법을 적용한 이후, 순차적으로 오르세 미술관과 루브르에서 매우 작은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래밍 작업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실제로 박물관과 문화 시설의 프로그래밍 작업

트'(Capital Project)라 명명하기도 한다.

25) 앞 책, p.5-6.

26) Claude Pecquet, Patrich O' Byrne, Programming - a tool at the service of curator, the sommissioning authority and the architect, Programming for Museum, *Museum*, Vol. XXXI No.2, 1979, UNESCO, p.74.

을 전문화한 이래로 박물관 운영에서도 성공을 가져온 것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ICOM이나 AAM 같은 박물관 협회에서도 점점 더 박물관 건립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²⁷⁾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프랑스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시와 경영 컨설팅을 위한 뮤지엄 플래너의 역할은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라 하겠다.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뮤지엄 플래너라는 전문직에 대한 인식은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박물관 경영’(Museum Management)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박물관 건립을 위한 프로그램과 연구에 참여하는 유사한 형태의 전문인을 말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다.²⁸⁾ 실제로 건립을 위한 제반 과정 중 전시 및 운영 계획을 비롯한 박물관 기본 방향과 프로그래밍 연구를 실행하는 작업이 이미 있었으며, 그 자체로 상당한 실효성을 보인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계획과 기본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의 참여 정도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개관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라운영되는 시스템이 없다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앞서 지적했지만 많은 경우 자문위원회에 의해 부분적인 자문이나 요식적인 절차로 끝나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료적 행정이나 정책적으로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 단기간 내에 건축하겠다는 일념으로 진행되는 현실 역시 뮤지엄 플래너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3. 해외 ‘뮤지엄 플래닝’의 도입과 현황

뮤지엄 플래닝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북미권 중심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박물관 건립 계획이론이다. 이것은 학술적인 이론이라기보다는 박물관 건립 프로젝트에 참여한 실무자들의 경험에 의해서 정리된 일종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박물관 프로젝트에서 여러 다른 분야의 참여자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고 건립 단계를 진행하는 업무는 건축가의 소관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건축가가 박물관 건립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일어나는 제반 문제들(소장품, 관람객 개발, 박물관 조직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비건축적 요소가 배제되고 시설만 건립되는 문제)과, 복합적인 박물관의 특성을 무시하고 모든 박물관에 보편적인 아이디어를 적용시켜千篇일률적인 박물관이 양산되는 문제 등이 두드러지면서 박물관 건립 과정의 개선이 촉구되었다.

27) Jean Pierre Vuilleumier, Museum programming and development policy, *Museum*, Vol.35, No.2, Unesco, 1983 : 94-96.

28) 이에 대한 성과로는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를 비롯한 대학 부설 연구소, 한국 문화공간 건축학회(전 한국박물관 건축학회)를 비롯한 학회 등의 연구 활동이 있어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건축가가 투입되기 이전에 박물관 운영과 관계된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방식으로 박물관 건립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박물관 건립 목표 설정과 프로젝트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초 계획 및 법인 계획, 소장품 분석과 전략, 시장성 분석, 예산 및 재정 계획, 공공 프로그램 계획, 개발 타당성 연구로 구성되는 뮤지엄 플래닝이 선행된 후에 시설 건립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박물관 건립 과정의 혼선과 건립 이후의 경영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찾은 것이다. 이는 곧 박물관 기획을 건축 계획의 범주에서 분리시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진행하는 담당자도 박물관학에 대한 전문지식과 함께 건설 과정에 참여한 풍부한 경험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박물관 직원과는 별개의 뮤지엄 플래너로서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함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뮤지엄 플래닝의 개념이 북미 지역에서 발전하게 된 것에는 제도적인 지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캐나다에서는 1972년에 개정된 국립 박물관 정책(National Museum Policy)에 따라 박물관 캐피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신축 박물관이나 기존에 운영되는 박물관의 개보수에 연방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박물관 지원 프로그램(Museum Assistance Programmes)이 수립되었고, 이 제도의 세부 정책으로 1977년 실질적인 건립 예산 지원(Capital Grants)에 앞서 플래닝을 지원하는 보조금 규정(Planning Grants)이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이 규정은 박물관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축가에 의해서 설계된 박물관이 봉착하게 되는 활동 프로그램 기획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가가 투입되기 이전에 뮤지엄 플래닝을 선행하도록 지원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였다. 물론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박물관을 계획(planning)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였지만,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박물관 건립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뮤지엄 플래닝 프로세스가 정립되기 시작하였는데, 1983년 캐나다 국립박물관에 의해 발행된 「Planning Our Museums」이라는 책²⁹⁾은 박물관 건립 과정을 박물관학적 측면에서 체계화한 최초의 도서로서 의미가 크다. 이 책은 발행 즉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주의 박물관 예산 지원 프로그램(museum funding program)의 계획 지침서로 활용되었고, ICCR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committee on conservation)에서도 채택되는 등 뮤지엄 플래닝 프로세스 구축에 활용되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북미권에서 뮤지엄 플래닝을 진행하는 컨설팅 회사가 건립되기 시작하였는데, 캐나다 토론토의 '로드 컬처럴 리소시스'(Lord Cultural Resources, Inc)와 미국 메사추세츠 캠프리

29) Gail Dexter Lord·Barry Lord, *Planning Our Museums*, 1983.

배리 로드(Barry Lord)는 1977년에서 1981년에 걸쳐 캐나다 정부의 박물관 지원 프로그램(Museum Assistance Programmes)의 어시스턴트 디렉터로 근무하는 동안 플래닝을 지원하는 보조금 규정(Planning Grants) 제정 과정의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배우자인 게일 로드(Gail Dexter Lord)와 함께 1981년 세계적인 박물관 컨설팅 기업인 로드 컬처럴 리소시스 앤 매니지먼트(Lord Cultural Resources and Management)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창업했다.

지의 ‘베르너 존슨’(Verner Johnson, Inc)이 대표적인 회사이다. 이들 기업들은 세계 각국의 국립박물관의 건립이나 리노베이션 계획을 컨설팅하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갔으며, 뮤지엄 플래닝이 지식 산업의 일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중 로드 킬처럴 리소시스는 박물관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과 문화 정책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세계 각국 박물관 건립 프로젝트의 컨설팅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캐나다의 토론토, 오타와, 벤쿠버와 미국의 뉴욕, 샌프란시스코 외에도 유럽의 파리와 마드리드, 아랍 지역의 바레인, 아시아 지역의 베이징으로까지 지사를 진출했으며, 현재 타이완에도 지사 설립이 추진 중이다. 이 밖에 북미권에는 수많은 뮤지엄 컨설팅 회사가 존재하며, 박물관 건립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뮤지엄 플래너를 공개 채용(개인 입찰 형태이든 기업 입찰이든)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을 정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분야로 자리 잡혀 있다.

이처럼 뮤지엄 플래닝이 박물관 건립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주도적인 몇몇 기업의 컨설팅 성공 사례로 인해 세계 각국으로 자연스럽게 확대되어 갔다는 점은 국내 박물관 건립 과정의 문제점 개선 방안 연구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박물관 건립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박물관 건립 계획의 필요성을 점검해 보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박물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문화 시설을 대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실제로 문예회관을 비롯한 많은 경우, 건립 계획에서의 전문성과 총체적인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공연장 시설의 비활성화와 예술 진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연구가 여타의 다른 문화 시설에 대한 건립 계획의 필요성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도서관은 비교적 연구가 되어 있는 편이나, 문예회관이나 극장 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의 중요성에 비해 이러한 접근이 미비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에 공연장 조성을 위한 매뉴얼³⁰⁾을 발간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경우를 보면, 일정하게 연구 작업이 확산되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 여기고 있다. 박물관 건립 계획의 목표가 그러하듯, 공연장 역시

30)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 단체를 위한 공연장 조성 매뉴얼」, 2008.

일반 건물과 달리 ‘공연’이라는 사용 목적이 명확한 공연장을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 지식 외에도 공연,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기계와 같은 특수시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공연장 조성 후 발생한 오류를 보전하기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공연장 설계에서부터(건축, 리모델링) 치밀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공연예술 활동의 공간이 갖는 특수성을 전문화하고, 이를 공간 설계에 구현함으로써 추후 공연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이루는 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박물관 건립 계획과 뮤지엄 플래너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은 단순히 문화 시설 건립에 한정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과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를 전제로 함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한 전문분야의 역할 정도가 아니라 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구도에서 파악될 사안이며, 결과적으로 법·제도적 방안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논문은 그러한 접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논의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추후 쟁점을 따라잡으면서 추가 연구가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와, 박물관 건립에 대한 제반 행정적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연구가 주어질 수 있겠다. 또한 ‘뮤지엄 플래닝’의 제반 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 및 사례에 대한 분석이 주어질 수 있으며, ‘뮤지엄 플래너’ 양성과 관련한 인력 양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박물관 건립 계획과 관련한 법·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와 이에 따른 실질적인 제도 운용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추가로 연구될 수 있겠다.

참고 문헌

- 김태현(2008), 전시 산업 발전법을 통해서 바라본 전시 산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박물관대회집』.
- 박석수·이우권(2002), 박물관 설립 기획을 위한 프로그래밍 체계 연구, 『한국박물관건축학회논문집』.
- 박신의(2000), 박물관·미술관 건립에서의 전시 전문인의 역할, 『문화예술경영, 이론과 실제』, (30-45), 서울: 생각의 나무.
- 손숙리·김주형·신성우·김재준(2007), 문화·관광 부분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학술지』, 129-138.
- 오동훈·이재순·정만모(2006), 공공 문화 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방법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 문화체육관광부(2008), 『2007 문화정책백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체계 구축 방안』.
- 예술경영지원센터(2008), 『문화예술 단체를 위한 공연장 조성 매뉴얼』.
- 도시경영연구원(2008), 『고척동 ‘구로디지털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 Gail Dexter Lord, Barry Lord(2001), *The Manual of Museum Planning*, 2nd edition, AltaMira Press.
- Gail Dexter Lord, Barry Lord(1997), *The Manual of Museum Management*, Stationary Office.
- Pecquet, Claude, O' Byrne, Patrich(1979), Programming - a tool at the service of curator, the sommissioning authority and the architect, *Programming for Museum, Museum, Vol. XXXI No.2*, UNESCO.
- Riviere, H. George(1974), Programming and Planning : The Construction of Museum, *Museum Architecture, Museum, Vol. 26*, UNESCO, 268.
- Vuilleumier, J-P.(1983), Museum programming and development policy. *Museum, Vol. 35, No.2*, UNESCO.

Abstract

The Application of 'Museum Planning' through Analysis of the Museum Construction Process in Korea

Park, Shin-Eui

Assistant Professor, Dept. of Arts & Cultural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Hee University
Director, Center for Arts & Cultural Management, Kyung-Hee University

This treatise examines museum construction problems in Korea, and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museum planning and its necessity. The expansion of facilities is a very important accomplishment indicator of the reality of Korean museum policy. However, insufficiency of construction planning and design work causes insolvent operation and insufficient public participation. Furthermore, feasibility studies for museum planning are not concerned with financing and investment for securing funds, or the museum's character, but are only perfunctory processes. There are difficulties in achieving distinctiveness and competitiveness in architectural design and display due to the lack of practical guidelines. This treatise therefore suggests the concept of museum planning and its sphere of activity which includes the planning and administration process in its entirety from construction planning to practice. In particular, it gives shape to systemic methods through elucidating the role of the museum planner and expert of museum construction. After all, museum planning aims to promote museums and also to reinforce competitiveness in respect of policy.

[Key Words : museum planning, museum planner, museum promotion]

지역사회 박물관 활성화 방안 연구

: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사례

이주연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부 대우조교수-제1저자
서희석 원광대학교 정치행정전문학부 교수*
류지원 원광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박사연구원

최근 지방자치 단체는 다양한 문화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문화 기반 시설과 지역 문화 활성화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선행 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다. 이 연구는 사례 연구로서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의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고 전시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박물관 활성화 수준을 관람객 수, 관람객 만족도 수준으로 정의하고 박물관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세 개 영역(지역 사회, 박물관 및 관람객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역 사회 특성은 지방 정부의 문화 정책·예산·인력 배분과 지역 사회 문화 시설들 간의 협력이며, 박물관 특성은 인력, 예산, 시설, 프로그램, 외부 소통 능력 및 외부 기관과의 네트워킹 능력을, 관람객 특성으로 거주 지역, 방문 목적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으로 문헌 조사, 관련 전문가 인터뷰와 초점 집단 인터뷰, 148명의 관람객 설문 조사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은 현재 운영 면에서 많은 취약점을 보였다. 개선을 위해 먼저 지역 정부가 일관된 문화 정책을 갖춘 후 그에 따른 문화 예산 및 인력 구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박물관은 관람객을 세분화한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전시 공간 외에 여가 공간 시설의 보완과 함께 외부 전문인 및 타문화 시설 간의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지역 사회, 문화 기반 시설, 박물관(유물 전시관), 박물관 활성화]

I. 글을 시작하며

21세기 문화 시대 도래와 함께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으로는 문화 및 여가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문화·레저·스포츠·관광 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 시설과 전문 인력이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어 이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 이 논문은 2008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지역에는 문화 시설, 전문 인력과 운영 프로그램들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은 문화생활 및 삶의 질 저하로 이어져 인구 유출은 물론이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다. 따라서 지역 정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 사회를 활성화시키고자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 문화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축제 개최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 시설을 경쟁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의 문화 기반 시설의 확충이 과연 지역 주민의 문화 향수 욕구와 필요에 제대로 부응하며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와 이에 관련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익산시의 경우 ‘백제 문화의 계승과 관광 산업 기반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 예산의 많은 부분을 백제 문화 유적의 복원 및 정비에 할애하고 있으며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 외에 왕궁리 유물 전시관, 입점리 유물 전시관, 마한관 등 다수의 박물관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익산시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정체성 확립과 문화 유산을 활용한 시설 확충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익산시의 문화 유적 시설들이 관람객의 특성과 관람 동기를 제대로 파악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이 시설들이 익산시의 다른 문화 시설과 연계성을 갖지 못하여 문화 시설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익산시의 문제라기보다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사회 문화 기반 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양한 문화 기반 시설 중에서 박물관을 선택하여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 박물관과 지역 사회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들이 다양한 문화 기반 시설 중에서 박물관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미술관을 포함한 박물관 수는 총 478개로 OECD 국가 중에 10위에 해당하여 문화 기반 시설 부문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나 문화 향수 측면에서 국민 1인당 박물관 관람 횟수가 주요 선진 국가에 비해 1/17에 불과하고 1위인 미국과 비교하면 1/68에 해당하여(이보아 역, 2008 : 18) 박물관의 문화 향유 수준이 그 시설에 비해 매우 저조하여 박물관 향유 수준을 활성화시키는 대응을 시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에 의하면 박물관¹⁾은 ‘인간 환경의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보존, 연구하여 전시라는 행위를 통해 사회와 인류 문화 발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연구와 교육, 과학에 이바지하는 비영리적이고 항구적인 시설’로 정의되고 있다. 박물관은 수집·보관, 조사·연구, 전시, 교육 기능과 같은 주요 기능과 여가 선택 및 관광 자원으로

1) 우리나라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04년 개정) 제1장 제2조에 의하여 박물관을 “文化·藝術·學問의 발전과 一般 公衆의 文化享受 增進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歷史·考古·人類·民俗·藝術·動物·植物·礦物·科學·技術·産業 등에 관한 資料를 蒐集·관리·보존·調査·研究·展示하는 施設”라고 정의한다.

서의 부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난영, 2008). 박물관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능들이 잘 수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박물관은 예전보다 대중 친화적이며 개방적인 ‘살아 있는 박물관’(김영호, 1998; 이보아, 2003)으로서 박물관의 유물 수집·보관, 조사·연구만큼이나 전시·교육 기능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박물관은 유물 중심(object-oriented)의 기관에서 관람객 중심(visitor-oriented), 지역 사회 중심(community-oriented) 기관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이보아, 2003). 최근 대중들은 박물관 관람 빈도가 높은 박물관을 “국가의 문화유산과 예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아름다운 건물”로 대중들이 인식하지만, 관람 빈도가 낮은 박물관은 고리타분한 “골동품이 진열된 장소”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Eilean Hooper-Greenhill, 1996 : 이보아, 2003 : 36에서 재인용).

본 연구자들은 새로이 등장한 박물관 개념을 토대로 관람 빈도가 높고 관람 만족도가 높은 박물관을 활성화된 박물관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관람객이 많고 관람 만족도가 높은 박물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박물관 자체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박물관이 관람객 중심(visitor-oriented) 및 지역 사회 중심(community-oriented)으로 발전한다고 할 때 박물관은 관람객의 관람 행동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지역 사회 정부(예산 및 정책)와 지역 사회 기관(단체)의 협력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지역 사회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국·공립 박물관이건 사립 박물관이건 박물관의 대중성 확대로 공공적 성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탐색적 사례 연구로서 관람객 중심(visitor-oriented) 및 지역 사회 중심(community-oriented)을 근간으로 미루사지 유물 전시관(이하 전시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전시관 활성화와 관련된 지역 사회, 전시관, 관람객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 둘째, 전시관의 활성화 수준(관람객 수 및 관람객의 만족도)은 어느 정도인가,
- 셋째, 지역 사회, 전시관, 관람객 특성과 전시관 활성화 수준 간에 관련성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지역 사회, 전시관, 관람객 특성 중에서 전시관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넷째, 전시관 활성화 저해 요인을 극복하는 방안이 무엇인가이다.

II. 선행 연구 및 박물관 성공 사례 검토

이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박물관 관람객의 특성과 관람 만족도 간의 상관성을 조사한 연구들과 둘째, 박물관을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 연구들이다. 첫째 유형의 연구는 관람객 관람 행위 특성-관람 동반자 유형, 관람 동기, 관람 방

법, 관람 시간 등—과 관람 만족도(또는 학습 효과) 간의 상관성을 연구한 것들이다. Falk(1991)는 자연사박물관에서 가족/비가족 방문객 유형을 구분하여 관람 행위 특징을 조사하였으며, Sandifer(1997)도 과학박물관의 방문객을 가족/비가족, 주말/주중 방문객 유형으로 나누어 관람 시간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주중에 가족 방문객이 비가족 방문객보다 관람 시간이 길지만 주말에는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주말에 가족 방문객이 박물관 혼잡으로 인하여 원하는 시간만큼 관람하지 못할 때 관람 만족도가 떨어짐을 밝혔다. 이와 유사하게 Randol(2005)은 박물관 주요 방문객을 가족 단위와 학교 단위로 구분하고 가족 관람객들은 비가족 관람객보다 전시물 관람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짐으로써 관람 만족도가 더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석(2007)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 관람 동기를 유형화한 후 동기 유형별 지각된 성과와 관람 만족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이외에 박물관 관람객의 행동 특성과 관람 만족도 간의 상관성을 연구한 최지은(2004)의 연구가 있다.

다음 유형의 선행 연구에 나타난 박물관 활성화 방안들을 정리하면 크게 여섯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전문가들의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최병석(2004)은 박물관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재정비도 중요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이를 수행해 가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자들이 박물관 성공 사례²⁾로 살펴본 고령 대가야 박물관의 경우는 전문가들의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고령군 지자체장이 문화 자원과 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가야 박물관장을 임명할 때 다른 지자체들이 일반 공무원을 박물관장으로 임명하는 것과 달리 학예사인 전문가를 고령 대가야 박물관장으로 임용하였다. 2000년 9월에 문을 연 대가야 박물관은 대가야 체험 축제와 연계한 기획 전시 등 전문성에 기초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매해 평균 20만 명의 유료 관람객이 방문하며 총 관람료 매출이 2007년 기준 약 1억 원에 이르러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역의 유료 박물관에 비하여 세 배 이상의 관람료 매출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 운영의 원인은 자치단체장이 문화 기반 시설 활성화와 문화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 전체의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등 자치단체장 및 박물관장의 인식 전환과 리더십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박물관의 전시 시설 및 편의 시설의 개선이 활성화 방안이라고 지적한 연구가 있다. 이후석(2008)은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박물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였는데, 건물 외관, 주차장 시설, 노약자·장애인을 배려한 동선이나 편의 시설의 개선이 박물관 활성화

2) 이 연구는 박물관 활성화 방안을 다룬 선행 연구뿐만 아니라 박물관 운영 성공 사례도 함께 조사하였다. 박물관 운영 성공 사례를 선택하는 데에 (사)한국박물관협회 관계자와 익산 소재 박물관 및 유적 전시관의 학예사 3명의 도움을 받았다. 이 글에서는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과 유사한 박물관의 성공 사례들 중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된다고 평가받는 고령 대가야 박물관을 참고하였다. 고령 대가야 박물관에 대한 사례 조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참여 관찰하고 박물관장 및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박물관 운영 자료와 프로그램 자료를 검토하였다.

화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대가야 박물관의 경우는 140석 규모의 박물관 강당을 일반 지역민들의 행사 목적으로 대여하여 지역 주민이 박물관 정내에 자주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변 녹지 시설과 연계하여 등산, 산책 및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셋째, 박물관에서 전문 인력 양성과 활용이 박물관 활성화에 중요하다고 한 연구가 있다. 이후석(2008)은 박물관에서 안내와 정보 제공을 담당하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의 양성과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더불어 방문객의 인지적 상호 활동을 높여줄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생동감 있는 설명을 갖추어 나가는 방식의 채택, 전시 매력물을 발굴하는 상품 개발, 어린이 교육을 위한 전시에 관한 서비스 방법에 대한 창의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가야 박물관의 경우 박물관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은 대가야 문화 마니아(대가야 문화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지역 주민인 농민을 대상으로 농한기에 실시하고 있다. 이 문화대학 졸업생들은 각종 학술회의 및 박물관 행사 자원봉사, 일부는 문화유산 해설사(현재 20명, 매일 3명씩 근무), 관광 가이드 활동 등의 후속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넷째, 박물관의 교육 기능이 현대 사회 박물관 활성화에 중요하다고 본 연구들이 있다. 먼저 이후석과 이장주(2004)는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객의 특성에 관한 분석적 연구에서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객은 15-29세의 연령층, 수도권, 학생, 대학생 및 대졸자가 많다는 점과 방문 동기로 교육 학습 부분이 가장 높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선경 외(2004)는 박물관이 전시물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시물을 관람하는 관람객의 흥미와 필요에 기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역시 참여자의 수준, 흥미 및 요구에 부합해야 그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오종숙(1999)은 전통적인 박물관의 기능이 '유물' 중심 박물관에서 '관람객' 중심 박물관으로 전환되어 방문객 참여를 유도하는 전시 방식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홍상희(2006) 연구도 박물관이 평생 교육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고령 대가야 박물관은 다양한 체험 위주의 전시 방식과 프로그램 및 박물관 문화학교 등을 운영하고 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 교육 참여자들이 박물관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정도로 전문 지식을 가지게 된다.

다섯째, 홍보 및 마케팅이 박물관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본 연구가 있다(박혜완, 2005; 이보아, 2003). 특히 박혜완(2005)은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내외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공공 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하려면 통합적이고 일관적이며 체계적인 홍보 전략, 홍보의 주요 포인트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가야 박물관도 지속적인 관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 남·북도 교장단, 교육청 관계자를 초청하여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행사, 고속도로 휴게소, 기업과 연계하여 관광 프로그램 개발, 축제 기간에는 축제장까지 '오시는 길'을 명함 크

기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모방이 아닌 고유의 문화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람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여섯째, 박물관이 이해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활발히 구축해야 활성화된다고 본 연구들이다. 최병석(2004)은 ‘박물관 멤버십 제도’와 같은 자체적인 노력을 시작으로 하여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상호 연대와 정책이나 연구 기능을 갖추어 가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박재용과 조윤희(2004)는 도서관과 박물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문화유산 정보를 보다 상세하고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도서관과 박물관의 정보와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며 두 기관의 중복된 업무를 감소시켜 업무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가 성공 사례로 살펴본 대가야 박물관은 문화재 발굴 기관으로서의 자격은 박탈되었으나 문화재 지표 조사 기관으로 선정되어 건설 현장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다른 박물관에 조사를 요청할 필요 없이 자기 지역 박물관에 직접 부탁할 수 있게 되자 대가야 박물관을 “민원 해결의 창구인 박물관”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대가야 박물관은 다른 국립박물관의 대여품을 적극 활용하여 전시를 기획하기도 하고 대가야 역사 문화를 고령군의 활성화 핵심 사업으로 파악하여 군청과도 협력을 꾀하고 있었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박물관 활성화 수준을 ‘관람객 수 규모와 관람객의 관람 만족도 수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박물관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세 개의 행위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역 사회 특성(지역 정부 문화 정책, 지역 사회 타 기관과의 협력), 박물관의 특성(시설, 프로그램, 교육, 홍보 등)과 관람객의 특성(관람 동반자 유형, 관람 목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사회, 박물관, 관람객 관람 행동의 특성과 전시관의 활성화 수준을 밝히고 전시관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전시관 활성화 수준 간의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유물 전시관 활성화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박물관(전시관) 활성화 수준’은 관람객 수 규모와 관람 만족도 수준으로 한정하여 정의한다. ‘관람 만족도’는 최지은(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들을 응용하여 전시물 만족도, 운영

및 편의 시설 만족도, 재방문 의향을 지표로 사용하였다. 박물관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사회 특성’은 지역 정부의 문화 정책, 예산 및 인력 배분과 함께 지역 사회 문화 시설들 간의 협력을 통해 파악하였다. ‘박물관의 특성’은 박물관의 인력, 예산, 전시 공간 구성, 프로그램, 외부 소통 능력(전시물 해설 및 마케팅)과 타 기관과의 네트워킹 수준을 통해 조사하였다. ‘관람객 특성’은 최지은(2004)과 이후석(2007)을 참조하여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방문 횟수, 동반자 유형, 관람 목적, 관람 방법을 선택하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사례 연구로서 양적 조사 방법과 질적 조사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관람객 특성과 관람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 사회 및 박물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 조사와 개별 인터뷰 및 초점 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s)과 함께 관람객 대상의 설문 조사를 이용하였다. 관람객 대상 설문 조사는 2007년 9월 29일과 30일 주말 동안 전시관 14세(중학생) 이상 입장객 200명에게 면접자가 설문지를 직접 나누어 준 후 스스로 기입하게 한 후 면접자에게 돌려주도록 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 중 148개의 설문지가 분석 가능한 것이었다. 설문지 문항은 응답자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응답자가 전시관을 알게 된 정보원(情報源), 방문 횟수, 관람 목적, 주요 동반자 유형, 전시물 만족도, 가장 불만스런 부분과 시급히 개선할 부분, 운영 방식 및 편의 시설 만족도, 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재방문 의향, 자원봉사 의향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은 Window용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람객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총 148명에서 30대가 가장 많으며(39.9%), 다음으로 20대(27.1%), 40대(19%), 10대(3.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지 분포는 익산을 제외한 전북 지역 거주자(34.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익산시민(31.8%) 및 그 나머지는 다른 지역민으로 1/3 정도였다. 응답자의 교육 수준은 대졸자가 가장 많았으며(58.8%), 고졸, 29.4%, 대학원졸 8.8%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 수입은 100-199만원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주부(20.3%), 사무직(16.2%), 학생(15.5%), 자영업(14.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설문 응답자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배경

응답자 특성		빈도 (%)	응답자 특성		빈도 (%)
연령	14세-19세	5(3.4)	학력	중졸	5(3.4)
	20대	40(27.1)		고졸	43(29.1)
	30대	59(39.9)		대졸	87(58.8)
	40대	28(19.0)		대학원 이상	13(8.8)
	50대	14(9.5)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이하	39(26.4)
	60대 이상	2(1.4)		100-199만 원	45(30.4)
혼인상태	미혼	54(36.5)		200-299만 원	35(23.6)
	기혼	94(63.5)		300-399만 원	13(8.8)
	기타	0(0)		400만 원 이상	16(10.8)
			직업	경영/관리/전문직	19(12.8)
거주지역	익산시	47(31.8)		사무직	24(16.2)
	익산제외 전북	51(34.5)		전문기술직(엔지니어)	14(9.5)
	광주, 전남	6(4.1)		자영업	22(14.9)
	대구, 경북	1(0.7)		서비스/판매/영업직	9(6.1)
	부산, 울산, 경남	5(3.4)		생산/단순노무직	5(3.4)
	서울	9(6.1)		주부	30(20.3)
	인천, 경기	10(6.8)		학생	23(15.5)
	충북, 충남	19(12.8)		무직/무응답	2(1.4)
			합계		148(100)

마지막으로, 지역 정부의 문화 정책 기조 및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과 다른 외부 기관과의 네트워킹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익산시청 문화 시설 담당 공무원 1명, 익산시 소재 박물관(미륵사지 유물 전시관, 보석 박물관 및 마한 유적지 관리사업소)의 학예사 4명, 지방문화원 대표 1명, 사단법인 한국예총 익산지부 대표 1명, 연구자 3명이 참석한 초점 집단 면접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지역 사회 특성

문헌 조사 및 FGI를 통한 조사 결과, 익산시의 문화 정책, 예산 및 문화 인력 배분은 다음과 같다. 문화 정책의 경우 “백제 문화의 계승과 백제 문화 관련 관광 산업 기반 구축”으로 요약되는데 익산시

는 미륵사지는 서탑을 복원 중에 있고, 미륵사지 주변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왕궁리 유적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서동과 관련된 쌍능 주변 지역을 개발하여 테마 공원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익산시의 문화 사업은 대부분 문화재 보수, 건축, 조성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익산시의 문화 예산의 약 70%가 문화 기반 시설 관리 부분에 치우쳐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개발되고 있는 이들 시설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익산시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문화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단일 사업에 치우쳐 진행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익산시의 대부분의 문화 정책이 역사 문화와 관련한 문화재 관리, 유적 유물 복원과 발굴에 치중하여 일반 시민들의 문화 활동과 향유 기회를 증진하는 정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의 문화 부문 조직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팀제로의 조직 개편 한 후 문화관광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총 22명이고, 이 중 행정직은 15명, 기술직 4명, 보안직 2명이며 기술직과 보안직은 문화예술회관 근무자이다. 문화관광팀의 주요 업무는 크게 고도 보존, 고분 관리, 문화재 관리, 문화 업무, 문화 예술 단체 관리, 관광 진흥, 문화예술회관 관리로 나타났다. 문화 예산을 살펴보면 2007년 예산 총액은 609,501,736천 원이고, 이 중 문화 부문 예산은 15,042,349천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 표에서 나타나듯이 문화 예산의 70% 이상이 문화재 보수 등의 하드웨어 부분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

〈표 2〉 익산시 2007년도 문화 예술 예산 현황

(단위 : 천 원)

항목	2007년	2006년	비고
인건비	142,282	188,961	
일반운영비	171,324	260,996	책자, 관광안내도 등
일반보상금	635,491	374,182	시립예술단 운영 도지정문화재 전수 및 행사
민간경상 보조	708,932	591,589	후계자 양성 강사 수당 행사 지원, 향토자료집 발간, 찾아가는 문화 활동, 도민 문화예술사회 교육 등
민간행사 보조	540,000	580,000	서동축제 문화 축제거리 문화행사
사회단체 보조금	189,770	152,160	문화행사 보조금
문화재 보호 관리	4,148,641	4,438,017	조성, 정비

전시관과 유사한 문화 기반 시설을 살펴보면 보석 박물관, 왕궁리 유물 전시관, 웅포 입점리 고분 전시관 등을 들 수 있다. 2007년 조사 당시 왕궁리 유물 전시관과 마한관은 개관 준비 중에 있었다. 보석 박물관은 익산 I.C. 근처에, 보석 판매 센터는 익산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는 산업적 측면에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문화예술 공연과 관련된 시설로는 숨리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주로 대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현재 건립되어 있거나 건립 예정인 문화 기반 시설은 익산 인구 수 (2006년 당시 317,889명)에 비하면 그리 적은 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초점 인터뷰 참석자에 의하면 이 문화 시설들 간에 연계된 교통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지 못한다고 하였다.

2. 박물관 특성

1) 인력

전시관의 조직도는 '전라북도 익산지구 문화유적지 관리사업소'의 소장 산하에 '관리' 부분과 '학예연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소장은 박물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은 일반 공무원이며, 관리 파트는 예산, 회계, 보수 업무, 사적지 관리, 청사 및 시설 관리, 글짓기 대회 개최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리 분야 인력은 9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예 연구는 전시, 사회교육, 미륵사지 유물 자료 관리, 유물 수집 조사 연구, 홍보, 간행물 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학예연구 인력은 총 5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학예사는 2명이다. 정규 직원 외에 전시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박물관 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없는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 박물관 운영 성공 사례로 살펴본 고령군 대가야 박물관과 비교하면, 대가야 박물관의 직원은 15명으로 전시관과 같지만 대가야 박물관장이 학예사인 전문가로 리더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고, 소장을 포함하여 학예사가 3명으로 전문 인력이 전시관에 비해 더 많다. 그뿐만 아니라 대가야 박물관 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졸업생들을 전시물 해설자 등의 자원봉사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표 3〉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 인력 구성

계	소장	관리						학예연구		
	행정5급	행정6급	기계7급	건축7급	전기8급	임업8급	기능	별정6급	별정7급	기능
15	1	1	1	1	1	1	4	1	1	3

2) 예산

전시관의 2006년도 운영 예산을 살펴보면 총 예산이 약 14억 5천여만 원에 이르며 이 중 55.4%는 인건비에 사용되고, 시설 관리 유지비에 19.5%가 이용되고 국고 보조 사업비에 약 23.6%, 행사 운영비(기획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 예산의 매우 적은 비율(1.7%)로 사용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성공 사례로 살펴본 대가야 박물관의 경우 2006년도 사업 예산액만 2억 4천5백만 원이었다. 사업 예산액이 전시관에 비해 높은 것은 대가야 박물관 사업이 고령군의 신활력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표 4〉 2006년도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 운영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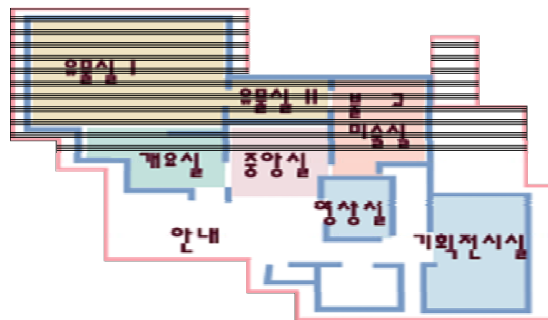
구분	항목	예산액 (원)	비율 (%)
총계		1,453,721,910	100
경상 예산	인건비	805,673,290	55.4
사업 예산 소계		648,048,620	
사업 예산 항목	행사운영비(전시교육)	25,110,010	1.7
	국고보조사업비	342,857,000	23.6
	시설관리유지비 등	280,081,610	19.3

3) 하드웨어 : 전시 공간, 전시물 및 편의 시설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은 12,400평의 대지에 연건평 594평 규모로 전시관 건물이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 전시실은 253평으로서 중앙 전시홀 36평, 유물전시실 217평이다. 전시관의 편의시설은 기념품점, 화장실, 주차장이 있으나 휴게 공간이나 매점 등의 공간은 현재 부족한 상태이다. 전시관 건물 밖에 넓은 주차장이 있으나 별도의 휴게 시설이나 매점이 없어 휴양 공간 시설이 부족하다. 전시관은 미륵사지 출토 유물 및 자체 소장 유물 자료를 19,368점 보관하고 있으며 이 중 40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그림에서 ‘중앙실’에 전시된 가람 모형은 미륵사의 1/50 축소 모형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1980년부터 1996년까지 약 17년간 미륵사지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발굴 성과를 토대로 추정 복원한 것이다. ‘개요실’은 미륵사에 관한 종합 설명을 하고 미륵사의 창건과 변천 과정을 전시하고 있다. ‘기획전시실’은 특별 기획전이 열리는 전시실이며 또한 강당을 겸할 수 있는 곳으로 시청각 기자재가 설치되어 있다. 주로 일반 단체나 개인의 강연회, 전시회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여도 가능하다. ‘유물실’은 백제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종류, 다양한 기능의 유물들을 불교 신앙에 관련된 것과 생활문화에 관련된 것으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

으며 ‘불교미술실’은 미륵사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를 위해 미륵 사상, 미륵 신앙, 미륵사 관련 사진 패널, 문헌 기록 등과 황룡사지와 비교 설명 패널, 백제계 석탑의 변천 과정, 석등 모형, 목탑 모형, 미륵사 출토 이형 제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그림 1〉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 평면도



이에 비하여 대가야 박물관은 2000년 9월 문을 연 대가야 왕릉 전시관과 2005년 4월 개관한 대가야 역사관, 그리고 2006년 3월 개관한 우륵 박물관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표 5〉 대가야 박물관 시설 현황

구 분	대지 (㎡)	건 축 연면적 (㎡)	시 설	비고
대가야 역사관	13,457	3,407	기획전시실, 어린이 체험학습실, 학예연구실, 관장실, 사무실, 접견실, 기념품 코너, 수장고, 시청각실, 당직실, 상설전시실, 기계전기실, 정리실, 문서고, 특별 수장고, 야외전시장, 야외화장실	약 300평의 규모를 가진 전시 공간이며 대가야 왕들의 무덤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지산동 44호 분의 발굴 조사에서 드러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전시관
왕릉 전시관	10,839	1,614	상설전시실, 기계·전기실, 정리실, 수장고, 야외화장실, 매점	
우륵 박물관	9,098	965	전시실, 사무실, 기계전기실, 가야금 체험실, 가야금 공방	

4) 소프트웨어 :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은 대부분 상설 전시로 이루어지며 1년에 1회 정도 특별 전시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특별 전시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었다. 교육 사업으로는 초등학교, 청소년, 교사, 성인 등을 대상으로 문화 강좌를 실시하는데 그동안의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여름 문화학교의 경우 99년부터 총 8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504명이 참가하였으며, 교사 역사문화 강좌의 경우 2001년부터 총 6회를 실시하였고 초·중·고교 교사 355명이 강좌에 참여하였다. 토요 전통문화 학교의 경우 2003년부터 총 5회를 실시하였으며 369명이 참석하였다.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의 경우 교통이 불편한 교육 장소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나 교육 장소(시설) 부족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초점 집단 인터뷰 참여자들에 의하면 대부분 익산시의 문화 정책이 하드웨어 구축 중심으로 이루어져 문화 예산이 하드웨어 부분에 치우쳐 있어서 문화 기반 시설의 (프로그램) 사업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또한 건립된 문화 기반 시설을 운영할 전문 인력도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표 6〉 2006년도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전시관 교육 프로그램	기간	실적
문화영화 상영	2006. 1. 2. ~ 10. 30.	875회 상영
토요 전통문화강좌	2006. 4. 1. ~ 6. 17.	66명
여름 문화학교	2006. 7. 19 ~ 7. 21.	용산초교 33명
교사 역사문화 강좌	2006. 8. 17. ~ 8. 19.	교사 76명
미륵사지 현장학습	2006. 4 ~ 11월	50여 회 실시
특별 기획 전시	'06. 9. 9~11. 5	'사찰 꽃살문 사진전'

관람객 설문조사에서 전시관 교육 프로그램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9.9%가 교육 프로그램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관람객의 전시관 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관람객의 전시관 교육 프로그램 참여	빈도	퍼센트(%)
예	15	10.1
아니요	133	89.9
합계	148	100.0

고령 대가야 박물관의 경우 대가야 박물관에서는 상설 전시실의 운영과 함께 매년 1회 이상의 특별 기획 전시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박물관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학술 조사와 연구, 소장 유물 관리 및 각종 학술 행사, 사회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대가야 체험 축제’를 박물관에서 연계하여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운영된 대가야 문화대학과 어린이 체험학교가 매년 각각 2회씩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대가야를 비롯한 고령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특히 자라는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여 대가야 마니아를 길러 내며 대가야 문화대학 수료생들은 박물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가야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는 박물관 개관 이후 매년 1회씩 개최되었는데 학술 분야의 전문성 확보로 박물관 콘텐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5) 외부 소통 능력 : 전시물 해설 및 홍보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의 전시물 해설 방식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고전적 전시물 해설 방식으로 전시물 옆이나 밑에 부착하는 설명 카드를 이용하였다. 또한 입장객은 전시관에 대한 홍보 자료인 리플릿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안내원의 해설이나 음성 안내기나 터치스크린 이용과 같은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전시물 해설 방식은 없었다. 전시관을 홍보하거나 기획 전시 등을 홍보할 때 주로 이용하는 수단은 플래카드이고, 전시관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입장객이나 관계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외에 전시관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으며(<http://www.mireuksaji.org>) 익산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한 백제 문화유산 정보 시스템(<http://www.goodiksan.go.kr>)에도 동시에 전시관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고령 대가야 박물관의 경우 전시물 해설 방식은 설명 카드 이외에 자원봉사의 안내 해설, 음성 안내기 및 터치스크린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전시물 해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관람객 홍보 및 유치를 위해 경상남·북도 교장단, 교육청 관계자를 초청하여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여행사, 고속도로 휴게소, 기업과 연계하여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었다.

6) 외부 기관과의 네트워킹 능력

본 연구자는 FGI에서 참여자들에게 타 문화 시설, 지역 예술인, 지역 학교와의 협력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참여자들에 의하면 익산시 소재 박물관 및 전시관 학예사 간 협력할 수 있는 시간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하였다. 물론, 전국 박물관 및 전시관 학예사 간 네트워킹으로 박물관 협의회가 발족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익산시 소재 전시관 및 박물관 학예사 간의 네트워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지 않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에 백제 역사와 유물에 관한 학계 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과 가장 협력이 높은 기관은 초·중·고등학교로 나타나 청소년의 교육 목적 방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당시 지역 사회 학교와 연계하여 ‘현장학습’ 프로그램이나 ‘교사 역사문화강좌’ 등을 개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익산시 소재 대학교의 역사 분야 교육 과정과 협력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관람객 특성

1) 관람객 거주 지역 및 재방문율

관람객 설문조사 결과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의 전시관 방문자의 거주 지역 및 방문 횟수를 분석한 결과 처음 방문자가 50.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방문 횟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거주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5회 이상 방문자가 응답자의 25%에 해당하는데 5회 이상 재방문자의 대부분은 익산시에 거주자로 나타났다.

〈표 8〉 거주 지역에 따른 방문 횟수

(단위 : 명(%))

거주 지역 방문 횟수	익산시	익산이 아닌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경남, 울산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충남	합계
처음 방문	8(17)	26(51)	5(83.3)	1(100)	4(80)	8(88.9)	9(90)	14(73.7)	75(50.7)
2번째	2(4.3)	10(19.6)	0(0)	0(0)	1(20)	0(0)	0(0)	1(5.3)	14(9.5)
3번째	9(19.1)	8(15.7)	0(0)	0(0)	0(0)	1(11.1)	0(0)	1(5.3)	19(12.8)
4번째	2(4.3)	0(0)	0(0)	0(0)	0(0)	0(0)	0(0)	1(5.3)	3(2)
5번 이상	26(55.3)	7(13.7)	1(16.7)	0(0)	0(0)	0(0)	1(10)	2(10.5)	37(25)
합계	47(100)	51(100)	6(100)	1(100)	5(100)	9(100)	10(100)	19(100)	148(100)

$\chi^2=66.579$ $df=28$ $p=.000$ $\langle .05$, Lamda 계수= .247

2) 주요 관람 동반자 유형

주요 관람자 동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 또는 연인(37.2%), 자녀(33.8%), 친구 또는 친척(23%)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시기가 주말이라 단체 유형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별, 혼인 상태별, 직업별, 소득

수준별 동반자 유형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 동반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10대는 “친구 및 친척” 응답률이 가장 높고 “단체(학교)” 응답률이 2위로 나타났으며, 20대는 “배우자 또는 연인” 응답률이 1위, “친구 및 친척” 응답률이 2위였다. 30대는 “자녀” 응답률이 1위, “배우자 또는 연인” 응답률이 2위로 나타났고, 40대는 “자녀” 응답률이 1위, “친구 또는 친척” 응답률이 2위였다. 마지막으로 50대, 60대는 “배우자 또는 연인” 응답률이 1위, “친구, 친척”이 2위로 나타났다.

혼인 상태에 따른 동반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혼자는 “배우자 및 연인” 응답률이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자는 “자녀” 응답률이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사무직, 주부는 “자녀” 응답률이 다른 유형 응답률보다 높았고, 학생은 “친구 및 친척” 응답률이 다른 유형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직업 집단은 “배우자 및 연인” 응답률이 다른 유형 응답률보다 높았다.

소득 수준별 동반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100만 원이하, 100만 원대)의 경우 “배우자 또는 연인” 응답률이,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대에서는 “자녀” 응답률이 가장 높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배우자(연인)” 응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연령에 따른 관람 주요 동반자

(단위 : 명(%))

연령 관람 동반자	14-19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배우자 또는 연인	0(0)	21(52.5)	19(32.2)	5(17.9)	9(64.3)	1(50)	55(37.2)
자녀	0(0)	2(5)	31(52.5)	15(53.6)	2(14.3)	0(0)	50(33.8)
친구 또는 친척	4(80)	16(40)	4(6.8)	6(21.4)	3(21.4)	1(50)	34(23)
혼자	0(0)	0(0)	3(5.1)	1(3.6)	0(0)	0(0)	4(2.7)
단체(학교)	1(20)	1(2.5)	11.7)	0(0)	0(0)	0(0)	3(2)
단체 (학교가 아닌 다른 모임)	0(0)	0(0)	1(1.7)	1(3.6)	0(0)	0(0)	2(1.4)
합계	5(100)	40(100)	59(100)	28(100)	14(100)	2(100)	148(100)

$\chi^2=66.928$ $df=25$ $p=.000$ $\langle .05$, Lamda 계수=.280

〈표 10〉 혼인 상태에 따른 주요 관람 동반자

(단위 : 명(%))

관람 동반자	혼인 상태	미혼	기혼	합계
배우자 또는 연인		29(53.7)	26(27.7)	55(37.2)
자녀		2(3.7)	48(51.1)	50(33.8)
친구 또는 친척		20(37)	14(14.9)	34(23)
혼자		1(1.9)	3(3.2)	4(2.7)
단체(학교)		2(3.7)	1(1.1)	3(2)
단체(학교가 아닌 다른 모임)		0(0)	2(2.1)	2(1.4)
합계		54(100)	94(100)	148(100)

 $\chi^2=38.907$ df=5 p= .000 <.05, Lamda 계수= .237

〈표 11〉 직업에 따른 주요 관람 동반자

(단위 : 명(%))

관람 동반자	직업	경영/ 관리/ 전문직	사무직	전문기술 직(엔지니어)	자영업	서비스/ 판매/ 영업직	생산/ 단순/ 노무직	주부	학생	무직/ 기타	합계
배우자 또는 연인		10(52.6)	7(29.2)	6(42.9)	8(36.4)	4(44.4)	3(60)	9(30)	8(34.8)	0(0)	55(37.2)
자녀		5(26.3)	11(45.8)	5(35.7)	8(36.4)	2(22.2)	1(20)	16(53.5)	1(4.3)	1(50)	50(33.8)
친구 또는 친척		2(10.5)	3(12.5)	3(21.4)	6(27.3)	3(33.3)	0(0)	5(16.7)	12(52.2)	0(0)	34(23)
혼자		2(10.5)	1(4.2)	0(0)	0(0)	0(0)	1(20)	0(0)	0(0)	0(0)	4(2.7)
단체(학교)		0(0)	1(4.2)	0(0)	0(0)	0(0)	0(0)	0(0)	2(8.7)	0(0)	3(2)
단체(학교가 아닌 다른 모임)		0(0)	1(4.2)	0(0)	0(0)	0(0)	0(0)	0(0)	0(0)	1(50)	2(1.4)
합계		19(100)	24(100)	14(100)	39(100)	22(100)	9(100)	30(100)	23(100)	2(100)	148(100)

 $\chi^2=87.438$ df=40 p= .000 <.05, Lamda 계수= .172

〈표 12〉 소득 수준에 따른 관람 주요 동반자

(단위 : 명(%))

소득 수준 관람 동반자	100만원 이하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만원 이상	합계
배우자 또는 연인	18(46.2)	18(40)	9(25.7)	4(30.8)	6(37.5)	55(37.2)
자녀	3(7.7)	13(28.9)	20(57.1)	7(53.8)	7(43.8)	50(33.8)
친구 또는 친척	15(38.5)	11(24.4)	4(11.4)	1(7.7)	3(18.8)	34(23)
혼자	1(2.6)	2(4.4)	1(2.9)	0(0)	0(0)	4(2.7)
단체(학교)	2(5.1)	0(0)	1(2.9)	0(0)	0(0)	3(2)
단체 (학교가 아닌 다른 모임)	0(0)	1(2.2)	0(0)	1(7.7)	0(0)	2(1.4)
합계	39(100)	45(100)	35(100)	13(100)	16(100)	148(100)

 $\chi^2=35.866$ df=20 p=.016<.05, Lamda 계수=.161

3) 관람 목적

관람 목적을 분석한 결과 여가 선용(47.3%), 자녀 교육(25.7%), 역사(유물) 관심(20.3%), 과제 탐구(4.1%) 순으로 나타났다. 재방문 횟수에 따른 방문 목적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동반자 유형에 따른 방문 목적에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응답자들은 “자녀 교육(교육 목적)” 응답률이 다른 목적에 비해 높았으며, 그 외 동반자 유형 모두(학교 단체 포함)는 “여가 선용”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표 13〉 관람 동반자에 따른 관람 목적

(단위 : 명(%))

관람 동반자 관람 목적	배우자 또는 연인	자녀	친구 또는 친척	혼자	단체 (학교)	단체(학교가 아닌 다른 모임)	합계
학교 과제 탐구	2(3.6)	1(2)	2(5.9)	0(0)	0(0)	1(50)	6(4.1)
자녀 교육(교육 목적)	3(5.5)	32(64)	2(5.9)	0(0)	1(33.3)	0(0)	38(25.7)
역사(유물)에 대한 관심	14(25.5)	6(12)	9(26.5)	1(25)	0(0)	0(0)	30(20.3)
여가 선용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려고	32(58.2)	11(22)	21(61.8)	3(75)	2(66.7)	1(50)	70(47.3)
특별 전시에 관심이 있어서	1(1.8)	0(0)	0(0)	0(0)	0(0)	0(0)	1(7)
기타	3(5.5)	0(0)	0(0)	0(0)	0(0)	0(0)	3(2)
합계	55(100)	50(100)	34(100)	4(100)	3(100)	2(100)	148(100)

 $\chi^2=77.101$ df=25 p=.000<.01, Lamda 계수=.269

응답자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조사한 결과 연령, 혼인 상태, 거주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의 경우 10대, 20대는 “여가 선용” 이, 30대와 40대는 “자녀 교육”, 50대는 “역사 유물 관심” 응답률이 다른 목적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상태에 따른 방문 목적은 미혼자는 “여가 선용”, 기혼자는 “자녀 교육” 응답률이 다른 목적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별로는 익산 거주자는 “여가 선용” 응답률이 다른 목적에 비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박물관을 교육 공간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여가 선용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연령에 따른 관람 목적

(단위 : 명(%))

연령	14-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관람 목적							
학교 과제 탐구	0(0)	4(10)	1(1.7)	1(3.6)	0(0)	0(0)	6(4.1)
자녀 교육(교육 목적)	1(20)	0(0)	25(42.4)	11(39.3)	1(7.1)	0(0)	38(25.7)
역사(유물)에 대한 관심	1(20)	5(12.5)	9(15.3)	8(28.6)	6(42.9)	1(50)	30(20.3)
여가 선용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려고	3(60)	29(72.5)	24(40.7)	8(28.6)	5(35.7)	1(50)	70(47.3)
특별전시에 관심이 있어서	0(0)	1(2.5)	0(0)	0(0)	0(0)	0(0)	1(7)
기타	0(0)	1(2.5)	0(0)	0(0)	2(14.3)	0(0)	3(2)
합계	5(100)	40(100)	59(100)	28(100)	14(100)	2(100)	148(100)

 $\chi^2=51.174$ df=25 p= .000(<.01, Lamda 계수= .064

〈표 15〉 혼인 상태에 따른 관람 목적

(단위 : 명(%))

혼인 상태	미혼	기혼	합계
관람 목적			
학교 과제 탐구	4(7.4)	2(2.1)	6(4.1)
자녀 교육(교육 목적)	2(3.7)	36(38.3)	38(25.7)
역사(유물)에 대한 관심	10(18.5)	20(21.3)	30(20.3)
여가선용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려고	37(68.5)	33(35.1)	70(47.3)
특별전시에 관심이 있어서	1(1.9)	0(0)	1(0.7)
기타	0(0)	3(3.2)	3(2)
합계	54(100)	94(100)	148(100)

 $\chi^2=30.033$ df=5 p= .000(<.01, Lamda 계수= .038

〈표 16〉 거주 지역에 따른 관람 목적

(단위 : 명(%))

거주 지역 관람 목적	익산시	익산이 아닌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경남, 울산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충남	합계
학교 과제 탐구	3(6.4)	0(0)	0(0)	0(0)	0(0)	2(22.2)	1(10)	0(0)	6(4.1)
자녀 교육 (교육 목적)	7(14.9)	18(35.3)	0(0)	1(100)	0(0)	2(22.2)	6(60)	4(21.1)	38(25.7)
역사(유물)에 대한 관심	11(23.4)	14(27.5)	0(0)	0(0)	2(40)	1(11.1)	0(0)	2(10.5)	30(20.3)
여가선용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려고	25(53.2)	18(35.3)	6(100)	0(0)	2(40)	4(44.4)	3(30)	12(63.2)	70(47.3)
특별전시에 관심이 있어서	0(0)	1(2)	0(0)	0(0)	0(0)	0(0)	0(0)	0(0)	1(0.7)
기타	1(2.1)	0(0)	0(0)	0(0)	1(20)	0(0)	0(0)	1(5.3)	3(2)
합계	47(100)	51(100)	6(100)	1(100)	5(100)	9(100)	10(100)	19(100)	148(100)

 $\chi^2=53.102$ df=35 p= .026<.05, Lamda 계수= .051

4) 주요 관람 방법

주요 관람 방법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 카드(38%), 전시물만(33.8%)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고전적 관람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물관 측에서 제공하는 관람 방법이 한정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17〉 주요 관람 방법

주요 관람 방법	빈도	퍼센트(%)
전시물만 보았다	50	33.8
설명카드를 읽으면서 보았다	71	48.0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보았다	5	3.4
단체 리더(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보았다	2	1.4
부모님(가족)의 설명을 들으면서 보았다	4	2.7
터치스크린 이용	2	1.4
음성 안내기를 들으면서 보았다	2	1.4
영상 자료 도움을 받으며 보았다	9	6.1
기타	3	2.0
합계	148	100.0

5)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에 대한 정보원(情報源)

박물관에 대한 정보를 얻는 출처는 “기타”(39.9%)가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변 사람의 권유 33.1%, 인터넷 13.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륵사지의 경우 학교 교육 과정의 역사 교과서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8〉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에 대한 정보원(情報源)

전시관에 대한 정보원	빈도	퍼센트(%)
인터넷	20	13.5
주변 사람 권유	49	33.1
신문이나 뉴스	9	6.1
박물관(전시관) 홍보물	11	7.4
기타	59	39.9
합계	148	100.0

4. 전시관 활성화 수준

1) 관람객 수 규모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의 경우 관람객의 입장료는 무료이다. 2006년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의 관람객 현황은 413,186명으로 2004년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익산시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고령군의 고령 대가야 박물관의 경우 2006년 21만 3천여 명 (유료 입장객 9만 9천1백여 명 포함)이 방문한 것과 비교하면 무료로 입장하는 전시관 관람객 수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다. 유물 전시관의 2006년 입장객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전체 입장객 412,186명 중 일반인이 116,318(28%)명이었으며 청소년이 296,019명 (71%), 외국인이 849명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단체 입장이 전체 관객의 대부분 (71%)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 연도별 관람객 수

(단위 : 명)

연도	계	구분		비고
		내국인	외국인	
1999	364,194	362,573	1,621	
2000	360,053	358,842	1,211	

연도	계	구분		비고
		내국인	외국인	
2001	308,648	307,828	820	
2002	368,410	367,169	1,241	
2003	319,018	317,169	1,849	
2004	387,568	386,105	1,463	
2005	410,355	408,637	1,718	(일본인:646)
2006	413,186	412,337	849	(일본인:309)

고령 대가야 박물관의 경우 2005년 이후 200,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장료가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수와 관람료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다.

〈표 20〉 고령 대가야 박물관 연도별 관람객 수

(단위 : 명)

기간	관람 인원			관람료(원)	비고
	계	유료	무료		
총계	1,364,837	567,742	670,865	480,104,550	
2000	25,408	14,464	10,944	7,030,450	왕릉 전시관 개관
2001	172,539	111,692	60,847	56,640,600	
2002	222,379	95,677	126,702	45,153,600	
2003	168,104	78,226	89,878	39,061,300	
2004	158,731	77,666	81,065	37,458,850	
2005	278,398	90,848	187,550	129,650,650	가야 박물관 개관
2006	213,048	99,169	113,879	165,154,100	우륵 박물관 개관
2007	126,230	56,190	70,040	90,176,700	(2007년 5월 통계)

2) 전시물 만족도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의 전시물 관람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방문 목적에 따른 전시물 만족도 차이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물 전시 관심” 목적의 경우 불만족률이 36.6%로 전체 응답자의 불만족률인 2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방문 목적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불만족률인 29%와 비슷하거나 낮게 나타났다.

〈표 21〉 관람 목적에 따른 전시물 관람 만족도

(단위 : 명(%))

관람 목적 전시물 관람 만족도	학교 과제 탐구	자녀 교육 (교육목적)	역사(유물) 에 대한 관심	여가선용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려고	특별전시에 관심이 있어서	기타	합계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0(0)	1(2.6)	1(3.3)	3(4.3)	1(100)	2(66.7)	8(5.4)
조금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1(16.7)	10(26.3)	10(33.3)	14(20)	0(0)	0(0)	35(23.6)
만족스러운 편이다	4(66.7)	21(55.3)	15(50)	48(68.6)	0(0)	1(33.3)	89(60.1)
매우 만족스럽다	1(16.7)	6(15.8)	4(13.3)	5(7.1)	0(0)	0(0)	16(10.8)
합계	6(100)	38(100)	30(100)	70(100)	1(100)	3(100)	148(100)

 $\chi^2=46.451$ $df=15$ $p=.000(.01, \text{Lamda 계수}=.034)$

3) 운영 및 편의 시설 만족도

운영 및 편의 시설 만족도에 관한 분석 결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직원 및 해설사의 관람객 서비스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주차장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이 3점임을 감안하면 운영 및 편의 시설 각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 운영 및 편의 시설 만족도

운영 및 편의 시설 만족 측정 항목	응답자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개관시간	148	1	5	2.15	.971
직원 및 해설사의 관람객 서비스	148	1	5	3.00	1.119
기념품점	148	1	5	2.68	.962
주차장	148	1	5	1.88	.932
화장실	148	1	4	2.08	.869

4) 재방문 의향

재방문 의향을 분석한 결과 재방문 의향 응답률이 82.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방문 목적에 따른 재방문 의향 응답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 과제 탐구”의 경우 재방문 의향 응답률이 50%로 전체 82.4%보다 낮았으며, “여가 선용”의 경우 재방문 의향 응답률이 74.3%로 전체 82.4%보다 낮았다. “자녀 교육(교육 목적)”은 재방문 의향 응답률이 89.9%로 전체 82.4%보다 높았고, “역사 유물 관심” 및 “특별 전시 관람”은 응답률이 100%로 전체 8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중 역사 유물에 관심이 있거나 특별 전시에 관심이 있는 경우 재방문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방문 목적에 따른 재방문 의향

(단위 : 명(%))

관람 목적 재방문 의향	학교 과제 탐구	자녀 교육 (교육목적)	역사(유물) 에 대한 관심	여가선용으 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려고	특별전시에 관심이 있어서	기타	합계
있다	3(50)	34(89.5)	30(100)	52(74.3)	1(100)	2(66.7)	122(82.4)
없다	3(50)	4(10.5)	0(0)	18(25.7)	0(0)	1(33.3)	26(17.6)
합계	6(100)	38(100)	30(100)	70(100)	1(100)	3(100)	148(100)

 $\chi^2=15.989$, $df=5$, $p=.007 < 0.05$, Lambda 계수= 0.0

5) 가장 불편한 부분

가장 불편한 부분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는 안내·해설 미흡(39%), 전시 내용 미흡(28.4%), 휴게 공간 미흡(23%)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4〉 가장 불편한 부분

가장 불편한 부분	빈도	퍼센트(%)
주차 공간 부족	2	1.4
휴게 공간 부족	34	23.0
안내, 해설 미흡	59	39.9
전시 내용 미흡	42	28.4
기타	11	7.4
합계	148	100.0

6) 가장 시급히 보완할 부분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부분은 행사 홍보 부족(22.3%), 전시 내용 개선(21.6%), 해설사 증원(2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가장 시급히 보완할 부분

가장 시급히 보완할 부분	빈도	퍼센트(%)
전시 시설 및 환경	16	10.8
편의 시설(휴게소, 식당, 매점)	24	16.2
기념품점	5	3.4
해설사 증원	32	21.6
관광에 필요한 교통 문제(셔틀버스 운행 등)	4	2.7
박물관(전시관) 전시회 및 행사 정보 부족	33	22.3
박물관(전시관) 전시 내용	32	21.6
기타	2	1.4
합계	148	100.0

6) 자원봉사 활동 의향

관람객 설문 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91.2%)는 해당 전시관이나 다른 박물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박물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37.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인구 및 사회 경제적 특성별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 의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대, 30대, 50대의 경우, 전체 자원봉사 활동 의향 응답률 37.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대, 40대, 60대의 경우 전체 자원봉사 활동 의향 응답률 37.8%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26〉 박물관(전시관)에서 자원봉사 경험 여부

박물관 자원봉사 경험 여부	빈도	퍼센트(%)
예	13	8.8
아니요	135	91.2
합계	148	100.0

〈표 27〉 연령에 따른 박물관 자원봉사 의향

(단위 : 명(%))

연령	14-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자원봉사 의향							
무응답	1(20)	0(0)	1(1.7)	0(0)	0(0)	0(0)	2(1.4)
예	2(40)	11(27.5)	27(45.8)	10(35.7)	6(42.9)	0(0)	56(37.8)
아니요	2(40)	29(72.5)	31(52.5)	18(64.3)	8(57.1)	2(100)	90(60.8)
합계	5(100)	40(100)	59(100)	28(100)	14(100)	2(100)	14(100)

 $\chi^2=19.563$ df=10 $p=.034$ <.05, Lamda 계수=.000

5. 전시관의 활성화 저해 요소

미루사지 유물 전시관의 활성화 수준을 간단히 요약하면 성공 사례로 살펴본 고령 대가야 박물관에 비하여 박물관 활성화 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2006년 기준 익산 전시관은 익산시 인구 1명당 연간 1.7회, 대가야 박물관은 고령군 인구 1명당 5.7회 방문한 꼴로 나타나 전시관의 관람객 규모가 고령군에 비해 작다. 또한 익산의 전시관의 경우 전시물 관람 만족도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한 응답률이 29%로 나타났는데 고령 대가야 박물관의 2006년도 방문객 조사에서 나타난 불만족 응답률(1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관람객 규모 면이나 관람 만족도 면에서 전시관이 잘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전시관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전시관의 활성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영역의 요인들 -지역 사회 특성, 박물관 특성, 및 관람객 특성-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사실상 어려운데 이것은 지역 사회 특성, 박물관 특성에 대한 자료가 대부분 질적 자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료의 통계 분석이 어렵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활성화 저해 요인들을 따져 본다면, 가장 먼저 박물관 특성 영역에서 예산과 인력 요인을 들 수 있겠다. 전시관의 총 예산(약 14억 5천여만 원) 중 1.7%만 행사 운영비(전시 교육)에 이용되고 학예사 2명이 전시관 운영을 대부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관람객의 관람 목적과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행사 운영비 예산 부족은 자연히 관람객의 만족도 조사에서 관람객이 “가장 불편한” 부분으로 “전시 안내·해설 미흡(39.9%)”과 “전시 내용 미흡(28.4%)”에 응답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공립 박물관인 전시관의 예산 및 인력 부족은 지역 사회 정부의 문화 정책 방향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익산시의 경우 문화 유산 시설의 건립 및 보수에 집중하여 관람객 개발을 위한 예산이나 운영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전시관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는 전시관의 외부 소통 능력 부족과 외부 기관과의 네트워킹 부족을 들 수 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미루사지 덕분에 전시관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 없이 청소년 단체 관람객들은 전시관을 방문하였다. 관람객 설문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전시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방문 목적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고 세분화된 관람객 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었다. 관람객 설문 조사에서 22.3%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전시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야로 “전시회 및 행사 정보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전시관이 외부 기관 및 전문기와의 협력하는 수준이 부족한 것도 전시관 활성화 장애 요소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고령군의 경우 고령 대가야 박물관, 고령군청, 경남도청과 협력하여 행정부의 ‘신활력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박물관 행사 운영비를 위한 사업 예산을 마련하였다. 전시관

의 경우 외부 기관과의 적극적 네트워킹 노력이 활발하지 않았다.³⁾

V. 전시관 활성화 방안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을 둘러싼 지역 사회 특성, 박물관 특성, 관람객 특성 및 박물관 활성화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먼저, 전시관의 조직과 인력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순환 보직제에 의한 행정관들이 전시관 책임자로 있는데 이로 인해 전문가 집단(학예사)과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령 대가야 박물관의 경우 학예관이 박물관장을 맡아 박물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의 경우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전문 학예관이 관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예 인력의 확충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시관과 외부 기관(단체) 간 다양한 협력관계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⁴⁾ 이를 위하여 익산시 박물관 학예사들 간 네트워킹과 전국 박물관 학예사 간 네트워킹이 필요하며, 백제 역사와 유물에 관한 전국 학계 인사와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구성하여 전시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케팅과 홍보 분야에서도 네트워킹을 통하여 홍보의 효과를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선행 연구(김봉수, 2007; 홍상희, 2006)가 보여 주듯이 초·중·고등학교 국사 교사나 대학교 역사 전공학과와 연계한 전시관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시 기획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평생 교육 기관이나 지역 주민의 동아리 모임과 연계한 전시 기획이나 프로그램 개발도 유용할 것이다. 고령 대가야가 ‘대가야 체험 축제’와 연계하여 박물관 인지도와 이용률을 높이듯이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도 익산시 서동 축제 조직위원회와 협력하여 백제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전시관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람객 특성을 고려하여 관람객의 세분화 및 핵심 관람객 선정(Segmentation & Targeting)이 필요하다. 관람객의 특성을 살펴보면 익산과 인접 도시에서 방문한 관람객들이 대다수였으며, 30

3) 이 연구가 수행된 2007년에는 전시관이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최근에 와서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지난 2009년 1월 미륵사지 석탑해체과정에서 출토된 미륵사지 사리장엄구와 사리를 전시하는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특별전’이 6월 27일부터 한 달간 전시되어 국내외 관람객이 약 12만 7천 명에 이르러 2008년 월평균 관람객 수보다 500%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 전시회의 성공은 전라북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익산시와 함께 불교계 및 백제 문화에 관심 있는 일본에 적극 홍보하고 협조를 통해 가능했다고 평가받고 있다(2009년 7월 30일 연합뉴스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日서 관심 높아’ 참조).

대, 20대, 40대, 대졸, 고졸자, 주부, 사무직, 학생, 자영업자, 순으로 많았으며, 동반 유형은 배우자/연인, 자녀 순으로 나타났으며, 방문 목적은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이 대다수였다. 관람 목적에 따라 3개로 세분화가 가능하며, 주요 관람객으로는 교육 목적 관람객의 경우 자녀를 동반한 익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 거주자로, 여가 선용의 경우 익산시민을 중심으로 한 불특정 다수로, 역사 유물 관심 관람객은 역사 유물에 관심이 높은 50대 이상의 익산과 전북 지역 거주자로 나타난다.

〈표 28〉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의 관람객 세분화

관람 목적별 관람객 유형	관람객 특징	연령	혼인 상태	거주 지역	동반 유형
여가 선용 관람객		10대 및 20대	미혼	모든 전 지역 해당	자녀 제외한 모든 동반 유형 해당
교육 목적 관람객		30대 및 40대	기혼	익산 제외 전북 지역 인천/경기	자녀 동반
역사 유물 관심 관람객		50대 이상 성인	기혼	익산 및 전북 지역	특정 유형 없음

넷째, 위에서 세분화한 관람객들의 유형에 맞추어 박물관의 시설 기능 재확립(repositioning)이 필요하다. 설문 조사 결과 유물 전시관은 전시 기능과 더불어 익산 시민들의 여가 생활 공간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시민들의 여가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역사 유물 발굴 및 전시 공간으로서의 기존 기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일상생활의 여가 공간 기능과 유물 체험 공간으로 그 기능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이나 야외 상설 공연을 유치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즐길 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전시관 주변을 산책로와 휴게 시설을 겸비하여 여가 활동이 가능한 공원으로 새롭게 조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박물관을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곳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복합 문화 관광 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송동근, 2005; 김영호, 1998). 이를 위해 먼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에서 전시관까지 도보 거리가 상당히 긴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물 앞 조경을 새로이 하여 주차장에서 건물까지 도보 중에도 보고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전시관에서 판매하는 기념품들은 미륵사지를 상징하지 못하고 있어서 기념품이 백제나 미륵사지 유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 공예가들을 중심으로 미륵사지 석탑을 상징물로 하는 기념품 디자인과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해설사의 증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익산시청의 문화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민들로 구성된 전시관 해설사를 양성해야 한다. 또한 해설 어휘의 현대화를 통해 관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관람객 인식 조사에서 향후 자원봉사를 희망한 응답자가 37.8% 이고 특히 응답률이 높았던 중고생 10대, 어린 자녀를 둔 30대, 50대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모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물 전시 품목을 다양화하고 해당 유물과 그 시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미륵사지석탑 복원 현황에 대한 교육도 요청된다. 고령 대가야 박물관이 유물 발굴 현장을 그대로 전시관으로 꾸민 것을 참조하여 미륵사지 석탑 복원 과정이 언제부터 시작하여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람객에게 전시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발굴되고 복원되어진 유물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 과정과 복원 과정 그 자체도 전시물의 내용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선행 연구(박혜완, 2005; 이보아, 2003)에서도 나타났듯이 박물관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일관된 이미지를 갖춘 다양한 홍보 방법들이 필요하다.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의 홍보물은 일관성이 없이 산만한데,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미륵사’를 대표 브랜드로 선정하여 ‘미륵사’를 중심으로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홍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현재 전시관 내에 리플렛을 비치시키는 소극적 방법 외에 다양한 종류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기차 역사, 고속버스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포하고 타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다양한 홍보 수단을 개발하여 전시관과 전시 기획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전시관 활성화 방안들은 근본적으로 지방 정부의 문화 정책 기조와의 일치 및 문화 예산과 인력 구성 개선이 따를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의 경우처럼 공립 박물관의 경우, 더욱 지방 정부의 문화 정책 영향력이 크다(최병석, 2004). 익산시의 문화 예산이 시설 관리 부분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것을 개선하여 행사 운영비 예산을 늘리고 순환 보직제 공무원을 임명하기보다 전문 인력을 유치하여 전시관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VI. 글을 마치며

이 연구는 지역 사회 박물관을 관람객 중심(visitor-oriented)과 지역 사회 중심(community-oriented)의 박물관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적 사례 연구로서 익산시 소재의 미륵

사지 유물 전시관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박물관 활성화 수준은 지역 사회 특성(지역 정부의 문화 정책·예산·인력 배분, 지역 사회 문화 시설들 간 협력), 박물관의 특성(인력, 예산, 시설, 프로그램, 외부 소통 능력, 외부 기관과의 네트워킹 능력), 관람객의 관람 행동 특성(사회인구학적 특성, 동반자 유형, 관람 목적, 관람 방법, 방문 횟수)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각 특성들 간의 관계에 대해 통계적 유의미성을 밝히지 못하여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후속 연구가 축적되어 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밝혀지고 지역 사회 문화 기반 시설의 활성화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모델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분석틀이 개발되면 지역 사회 문화 기반 시설의 이용 수준과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보다 쉽게 밝힐 수 있게 되고 이에 대응하는 지역 문화 정책을 수립하기도 용이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김봉수(2007), 「박물관과 초등학교 연계 교육을 위한 실제」, 서울 : 모아재.
- 김영호(1998), 변화하는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 「현대미술학회 논문집 (제1호)」, 서울 : 도서출판 재원.
- 박재용·조윤희(2004), 도서관/박물관 협력 체제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권 12호, 315-333.
- 박혜완(2005), 「국립중앙박물관 재 개관에 따른 홍보 전략 연구 프로젝트 보고서」,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동근(2005), 문화 관광 자원으로서의 박물관 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정책학연구」, 11권 3호, 21-40.
- 오종숙(1999), 박물관 교육자의 역할과 그 대안, 「교육철학」, 21권 1호, 237-240.
- 이난영(2008), 「박물관학 : 박물관 관리 운영의 이론과 실무」, 서울 : 삼화출판사.
- 이보아(2003), 「성공한 박물관 성공한 마케팅」, 서울 : 역사넷.
- 이선경·최지은·신명경·김찬중·임진영·이선경·변호승·이창진(2004), 선진국의 주요 자연사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및 특징,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4권 2호, 357-374.
- 이후석·이장주(2004),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객 특성에 관한 분석적 연구, 「관광연구」, 18권 3호, 197-210.
- 이후석(2007), 박물관 방문객의 관람 동기 유형별 지각된 성과와 만족 분석 :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저널연구」, 21권 1호, 5-19.
- 이후석(2008), 문화 관광 상품으로서 박물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중요도 만족도 분석, 「관광연구저널」, 22권 1호, 55-66.
- 최병석(2004), 한국의 박물관 운영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대안, 「현대미술연구소 논문집」, 제7집, 1-31. 서울 : 경희대학교 현대미술관.
- 최지은(2004), 자연사 박물관 관람객의 관람 유형과 관람 만족도 관계, 「Journal of Korean Earth Science Society」, 25권 5호, 315-326.
- 홍상희(2006), 평생 교육과 지역 박물관의 역할, 「충북학」, 제8집, 23-37.
- Dierking, Lynn. D. & Falk, John H., (1994), Family behavior and learning in informational science setting : A review of the research, *Science Education*, 78(1) : 57-72.
- Falk, John H. (1991), Analysis of the behavior of family visitors in natural history museums, *Curator*, 34(1) : 44-50.

- Falk, John. H. & Dierking, Lynn. D. (1992), *The Museum Experience*, 이보아 역(2008), 「관람객과 박물관」, 서울 : 북코리아.
- Randol, S.M. (2005), *The nature of inquiry in science centers : Describing and assessing inquiry at exhibi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Sandifer, C.(1997), Time-based behaviors at an interactive science museum : Exploring the differences between weekday/weekend and family/nonfamily visitors, *Science Education*, 81 : 689-701.
- Silberberg, T.(1995), Cultural tourism and business opportunities for museums and heritage sites, *Tourism Management*, 16(5) : 361-365.

Abstract

Museum Revitalization in a Local Community : A Case Study on the Relic Museum of Mi-Reuk-Sa-Ji

Yi, Jou-Yeon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College of Social Sciences, Ajou University

Seo, Hui-Seok

Professor,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College of Social Sciences, Wonkwang University

Ryu, Ji-Won

Researcher, Regional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ity

Local governments have recently made great efforts to build diverse cultural facilities to develop the quality of community life; however, there is limited research on how much cultural facilitie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y culture. As a case study on the relic museum of Mi-Reuk-Sa-Ji, this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the managerial success of the museum, and giving suggestions for its development. This study investigated managerial aspects of the museum, visitors' characteristics and their satisfaction, the cultural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networking between the museum and other cultural facilities. Literature reviews, face-to-face interviews with the museum staff, surveys with 148 visitor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the staff, one government officer, and staff members of other cultural facilities were conducted. The study found that the relic museum had a number of problems with effective management. For better managerial success, the museum needs to : segment potential visitors and develop different programs targeting each segment; increase the number of leisure and recreation facilities in addition to exhibition facilities; and develop networking with other cultural facilities. More importantly,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develop consistent cultural policies related to the public museum and other cultural facilities, and should provide the more budget and the more professional staff members in order for the museum to manage diverse cultural programs targeting segmented potential visitors.

[Key Words : local community, cultural facilities, museum, managerial success]

계층적 분석 처리(AHP)를 이용한 출판 수출 지원 기능에 대한 만족도 평가

서보밀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제1저자
오준석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김소영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_교신저자

본 연구에서는 출판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기능에 대한 만족도 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층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각 기능의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AHP를 활용하였다. 기존 문헌 조사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정보 지원, 번역 지원, 계약 체결 지원, 계약 이행 및 운영, 수출 실무 지원의 5개 기능군에 14개의 세부 기능이 출판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기능으로 도출되었다. 이들 기능을 계층 구조로 모형화하였으며,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각 기능군 및 세부 기능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였다.

제시한 모형을 바탕으로, 출판 정책 및 출판 관련 기구들이 제공하고 있는 출판 수출 지원 기능에 대한 만족도를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출판 수출 지원 기능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출판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출판 수출, 지원 기능, 계층적 분석 처리]

I. 서론

문화산업은 물질적 풍요를 뛰어넘어 정신적 풍요를 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1차, 2차, 3차 산업과 다른 새로운 개념의 4차 산업이라 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기존 산업들의 성장률이 다소 정체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4차 산업인 문화산업은 향후 한국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무형의 콘텐츠를 유형의 경제재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통해 문화산업은 정신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문화산업 중에서도 출판업은 국내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이다. 2006년의 경우, 출판업의 총 매출액은 전체 문화산업 매출액의 34.31%에 해당하는 19조 8,793억 원으로 집계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방송업의 매출액이 9조 7,198억 원, 광고업의 매출액이 9조 1,180억 원으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출판업의 매출액은 2위와 3위보다 10조 원 이상 더 큰 규모로, 출판업이 국내 문화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문화산업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업은 최근 내수 시장에서의 성장률 둔화와 해외 시장과의 심각한 무역 역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적 출판업의 경우, 도서 수요의 정체와 온라인 매체의 활성화에 따라 2006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화에 따른 번역 도서의 증가 및 수입 도서의 증가 역시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례로 2007년 한 해 동안 번역된 도서가 12,322종으로 전체 출판물 발행 종수의 30.0%를 차지할 정도이다. 또한 서적 출판업의 2007년 수입액은 3억 5,440만 달러인 데 비하여, 수출액은 2억 1,035만 달러에 그쳐 1억 4,405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내수 시장 정체와 무역 역조 심화라는 최근의 환경 변화로 인하여, 한국 출판업계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출판 시장의 급속한 글로벌화 추세와 국내 시장의 한계 등은 한국 출판업계로 하여금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출판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우리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 향상에 힘입어 한국 출판업의 수출 실적도 상당히 증가하기는 하였다. 2007년 서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8%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에 머물던 저작권 수출 종수가 2002년 이후 세 자릿수로 급증하였고 2008년에는 1천 종을 돌파하였다.¹⁾ 주요 수출 분야 역시 초기의 아동, 만화 등 시각성이 강한 영역 위주에서 최근에는 시각성이 약하고 텍스트 위주인 문학이나 실용서 분야의 수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이제 우리나라의 출판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현지 및 글로벌 출판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국내 출판사의 수는 29,977개로 이들의 평균 매출액이 3억 원 미만 수준일 정도로(문화체육관광부, 2008), 국내 출판 관련 기업은 대부분 중소 업체이다. 우리나라의 출판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소 출판업체들로서는 해외 시장 진출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험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수출 기회를 제약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중소 출판업체가 개별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거나, 또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1) 대한출판문화협회(<http://www.kpa21.or.kr>)의 '출판 저작권 수출 DB'.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를 보유한 출판업체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출판업체의 수출 기회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정부는 출판업의 수출 확대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국제 도서전 개최, 국내 출판물의 해외 보급 지원, 국제 출판 포럼 개최 등이 대표적인 지원 내용이었다. 또한, 한국 문학 및 국내 간행물의 번역·출판, 번역가 양성, 한국 문학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 한국 문학의 해외 교류 및 홍보 등의 일부 지원 사업이 한국 문학번역원을 통해서도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와 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기능이 실질적으로 출판 수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체계의 정립은 미흡한 실정이다. 모든 사업과 투자에 있어서 기존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평가 과정은 다음 사업과 투자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출판 수출 지원 기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출판 수출 지원에 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출판 수출 지원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위한 학술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판 정책 및 출판 관련 기구가 제공하고 있는 출판 수출 지원 기능을 평가하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문헌 조사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출판 수출 지원에 필요한 기능을 도출하고 계층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출판 수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계층적 분석 처리를 통하여 이들 기능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개발된 평가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하여, 출판 수출 지원 기능의 수혜자인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현재의 출판 수출 지원 기능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출판 수출 지원 기능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출판 수출 지원에 대한 평가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출판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제도와 사업에 대한 체계적 평가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평가 모형은 학문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실무적 적용성도 갖추어야 실무 현장에서 실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가 모형에 포함된 각 기능에 대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함으로써 출판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및 사업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기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 기존 문헌 조사

1. 출판 수출입 현황

출판 수출은 크게 5가지를 포함한다(이은국·한주리, 2003). 첫째, 각 발행국의 언어로 된 도서 수출이 있다. 이는 각국에서 자국어로 발행된 인쇄 출판물을 일반 상품처럼 그대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이다. 둘째, 각국에서 외국어로 발행된 도서 수출이 있다. 즉, 발행국 내에서 처음부터 외국어로 집필되어 출간되는 인쇄 출판물을 수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발행국 내에서의 도서 번역 수출이다. 이는 발행국의 언어로 집필되어 출간된 인쇄 출판물을 발행국 내에서 외국어로 번역·출간하여 수출하는 경우이다. 네 번째는 해외 출간에 의한 도서 번역 수출이 있다. 이는 발행국 내 기관이 해외의 출판사나 번역자를 지원하여 해외에서 인쇄 출판물을 출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수출에 의한 번역 출간이 있다. 이는 저작권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인쇄 출판물을 출간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출판 수출을 정리하면, 각국에서 발행된 인쇄 출판물의 수출과 출판 저작권의 수출에 의한 번역서 발행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언어권이 동일하거나 발행국의 언어를 이해하는 수요자가 많을 경우에는 인쇄된 출판물이 직접적인 수출입 품목이 된다. 하지만, 언어 장벽이 존재하고 수입국에 수출국의 언어를 이해하는 수요자가 적을 경우에는 번역서를 발행함으로써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자 하게 된다. 과거에는 교통 및 통신이 발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출판 수출입의 지리적 범위가 넓지 않아, 인접국 및 동일 언어권 간에 실물 도서를 거래하는 방식의 제한적인 무역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현대 출판에서는 국가 간 지리적 제한이 완화되면서 인쇄 출판물의 수출입도 증가하는 한편, 저작권 수출에 의한 번역 출간 방식이 출판 수출입에서 보다 보편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표 1〉 연도별 인쇄 출판물 수출입 규모

(단위: 천 달러)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출	58,393	63,724	71,901	71,849	87,327	94,335	93,296	118,530	137,939
수입	94,255	117,369	120,502	164,177	124,440	150,998	179,985	231,592	221,339

출처: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UNIPASS(<http://portal.customs.go.kr>) 수출입 통계에서 정리

주: 관세청 품목 분류 코드에서 일반 서적(4901) 및 아동 서적(4903) 합산

우리나라의 출판 수출입도 인쇄 출판물의 수출입과 출판 저작권의 수출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의 도서 수출입 통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수출입 모두 지속적인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출입 규모는 이 기간 동안 2배 이상씩 증가하였다. 2008년 국내 인쇄 출판물의 수출액은 약 1억 4천만 달러인 반면, 외국 인쇄 출판물의 수입액은 약 2억 2천만 달러 규모로 거의 2배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출판 수출입에서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게다가, 개인 우편이나 인터넷 서점에서의 거래를 통한 배송 물량이 <표 1>의 관세청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쇄 출판물의 수입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인쇄 출판물의 대부분은 한국어 출판물이며, 국내 출판사가 제작한 외국어 판 출판물의 수출도 극소수 포함된다. 국내 인쇄 출판물의 수출 국가는 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이 주요 대상국이며, 수출 분야는 만화, 비소설, 소설 등이 중심이다(노병성, 2004). 이러한 인쇄 출판물은 해외의 한국학 연구자 및 연구 기관, 공공 도서관, 한국어학과 소재 대학과 교육 기관, 한인 교포 등을 수요자 층으로 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의 인쇄 출판물의 수입은 각종 학술·교육서에서부터 소설, 그림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한국출판학회, 2009). 수요자 층도 전문 연구자에서부터 영어를 학습하는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폭넓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홈페이지(<http://www.kpa21.or.kr>)에 구축된 ‘출판 저작권 수출 DB’에는 2009년 3월 현재 총 5,525종이 등록되어 있다. 출판 분야는 만화와 아동이 전체의 64.3%로 비중이 가장 크며, 지역별로는 아시아권이 72.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출판 저작권 수출은 아동 및 만화 등 시각성이 강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기타 분야에서는 성과가 미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 및 아메리카 등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한출판문화협회(<http://www.kpa21.or.kr>)에 따르면, 외국 도서의 출판 저작권 수입에 의한 국내 출판물의 번역서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전체 도서 발행 종수 중 번역서의 비중은 1996년만 하더라도 15%였던 데에 비하여, 2008년에는 31%에 이를 정도로 대폭 증가하였다. 분야별로는 철학, 종교, 아동, 순수과학, 만화의 번역서 구성비가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다.

2. 출판 수출 지원을 위한 필요 기능

국내 출판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 업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출판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출판 정책 및 출판 관련 기구를 통한 수출 지원이 절실하다. 개별 출판업체들이 해외 진

출 과정에서 직면하는 각종 장벽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언어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태생적인 언어 장벽을 가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으로서 수입국 현지에서의 판매 네트워크 등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시장을 장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수출 경험도 일천하여 마케팅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노병성, 2004). 따라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보유한 국내 출판업체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에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출판 수출의 기회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 출판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지원 기능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다양한 연구에서 국내 출판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및 전략이 제시되어 왔다. 이은국·한주리(2003)는 출판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1) 출판 수출에 대한 인식 전환, (2) 전문 번역가 양성, (3) 전문 단체 설립, (4) 국내 출판에 대한 현황 자료 구축, (5) 국제 도서전의 활용, (6) 배포망의 확보, (7) 통계 자료 구축, (8) 저작권 에이전시 활용의 8가지를 제시하였다. 노병성(2004)은 출판의 프로세스를 시장 탐색 단계, 기획 단계, 생산 단계, 시장 진출 단계로 구분하여, 국내 출판의 영·미권 진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전략에는 국가 전략과 기업 전략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 중장기 전략과 중단기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중단기 국가 전략에는 (1) 정보 제공, (2) 국제 도서전시회 지원, (3) 연구 지원, (4) 네트워크 구축, (5) 자문기관 활성화, (6) 번역 지원, (7) 수출 지원, (8) 국가적 차원의 홍보, (9) 해외 서점 지원, (10) 출판 문화권 구축, (11) 해외 출판인 교류 후원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김진두(2005)는 동아시아에 대한 출판 저작권 수출을 위하여 (1) 수출 투자 지원, (2) 전문 번역가 양성, (3) 대중 서적 우선 고려, (4) 해외 시장 조사, (5) 거대 복합기업, (6) 에이전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진두(2007)는 국내 도서의 중국 진출 방안으로 (1) 치밀한 사전 조사, (2) 적극적 홍보 전략, (3)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 (4) 전문적 에이전시 영역 확충, (5) 유능한 번역가 양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출판을 포함한 문화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문화관광부(2000)는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시장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산업 지원, 전시회 참가, 저가 공급, 대중문화 위주 진출, 소비자의 기호 파악, 적극적 홍보, 에이전트 활용 등을 각국의 상황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2)은 문화산업이 동북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1) 정보 서비스 지원, (2) 사례 중심의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 (3) 정부 간 협력 체계 수립, (4) 인력/금융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WTO가 발행한 「World Trade Report 2007」에 의하면, 국제 무역협정에 따라 수출 지원 기구가 담당해야 하는 기능은 9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WTO, 2007). 다자 간 협상 진행, 정보 보관소, 거래

촉진자, 조정자, 정보 보급자, 정보 수집자, 중재자, 판결자, 감시자가 그것이다. 이들 기능은 특성에 따라, (1) 정보 지원, (2) 계약 체결 지원, (3) 계약 이행 및 운영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정보 지원에는 정보 수집자, 정보 보관소, 정보 보급자 기능이 포함되며, 계약 체결 지원에는 다자 간 협상 진행, 거래 촉진자 기능이 포함된다. 또한, 계약 이행 및 운영은 감시자, 조정자, 중재자, 판결자 기능으로 구성된다.

이상의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출판 수출 지원 기능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출판 수출 지원 기능

문헌	정보 지원	번역 지원	계약 체결 지원	계약 이행 및 운영	수출 실무 지원	기타
문화관광부 (2000)	○				○	전시회 참가 저가 공급 대중문화 위주 진출 에이전트 활용
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2)	○		○			인력/금융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이은국· 한주리 (2003)	○	○			○	인식 전환 전문 단체 설립 국제 도서전 활용 에이전시 활용
노병성(2004)	○	○			○	국제도서전시회 지원 연구 지원 자문기관 활성화 해외 서점 지원 출판 문화권 구축 해외 출판인 교류 후원
김진두(2005)	○	○			○	대중 서적 우선 고려 거대 복합 기업 에이전시 활성화
김진두(2007)	○	○			○	종합 엔터테인먼트회사 에이전시 영역 확충
WTO (2007)	○		○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관점 및 상황에서 출판 수출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각각 제한된 특정 상황 하에서의 전략

과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국내 출판업계를 위한 포괄적이고도 세부적인 지원 기능을 망라하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출판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미 수행된 다양한 지원 제도 및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즉, 기존 연구들은 미래지향적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과거 성과의 평가에 따른 활동의 개선 및 경험의 축적을 위한 토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판 정책 및 출판 관련 기구가 제공하고 있는 출판 수출 지원 기능에 대한 평가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가 모형에 포함되는 지원 기능은, WTO(2007)의 지원 기능을 바탕으로, 기존 문헌의 연구 결과와 출판 수출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기능을 추가하여 다음의 5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 정보 지원 : 출판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며, 이를 출판업계에 제공하는 기능
- 번역 지원 : 국내 출판물의 수출을 위하여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기능
- 계약 체결 지원 : 출판 수출을 위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협상 및 거래를 촉진하는 기능
- 계약 이행 및 운영 : 계약 당사자의 계약 이행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등 계약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기능
- 수출 실무 지원 : 출판물 수출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기능

3. 계층적 분석 처리

계층적 분석 처리(Analytic Hierarchy Process : AHP)는 다기준 의사 결정 모형으로, 의사 결정 문제를 네트워크 혹은 계층 모형으로 표현하여 접근한다(Saaty, 1980). 즉,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계층 구조로 표현하고, 그 계층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간의 쌍대 비교(pairwise comparison)에 의한 판단을 통하여 요소들의 가중치를 구하는 것이다. AHP는 복잡한 의사 결정 문제를 계층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AHP는 두 요소 간의 비교를 통한 중요도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량적 특성과 정성적 특성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 평가자들의 판단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조근태 등, 2003).

AHP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 결정 요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복잡한 의사 결정 문제를 계층 구조로 표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계층 구조는 의사 결정의 목적, 분류 기준, 대안이라는 3단계로 구성하는 것이다(Vargas, 1990). 하지만, 계층 구조는 사명-목표-전략-평가 요인 등으로 AHP의 적용 분야 및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다(Liberatore et al., 1992). 계층

구조를 구축한 후에는, 9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문가들이 각 요소들 간의 쌍대 비교를 하도록 하며, 이 결과를 통하여 계층별 쌍대 비교 행렬을 산출한다(Saaty, 1980). 산출된 쌍대 비교 행렬로 각 계층 내의 의사 결정 요소들 간의 상대적 가중치를 각 전문가들에 대하여 고유치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게 된다. 이후에 각 전문가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결합하여 의사 결정 요소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종합화 하게 된다(Zahedi, 1986).

AHP는 쌍대 비교의 평가자가 일관성을 가지고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 CR)을 사용한다. 일관성 비율은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 CI)를 무작위 지수(Random Index : RI)로 나눈 값이다. RI는 표본 크기를 100으로 하고 9점 척도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만들어 낸 역수 행렬의 CI의 평균값으로 일관성의 허용한도를 나타낸다(Saaty, 1990). CR은 평가자의 응답이 일관되지 않은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0.1 이하이면 평가자의 응답이 합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0.2 이하일 경우에도 용납할 수 있는 일관성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CR이 0.2 이상일 경우에는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하게 된다(Saaty, 1990).

AHP는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Tam과 Tummala(2001)는 통신업체 선정을 위하여 AHP를 적용하였으며, Saad(2001)는 조직의 성과 평가를 위하여 AHP를 활용하였다. 오기성(2004)의 연구에서는 최적의 웹사이트 선정에 AHP를 적용하였으며, Uzoka(2005)는 기업의 재무 정보를 평가하기 위하여 AHP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AHP는 소방 행정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 평가(이동기, 2005) 및 광역자치단체 공공 서비스 정책의 우선순위 분석(이은진·문상호, 2007) 등의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문화산업의 경쟁력 결정 요인 분석(김동진·박종화, 2006), 지역 축제 정책 결정 우선순위 분석(문성종·손대현, 2007), 디지털 콘텐츠 기업 육성 방안(김민철 등, 2007) 등의 문화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III. 만족도 평가 모형

1. 출판 수출 지원 기능군 및 세부 기능 선정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WTO(2007)의 지원 기능을 바탕으로 기존 문헌의 연구 결과와 출판 수출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도출된 <표 2>의 출판 수출 지원을 위한 5가지 기능군을 모두 포괄하고자 한다. 이렇게 도출된 기능군은 정보 지원, 번역 지원, 계약 체결 지원, 계약 이행

및 운영, 수출 실무 지원이다.

5가지의 기능군에 포함되는 세부 기능의 도출을 위해서도 「World Trade Report 2007」(WTO, 2007)을 근간으로 하였다. WTO(2007)가 제시한 기능을 바탕으로, 국내 출판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연구(김진두, 2005, 2007; 노병성, 2004; 이은국·한주리, 2003)와 문화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연구(문화관광부, 2000; 이충배·이정민, 2006;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를 참고하여 세부 기능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세부 기능 도출 과정에서 출판업계 및 문화산업 분야의 전문가들과 3차에 걸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출판 수출 지원을 위한 세부 기능을 확정하였다. 선정된 세부 기능은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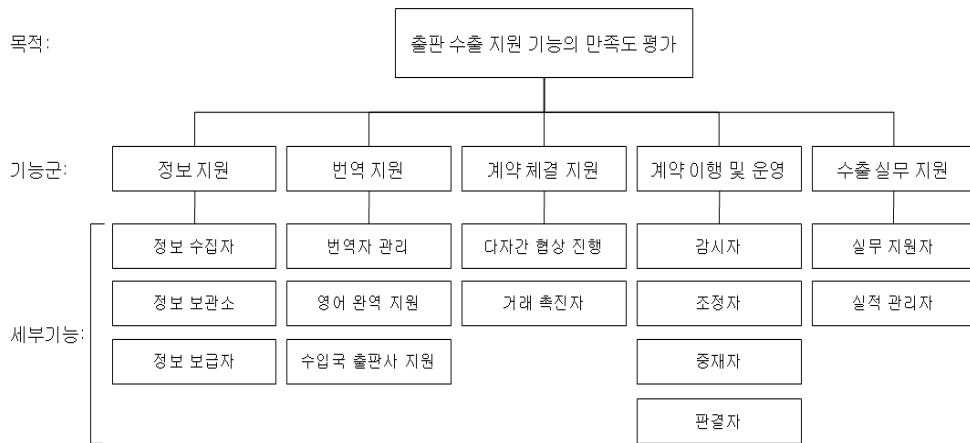
<표 3> 출판 수출 지원을 위한 세부 기능

기능군	세부 기능	의미
정보 지원	정보 수집자	출판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판단하여 수집하는 기능
	정보 보관소	출판 수출에 필요한 정보의 보관, 기록, 검색, 편집, 처리 등의 제도적 정보 관리자로서의 기능
	정보 보급자	정보 불균형 및 이로 인해 정보 소유자가 인위적으로 오류를 저지르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를 보급하고 감독하는 기능
번역 지원	번역자 관리	언어권별로 전문 번역자를 확보하여 관리하는 기능
	영어 완역 지원	국내 출판물의 영어 완역을 지원하는 기능
	수입국 출판사 지원	수입국 출판사에 대한 제작 및 번역을 지원하는 기능
계약 체결 지원	다자 간 협상 진행	다자 간 협상(예 : 국내 출판사-국내 에이전시-해외 에이전시-해외 출판사 간의 협상)이 필요한 경우, 쌍방 간 협상을 여러 번 진행하기 보다는 전체 계약 당사자들이 효율적으로 단일 협상을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기능
	거래 촉진자	계약자 국가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관세청, 수입/수출업자, 고객, 국회 통상위원회 등)에게 계약에 대하여 설명하고 거래를 촉진하는 기능
계약 이행 및 운영	감시자	최초 계약에 대한 효력의 약화, 무시, 불이행 등을 방지하고, 계약이 잘 이행되는지에 대하여 감독하는 기능
	조정자	최초 계약에 대한 의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위 및 이에 따르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기능
	중재자	분쟁 발생 시, 계약당사자들을 중재하고 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기능
	판결자	재협상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상황 발생에 대한 계약 당사자들의 시시비비를 판정하는 기능
수출 실무 지원	실무 지원자	출판 수출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예 : 해외 출판 마케팅 지원, 저작권 수출 상담 지원)
	실적 관리자	출판 수출 실적 관리 운영자로서의 기능(예 : 저작권 수출에 대한 장려 인센티브 제공)

2. 만족도 평가 계층 모형

본 연구에서는 출판 정책 및 출판 관련 기구가 제공하고 있는 출판 수출 지원 기능을 평가하고자 하므로, 출판 수출 지원 기능의 만족도 평가가 AHP의 목적(goal)이 된다. 출판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5가지 기능군은 출판 수출 지원 기능의 평가를 위한 분류 기준(classification criteria)으로 대응시킬 수 있으며, 세부 기능은 출판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alternative)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출판 수출 지원 기능의 만족도 평가 계층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만족도 평가 계층 모형



3. 기능별 중요도 평가

출판 수출 지원 기능의 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구성된 계층 모형의 각 기능군 및 세부 기능의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출판 수출 전문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2009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약 20일간 이루어졌으며, 전문가들과 사전 연락을 통하여 설문을 요청하고 설문지를 이용한 대인 면접법을 사용하였다.

1) 표본 설계 및 설문의 구성

중요도 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 대상자는 학계를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대한출판문화협회 담당자, 한국출판연구소 연구원, 주요 출판업체 수출 담당자로 구성되었다. AHP는 설문 응답자의

수보다는 설문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김대기·권오경, 2003). 이에 따라 AHP를 활용하는 기존의 연구들도 많은 설문 응답자를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Tam과 Tummala(2001)는 통신업체의 선정을 위하여 5명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AHP를 적용하였으며, 오기성(2004)은 AHP를 적용하여 최적의 웹사이트를 선정하기 위해 웹사이트 전문가 1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고, 장양철·안병석(2006)은 정보 시스템 개발업체의 선정에 위한 AHP 활용에서 전문가 7명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22명의 전문가로부터 설문 응답을 받았다. 설문 응답한 전문가는 대학교 교수 3명,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1명, 대한출판문화협회 담당자 3명, 한국출판연구소 연구원 2명, 주요 출판업체 수출 담당자 10명이었으며, 3명은 소속 기관을 응답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85.7%가 출판 관련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이었으며, 61.9%가 5년 이상의 수출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설문지는 Saaty(1980)가 제안한 9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계층을 구성하는 요소 간의 쌍대 비교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기능군 및 세부 기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함께 제시하여 보다 정확한 응답을 하도록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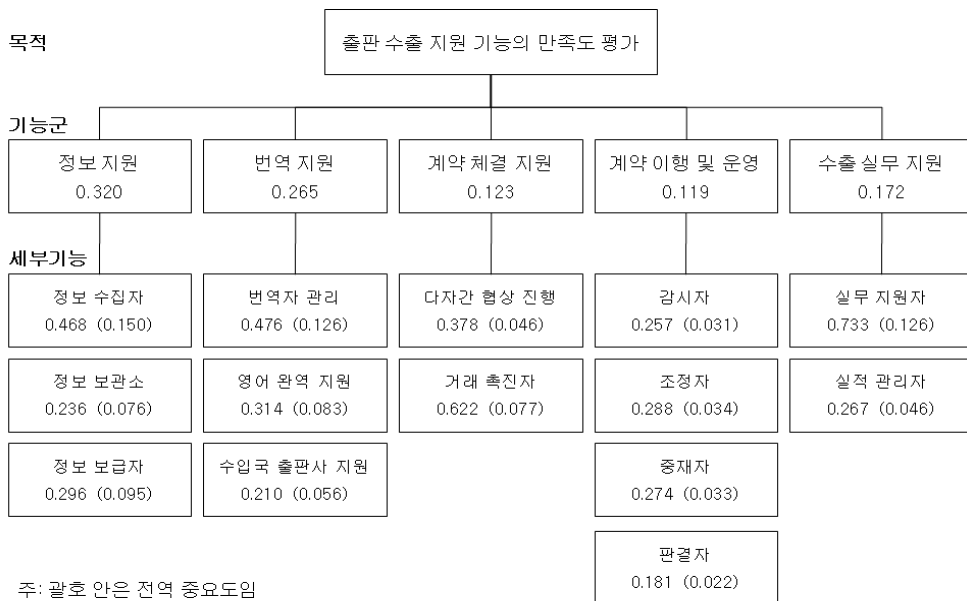
2) 설문 결과의 분석

설문 응답 데이터는 Expert Choice 20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설문 응답자가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CR을 산출하여 검토하였다. 8명의 응답자는 CR이 0.1 이하로 합리적인 일관성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14명의 응답자의 CR은 허용 수준인 0.2를 넘어서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CR을 보이는 것은 설문 문항이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응답자가 무성의하게 응답한 경우로 볼 수 있다(홍태호 등, 2008). 본 연구에서 CR의 허용 수준을 만족하는 응답이 적은 것은, 설문 응답자가 AHP에서 활용하는 쌍대 비교 형식의 설문지에 익숙하지 않아서 설문 작성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표기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전문가들이 바쁜 업무로 인하여 무성의한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CR이 0.2 이상으로 허용 수준을 만족하지 않는 응답은 제외하고, 합리적인 일관성을 가진다고 판단된 8명의 응답만을 AHP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는 대학교 교수 1명, 대한출판문화협회 담당자 3명, 한국출판연구소 연구원 1명, 출판업체 수출 담당자 1명이었으며 2명은 소속 기관을 응답하지 않았다.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 중 경력을 응답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가 3년 이상의 출판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5명의 응답자는 7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 중 3명은 5년

이상의 수출 업무 경력도 가지고 있었다.

만족도 평가 계층 모형의 각 기능군 및 세부 기능별 중요도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각 기능군에 대하여 제시된 중요도는 이 계층 모형의 목적인 ‘출판 수출 지원 기능의 만족도 평가’를 위한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각 기능군에 부여된 중요도의 합은 1이 된다. 각 세부 기능의 중요도는 그 세부 기능이 속한 기능군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로, 이는 각 세부 기능의 지역 중요도가 된다. 따라서 하나의 기능군에 속한 세부 기능들의 지역 중요도를 합하면 1이 된다. 또한, <그림 2>에서는 각 세부 기능에 대한 전역 중요도도 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다. 각 세부 기능의 전역 중요도는 계층 모형의 목적인 ‘출판 수출 지원 기능의 만족도 평가’를 위한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계층 모형에 포함된 14개 세부 기능의 전역 중요도를 모두 합하면 1이 된다. 이러한 세부 기능의 전역 중요도는 세부 기능의 지역 중요도와 그 세부 기능이 속한 기능군의 상대적 중요도를 곱하여 구하게 된다.

<그림 2> 기능별 상대적 중요도



기능군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정보 지원 기능군이 0.3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출판 수출과 관련된 정보의 부족 현상이 심각하며,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 대상국 시장 및 특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중요함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번역 지원 기능군의 중요도는 0.265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이는 출판 수출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태생적 한계점인 언어 문제를 해결해야 함

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존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김진두, 2005, 2007; 노병성, 2004; 이은국·한주리, 2003) 수출 실무 지원 기능군의 중요도는 0.172로 세 번째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국내 출판업계의 영세성과 수출 경험 부족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계약 체결 지원 기능군(0.123), 계약 이행 및 운영 기능군(0.119)의 순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계약 이행 및 운영 기능군의 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출판 수출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출판 수출과 관련된 분쟁이 그다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정보 지원 기능군에서는 정보 수집자의 중요도가 0.468로 가장 높았으며, 정보 보급자의 중요도는 0.296이었다. 정보 보관소의 중요도는 0.236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판 수출과 관련된 정보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번역 지원 기능군에서는 번역자 관리가 0.476의 중요도를 나타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출판 수출을 위해서는 전문 번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김진두, 2005, 2007; 이은국·한주리, 2003). 영어 완역 지원의 중요도는 0.314였으며, 수입국 출판사 지원의 중요도는 0.210이었다. 계약 체결 지원 기능군에서는 거래 촉진자가 0.622의 중요도를 보여, 다자 간 협상 진행의 중요도(0.378)보다 높았다. 따라서 협상에 대한 지원보다는 거래를 촉진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계약 이행 및 운영 기능군에서는 감시자(0.257)와 조정자(0.288), 중재자(0.270)의 중요도가 유사하였고, 판결자(0.181)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출판 수출에 있어서 계약 이행을 감시하고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 제3자로서의 도움이 계약 불이행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을 하는 기능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수출 실무 지원 기능군에서는 실무 지원자의 중요도가 0.733으로 실적 관리자의 중요도 0.267보다 높아, 실적에 대한 관리보다는 수출 실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기능에 대한 전역 중요도를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보 수집자(0.468)와 번역자 관리(0.126), 실무 지원자(0.126), 정보 보급자(0.095), 영어 완역 지원(0.083)이 전역 중요도가 가장 높은 5개 세부 기능이었다. 반면, 판결자(0.022)와 감시자(0.031), 중재자(0.033), 조정자(0.034), 실적 관리자(0.046)는 전역 중요도가 가장 낮은 5개 세부 기능으로 나타났다. 세부 기능의 전역 중요도는 기능군별 중요도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 정보 지원과 번역 지원 기능군에 속하는 세부 기능들의 전역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역 중요도가 0.05 이상인 세부 기능을 살펴보면, 정보 지원과 번역 지원 기능군의 모든 세부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의 세부 기능은 거의 전역 중요도 0.05 이하임을 알 수 있다.

IV. 출판 수출 지원에 대한 만족도 평가

개발된 평가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해서는, 출판 정책 및 출판 관련 기구가 제공하고 있는 현재의 출판 수출 지원 기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출판 수출 지원 기능의 수혜자인 주요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2009년 2월 6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를 이용한 대인 면접법과 이메일 조사를 혼용하였다.

1. 표본 및 측정 문항 설계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은 출판업체 수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한 업체와 한국문화번역원 협의체 가입사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출판 수출 지원 기능의 실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과거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아직 수출 실적이 없는 업체도 설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출판 수출 지원에 대한 기존 수요자뿐만 아니라 잠재 수요자의 의견까지 반영하고자 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출 실적이 없는 업체라 하더라도 수출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였거나 한국문화번역원 협의체 가입사이기 때문에, 현재의 출판 수출 지원 기능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업체라 할 수 있다.

총 201개 업체가 조사에 응답하였다. 응답 업체의 설립연도는 1934년부터 2008년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업력은 약 16.4년이었다. 또한, 응답 업체의 48.8%(98개 업체)는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여, 국내 출판업체의 상당수가 중소기업 규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립 이래로 수출 누적 실적을 질문한 결과, 전체 업체의 53.7%(108개 업체)가 실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출 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의 57.0%(53개 업체)도 누적 수출 매출액이 50,000 달러 미만이라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수출 경험 및 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보여주었다. 과거 3년간 출판물을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중국이 28.6%(63개 업체), 일본 18.6%(41개 업체), 대만 15.9%(35개 업체), 태국 10.9%(24개 업체)로 수출 대상국이 동아시아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출판 수출 지원 기능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세부 기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만족도를 답변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들은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의 리커트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2. 평가 결과 및 해석

201개 업체의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출판 수출 지원 기능에 대한 만족도를 산출하였다. 만족도 산출에 있어서 AHP를 통하여 도출된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였다. 세부 기능에 대한 만족도는 설문을 통하여 출판업체에게 직접 질문을 하였으므로, 응답 업체들이 답변한 만족도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기능군에 대한 만족도는 그 기능군에 속한 세부 기능의 만족도를 가중 합산하였으며, 이때 각 세부 기능의 지역 중요도를 가중치로 사용하였다. 또한, 출판 수출 지원 기능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기능군의 중요도를 가중치로 하여 기능군들의 만족도를 가중 합산하였다.

이러한 가중 합산을 통하여 만족도를 산출한 결과, 전체적인 만족도가 2.58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현재의 출판 수출 지원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이행 및 운영 기능군에 대한 만족도(2.39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계약 이후의 이행 및 분쟁, 재협상 등에 대한 사후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약 이행 및 운영 기능군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출판 수출이 활발하지 않아 수출 관련 분쟁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지원 기능군에 대한 만족도(2.46점)도 매우 낮게 평가되어, 계약 체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번역 지원(2.62점)과 수출 실무 지원(2.62점) 기능군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보통 이하의 상당히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즉, 콘텐츠의 확보와 출판 수출의 준비 및 수출 과정에 대한 지원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정보 지원 기능군(2.65점)에 대해서도 응답 업체들은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판 수출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정보의 부족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출판업체들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4>는 산출된 만족도를 요약하고 있다.

세부 기능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정보 지원 기능군에서는 정보 수집자(2.65점), 정보 보관소(2.70점), 정보 보급자(2.60점)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유사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 지원은 정보의 수집, 관리 및 배포가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하나의 세부 기능이라도 적절히 수행되지 못하면 전체적인 정보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출판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여 출판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겠다.

〈표 4〉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만족도: $2.58 = 0.320 \times 2.65 + 0.265 \times 2.62 + 0.123 \times 2.46 + 0.119 \times 2.39 + 0.172 \times 2.62$					
기능군	중요도	만족도	세부 기능	중요도	만족도
정보 지원	0.320	$2.65 = 0.468 \times 2.65 + 0.236 \times 2.70 + 0.296 \times 2.60$	정보 수집자	0.468	2.65
			정보 보관소	0.236	2.70
			정보 보급자	0.296	2.60
번역 지원	0.265	$2.62 = 0.476 \times 2.63 + 0.314 \times 2.63 + 0.210 \times 2.59$	번역자 관리	0.476	2.63
			영어 완역 지원	0.314	2.63
			수입국 출판사 지원	0.210	2.59
계약 체결 지원	0.123	$2.46 = 0.378 \times 2.44 + 0.622 \times 2.48$	다자 간 협상 진행	0.378	2.44
			거래 촉진자	0.622	2.48
계약 이행 및 운영	0.119	$2.39 = 0.257 \times 2.36 + 0.288 \times 2.40 + 0.274 \times 2.38 + 0.181 \times 2.42$	감시자	0.257	2.36
			조정자	0.288	2.40
			중재자	0.274	2.38
			판결자	0.181	2.42
수출 실무 지원	0.172	$2.62 = 0.733 \times 2.62 + 0.267 \times 2.61$	실무 지원자	0.733	2.62
			실적 관리자	0.267	2.61

번역 지원 기능군에서는 수입국 출판사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2.59점으로 특히 낮게 나타났으며, 번역자 관리와 영어 완역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2.63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어라는 언어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번역 지원 기능군은 출판물 수출에 있어서 필수적인 지원 서비스이다. 따라서 향후 국내 및 해외 번역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DB화하여 관리하고 지원하며, 국내 출판물의 영어권 국가로의 수출을 위하여 영어 완역을 지원함으로써, 출판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어권 이외의 국가로의 출판물 수출을 위하여 수출 대상국의 출판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수출국의 다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및 유럽 등 시장 규모가 큰 국가의 언어에 대한 번역 지원이 중요할 것이다.

계약 체결 지원 기능군에 대해서는, 다자 간 협상 진행에 대한 만족도가 2.44점, 거래 촉진자에 대한 만족도가 2.48점으로 평가되어 매우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현재의 출판 정책 및 출판 관련 기구가 수출 계약 체결 과정을 거의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출판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할 때, 다수의 계약 당사자들과의 협상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은 명백하다. 또한, 계약 당사자들이 속한 국가의 여러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계약을 유효화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향후에는 출판 수출에 대한 협상 과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설득함으로써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 이행 및 운영 기능군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기능군 및 세부 기능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감시자 기능에 대한 만족도는 2.36점, 중재자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2.38점으로 세부 기능들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조정자와 판결자에 대한 만족도도 각각 2.40점과 2.42점으로 나타나, 현재의 출판 정책 및 출판 관련 기구가 계약 이행 및 운영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판물 수출에 있어서 계약의 체결만큼이나 그 계약에 대한 이행은 중요하다. 최초 계약의 조건 및 사항대로 이행되어야 계약 당사자들의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제도에 대한 상이한 해석,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최초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는 것이 쉽지않은 않다. 따라서 계약의 변경이나 불이행이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규모와 수출 경험을 고려할 때, 국내 출판업체들은 이러한 계약 이후의 상황을 모두 자체적으로 관리할 역량이 부족하다. 따라서 계약 이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출판 수출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출 실무 지원 기능군에 대해서는, 실무 지원자에 대한 만족도는 2.62점, 실적 관리자에 대한 만족도는 2.61점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와 수출 경험을 고려하면, 국내 출판업체들은 수출 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수출 방법 및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출판 수출에 있어서의 실무 지원은 매우 중요한 기능군이라 할 수 있다. 향후에는 출판 수출에 대한 전문가를 확보하여 수출 업무 전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출판업체의 수출 실적을 관리하고 수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출판 수출 지원에 대한 만족도 평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출판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5가지 기능군과 14가지 세부 기능을 도출하였으며, 이들 기능의 평가를 위한 계층 모형을 개발하고 AHP를 활용하여 각 기능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201개 출판업체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개발된 계층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현재의 출판 수출 지원 기능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평가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실증하였다.

1.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4차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은 향후 우리나라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출판업은 문화산업 중에서도 국내 시장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이다. 따라서 출판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 출판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규모이며 수출 경험과 실적이 일천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출판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기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 기능에 대한 평가 도구가 부족하여 적절한 평가가 미진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판 수출의 지원 기능에 대한 만족도 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데에서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출판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기능을 다양한 선행 연구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도출하였으며, 이 기능들의 중요도를 산출하여 실제 만족도 평가 시에 어느 기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였다. 특히, 각 기능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함에 있어서 많은 기존 문헌에서 검증된 기법인 AHP를 활용함으로써 산출된 중요도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출판 수출 지원 기능의 평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향후 출판 수출 지원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타 산업, 특히 다른 문화산업 분야의 수출 지원 기능에 대한 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평가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은 번역 지원 기능군을 제외하고는 출판업 이외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번역 지원 기능군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출 지원 기능의 평가를 위한 계층 구조를 정립하였기 때문에, 산업의 특성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원 기능을 수정함으로써 타 산업, 특히 다른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수출 지원 기능에 대한 평가 모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출판 수출 지원 제도 및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실무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원 기능들은 다양한 문헌에 대한 조사와 출판 수출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도출하였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중요한 기능뿐만 아니라 출판 수출 실무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능들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학문적 완성도만을 고려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 기능만을 포함시키는 것을 피함으로써, 실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실제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한 것이다. 또한 제시된 지원 기능들의 수혜자인 출판업체에게 설문 조사를 하여 본 연구의 평가 모형을 통한 평가를 직접 실시해 봄으로써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출판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능들이 모두 동등한 수준의 효과를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판 수출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응답 데이터를 바탕으로 AHP를 적용하여 각 기능군 및 세부 기능의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지원 기능을 제시함으로써 모형의 실용성을 더욱 높였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실무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출판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출판 수출 지원 기능을 전담하는 기구의 설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개 기능군과 14개 세부 기능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전담 기구(이하, 출판 수출 지원 기구)의 설립을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출판 수출 지원 기구가 설립될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능들의 상대적 중요도가 이 기구의 조직과 기능 및 업무를 설계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출판 수출 지원 기구는 출판업체가 해외 시장으로 의사 결정의 시각을 넓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영역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출판업계에서 국제 교류를 위한 허브로서 기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출판 수출 지원 기구가 담당하여야 하는 역할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판 수출에 있어서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장이 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시장을 고려하여, 해외 시장 진출의 과정과 절차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해외 시장 진출 사례 등에 대한 공유와 교육이 필요하며, 각 수출 대상국 언어에 대한 번역 전문가의 육성이 절실한 것이다. 셋째, 수출 대상국 출판 관련 업체들이 국내로 들어와 효율적으로 국내 출판업체와 다양한 만남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이벤트의 장이 되어야 한다. 넷째, 출판 수출의 절차와 접근법에 있어서 공통적인 서비스 모듈을 개발하고, 개별 출판업체의 요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출판 수출 관련 사업 서비스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내 출판물의 수출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향후 출판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대부분 산업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출판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의 연계가 필요해지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판 수출을 지원하는 기능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횡단조사를 통하여 수행된 연구로서, 만족도 평가 모형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지 못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년간에 걸친 횡단 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만족도 평가 모형을

수정/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은 향후 연구 과제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 모형이 출판 수출 활성화에 필요한 포괄적인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문적 완성도와 실무적 적용 가능성, 모형의 간결성을 모두 추구하는 과정에서 모형에 포함된 지원 기능들이 출판 수출의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한다고는 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수출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 도서전 참가 지원이나 견본 상품 제작 지원과 같이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의 무역 상황을 고려할 때, 영어 번역 지원 세부 기능을 중국어와 일본어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외국어 번역 지원으로 확장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아직 우리나라의 출판 수출이 활발하지 않아 수출 분쟁이 다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수출이 안정화 궤도에 진입한 이후에 필요한 계약 이행 및 운영 기능군은 축소하거나 제거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먼저 학문적 완성도를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완전한 기초 평가 모형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업계의 상황에 따라 실무적 적용 가능성과 모형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기초 평가 모형의 기능 요소들을 가감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군 및 세부 기능의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AHP를 적용하였다. 총 22명의 전문가에게 응답을 받았으나, 14명의 CR이 허용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8명의 응답만을 중요도 산출에 활용하였다. 상당수 전문가의 설문 답변에 일관성이 부족하였다는 사실은 설문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절히 수집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들이 쌍대 비교라는 설문 형식에 생소하여 적절히 응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거나 응답자들이 답변에 무성의하게 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중요도 산출을 위해 활용한 전문가 응답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이는 응답자 상당수가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여 중요도 산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AHP의 특성상, 많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것이 반드시 결과의 신뢰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설문 문항의 응답 방법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고 응답자가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설문에 임하도록 유도하여 신뢰성 있는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 모형은 인쇄 출판물의 수출과 출판 저작권의 수출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출판 수출은 인쇄 출판물의 수출과 출판 저작권의 수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 2가지 방식의 수출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특징을 보인다. 인쇄 출판물의 수출은 서적의 형태로 수출되는 반면, 저작권의 수출은 수입국에서 서적을 만들어내는 제2의 제작이

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두 가지 방식에 따라 출판 수출 지원 기능의 중요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인쇄 출판물의 수출과 출판 저작권의 수출을 구분하여 지원 기능의 중요도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향후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수출 방식에 따라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
- 김대기·권오경(2003), 제3자 물류업체 선정에 위한 평가항목 개발 및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경영과학」, 제20권 제2호, 151-163.
- 김동진·박종화(2006), 도시 문화산업의 경쟁력 결정 요인 - 분석적 계층화(AHP) 기법을 이용한 상대적 중요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18권 제1호, 311-333.
- 김민철·김희철·부창산(2007), 제주 지역 디지털 콘텐츠 문화산업의 선도 기업 육성 방안,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2호, 3-18.
- 김진두(2005), 한류와 출판 저작권 수출 방안에 대한 연구, 「동서언론」, 제9집, 259-289.
- 김진두(2007), 중국 출판 산업 변화와 도서 수출 방안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53호, 33-60.
- 노병성(2004), 한국 출판의 영미권 진출을 위한 전략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46호, 49-93.
- 대한출판문화협회, <http://www.kpa21.or.kr>.
- 문성중·손대현(2007), 지자체의 지역 축제 정책 결정을 위한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 제주 지역 축제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제22권 제1호, 325-342.
- 문화관광부(2000), 「한국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08), 「2007 문화산업백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오기성(2004), AHP 기법을 이용한 최적의 웹사이트 선정 및 품질 평가에 관한 연구, 「정보처리학회 논문지」, 제11권 제2호, 381-386.
- 이동기(2005), 소방 행정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 평가와 측정, 「도시행정학보」, 제18집 제1호, 103-123.
- 이은국·한주리(2003), 도서와 출판 저작권 수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45호, 213-268.
- 이은진·문상호(2007), 광역자치단체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정책 우선순위 분석 - DEA와 AHP 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제1호, 1-28.
- 이충배·이정민(2006), 한류문화 확산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수출확대방안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2호, 1-20.
- 장양철·안병석(2006), AHP를 이용한 정보시스템 개발업체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제5권 제3호, 187-200.
- 조근태·조용곤·강현수(2003), 「앞서가는 리더들의 계층 분석적 의사 결정」, 서울: 동현출판사.

- 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2), 「한국 문화산업의 동북아지역 진출 활성화 및 협력 방안 연구」, 서울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한국출판학회(2009), 「국제 출판유통지수 비교연구」,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 홍태호·김은미·서보밀(2008), AHP를 이용한 금융기관의 CRM 시스템 선정, 「정보 시스템연구」, 제 17권 제2호, 137-154.
- Liberatore, M.J., Monahan, T.F., & Stout, D.E.(1992), A Framework for Integrating Capital Budgeting Analysis with Strategy, *The Engineering Economist*, 38(1), 31-44.
- Saad, G.H.(2001), Strategic Performance Evaluation : Descriptive and Prescriptive Analysis, *Industrial Management and Data System*, 101(8), 390-399.
- Saaty, T.L.(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New York, NY : McGraw-Hill.
- Saaty, T.L.(1990), How to Make a Decision :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48(1), 9-26.
- Tam, M.C.Y., & Tummala, V.M.R.(2001), An Application of the AHP in Vendor Selection of a Telecommunications System, *Omega*, 29(2), 171-182.
- Uzoka, F.M.E.(2005), AHP-Based System for Strategic Evalua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Information, Knowledge, Systems Management*, 5(1), 49-61.
- Vargas, L.G.(1990), An Overview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Its Application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48(1), 2-8.
- WTO(2007), *World Trade Report 2007 - Six Decades of Multilateral Trade Cooperation : What Have We Learnt?*, Geneva, Switzerland : World Trade Organization.
- Zahedi, F.(1986),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 A Survey of the Method and Its Applications, *Interfaces*, 16(4), 96-108.

Abstract

Evaluation of Satisfaction in the Support Function for Exporting Book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Suh, Bo-Mil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h, Joon-Seok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im, So-Young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suggests a hierarchical model for evaluating satisfaction in the support function for exporting books. In addition, AHP made it possible to derive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function from experts. Based on literature and interviews with experts, five support function classes for exporting books were defined : information support, translation support, support to contract agreement, fulfillment and administration of contract, and support to export practice. Fourteen detailed support functions were included in the function classes. After defining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se functions,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support function was computed through a survey with experts.

In order to evaluate satisfaction in the support function to exporting books, we conducted a survey with publishers. Overall, publishers were not satisfied with the current support function. We suggested a policy direction for promoting books export.

[Key Words : exportation of books, support function,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文化政策論叢

문화정책논총
발간규정

2009

《문화정책논총》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2009. 3.23>

○ 제1조(목적)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연구원”) 《문화정책논총》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지침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행하는 논문집 《문화정책논총》의 발간과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과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 및 위원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원 및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인 자로, 원장이 위촉한다.
 - 1) 연구원 내부 위원은 해당 실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 2) 연구원 외부 전문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은 편집위원인 자로, 위원회 호선으로 정한다.
 - 1) 위원장은 학술지 편집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5.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담당자(간사)를 1인 이상 둔다.
6. 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문화정책논총》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에 참여한다.
2. 위원회는 《문화정책논총》의 이름으로 출판되는 모든 간행물을 기획·편집한다.
3.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의 결정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 제4조(연구윤리)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고, 적절한 심사 조취를 취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져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하고,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4.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과 관련하여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감안하여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연구원 지침에 의거한다.

《문화정책논총》 발간 규정

<개정 2009. 3. 23>

○ 제조(논문 작성 양식)

1.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 용지 단면으로 작성한다.
2.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한글 프로그램에서 ‘파일-문서정보-문서분량-원고지’로 체크)로 하며, 전체 분량이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한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표, 그림 포함. 단, 표, 그림의 경우는 세로 1cm 당, 70자로 계산).
3. 원고는 제목, 필자, 국문초록(200자 원고지 3장 이내, 키워드 3개 포함), 본문,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의 순으로 배열한다. 표지에는 논문 제목(국·영문), 성명(국·영문), 소속기관 및 직위(국·영문), 주소, 전화(직장, 자택, 이동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기재한다.
4. 게재논문은 제목, 필자, 국문초록(키워드 포함), 논문 처리일자, 본문,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제목, 필자명, 키워드 포함)의 순으로 명기한다.
5.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6. 본문의 체제는 ‘서론/본론/결론’이나 ‘장, 절’ 등을 쓰지 않고 I → 1. → 1) → (1) → ①의 순서로 한다.
7.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와 외국어로 된 용어, 인명, 지명 등은 한글로 적고 처음 나올 때에 한해 () 안에 같이 적는다.
8. 원고는 우송(디스켓 포함) 또는 전자메일 전송을 원칙으로 한다.

- 1) 우송 : 157-857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교육협력센터
《문화정책논총》 편집자 앞
- 2) 전송 : yunmi@kcti.re.kr
9.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연구원 측의 내용 수정 및 보완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한다.
10. 원고 작성의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다.

편집용지			문단모양			글자모양	
용지여백	위쪽	30	여백	왼쪽	0	글꼴	신명조
	아래쪽	30		오른쪽	0	크기	10
	왼쪽	30	간격	줄간격	160	장평	100
	오른쪽	30		문단위	0	자간	0
	머리말	12		문단아래	0		
	꼬리말	12	첫째줄	들여쓰기	3		
	제본	0	정렬	정렬방식	양쪽혼합		
				날말방식	0		

11. 개별 게재논문의 표지에는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명기한다.

○ 제2조(본문주)

1.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는 다음과 같이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을 논문의 말미에 첨부한다.
- 1) 저자가 본문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
- 예) 박동서(1990)에 의하면 ...; 강내희(1985)의 연구에서도 ...; 김창식·안문훈, 1989 : 79)은...; 이종석 등(1990 : 410-412)이 제시한...; THOMAS(1976 : 900)의 모형을 수정하여 ...; ...Hwang(1987)을 들 수 있다.; Perry와 Wise(1990)의 분류에 따라 ...; Brown 등(1982)을 중심으로...
- 2) 저자가 본문과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
- 예) ...입장을 취하고 있다(박동석, 1990; 이정서 등, 1990 : 410-412; 김창식·안문훈, 1989 : 79; 신문섭, 1985).;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예 : Perry & Wise, 1990; Hwang, 1987; BROWN ET AL, 1982; Thomas, 1976 : 900).
2.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예 : ...하였다.1)),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 제3조(참고문헌)

1. 일반적인 사항

- 1) 참고 문헌은 본문 다음에 ‘참고 문헌’이라는 제목 아래 나열하되,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언급한 문헌만을 제시한다.
- 2) 한글문헌, 동양어 문헌 (일본어, 중국어), 서양문헌 순으로 배열하되, 번역서 (예컨대 한글로 번역된 영문서) 는 해당 원어 문헌으로 분류한다.
- 3) 한글·한자·일본어로 된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서양 문헌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중국어나 일본어 저자명은 한자의 한글식 표기에 따라 배열하되, 원어 표기를 알 때에는 괄호 속에 병기한다.
예) 吉澤 清-지(요시자와 키요요시)(2007),
- 4) 같은 저자의 문헌은 출판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배열하되, 같은 연도의 것이 두 편 이상일 때에는 연도 다음에 a, b, c, ... 등을 넣어 구별한다.
예) (1999a), (1999b)
- 5) 참고문헌을 나열할 때 각 문헌의 둘째 줄(行)부터는 3 칸 들여쓰기를 하여 각 참고문헌간의 구별을 쉽게 한다.
- 6) 저자가 1~5명인 문헌은 이름을 모두 밝히고, 저자가 6인 이상일 때는 000 외, 000, et al. 로 표기한다.
예) 김문환 외(1990),
Gibbon, T., et al.(1983),
- 7) 저자가 없는 문헌은 문헌 제목을 저자 위치로 두고 그 다음에 발간연도를 밝힌다. 단 인용문헌에서 Anonymous라고 된 것은 이것을 저자로 간주한다.
- 8) 만일 주 저자 다음에 with와 더불어 다른 이름이 열거된 문헌(예, Kuan- Hsing Chen with Hsiu-Ling Kuo, Hans Hang, and Hsu Ming Chu)은 참고문헌에서는 이름을 모두 열거한다. 단, 본문에서 인용할 때에는 주 저자 이름만 밝힌다.
- 9) 특히 단행본의 연도는 문헌이 인쇄된 연도가 아니라 저작권 표시(©)된 연도를 쓴다.
- 10) 발간연도가 불분명한 문헌은 (n.d.) 라고 쓴다.

2. 논문

- 1) 학술지나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논문의 예

임학순(2004),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사전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집 2호, 305~324.

홍길동·이몽룡(1990), 문화와 관광, 「문화관광」, 34 권 2 호, 78~91.

Knapp, M., Ellis, D., & Williams, B.(1980), Perceptions of communication behavior associated with relationship terms, *Communication Monographs*, 47, 262~278.

Scott, W. A.(1950), Reliability of content analysis :The case of nominal scaling coding, *Public Opinion Quarterly*, 51(3), 79~91. (* 저널명, volume 은 이탤릭으로 처리)

Glaser, R., & Bond, L. (Eds.).(1981), Testing :Concepts,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Special issue], *American Psychologist*, 36(10). (저널 특별호 전체를 표기할 때).

단, 학술지의 권, 호수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저자 / 연도 다음에 발간 월이나 계절을 표기한다.

예) Austin, J. E.(2003, September), 홍길동(2003, 가을)

2) 단행본에 게재된 논문의 예

홍길동(1990), 미디어 문화정책의 전망, 홍길동·이몽룡(편), 「미디어문화정책론」(45~66쪽), 서울 : 한울아카데미.

Berger, C. R.(1987), Communicating under uncertainty. In M. E. Roloff & G. R. Miller(Eds.), *Interpersonal processes :New directions in communication research*(pp. 39~62), Newbury Park, CA : Sage.

3. 단행본·보고서·학위논문

* 출판사 사항을 표기할 때엔 ‘출판사 소재 도시, 주 :출판사 명’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일 때), ‘도시, 국가 :출판사’(영문 서적 중 미국 이외 지역일 때), ‘도시 :출판사명’(대도시일 때) 순으로 한다. 이 때 주(state) 이름은 약자로 쓴다(예, CA, NY, IL). 출판된 도시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가장 먼저 나온 것만 표시한다.

예) Hillsdale, NJ : Erlbaum,

Oxford, England : Basil Blackwell,

Amsterdam : Elsevier.

* 출판사 이름에서 Books, Press 등은 밝히나, Publishers, Co., Inc. 등은 생략한다.

1) 단행본의 예

고정민(2007), 「문화콘텐츠 경영전략」,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홍길동·이몽룡 (편)(1995), 「문화예술정책 연구」, 서울 : 새나라.(공편저일 때)

Fiske, J.(1990),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London : Routledge.

Burgoon, J. K., Bowers, J. W., & Woodall, W. G.(1986), *Nonverbal communication : The unspoken dialogue*, New York : Harper & Row.(공저일 때)

Gibbs, J. T., & Huang, L. N.(Eds.).(1991), *Children of color : Psychological interventions with minority youth*, San Francisco : Jossey-Bass.(공편저일 때)

2) 보고서의 예

조현성 (2007). 「2006 문화향수 실태조사」. 서울 : 문화관광부.

N 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1982), *Television and behavior : Ten year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mplications for the eighties*(DHHS Publication No. ADM 82-1195), Washington, D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3) 학위논문의 예

홍길동(2000), 「지역과 학교를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조사 연구」, 한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Ryerson, J. F.(1983), *Effective management trainging : Two models*, Unpublished master ' s thesis, Clarke College of Technology, Potsdam, NY.

4. 번역서나 번역논문

* 번역서는 한글 번역서에 한해 원서명을 함께 밝혀준다.

1) 번역서의 예

Illich, I.(1996), *Deschooling Socity*, 심성보 역(2004), 「학교 없는 사회」, 서울 : 도서출판 미토.

Laplace, P. -S.(1951), *A philosophical essay of probabilities*(F. W. Truscott & F. L. Emory, Trans.), New York : Dover.(Original work published 1814).

2) 번역논문의 예

Hall, S.(1996), 문화연구의 두 가지 패러다임. 임영호(편역),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203-232 쪽), 서울 : 한나래출판사.(원저 출판연도 1980).

Freud, S. (1961), The ego and the id. In J. Strachey (Ed. and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19, pp. 3-66). London :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23).

5. 신문·잡지기사

홍길동(2002. 6. 28), 문화환경이 지역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한국매일신문』, 5. 문화예술평론을 말한다(2001. 9. 1), 『한국매일신문』, 1. (* 저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기사명, 날짜, 신문, 쪽수 순으로 표기)

Gardner, H.(1981, September), Do babies sing a universal song ·*Psychology Today*, 70-76.(잡지 기사일 때)

Study finds free care used more.(1982, April 15), *APA Monitor*, 14.(신문기사일 때).

6. 인터넷 자료

인터넷 자료를 참고한 경우, 해당 기관(개인) 홈페이지 사이트명만 쓰지 않고 실제로 참고한 자료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표기한다. 맨 끝에 마침표는 찍지 않는다. 저자가 없을 때는 문서명을 저자 위치에 둔다. 출판일은 사이트에 명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되, 날짜가 나와 있지 않을 때에는 접속일자를 밝힌다.

예) Author, I.(date), Title of article. Name of Periodical[On-line], 호수, Available : 웹사이트 주소나 이메일 주소

7. 시청각 자료(영화, TV프로그램, 음반, CD-ROM 등)

Harrison, J.(Producer), & Schmichen, R.(Director),(1992), *Changing our minds : The story of Evelyn Hooker* [Film]. (New York : Changing Our Minds). (영화일 때).

Crystal, L. (Executive Producer).(1993, October 11), *The MacNeil/ Leher news hour* . New York and Washington, DC : Public Broadcasting Service. (텔레비전 프로그램일 때).

○ 제4조(기타)

1. 표나 그림의 제목은 세분화 없이 각각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예 : <표 1>, <그림 1>)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표기하고, 자료의 출처는 ‘자료 :’라고 표시하고 본 책자의 인용 요령에 따라 표나 그림의 아랫부분에 표기한다.
2. 표나 그림에 대한註는 개별주(a, b, c)의 기호 사용), 일반주(‘주 :’로 표시하고 기재)의 순으로 자료출처의 윗부분에 달아 준다. 그림에 대한註도 이에 준한다(즉, 표나 그림의 하단에 개별주, 일반주, 자료의 순이 되도록 배열한다).

예))

〈표 2〉 0000

구 분	00	00	00

자료 : Duncan(1981 : 349)a)의 재구성

a) 0 0 0 0 0 0

3. 표와 그림은 원본 그대로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하고, 다양한 도식, 화살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개체를 묶고 반드시 문서에 포함시킨다.
4.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줄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밝혀 적는다.
5. 여기에 제시된 주와 참고문헌의 작성양식은 1986년 미국심리학회(APA) 양식을 표준으로 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 것으로, 본 요령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APA 매뉴얼에 따른다.

○ 제5조(발행 일자)

《문화정책논총》은 매년 2회 발행하며, 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 1) 제1호 : 1월 31일
- 2) 제2호 : 8월 31일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정책논총》 심사 규정

○ 제1조(심사 기준)

1. 투고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투고된 논문은 반드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연구논문집에 게재될 수 있는 논문은 연구자가 이미 지면에 발표하지 않은 새로운 논문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향후 3년간 논총에 투고를 금한다.
3. 위원회에서는 모든 투고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의 적절성 및 연구 목적의 명료성, 연구방법 및 논의 구성의 타당성, 연구의 체계성, 논문의 독창성, 연구 결과의 의의(학문적 기여도, 실용적 기여도), 논문 작성 규정의 준수 정도 등의 각 항목을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네 단계로 나누어 평가하여 판정한다.

○ 제2조(심사위원 위촉)

1. 투고된 논문은 각 논문당 위원장 및 위원이 추천하여 선정한 3인의 심사위원이 독자적으로 심사를 하며, 이 때 반드시 논문심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 이외의 심사위원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자인 자 및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가에 한한다.
3. 심사 대상인 논문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오직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관점에 의해서만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과 투고자 간의 익명성을 엄격히 유지한다.
5. 논문을 투고한 자는 다른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6.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호의 심사위원 선정 과정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 제3조 (심사 절차)

1. 초심에서 3인의 심사위원이 내린 평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표 참조)

유형 번호	심사위원 평가 결과				최종 판정 결과	판 정 기 준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1	3				게재 가	2명 이상이 '게재 가'로 평가한 경우, '수정 후 재심사'나 '게재불가'가 없는 경우
2	2	1				
3	2		1			
4	2			1	수정 후 게재	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명 이상이 '수정 후 게재'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5	1	2				
6	1	1	1			
7		3				
8		2	1			
9		2		1	수정 후 재심사	위의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명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이 경우에도 게재불가가 1명 있는 경우
10	1	1		1		
11	1		1	1		
12		1	1	1		
13	1		2			
14		1	2			
15			3			
16			2	1		
17	1			2	게재 불가	2명 이상이 '게재 불가'로 평가한 경우
18		1		2		
19			1	2		
20				3		

* 표 안의 숫자는 해당 판정의 심사위원 수

- 위원회에서는 반드시 등급 판정의 이유와 '수정 후 게재'의 경우 수정 세부 사항을 해당 연구자에게 소정의 공문으로 알려야 하며, 위원회로부터 '수정 후 게재'의 통보를 받은 연구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 재심을 받아야 한다.
- '게재불가'의 평가를 받은 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 내용을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편집위원 전원이 해당 논문을 재심사하여 다수결의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원래 평가를 적용한다.

○ 제4조 (논문투고 자격)

1. 논문 투고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한다.
2. 논문 투고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위원회의 《문화정책논총》에 의거, 연구 결과의 심사율리 및 출판윤리,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힘쓴다.
3. 투고된 모든 논문은 돌려받을 수 없다.
4. 심사 과정을 통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수정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5. 심사로 및 게재료는 내부 지침으로 정한다.

○ 제5조 (위원회의 개입)

《문화정책논총》의 질적 수전 향상과 심사 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사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 1) 위원회는 최종 심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 2) 위원장은 초심 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6조 (이월심사)

1.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원고마감일 이전에라도 수시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마감일을 넘긴 논문은 다음 호에 이월하여 심사한다.
2.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을 주어진 기간 내에 수정하지 않을 경우 다음 호에 이월하여 심사한다.

○ 제7조 (특집 논문)

특집 논문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게재한다.

- 1) 특집 논문 모집은 편집위원회의 기획을 거쳐 공모나 청탁 형식으로 할 수 있다.
- 2) 기획/특집 논문도 일반 투고 논문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단, 기획/특집의 성격이나 취지를 감안해 위원회의 권한으로 심사의 일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집 편집자를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 제8조 (게재 순서)

일반논문의 게재 순서는 투고 일자 순으로 한다.

○ 제9조 (심사 탈락 논문)

다음에 해당하는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탈락되어 게재 불가함을 통보한다.

- 1) 기존에 발표된 논문, 혹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 단, 학회의 제반 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은 다른 학술논문집에 게재하지 않았다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 2) 분량, 형식, 논문 작성 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논문
 - 논문 분량 : 총 원고 분량 150매 (표, 그림 포함). 단, 표, 그림의 경우는 세로 1cm 당, 70자로 계산함.
- 3)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 단, 《문화정책논총》의 논문 주제와 게재자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의 논문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 특별기고논문 /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 기획초청논문
- 4) 다른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행한 연구논문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특집 논문으로 청탁되는 경우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제10조 (심사 결과 통보)

심사가 완료된 후에 투고자에게 투고일과 심사 완료일, 그리고 최종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 제11조 (수당)

심사 관련 수당은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 등은 이 지침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문화정책논총》 논문심사표

				초심		재심	
논 문 제 목							
심사의뢰 받은 일자	년	월	일	논 문 유 형	기획논문 ()		
심 사 표 제출 일자	년	월	일		일반논문 ()		
심 사 위 원	성명 : _____ 직위 : _____ 소속 : _____ 이메일 : _____ 전화 : _____						
※ 아래의 척도를 이용하여 각 항목 해당 점수에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게재불가의 경우 심사총평에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항 목	점 수						
	매우 미흡		보 통			매우 우수	
1. 연구 주제의 적절성	1	2	3	4	5	6	7
2. 연구 방법 및 논의 구성의 타당성	1	2	3	4	5	6	7
3. 연구의 체계성	1	2	3	4	5	6	7
4. 논문의 독창성	1	2	3	4	5	6	7
5. 연구 결과의 의의(학문적·실용적 기여도)	1	2	3	4	5	6	7
6. 논문 작성 규정의 준수 정도	1	2	3	4	5	6	7
총 점	_____ 점						
※ 참 고 : [심사 총점] 6-17점 : 게재불가 31-36점 : 수정 후 게재 18-30점 : 수정 후 재심사 37-42점 : 게재가							
<심사 총평> 심사위원 : _____ (인)							
※ 귀하의 인적사항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언급이 없으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① 비공개로 해 주십시오. () ② 저자에게 공개하여도 좋습니다. () ③ 다른 심사자에게 공개하여도 좋습니다. ()							

〈세부 심사평〉

※ 수정사항에 대한 의견, 제안 및 논평 등을 가급적 자세히 기술하여 논문 저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논총》 윤리 권고사항

○ 제1조(목적)

윤리 권고사항은 연구 수행의 정직성, 연구 결과 출판 과정에서의 윤리, 연구자의 책임성 등을 포함하여 연구의 충실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관련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날조)
- 2)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공정 등을 허위로 조작,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바꾸거나 삭제하는 등 연구의 내용을 부정확하게 발표하는 행위(위조)
- 3)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표절)
- 4)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투고하는 행위(중복 게재) : 판정은 논문의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 등재 여부를 막론하고, 인쇄 혹은 전자매체 등의 형태로 된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 제3조(심사주체)

《문화정책논총》과 타 학회지 및 논문집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 및 제재 내용의 확정은 위원회가 담당한다.

- 1) 모든 심사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갖는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학술적 기준을 토대로 논문에 포함된 이론의 내용,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연구나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3)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4)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논문에 대하여 특별한 조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 5)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 결과 및 자료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4조(논문저자)

저자는 연구의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동일한 내용의 논문이 이미 발표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 1) 연구 논문은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 결과를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리하여 발표하는 것은 연구 논문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해야 한다.
- 2)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이어야 하고, 투고 당시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각주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3) 학술지에 발표되었거나 투고하여 심사중인 논문을 이중으로 투고할 수 없다. 학술대회에 발표한 내용을 완전한 논문으로 다시 투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첨가되어 있어야 하고, 학술대회 발표 사실이 적절하게 인용되어야 한다.
- 4) 연구 논문에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비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 5) 저자는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의 의견을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3조(운영방법)

편집위원회에서는 연구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처리한다.

- 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및 접수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실명, 익명 모두 가능하다. 다만 제보자는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다.
- 2) 제2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제보한다.
- 3)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기밀의 유지, 공정한 조사, 신속한 처리, 조사당사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 조사 결과 등을 공지한다.

편 집 위 원

편집위원장 | 양건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편 집 위 원 | 양현미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이상현 안동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정상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홍기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가나다 순〉

「문화정책논총」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2009 문화정책논총 제22집

발행일 2009년 8월 31일

발행인 정갑영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827

전화: 2669-9800 FAX: 2669-9882

홈페이지: www.kcti.re.kr

인쇄 크리홍보(주)

© 2009 한국문화관광연구원